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2018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이 좋은 사회를 향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2018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이 좋은 사회를 향하여

*이 보고서는 OECD와의 협의에 의해 출판되었으며 OECD 공식 번역본은 아닙니다.
한국어 번역의 품질 및 원문과의 일치 여부는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원 저작물과 번역본간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원본 저작물만 유효하다고 간주됩니다.*

본 저작물은 OECD 사무총장의 책임하에 발간된다. 본 보고서에서 언급된 의견과 주장이 OECD 회원국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다.

제시된 모든 자료와 지도 그리고 본 보고서는 그 어떤 영토의 지위 또는 주권, 국경 및 경계의 제한, 영토나 도시 또는 지역의 명칭을 침해하지 않는다.

OECD 에서 발간된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Towards Sustainable and Resilient Societies ©2018 OECD

©2018 OECD/KOREA Policy Centre 한국어 번역

이스라엘에 대한 통계자료는 관련 이스라엘 당국의 책임하에 공급된다. OECD가 제공한 이러한 자료의 사용은 국제법의 규정에 따라 골란 고원, 동예루살렘 및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지위를 침해하지 않는다.

사진 제공자: 표지 ©agvisuell-fotalia.com

OECD 출판물의 정오표는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www.oecd.org/about/publishing/corrigenda.htm)

서문

2030 의제는 세계적, 국가적 및 지역적 수준 모두에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집단적인 책임을 의미한다. 불공정한 세계화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다자간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세계는 더욱 복잡하게 상호 연결되고 한 국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세계적인 정책 과제의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개발목표(SDG)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전환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더 강력하고 일관된 다자간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올해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는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이 좋은 사회로의 변환”이라는 주제 하에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대한 발전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라는 SDG 세부목표 17.14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를 실현하는 일이 다차원적인 과제라는 현실을 반영한다. 따라서 개별정책의 고립상태(silo)에서 탈피하여 SDG 간의 상호작용과 연관성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관리할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이는 시너지 효과 활용, 절충과 정책갈등 관리, 국내 및 국제적인 활동이 잠재적으로 미칠 수 있는 국가 간 및 세대 간 정책 효과를 다루는 일을 수반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아무도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이며 이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의 핵심적인 목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고, 다양한 부문, 수행주체 및 협치 수준에 관여하고 이들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이 좋은 사회로의 변환은 불평등, 부당성 및 차별, 부실한 정부와 기관 및 자연 자원의 고갈을 포함한 취약성의 체계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달성할 수 없다. 경제와 인간의 복지가 달린 천연자원기초에 가해지는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와 생산 규모 및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런 변화는 실제로는 국내적인 이해관계에 단기적으로 집중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또한, 세계적인 공익을 실현하는 역할을 고려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세계적으로 복지를 향상시키면서 사회, 경제, 환경 및 협치 체계를 위협하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위험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올해 OECD가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에 기고한 내용 중 일부인 2018년판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에서는 HLPF의 검토 하에 목표 간 중요한 상호연계성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여 정책입안에 필요한 중요 원칙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SDG 실행에 있어 정책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다양한 분야의 사상가와 제휴기관의 식견을 공유하여 정책일관성의 발전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한다. 또한 본 연구서는 OECD가 정책분석, 지침 및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각국의 SDG 실행 노력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지속가능개발목표 OECD 실행계획의 일환이다.

4 서문

OECD는 정책일관성을 강화하려는 접근법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모든 수행주체, 이해관계자와 정책입안자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러한 공동 노력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의 목표와 더 좋은 삶을 위한 더 좋은 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OECD의 희망, 임무 및 포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앙헬 구리아 (A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

감사의 말

수석 자문인 Ebba Dohlman의 총괄 감독하에 OECD 사무총장실 소속의 개발정책일관성 부서(PCD)가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Ernesto Soria Morales와 Carina Lindberg가 분석을 지원하였다. Elisabeth Kamm와 인턴 Carlo Schmid는 국가조사 답변자료의 작성과 검토에 소중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보고서는 OECD 여러 부서에서 수행한 분석에 광범위하게 의존하고 있다. 1장은 다음에 열거하는 동료들이 제공한 심층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자료에 힘입은 바가 크다. 환경부의 Brilé Anderson, Ruben Bibas, Simon Buckle, Anthony Cox, Rob Dellink, Jane Ellis, Katia Karousakis, Kumi Kitamori, Myriam Linster, Michael Mullan, Dirk Röttgers, Aayush Tandon 및 Robert Youngman. 기업, 중소기업, 지역 및 도시센터의 Aziza Akhmouch, Stefano Marta, Delphine Clavreul, Marissa Plouin, Oriana Romano, Abel Schumann, Håkan Tropp 및 Paolo Veneri. 개발협력부의 Liwayway Adkins, Ana Fernandes, Nicolina Lamhauge, Naeeda Crishna Morgado 및 Cécilia Piemonte. 무역농업부의 Guillaume Gruère, Gregor Slokan 및 Ronald Steenblik. 통계 및 데이터부의 Michal Shinwell. 조세정책 및 행정센터의 Luisa Dressler. 교육기술부의 Caitlyn Guthrie. 협의회 및 집행위원회 사무국의 Laura Völker와 Julie Habersetzer. 국제에너지청의 Laura Cozzi, Daly Hannah 및 Dave Turk. 이들 모두의 지원과 지도에 감사를 드린다. 환경정책위원회, 개발지원위원회, 지역개발정책위원회, 도시정책실무단 및 물관리 협치 발의안 회원들로부터는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1장의 내용은 OECD 집행위원회가 회람하고 논의하였다.

2장, 3장, 4장 및 5장에는 유엔 고위급정치포럼에 대한 OECD 회원국의 국가평가보고서, 정책일관성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에 대한 조사에 응한 각국의 답변, OECD 통계 데이터베이스, 최근 간행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다자간 협의회 구성원의 의견을 포함하여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수록하였다. 저자들은 또한 5장의 작성에 기여한 Jorge Moreira da Silva OECD 개발협력부장, Colin Bradford 브루킹스 연구소 비상임 수석연구원 및 컨설턴트 Neil Martin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편집에 대한 조언과 감독을 하신 Amelia Smith와 Anne-Lise Prigent, 그래픽과 제작기술을 제공한 Audrey Garrigoux, Nandita Deshpande 및 Damian Garnys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들의 소중한 조언이 없었더라면 본 보고서는 발간될 수 없었을 것이다.

목차

서문.....	3
감사의 말.....	5
약어.....	12
개요.....	15
제1장.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일관된 접근법.....	17
서론.....	18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일관된 접근법.....	18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시설	19
물과 관련된 과제.....	21
다른 지속가능개발목표(SDG)와의 주요 상호작용	23
정책 및 거버넌스를 통한 대응.....	28
목표 7: 모두를 위한 적절한 가격의 믿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현대적 에너지.....	33
에너지와 관련된 과제	34
다른 지속가능개발목표(SDG)와의 주요 상호작용	37
정책 및 거버넌스를 통한 대응.....	42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및 주거지 조성	43
도시화와 관련된 과제	45
도시의 역할과 다른 지속가능개발목표(SDG)와의 주요 상호작용	50
정책 및 거버넌스를 통한 대응.....	53
목표 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54
주요 과제.....	56
다른 지속가능개발목표(SDG)와의 주요 상호작용	58
정책 및 거버넌스를 통한 대응.....	61
목표 15: 육지 생태계.....	64
주요 과제.....	65
다른 지속가능개발목표(SDG)와의 주요 상호작용	67
정책 및 거버넌스를 통한 대응.....	69
각주.....	72
참고문헌.....	72
제2장. SDG의 일관된 실행을 위한 8개 기초요소.....	80
서론.....	81
정책일관성과 지속가능개발목표	82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8개 기초요소	82
정치적 약속.....	83
정책 통합.....	88
장기적 계획의 대상 기간	91
정책 효과.....	91

정책 및 제도적 조정	93
하위국가 정부 및 지방정부의 참여	96
이해관계자의 참여	98
모니터링 및 보고	100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분야 협력기관의 기고	101
SDG 상호작용 틀의 적용: 사전 습득한 교훈	101
현실은 게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103
참고문헌	105
부록 2.A.	108
제3장. 국가별 현황: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	110
서론	111
오스트리아	111
벨기에.....	113
체코	116
에스토니아.....	118
핀란드.....	120
독일	124
그리스.....	127
일본	129
리투아니아	131
룩셈부르크	134
멕시코.....	136
네덜란드	139
폴란드.....	141
포르투갈	143
슬로바키아	145
슬로베니아	146
스페인.....	148
스웨덴.....	150
스위스.....	153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분야 협력국가의 기고	155
네팔의 SDG 실행을 위한 제도적 일관성	155
파키스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 이행.....	156
브라질의 지방자치 입법에 적용된 수직적 정책일관성에 관한 사례연구	157
각주	159
제4장.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의 이행상황 조사.....	167
서론	168
정책일관성의 이행상황 조사를 위한 분석틀.....	169
정책일관성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 평가지표	169

정책 상호작용 평가지표.....	173
정책 효과 평가지표.....	175
국가적 우선과제 및 정책일관성 지표 확인을 위한 분석틀 적용.....	177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시설.....	177
목표 7. 모두를 위한 적절한 가격의 청정에너지.....	180
목표 11. 지속 가능한 도시 및 지역사회.....	183
목표 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186
목표 15. 육지 생태계.....	188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분야 협력국가의 기고.....	191
세계가 직면한 새로운 현실에 개발기여도지수 적용.....	191
스리랑카의 에너지 SDG 7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적용의 교훈.....	193
의회의 SDG 활동 조사: 기술적인 해답.....	194
각주.....	196
참고문헌.....	197
제5장. 2030 의제를 위한 국내 및 국제 의제의 조정.....	203
서론.....	204
국내 정치 상황을 반영한다는 맥락에서 2030 의제에서의 본 체제 변환에 대한 장기 전망.....	206
수조달러 기금조성 목표: 2030 의제 실행을 위한 공통 영역의 필요성.....	213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분야 협력국가의 기고.....	215
SDG 추진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법 강화: 고위급정치포럼의 역할은 무엇인가?.....	215
다단계 SDG 정책일관성: 2030 의제에 맞게 정부간 의제 조정.....	217
파리기후협약과 2030 의제의 주제 연관성.....	219
PPPs를 통한 성공적인 SDG 자원조달을 위한 PCSD 접근법의 역량강화 필요성.....	222
충분한 일관성.....	224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일일관리 실태.....	227
SDG 6, 7, 11, 12, 15와 문화창조산업: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위한 문화적 여건 조성.....	230
각주.....	230
참고문헌.....	231

표

표 1.1. 물 오염의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영향.....	22
표 1.2.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실현수단으로서의 SDG 6.....	24
표 1.3. 기타 부문에 대한 수질 정책 및 영향 사례.....	30
표 1.4. 이해관계자의 물 협치 참여에 관한 OECD 원칙.....	33
표 1.5.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에너지에 대한 SDG 7.....	38
표 1.6.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의 교통 관련 세부목표.....	53
표 1.7. 지속가능개발목표 및 자원 효율성.....	59
표 1.8.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대한 생물 다양성의 기여도.....	67

표 1.9.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수단	70
표 1.10.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계획 원칙	71
표 3.1. PCSD 확보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오스트리아)	112
표 3.2. PCSD 확보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벨기에)	114
표 3.3. PCSD 확보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체코)	117
표 3.4. PCSD 확보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에스토니아)	119
표 3.5. PCSD 확보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핀란드)	121
표 3.6. PCSD 확보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독일)	124
표 3.7. PCSD 확보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그리스)	128
표 3.8. PCSD 확보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일본)	130
표 3.9. PCSD 확보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리투아니아)	132
표 3.10. PCSD 확보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룩셈부르크)	134
표 3.11. PCSD 확보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멕시코)	137
표 3.12. PCSD 확보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네덜란드)	140
표 3.13. PCSD 확보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폴란드)	142
표 3.14. PCSD 확보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포르투갈)	144
표 3.15. PCSD 확보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슬로바키아)	145
표 3.16. PCSD 확보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슬로베니아)	147
표 3.17. PCSD 확보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스페인)	149
표 3.18. PCSD 확보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스웨덴)	151
표 3.19. PCSD 확보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스위스)	153
표 4.1. SDG 실행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 권장 평가지표	170
표 4.2. 정책간 상호작용 내용 파악을 위한 지표 예시	174
표 4.3. 목표 평점 부여	175
표 4.4. 국경을 초월한 효과 정보 파악을 위한 지표 예시	176
표 4.5. 미래 복지를 위한 자원감시 지표 예시	177
표 4.6. 국경을 초월한 하천유역의 상태 평가를 위한 핵심지표	178
표 4.7. SDG 6과 관련된 PCSD 발전상황 조사를 위한 지표	180
표 4.8. SDG 7과 관련된 PCSD 발전상황 조사를 위한 지표	183
표 4.9. OECD 대도시 데이터베이스: 비교 가능한 도시지표	184
표 4.10. SDG 11과 관련된 PCSD 발전상황 조사를 위한 지표	185
표 4.11. SDG 12와 관련된 PCSD 발전상황 조사를 위한 지표	188
표 4.12. SDG 15와 관련된 PCSD 발전상황 조사를 위한 지표	190

도표

도표 1.1. 2050년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물 수요	23
도표 1.2. 안전한 식수 및 개선된 공중위생시설 이용	27
도표 1.3. 재생에너지 부문별 투자 동향	37
도표 1.4. 지역별 도시인구(1970-2050)	46

도표 1.5. 아프리카의 도시, 지방 및 전체 인구 성장 추이(1950-2050)	47
도표 1.6. 국민 1인당 기성 시가지 증가세(기성 도시화된 국가 포함, 1990-2014).....	48
도표 1.7. 대기오염물질 입자 및 오존에 노출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	49
도표 1.8. 정책 분리 동향: OECD 및 세계(1980-2010)	56
도표 1.9. 세계의 토지 이용(1970/2010).....	66
도표 1.10. 환경적인 목적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개발원조(ODA).....	67
도표 2.1.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의 8가지 기초 요소.....	83
도표 2.2. SDG 실행 조정 리더십	94
도표 2.3. SDG 상호작용의 7단계 유형 분류 체계	101
도표 3.1. 에스토니아의 SDG 실행을 위한 주요 제도적 메커니즘, 정책문서 및 주요 수행주체 ..	120
도표 3.2. 핀란드의 2030 의제 실행을 위한 주요 제도적 메커니즘, 정책문서 및 주요 수행주체	123
도표 3.3. 독일의 SDG 실행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	126
도표 3.4. 슬로베니아의 개발계획 모델	148
도표 3.5. 2030 의제의 5P와 핵심 동인	159
도표 4.1. PCSD 이행상황 조사를 위한 요소	169
도표 5.1. 일관성의 5가지 보완적 단계.....	205
도표 5.2. NDC 기후변화 대응활동과 각 SDG와의 관련성	220
도표 5.3. NDC와 SDG간의 시너지 효과와 절충안	221

박스

박스 1.1. SDG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 시설의 이용 및 지속 가능한 관리 보장	20
박스 1.2. 물관리에 대한 OECD 권고사항.....	28
박스 1.3. 물에 대한 OECD 권고사항 제 6 장 / 물 관리 거버넌스에 대한 OECD 원칙.....	32
박스 1.4. SDG 7: 모두를 위한 적절한 가격의 믿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현대적 에너지 이용 보장	34
박스 1.5. IEA 지속 가능한 개발 시나리오: 기후, 대기오염 및 보편적 에너지 이용의 통합	39
박스 1.6.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적절한 가격의 청정에너지 달성, 습득한 교훈.....	42
박스 1.7. SDG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이 좋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및 주거지 조성	44
박스 1.8. SDG 12: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유형 보장	55
박스 1.9. SDG 15: 육지 생태계의 보호, 복구 및 지속 가능한 이용 촉진, 삼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방지 및 복원, 생물 다양성 상실 방지	64
박스 2.1.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이란 무엇인가?	82
박스 2.2. 2030 의제와 SDG 간 조정을 위한 국가전략 수정	84
박스 2.3. SDG 실행을 위한 국가별 행동 계획	86
박스 2.4. 정책일관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공약한 국가.....	87
박스 2.5. 정책 통합 사례.....	90
박스 2.6. SDG 이행을 위한 장기 계획의 대상 기간	91
박스 2.7. 국경을 초월한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책.....	92

박스 2.8. 최고위급 중앙 조정 메커니즘을 지닌 국가.....	94
박스 2.9. SDG 실행에 하위국가 정부 및 지방정부의 참여.....	97
박스 2.10. 국가 SDG 계획 및 전략에 이해관계자 참여.....	99
박스 2.11. 정책일관성 확보 수단으로서의 모니터링 및 보고 시스템.....	100
박스 3.1. 벨기에의 정책 고립 타파.....	115
박스 3.2. SDG 실행을 위한 우선순위 확인 및 설정.....	118
박스 3.3.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참여방식의 추적조사 시스템.....	123
박스 3.4. 지속 가능한 코코아 생산에 대한 독일의 발의 안.....	127
박스 3.5. 정책일관성 지지 측면에서 공공서비스의 문화적 변화 촉진.....	129
박스 3.6. 일본 사회의 SDG 증진.....	131
박스 3.7. 일관된 환경 정책을 위한 부처간 협력.....	133
박스 3.8. 기후변화대책 재정지원을 위한 조정 노력.....	135
박스 3.9. 멕시코의 SDG 실행을 위한 예산조정.....	137
박스 3.10. 일관된 정책 평가를 위한 제안: SDG 시험.....	141
박스 3.11. 통합 해결책을 통한 지역개발 지원.....	143
박스 3.12.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 발굴.....	152
박스 3.13. MONET 지표 시스템을 이용한 SDG 이행 모니터링.....	154
박스 4.1. OECD 물 관리 거버넌스 지표 틀.....	172

약어

AMIS	농산물시장 정보시스템
BAT	최적가용기술
BRI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BRS	바젤, 로테르담, 스톡홀름 협약 사무국
CBD	생물 다양성 보존협약
CH4	메탄가스
CITES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2	이산화탄소
COP21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파리기후협약
CSO	시민사회단체
DAC	개발지원위원회(OECD)
DEU	국내추출자원 사용량
DMC	국내 원자재 소비량
DMI	국내 원자재 투입량
EAMP	환경손실 조정 다요소 생산성
EC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FC	생태학적 소비 족적
EFE	생태학적 수출 족적
EFI	생태학적 수입 족적
EFP	생태학적 생산 족적
EIA	환경영향평가
ESD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EU	유럽연합
EU-28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말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
EUR	유로화
FAO	유엔식량농업기구
FWF	식품폐기물 족적(FAO)
GDP	국내총생산
GHG	온실가스

HLPF	고위급정치포럼(유엔)
ICIO	국가 간 투입-산출 데이터베이스(OECD)
ICSU	국제학술연합회의
IEA	국제에너지기구
IIASA	국제 응용시스템 분석연구소
ILO	국제노동기구
ITI	통합지역투자
IUCN	국제자연보전연맹
KPI	핵심성과지표
LED	발광 다이오드
LDC	후진개발도상국
litres/MWh	메가와트 아워당 리터
LPG	액화석유가스
MAPS	구매시스템 평가방법론(OECD)
MDGs	새천년 개발목표
MGoS	주요단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
µg/m ³	입방미터당 마이크로그램
MNE	다국적기업
MP	국회의원
MtCO ₂	이산화탄소 메트릭톤 수
N ₂ O	아산화질소
NGO	비정부단체
NOX	질소산화물
NPC	명목보호지수
NPO	비영리단체
NSDS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가전략
NUP	국가도시정책
ODA	공적개발원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PCD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PCSD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PCT	특허협력조약
PINE	환경정책 수단(OECD 데이터베이스)
PM _{2.5}	입자상 대기오염물질(PM _{2.5})

14 약어

PPP	민관협력사업
PRTR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PSE	농업생산자 지지 추정치 비율
PV	태양광발전
REDD+	삼림벌채 및 황폐화에 따른 유엔 배출저감계획
RIA	규제영향평가
SCP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양식
SD	지속 가능한 개발
SDG	지속가능발전목표
SEA	전략환경평가
SEI	스톡홀름 환경연구소
SIA	지속가능영향평가
TFI	무역촉진지표
TRIP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UDE	미사용 국내추출자원
UNDP	유엔개발계획
UNECE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UNEP	유엔 환경
UNGPs	유엔 기업 및 인권규범
UN HLPF	유엔 고위급정치포럼
UNSD	유엔 통계국
VNR	국가평가보고서
WHO	세계보건기구
USD	미국 달러화
WWF	세계야생생물기금

개요

지속가능개발목표(SDG)의 세부목표 17.14는 정책실행의 주요 수단으로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SD)을 제고하도록 모든 국가에 주문하고 있다.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은 정책일관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은 긴밀하게 상호 연결된 지속 가능한 목표 간의 상호작용을 확인, 이해, 관리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국내외 실행조치들로 인해 벌어지는 국경과 세대를 초월하는 잠재적인 정책 효과를 다루기 위한 것이다. 또한 협력적 실행의 장점을 활용하고 SDG 목표간의 불가피한 상충관계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정책적 고립에서 탈피해야 할 필요성도 점점 더 크게 고려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의 기본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일관된 접근법의 필요성을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인식한다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SD) 2018년 판에서는 강력한 제도적 메커니즘이 뒷받침하는 통합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이 좋은 사회로의 변환(2018년 유엔 고위급정치포럼의 주제)”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책에서는 정부가 국가적, 그리고 세계적 수준에서 집합적으로 SDG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과제 및 기회를 파악하기 위하여 PCSD 틀의 제도적, 분석적 및 감시 요소를 적용하고 있다.

제1장 (변환에 대한 일관된 접근법 구축)은 PCSD 렌즈를 사용하여 2018 HLPF에서 심의하는 다섯 개 SDG 간의 중요한 상호연계성을 파악한다.

- SDG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시설의 이용과 지속 가능한 관리 보장
- SDG 7: 모두를 위한 적절한 가격의 믿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현대적 에너지 이용 보장
- SDG 11: 도시 및 주거지를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하도록 조성
- SDG 12: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양식 보장
- SDG 15: 육지 생태계의 보호, 복구 및 지속 가능한 이용 촉진, 삼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방지 및 복원, 생물 다양성 상실 방지

제1장에서는 “세계를 지속 가능한 경로로 전환”한다는 2030 의제의 기본 염원을 실현하는 데 있어 각각의 목표들은 서로 다르지만,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OECD가 분석한 몇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설명한다. 즉,, 단일 부문 또는 고립적인 접근법으로는 SDG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1) 주요 과제, 2)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실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시너지 효과 및 상충관계, 3) 잠재적인 정책 및 거버넌스를 통한 대응의 측면에서 5개 목표를 각각 검토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변환을 보장하고 부실한 제도, 사회 경제적 불평등, 천연자원 고갈 등 취약성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 수행주체, 거버넌스 수준 및 시간 계획 측면의 정책일관성 제고를 권장한다.

제2장 (일관된 SDG 실행을 위한 8가지 기초요소)에서는 많은 정부에서 나타나는 부처할거적 구조 및 의사결정 과정에 도전하는 새로운 정책 상호의존성을 조명하며, SDG 17.14에서 요구하는 PCSD 강화 여부가 다양한 정책 압박을 예측하고, 균형을 맞추며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의 지원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지속가능개발목표와 기존 제도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구조와 의사결정과정을 조정하고, 세계적인 행동의 필요성에 대처하기 위한 부문 간 협력을 촉진하는 행정 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국가에 똑같이 적용되는 만병통치의 PCSD 접근법은 없다. 국가마다 각자의 제도적 메커니즘과 정책의 순서를 결정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HLPF에 국가평가보고서(VNR)를 제출한 OECD 20개국(벨기에,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이 채택한 SDG 실행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적용하는데 있어 계획과 초기의 조치를 살펴본다. 모범적인 제도적 메커니즘과 실행을 위한 PCSD 확보의 8가지 기초요소는 1) 정치적 약속 및 리더십, 2) 정책 통합 3) 장기 계획의 대상 기간, 4) 잠재적 정책 효과의 분석 및 평가, 5) 정책 및 기관 간 조정, 6) 하위국가 정부 및 지방정부의 참여, 7)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8) 감시 및 보고 이다.

제3장 (국가별 개요: 정책일관성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은 8개 PCSD 기초요소의 분석을 보완한다. 이 장은 19개 국가(호주, 벨기에, 칠레,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일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의 최신 국가별 개요를 제시하며, 정책일관성을 위한 비공식 국가별 담당자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에게 보낸 8개 PCSD 기초요소에 관한 설문 조사에 대한 응답 내용을 활용한다. 그 결과는 각 기초요소의 과정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4장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의 진척상황 조사)의 목적은 SDG 세부목표 17.14를 국가 수준에서 감시하고 지표 17.14.1(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운영하는 국가의 수)에 대한 세계적 방법론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 장은 국가 수준에서 PCSD의 진척상황을 조사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는 PCSD 분석틀의 3가지 주요 요소인 1) 제도적 메커니즘, 2) 중요한 상호작용 및 3) 국경과 세대를 초월한 정책 효과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이 접근법을 2018 HLPF에서 논의하는 5개 주제의 SDG에 적용하고, OECD 회원국 및 협력국가의 사례를 통하여 국가적 상황, 우선 과제 및 장기정책목적에 따라 상이한 지표를 확인하여 사용할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 장은 기존의 OECD 측정 틀과 자료 출처를 광범위하게 활용한다.

제5장 (2030 의제를 위한 국내 및 국제의제의 조정)은 여러 단계에서의 PCSD 확보의 중요성을 조명한다. 국가 수준에서의 정부의 실행조치는 중요한 동인이지만, 이해관계자의 참여, 국경을 초월한 집단적 조치, 국제적 처리과정 및 기관들 간의 협력이 없이는 진전을 이룰 수 없다. 집단적 노력은 실행 수단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SDG 17의 핵심 요소다.

PCSD 파트너십 회원국들이 각자 개별적인 견해를 본 보고서에 기고하게 한 것은 이러한 취지에서였다. 일부의 내용은 다른 해당 장에 통합되었지만, 국제적 수준에서 정책일관성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과제와 갈등요인은 제5장에 제시되어 있다.

제1장.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일관된 접근법

본 장에서는 정책일관성이라는 렌즈를 적용하여 2018년 고위급포럼(HLPF)에서 검토할 지속가능발전목표들, 즉 물에 관한 목표 6, 에너지에 관한 목표 7, 도시에 관한 목표 11,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목표 12 및 생물 다양성에 관한 목표 15간의 중요한 상호연계성을 파악한다. OECD의 연구를 활용하여 이 다섯 가지 목표를 1) 주요 과제, 2) 일관적이고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관리하여야 하는 목표 간의 핵심적인 시너지 효과와 절충 및 3) 잠재적인 정책 및 거버넌스를 통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탐구한다. 본 장은 UN HLPF에 분석자료와 주제별 검토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에 대한 OECD 실행 계획의 일부를 구성하는데 OECD가 각국의 SDG 실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분석, 지침 및 수단에 기여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

서론

2018년 7월,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는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이 좋은 사회로의 변환”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각국이 국제적 제휴를 활성화할 것을 촉구하는 SDG 17과 더불어 2018년 포럼에서는 다음의 목표를 검토한다.

- SDG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시설의 이용과 지속 가능한 관리 보장
- SDG 7: 모두를 위한 적절한 가격의 믿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에의 접근 보장
- SDG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및 주거지 조성
- SDG 12: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 보장
- SDG 15: 육지 생태계의 보호, 복구 및 지속 가능한 이용 촉진, 삼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방지 및 복원, 생물 다양성 상실 방지

본 장에서는 2018 HLPF 주제에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SD) 렌즈를 적용한다. 본 장에서는 각 목표가 “세계를 지속 가능한 궤도에 올리는” 2030 의제의 주된 요원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각기 다르지만,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전제하에서 검토대상인 다섯 가지 SDG 간의 중요한 상호연계성을 파악한다.

본 장에서는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이 좋은 사회에 관한 OECD의 광범위한 연구와 분석을 토대로 다섯 가지의 각 목표를 1) 주요 과제, 2) 다른 목표와의 핵심적인 연결성, 즉 일관된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하여야 하는 핵심적인 시너지 효과와 절충 및 3) 정책 및 거버넌스를 통한 대응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SDG 간의 상호연계성은 필연적으로 특정 국가의 사정과 과제에 영향을 받는다. 수많은 목표와 세부목표가 다른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단일 부문 또는 고립적인 접근법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한 SDG 세부목표 17.14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PCSD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일관된 접근법

회복력이 좋은 사회로의 변환은 다차원적 과제다. 이런 전환을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상관된 취약성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부문, 수행주체, 거버넌스 수준 및 시간계획 간의 정책일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취약성 원인에는 부실한 기관과 거버넌스 역량(수직적, 수평적 조정 부족 포함), 사회경제적 불평등, 불의와 차별, 불충분한 서비스와 사회기반시설, 천연자원 고갈, 세계적인 충격, 기후와 관련된 극단적 사건 및 재해가 포함된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 환경오염의 심화, 천연자원 고갈 및 인구구성 변화 등의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일관성 있고 통합된 접근법도 필요하다.

행복을 해치고 취약성을 영구화시키는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책일관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정책일관성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사회와 경제가 자원(자연적, 경제적, 인적 및

사회적)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회복력을 구축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정책일관성은 취약성의 근원인 구조적 불평등과 아울러 사회와 경제의 소비와 생산 양식을 다룬다.

2030 의제에서 정책일관성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 간의 중요한 상호연계성을 관리하고 이런 상호연계성이 지닌 함의를 다룰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일관성은 시너지 효과의 활용, 절충안의 관리, 부정적인 파급효과와 영향의 차단 또는 최소화할 수반한다. 이러한 관점을 2018년도 HLPF에서 검토할 다섯 가지 목표에 적용할 경우 강조되는 분야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물에 관한 SDG 6, 에너지에 관한 SDG 7 및 토지, 삼림 및 생태계에 관한 SDG 15는 주요 천연자원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목표들은 인간 행복의 원천인 자연자산 기반의 주요 구성요소를 나타낸다. 그러한 구성요소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며 경제활동의 주된 토대가 된다. 이러한 부문에서 수립된 정책은 다른 부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부문은 각국이 기후에 관한 SDG 13을 해결하는 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물, 에너지, 토지, 삼림 생태계와 기후 간의 상호작용은 다양하고 복잡하여 부문별 접근법만으로는 다룰 수 없다.
- 이러한 점에서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에 관한 SDG 12는 모든 목표에 적용할 수 있는 변환을 위한 핵심 동인이다. SDG 12에는 자원(자연적, 경제적, 인적 및 사회적 자본)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보장하고 이러한 자산 기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복구하고 보존하기 위한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모든 SDG 간의 효율성 및 자원이용과 관련된 세부목표가 이 목표를 뒷받침한다.
-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및 주거지에 관한 SDG 11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는 환경하에서 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더 증가할 전망이다. 도시와 대도시 지역의 천연자원(물, 에너지, 토지, 삼림 및 생태계)에 대한 수요는 막대하며, 이는 SDG 11을 달성하기 위해 SDG 6, 7, 12 및 15를 동시에 달성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도시는 전체 에너지의 약 67%를 소비하며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71%를 배출한다. 더욱이, 도시는 경제성장을 주도하지만, 불평등도 심화시킨다. 도시의 소득 불평등은 각국 국가의 평균적인 불평등에 비하여 심하며 대도시일수록 더 심한 경향을 보인다(OECD, 2016^[1]). 보건, 주택, 교육, 고용 등의 요소에 걸쳐 복지 수준은 도시 내 및 도시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시설

물은 모두와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다.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아울러 양질의 물과 적합한 위생시설의 공급을 통하여 빈곤과 질병 발생률 감소, 취학과 교육기회 증대, 가정적으로나 경제 주체로서 여성의 역량 강화, 생산성과 식품안전 증대 및 관광산업 진흥 등의 사회적, 경제적 및 환경적 편익을 창출한다(OECD, 2011^[2]). 적합한 양질의 물은

담수 생태계와 담수 생태계가 제공하는 역할(식물성장, 자연 서식지, 영양 재순환, 폐기물 처리 등)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다. 물은 농업, 수경재배, 공업 및 에너지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수자원과 관련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으면 건강을 해치고, 노동생산성이 감소하며,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담수 생태계가 손상됨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이 심각하게 지체되게 된다(OECD, 2017^[3]).

새천년 개발 목표 7은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 보장”의 일환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와 기본적인 위생시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세계 인구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SDG 6(박스 1.1)은 모든 국가가 의무적으로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시설의 이용 및 지속 가능한 관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국면 전환 요소의 역할을 한다(UNGA, 2015^[4]). MDG 7이 식수와 위생시설만을 대상으로 삼았지만, SDG 6은 전체 담수 자원 순환(예를 들면, 수질과 폐수, 물의 사용과 부족, 생태계)을 다룬다.

박스 1.1. SDG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시설의 이용 및 지속 가능한 관리 보장

6.1 2030년까지 모두가 안전하고 적절한 가격의 식수를 전 세계가 공평하게 마실 수 있게 한다.

6.2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여아, 취약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사항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모두를 위해 적합한 위생시설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며 야외 배변을 종결시킨다.

6.3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오염 저감, 쓰레기 투기 방지, 유해 화학물질 방출 최소화, 미처리 하수 비율 반감, 재활용과 안전한 재사용 증대를 통하여 수질을 개선한다.

6.4 2030년까지 모든 부문의 물 사용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담수의 회수와 공급을 보장하며,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인구수를 획기적으로 줄인다.

6.5 2030년까지 모든 수준에서 영역을 초월한 협력을 포함한 통합 수자원 관리를 실행한다.

6.6 2020년까지 산, 삼림, 습지, 강, 대수층 및 호수를 포함한 수자원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구한다.

실행수단에 관한 세부목표

6.a 2030까지 집수, 해수 담수화, 물의 효율적 사용, 하수처리,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을 포함한 물과 위생시설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 분야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6.b 물과 위생설비 관리 개선에 지방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출처: (UNGA, 2015^[4])

물과 관련된 과제

안전한 물과 적합한 위생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초래하며 빈곤 추방에 대한 주된 걸림돌이 된다. 수인성 질병은 병과 조기 사망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주로 빈곤층이 그 영향을 받는다. 매년 340,000명의 5세 미만 아동이 오염된 식수와 불량한 위생시설 및 위생상태로 인한 설사성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WHO/UNICEF, 2015^[5]).

유엔 사무총장이 제출한 두 가지의 SDG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발전이 있었다. 2000년의 82%에 비하여 2015년 현재 세계인구의 91%(66억 명)가 개선된 식수를 이용하고 있었다(UN ECOSOC, 2016^[6]). “개선된” 물이 반드시 인간이 마시기에 적합한 “안전한” 물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같은 해에 2000년의 59%와 비교하여 세계인구의 68%(49억 명)가 개선된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었다(UN ECOSOC, 2017^[7]).

그러나 2015년 현재 6억6천3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개선된 식수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같은 해에 24억 명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위생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중 9억4천6백만 명은 위생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UN ECOSOC, 2016^[6]).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의 주된 과제는 빈곤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물 공급과 위생시설을 확대하는 것이다. OECD 회원국의 공통된 과제는 기존의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교체하거나 개선하는 것이다(OECD, 2017^[3]).

모두에게 안전한 물 사용을 보장하는 과제(SDG6)는 기후변화로 세계 수자원 분포가 변화함에 따라 더욱 심각해졌다.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의 강도, 빈도, 계절적 변동의 변화는 기온뿐만 아니라 지표수 흐름과 지하수 보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OECD, 2013^[8]). 기후변화가 담수에 미치는 영향에는 수온 상승, 수질 악화, 증발량, 극한 상황의 발생 빈도 및 강도 증가가 포함된다(OECD, 2015^[11]).

수질오염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비용에는 1) 생태계의 기능 저하, 2) 물 처리 및 보건 관련 비용, 3) 농업, 어업, 제조업, 관광산업 등과 같은 경제적 활동의 생산성 저하, 4) 특정 지역의 재산 가치 감소 및 5) 추가 개발 기회비용이 포함된다(OECD, 2017^[10]). 수질오염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SDG 및 세부목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시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1. 물 오염의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영향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장애요인으로서의 물 오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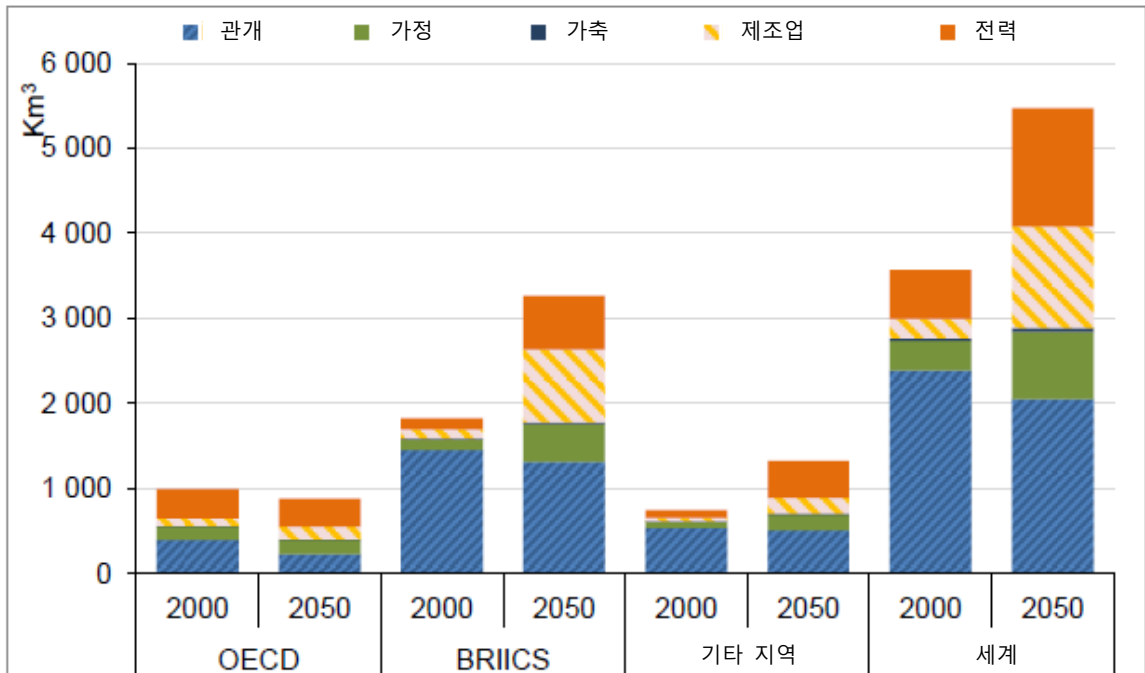
영향	예시	관련 SDG/세부목표
인간의 건강	물 오염은 삶의 질과 공중보건에 대한 가장 큰 건강위험 요소. 보건서비스 비용 증가, 수명단축, 오염사고와 관련된 비상의료비용 발생.	SDG 3.9
생태계 건강	담수 및 해양생태계 손상(어류 폐사, 무척추동물, 해저동물군, 식물군, 서식지 파괴) 및 생태계 기능(오염물질 처리기능 포함) 상실에 따른 회색 대체 기반시설 투자 필요.	SDG 14.2 SDG 15.1 SDG 15.8
사회적 가치	오락적 용도(수영, 낚시, 카약 등) 사용금지, 해변 폐쇄, 미적, 문화적, 정신적 가치에의 영향.	SDG 8.9 SDG 14.7
농업생산성	오염수의 농업용수 사용중단으로 물 부족 심화. 오염된 관개용수 사용으로 인한 목초와 농작물 손상 및 생산성 저하, 토양오염, 가축의 건강과 번식에의 영향, 시설의 불순물 축적.	SDG 2.3 SDG 2.4 SDG 15.3
산업생산성	오염수의 공업용수 사용중단으로 물 부족 심화. 시설의 불순물, 누출 또는 사고처리를 위한 청소비용 발생.	SDG 8.4 SDG 9.4 SDG 12.4
상업적 어업	직접적, 간접적 어류 폐사, 패류의 오염.	SDG 14.7
도시 및 국내 사용	물 처리 및 검사비용, 불순물 및 시설의 조기노후화로 인한 수리비용, 보다 엄격한 규정의 시행에 따른 하수처리비용의 증가. 누출 또는 사고처리를 위한 비상 및 청소 비용 발생.	SDG 11.1 SDG 11.2 SDG 11.7
관광산업	낚시, 뱃놀이, 래프팅 및 수영 등의 활동이 다른 레저활동으로 대체되거나 수질이 더 좋은 지역으로 이동.	SDG 14.7
재산가치	보기 흉한 오염 또는 악취로 수변 재산가치 하락.	SDG 5.a

출처: (OECD, 2017_[10]) 수정.

도시, 농장, 공장, 에너지공급자 및 생태계의 경쟁적인 물 수요로 인해 SDG 6을 달성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의 물 수요증가율은 인구증가율의 두 배였다(OECD, 2016_[12]). 전 세계 식량의 40%를 공급하는 관개농업이 전 세계 회수량의 70%, 특정 개발도상국에서는 85%를 점유하면서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OECD, 2017_[13]). 농업은 또한 증발과 증산으로 인한 손실로 인해 물 소비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OECD, 2016_[12]).

OECD 2050 환경 전망(도표 1.1)에 따르면 전 세계 물 수요는 2000부터 2050년 사이에 55%까지 막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 사용량 할당을 크게 변경시킬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세계 전역에서 제조업(+400%), 전력(+140%), 가정(+130%)용 수요 증가가 관개 수요를 훨씬 추월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OECD, 2012_[14]).

도표 1.1. 2050년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물 수요



주석: 2050 환경전망에 사용된 OECD 기준치는 새로운 환경보호정책 없이 현지의 사회경제적, 환경적 추세가 유지될 경우의 2050년의 변화된 세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본 그래프는 저장수에 대한 수요만 측정하였으며 천수농업은 고려하지 않았다.

출처: (OECD, 2012^[14])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571171>

물 수요 증가는 세계적으로 20억이 겪고 있는 물 부족 사태를 악화시킨다. 북부 아프리카와 서부 아시아는 60% 이상 수준의 물 부족을 겪고 있어 미래에 물 부족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UN ECOSOC, 2017^[7]). OECD 회원국의 3분의 1 이상이 보통에서 중상 정도로 담수 자원이 부족하다(OECD, 2017^[3]). 물이 부족한 유역(즉, 회수율이 가용자원의 40%를 초과하는)에 거주하는 인구수는 2000년의 16억에서 2050년에는 39억 또는 전 세계인구의 4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OECD, 2012^[14]).

다른 지속가능개발목표(SDG)와의 주요 상호작용

물은 모든 SDG 달성을 위한 실현수단이다. 물과 위생시설에 관한 SDG 6의 세부목표와 다른 SDG 간의 보완적인 상호작용을 파악한다면 목표 간의 충돌 가능성을 낮추면서 빠른 진전을 이루어 복합적인 세부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다. 표 1.2는 다른 SDG 달성을 위한 실현수단으로써 SDG 6의 관련성과 아울러 이러한 잠재적 상호작용 몇 가지를 조명한다.

표 1.2.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실현수단으로서의 SDG 6

목표	SDG 6와의 관련성
SDG 1. 빈곤퇴치	물과 위생시설의 보편적인 보급은 빈곤퇴치의 전제조건이다. SDG 1은 무엇보다도 물과 위생시설(6.1, 6.2)을 포함한 기본적인 서비스의 보편적인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SDG 2. 기아퇴치	식량 생산에는 수자원이 필요하다. 농업은 전 세계 담수 수요의 약 70%를 소비하는 가장 큰 물 소비처다. 안전한 물과 위생시설의 보급은 영양과 식품안전 개선에 도움이 된다. 오염된 관개용수를 사용하면 목초와 농작물이 손상되고 생산성이 떨어지며, 토양을 오염시키고, 가축의 건강과 번식에 영향을 미친다.
SDG 3. 건강과 복지증진	물과 위생시설의 보장은 보건 관련 세부목표를 뒷받침한다. 물과 위생시설을 보급함으로써 5세 미만 아동의 주된 사망원인인 설사와 영양실조를 줄일 수 있다. 오염된 물은 전 세계의 가장 큰 건강위험 요소다. 보건서비스 비용, 수명단축, 대형 오염사고와 관련된 비상 의료비용은 이러한 위험과 관련이 있다.
SDG 4. 양질의 교육	물 공급과 위생시설은 학생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며 학생의 출석률과 교육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SDG 5. 양성평등	많은 공동체에서 물을 구하고 물과 위생시설 부족으로 병든 친지를 돌보는 일을 여성과 여자 아이들이 담당한다. 여성들은 물을 구할 수 없거나 물의 배분과 관련된 의사결정권한이 없는 경우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는다. 농업, 보건, 시설관리를 위한 물의 사용을 관리하는 여성의 역할은 필수적이지만 충분히 인정을 받거나 발휘되지 아니한다.
SDG 7. 적절한 가격의 청정에너지	에너지 생산, 화석연료 채광, 바이오연료 공급원료의 관개에 물이 필요하다. 물의 공급을 위한 에너지(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고 에너지 공급을 위한 물 의존도 역시 줄여야 한다. 재생에너지 활용과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물 수요와 물의 흐름, 예를 들면 에너지 생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사용, 부족 및 관리와 관련된 세부목표를 보강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솔루션은 물의 이용가능성과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SDG 8. 완전고용과 경제 성장	물의 경제활동에 대한 중요한 투입물이자 성장인자다. 물, 위생시설, 폐수처리를 통해 건강한 노동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 물 관련 세부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인력이 필요하다. 직장에서의 물과 위생시설 확보는 노동자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좋은 일자리의 핵심 요소다. 여성을 포함한 직업훈련은 충분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분야에서 여성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무급에서 유급으로, 위험한 노동조건에서 안전한 노동조건으로의 이행이 중요하다.
SDG 9. 산업, 혁신 및 사회기반시설	산업은 수자원과 그 기반시설에 의존하고 있다. 수질관리기준 같은 도구를 전 세계에 보급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SDG 10. 불평등 해소	SDG 6과 세부목표는 모든 사람이 필수적인 물과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불평등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SDG 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도시는 물과 위생시설에 의존하고 있다. 도시화로 인해 수질오염과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 지속 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질개선, 폐수처리, 빗물수집 및 처리, 물의 효율적인 사용이 필수조건이다.
SDG 12.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수자원의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사용은 지표수와 지하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SDG 13.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의 강도, 빈도, 계절적 변동의 변화는 기온뿐만 아니라 지표수 흐름과 지하수 보충에 영향을 미친다. 확고한 물관리는 기후변화 영향을 완화시킬 전제조건이다.
SDG 14. 해양 생태계	수질과 폐수관리 개선은 오염부하를 줄여 수생 및 해양생태계 복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SDG 15. 육지 생태계	생태계의 수요충족에 충분한 물을 공급함으로써 물 관련 생태계 보존과 복원에 기여할 수 있다. 생태계를 압박하면 물 부족, 과잉, 오염, 기타 담수시스템(강, 호수, 대수층)에 대한 위험을 포함한 물 관련 위험이 증가한다.
SDG 16. 평화, 정의 및 제도	물 관련 목표 및 세부목표 달성은 국가 내 및 국가간의 분쟁 해소와 국경을 초월한 유역 공유를 위해 필요하다.
SDG 17. 제휴	공유 수자원관리를 위해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다. 정확한 분석과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해 데이터 수집 분담과 공유가 필요하다.

출처: OECD PCD Unit

물, 에너지 및 토지의 상호연계성을 등한시하는 정책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악화시킬 수 있다.

물(SDG 6), 에너지(SDG 7), 토지(SDG 15) 및 농업(SDG 2) 간의 상호작용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모두가 기후 변동성 및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부문의 어느 하나의 정책 결정은 다른 지속 가능 개발 분야뿐만 아니라 나머지 분야에까지 상호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업은 토지, 수자원 및 에너지 부문에 의존하고 있다. 에너지 부문에는 에너지와 수자원이 필요하며 바이오 연료의 경우 농업부문과 상호작용한다.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자원이 필요하지만, 에너지도 필요하다. 물, 에너지 및 토지는 서로 의존하고 있으며 어느 한 자원의 지속 불가능한 사용은 다른 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OECD, 2017_[13]).

관개를 주로 지표수에 의존하는 농업지역이 있는 반면에 지하수에 더 의존하는 지역도 있다. 농업은 잉여양분과 미량오염물질을 지표수와 지하수로 방출함으로써 수질에 영향을 미친다(OECD, 2017_[13]). 수질은 작물 성장을 더디게 하고 가축 오염을 증가시켜 결국에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OECD, 2017_[15]).

지표수 및 지하수원 또는 해수 담수화를 통한 물의 공급, 수송 및 분배, 폐수의 수집 및 처리에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물 공급은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14년 현재, 관개 펌프용 디젤유와 해수 담수화 설비용 가스가 대부분인 5천만 톤의 석유 환산 열에너지와 함께 물과 폐수의 추출, 분배 및 처리에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의 4%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040년까지 물 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IEA, 2016_[16]). 물 공급의 에너지 의존으로 인해 깨끗한 식수와 위생시설의 공급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OECD, 2016_[12]).

에너지 생산, 추출, 화석연료의 수송 및 처리, 전력생산(화력발전소의 냉각 포함), 바이오 연료 공급원료 관개에 물이 필요하다. 총 관개용수의 약 2%가 바이오 연료 생산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OECD, 2017_[13]). 물은 1차 에너지 생산을 위한 가장 큰 물 회수 및 소비 원천인 바이오 연료의 원료 작물에 대한 중요한 투입물이다. 화력발전소는 전력부문의 주된 물 수요처로서 대부분 지표 수원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물을 회수하기도 한다. 용수 확보 가능 여부는 에너지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에너지 옵션의 결정 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OECD, 2016_[12]).

물, 에너지 및 토지의 통합관리에 있어서는 수요와 공급 변동의 직접적, 간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배경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같은 자원을 사용하는 부문 간에 자원확보 경쟁이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에너지 부문의 물 사용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수확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정 자원이 고갈되어 사용하기 어려워지면 다른 자원의 사용량이 증가한다(대체). 예를 들면, 재래식 석유매장량이 고갈되면 석유 및 가스 자원은 가공 처리를 위해 물 사용량을 늘리게 되며 결국에는 수자원을 압박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자원이 고갈되면 공급량 확보를 위해 특정 부문의 투입물 또는 산출물을 다른 부문의 전용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물은 희소하고 에너지는 싼 중동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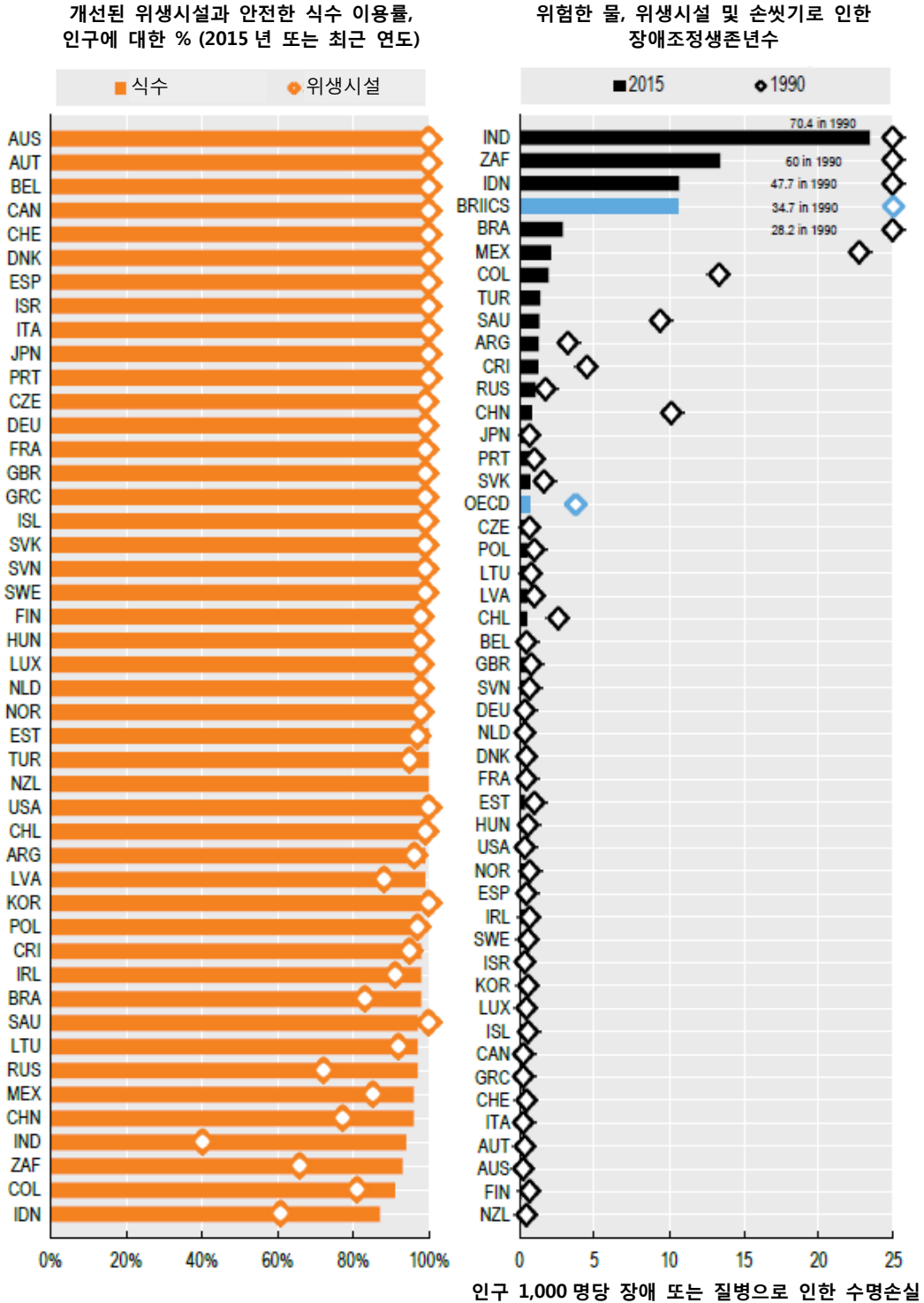
생산한 에너지의 상당량을 펌핑, 수송, 해수 담수화에 사용하고 있다. 이는 물 안전을 위한 목적에는 유익할지 모르나 에너지 수출에 의한 국가수입이 감소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은 증가한다(OECD, 2017^[13]). 목표 간의 상호작용을 무시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지속 불가능한 옵션을 장려하는 유인책을 폐지하는 정책을 입안할 경우에는 토지-물-에너지 결합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안전한 물과 위생시설에 대한 적절한 이용은 보건 관련 세부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안전한 폐수처리를 포함하여 물과 위생시설을 확보함으로써 보건을 증진하고 사망률과 질병 감염률을 낮출 수 있다. 예를 들면 멕시코와 터키에서 물과 위생시설을 개선한 결과,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수명 손실 측면에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1990년 이래 90% 감소). 마찬가지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70% 이상 감소하였다(도표 1.2). 인도네시아, 인도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개선된 위생시설과 식수 설비의 이용을 늘리기 위해 더욱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 국가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기 사망률과 생산성 손실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OECD, 2017^[3]).

도표 1.2. 안전한 식수 및 개선된 공중위생시설 이용

안전한 식수와 개선된 위생시설 이용 부족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였으나, 일부 국가는 심각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주석: 패널 A에 표시된 데이터에는 추정자료가 포함됨.

출처: (OECD, 2017⁽³⁾).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84792>

정책 및 거버넌스를 통한 대응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 이용에 관한 SDG 세부목표 달성에 드는 비용은 현재 투자수준의 세 배인 약 1,140억 달러로 추산된다(Hutton and Varughese, 2016[17]). 투자도 중요하지만, 투자를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속 가능한 솔루션으로 연결되도록 보장하는 더 효과적인 정책과 물 관련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물의 가용성과 사용, 홍수, 가뭄, 수질오염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에 영향을 주는 영역에서의 확고한 물 정책과 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수준을 결합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바람직한 거버넌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OECD는 1970년대 초부터 물에 관한 정책지침을 제공해 오고 있다. 전문적 연구, 정책검토 및 토론을 통하여 물관리 거버넌스와 경제적 측면을 문서로 만들었으며, 각국이 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포용적으로 입안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기준을 제정하였다. 2016년 12월, OECD는 물 관리 거버넌스에 대한 OECD의 원칙을 반영하는 *물관리에 대한 위원회 권고사항*(박스 1.2)을 채택하였다.

박스 1.2. 물관리에 대한 OECD 권고사항

OECD 위원회가 2016년 12월 13일 채택한 물에 관한 OECD 권고사항은 수자원 관리와 물 공급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일련의 주제에 대한 정책지침을 제시한다.

- 물 공급량 관리
- 수질 관리
- 물 관련 위험 및 재난 관리
- 바람직한 물 관리 거버넌스 보장
- 물과 물 관련 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재정, 투자 및 가격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은 물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권고한다.

- 장기적인 물관리 계획 및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서 그리고 다양한 부문(예를 들면, 토지관리, 식품 및 에너지 안전, 도시개발, 공간계획, 생물 다양성 보호) 간에 증진된 정책일관성에 따라 지방 상황에 맞게 조정된 정책
- 물 수요관리와 물의 효율적인 사용 촉진과 최소의 사회적 비용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역동적이고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배분제도를 연계한 정책.
- 오염유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제력 있고 경제적이며 자발적인 정책 수단을 통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경감시키고, 통제할 수 있는 정책.
- 물 관련 재해위험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비상관리 역량과 재정적 보호 전략을 개발하는 정책.
- 물 관리 거버넌스의 유효성과 효율성, 신뢰 및 참여도를 증진하는 정책.
- 물 관련 서비스, 물 공급 기반시설, 수자원 관리 및 물 관련 생태계 보호에 대한 지속 가능한 재정지원 대책이 포함된 정책.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행 과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정책.

출처: (OECD, 2016^[18]).

수자원 관리와 정책일관성 확보 필요성

수자원에 대한 압박이 지속해서 가중됨에 따라 수자원과 물 관련 서비스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관리가 모든 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전 세계 과제 규모를 화폐로 환산(환경위험 제외)하면 연간 5천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 비용 중 부적절한 물 공급 및 위생설비가 연간 2,600억 달러를 차지한다(Sadoff, 2015^[19]).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자원에 압박이 가해져 다양한 경제주체 간에 자원확보 경쟁이 격화되며, 지역에 따라 분쟁도 발생한다(OECD, 2009^[20]).

물 정책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의 가용성과 사용, 물 관련 위험(가뭄, 홍수, 오염)에의 노출 및 취약성은 토지이용, 도시개발, 농업, 기후 및 에너지 등 다른 영역의 다양한 정책안에서 파생된다. 이러한 영역 간의 정책일관성은 정책안들이 상호 보완되고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다양한 부문으로부터 야기되는 외부성을 해결하고 수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일관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일관성은 다른 정책부문에서 행해진 조치가 수질과 담수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도시개발, 농업, 기후, 천연자원, 임업, 에너지, 자연보호 및 인체 건강 등 다양한 정책부문은 수질오염과 그 관리의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농업 생산원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면(생산보조금에 의하여), 시장이 왜곡되고 식품, 사료 섬유생산이 급증하여 양분이 수역으로 유출됨으로써 그 처리를 위한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비용이 하류의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이에 따라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최적의 지속 가능한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게 된다(OECD, 2017^[10]).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일관성은 다음 사항을 수반한다.

- 수질오염을 확산시키는 토지이용의 변경이나 강화를 유도하는 보조금의 폐지.
- 대기질 및 수질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동시에 가져오는 질소산화물 저감과 같은 해결책 강구.
- 수질오염(점 오염원 및 비점 오염원) 관리와 대기오염 관리, 토지이용 관리, 물 공급량 관리의 통합.

정책일관성은 서로 모순되는 신호와 유인책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수질 개선 노력과는 우연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정부 정책이나 보조금도 발생한다. 예를 들면,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서식지 보존을 목적으로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면 비료, 살충제, 화석연료 등의 투입물 사용량이 증가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수질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물흐름을 유지하는 정책은 반건조 지역의 관개농업을 장려하는 정책과

상충된다(OECD, 2017_[10]).

물에 관한 OECD 권고사항(박스 1.2) 6장에는 물 관리 거버넌스에 관한 12개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박스 1.3). 원칙 3은 효과적인 부문 간 조정, 특히 물 정책과 환경, 보건, 에너지, 농업, 산업, 공간계획 및 토지이용 간의 다음 수단을 통한 조정을 장려한다.

- 부문 교차계획을 포함하여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및 정부계층의 전역에 걸쳐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정 메커니즘.
- 위험 예방뿐만 아니라 물의 가용성, 수질 및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고려한 수자원의 사용, 보호 및 정화를 위한 조직적인 관리.
- 감시, 보고 및 검토를 통하여 물 부문 내외의 실무, 정책 및 규정으로부터 정책 일관성 확보에 대한 장애 요인 확인.
- 부문 전략들을 물관리 요구사항에 맞추고, 지방 협치와 규범에 적합한 해결책을 도출하고 부문별 전략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유인책 및 규정. 원칙 10은 그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영향과 요구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다루고 있다.

정책일관성은 수질 및 공급량 관리와 토지, 에너지, 생물 다양성, 도시계획, 보건, 폐기물, 건설, 교통 및 기후변화 등 기타 부문 정책 간의 부문, 이해관계자, 용도에 걸친 공동혜택을 최적화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물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해수 담수화를 강화하면 다량의 에너지가 필요하며 고농도의 소금물이 생성된다. 부문 간의 잠재적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최적화하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여야 한다(OECD, 2017_[10]). 표 1.3에는 수질에 대한 개입에 따라 잠재적으로 나타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의 예시가 수록되어 있다.

표 1.3. 기타 부문에 대한 수질 정책 및 영향 사례

수질에 대한 개입	잠재적 영향
강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폐수의 재사용	부정적 영향: 강의 환경적 흐름 감소, 폐수와 슬러지를 과잉지역에서 부족지역으로 운반하고 처리하기 위한 에너지 비용 증가. 긍정적 영향: 인산염 같은 유한한 자원의 활용, 물 안전 향상.
인체건강 개선을 위한 식수수질기준 강화	부정적 영향: 물 처리 관련 에너지 및 화학약품 소비 증가, 탄소 발자국 증가. 긍정적 영향: 건강관리 비용 감소.
분산된 물 및 폐수 시스템으로의 전환	긍정적 영향: 장거리 급수에 필요한 에너지 및 화학약품 소비와 탄소 발자국 감소.
습지 복원	긍정적 영향: 물 처리 및 에너지 소비 감소, 생물 다양성 증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홍수위험 감소.
침식 및 퇴적 방지를 위한 토양 보존	긍정적 영향: 토지이용 효율, 생물 다양성, 식량생산, 물 및 비료의 효율성 증대.

출처: (OECD, 2017_[10]).

모두에게 물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모두가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자원, 정책 및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좋은 거버넌스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부실한 거버넌스는 많은 인구가 필요로 하는 물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물 관리 거버넌스는 “물관리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며 이해관계자가 이해관계와 관심사를 표명하고 관철하고, 의사결정자가 책임을 지는 정치적, 제도적, 행정적 규칙, 실무 및 절차(공식적 및 비공식적)로 이루어진 체계”로 정의된다(OECD, 2015_[21]). 다시 말해서, 누가, 무엇을,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OECD, 2011_[22]).

OECD 다단계 거버넌스 틀에는 효과적인 물 정책의 입안과 실행에 관련된 일곱 가지의 “격차”가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격차는 물 부문의 주요 특성(국지적 및 세계적, 자본 집약적, 분권적, 독점적 등)과 내재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특성에 의해 심화하기도 한다. 격차는 행정적 경계와 물 경계 간의 부조화(행정적 격차), 고립과 분리 간의 부조화(정책 격차), 서로 벗어나는 논리와 목적(목적 격차), 정보의 비대칭(정보 격차), 역량 결핍(역량 격차), 불충분한 자원(재정 격차) 및 건전성과 투명성(책무 격차)으로 분류한다(OECD, 2016_[23]).

SDG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대부분은 다양한 규모와 단계의 정부 및 정책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물 문제는 지리적, 시간적 차원을 포함하여 부문, 장소 및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 물 정책은 보건, 환경, 평등과 공평, 농업, 에너지, 공간계획 및 빈곤 완화 등 지속 가능한 개발에 중요한 다양한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국은 물 정책을 분권화함으로써 정부 계층 간의 상호의존성을 조정할 필요성이 커졌다(OECD, 2011_[22])(OECD, 2012_[24]). 모든 유형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고 모든 계층의 정부 부처와 조정 메커니즘에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더욱 물이 폭넓은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의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접근법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하다(OECD, 2016_[23]).

물 관리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는 무엇보다도 이해관계자의 참여, 잘 설계된 규제 틀, 적합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충분한 역량, 청렴 및 투명성이 포함된다. 2015년 장관급회의에서 채택된 OECD 물 관리 거버넌스 원칙(박스 1.3)은 물에 관한 OECD 권고사항 6장에 반영되어 있다. 동 원칙은 권고사항의 해당 부분을 실행하기 위한 지침이 된다. 동 원칙을 통하여 “과도한”, “과소한” 또는 “심하게 오염된” 물을 지속 가능하고 통합된 포용적인 방식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물 관리 거버넌스 시스템을 증진하고자 한다. 12개 원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유효성,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으로 지속 가능한 물관리와 복지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효율성, 공공의 신뢰와 인식을 구축하고 사회 전반의 민주적 합리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신뢰와 참여 등 세 가지 차원의 물 관리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OECD, 2015_[21]). OECD 원칙은 세계 물 관리 거버넌스 총회에 모인 140개 이상의 주요 이해관계자 단체 및 OECD 회원국과 관련 비회원국이 참여한 포용적인 과정을 통하여 개발되었다.

박스 1.3. 물에 대한 OECD 권고사항 제6장
물 관리 거버넌스에 대한 OECD 원칙



1. 물 정책 결정, 정책실행, 운영관리 및 규제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계 기관들 간의 조정을 촉진한다.
2.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통합 유역 거버넌스 시스템 내에서 **적정한 규모**로 물을 관리하고 각 규모 사이의 조정을 촉진한다.
3. 효과적인 부문 간, 특히 물 정책과 환경, 보건, 에너지, 농업, 산업, 공간계획 및 토지이용 정책 간의 조정을 통하여 **정책일관성**을 확보한다.
4. 담당 기관의 **역량** 수준을 해결할 물 관련 과제의 복잡성과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에 맞게 조정한다.
5. 일관성 있고 비교 가능하며, 정책과 관련된 물과 물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적시에 생산, 갱신 및 공유하고, 물 정책의 지도, 평가 및 개선에 활용한다.
6. 협치 구조를 **물 관련 재원조달**에 도움이 되고 재무자원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적시에 할당되도록 구성한다.
7. 적합한 물관리 **규제** 틀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실행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8. 담당 기관, 정부 계층 및 관련 이해관계자에 걸쳐 **혁신적인 물관리 거버넌스** 실무가 채택되고 실행되도록 추진한다.
9. 의사결정에서의 책무성과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물 정책, 물 관련 기관 및 물 협치 틀에 **건전하고 투명한** 실행 방법을 주류로 편입시킨다.
10. 물 정책의 설계와 실행에 있어 정보에 근거한 성과 지향적인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장려한다.

11. 물 사용자, 농촌과 도시지역 및 세대 간의 **절충안** 관리에 도움이 되는 물 협치들을 장려한다.
12. 적절한 경우에 물 정책과 거버넌스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필요한 경우 수정하도록 장려한다.

출처: (OECD, 2015_[21]).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물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지원하는데 필수 불가결하다.

물 관련 과제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해 볼 때,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정책입안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OECD, 2015_[25]).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공동 목적을 달성하고, 선호, 필요 및 원하는 결과를 파악하며, 위험, 비용 및 편익의 공유와 관련된 집단 의사결정을 위한 건설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실행된 정책에 대한 수용과 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시너지를 구축하고 부문 간, 민관협력 및 공공기관 간 협력에 걸쳐 공동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 통합, 조화 및 협치를 위해서 필요하다(OECD, 2017_[10]). OECD는 공공정책을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물 정책과 프로젝트를 입안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 이해관계자의 물 관리 거버넌스 참여에 관한 원칙(표 1.4)을 제정하였다. “물 정책의 설계와 실행에 있어 정보에 근거한 성과 지향적인 공헌을 하기 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장려”에 관한 원칙 10은 OECD 물 관리 거버넌스 원칙의 참여적인 관점을 대변한다(OECD, 2015_[25]).

표 1.4. 이해관계자의 물 관리 거버넌스 참여에 관한 OECD 원칙

원칙	세부 내용
1. 포용성과 공평성	결과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책임, 핵심 동기 및 상호작용을 파악한다.
2. 목표의 명확성, 투명성과 책무성	궁극적인 의사결정 라인, 이해관계자의 참여 목적, 투입물의 용도를 정의한다.
3. 역량과 정보	적절한 재무적 및 인적자원을 할당하고 성과지향적인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다.
4. 효율성과 유효성	이해관계자의 참여 과정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학습하고, 조정하며, 개선한다.
5. 제도화, 구조화 및 통합	명확한 법적, 정책 틀, 조직구조/원칙 및 담당기관을 참여과정에 적용한다.
6. 적응성	참여 형태와 수준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한다.

출처: (OECD, 2017_[10]); (OECD, 2015_[25]).

목표 7: 모두를 위한 적절한 가격의 믿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현대적 에너지

에너지는 인류의 발전과 번영에 필수 불가결하다. 에너지는 빈곤퇴치와 경제성장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동시에 화석연료를 사용한 에너지 생산은 전 세계 온실가스(GHS)와 대기오염물질의 주된 배출원이다. 현대적이고, 적절한 가격(즉,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지 않은)의 믿을 수 있는(항상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 확보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아직 보편적인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국가와 국제의제에 있어서 에너지는 핵심우선과제에 속한다. 2015년에 채택된 두 가지의 중요한 세계 협약에서 이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 협약인 지속가능개발목표 2030 의제에는 에너지에 관한 독립 목표(SDG 7)가 포함되어 있으며, 두 번째인 파리기후협약에는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보편적인 이용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SDG 7에서는 각국이 모두를 위한 적절한 가격의 믿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현대적 에너지 이용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스 1.4. SDG 7: 모두를 위한 적절한 가격의 믿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의 이용 보장

7.1 2030년까지 적절한 가격의 믿을 수 있는 현대적 에너지 서비스의 보편적인 이용을 보장한다.

7.2 2030년까지 세계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7.3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효율 개선율을 두 배로 높인다.

실행수단에 대한 세부목표

7.a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첨단 청정 화석연료 기술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연구와 기술 보급 촉진을 위한 기술협력을 증진하고 에너지 기반시설과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한다.

7.b 2030년까지 각 지원프로그램에 따라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인 개도국, 도서 개발도상국, 내륙 개발도상국에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술을 개발한다.

출처: (UNGA, 2015_[4]).

에너지 관련 과제

2016년 현재 전 세계인구의 86%가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IEA의 추산에 의하면 2000년 이후 거의 12억 명이 전력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2016년에 최초로 전력을 사용할 수 없는 인구가 11억 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전 세계인구의 14%가 아직도 전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들은 주로 농촌주민이다.

2000년 이후 8억7천만 명에게 전력이 보급된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이 최근 전력이용의 세계 발전을 전반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는 전체 인구의 58%인 6억 명이 전력을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최대의 에너지 빈곤 지역이다.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의 도시지역 전력보급률은 71%(14개국의 도시지역 전력보급률은 50% 미만)이며 농촌주민은 22%만이 전력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IEA, 2017_[26]). 대부분의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의 도농 간 격차는 50%를 초과한다(OECD, 2016_[27]).

개발도상국 중의 일부에서는 빈곤선 이상임에도 전력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전력기반시설 부족 또는 전력공급 비용 과중 등의 체계적인 장애가 존재한다는 신호일 수 있다.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서는 최소 1억2천만 명의 빈곤선 이상의 사람들이 전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시아의 개발지역 해당 인구는 7천만 명이다(IES, 2017_[26]). IEA에 따르면, 전력이 보급된 가정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개발도상국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가정에 대한 보편적인 에너지 보급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보장될 수 없다. 모든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업, 산업 및 상업활동 같은 생산적인 용도에도 에너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

청결한 조리법의 이용은 생계 개선과 가정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 감소, 여성의 사회진출, 환경보호 모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IEA가 최근 추정된 바에 따르면, 오늘날 아직도 28억 명이 청결한 조리를 할 수 없으며 청결한 조리의 개선 정도가 개발도상국의 높은 인구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이 지역에서는 조리를 바이오매스에 의존하고 있는 인구가 2000년 이후 4억 명이 증가하였다(IEA, 2017_[26]). IEA는 또한 청결한 조리가 불가능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에 살고 있으며, 특히 인도의 경우 8억3천4백만 명이 해당한다고 추정한다. 이 문제는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리를 하는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심각하다(IEA, 2017_[28]). 가정에서의 고체 바이오매스 사용으로 발생한 매연은 매년 280만 명의 조기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주요 건강위험요소가 되고 있다(IEA, 2016_[16]).

청결한 조리법 이용에 대한 IEA 전망을 살펴보면 2030년까지 SDG 세부목표 7.1을 달성하는 길은 아직도 요원함을 알 수 있다. IEA 새로운 정책 시나리오(즉 현행 및 계획 정책)²에 따르면 청결한 조리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인구가 23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공급이 거의 진행된 아시아 개발 도상국에서도 여전히 2030년에 당시 전 세계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3억 명이 청결한 조리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전기공급이 이미 완료된 중국에서도 약 4억5천만 명이 아직도 바이오매스를 사용한 전통적인 조리법에 의존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2억4천7백만 명으로 감소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지역은 청결한 조리를 할 수 없는 인구가 2030년까지 9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IES, 2017_[26]).

현대적 에너지로의 전환은 도전적인 과제이다. 가장 기초적인 필요만을 충족하는 것 이상으로 현대적 에너지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가용하고, 적절한 가격(즉,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지 않은)이어야 하며, 충분하며(즉, 공급량과 품질이 충분한), 수용 가능하며(역사 또는 문화적 요소에 부합하는), 안정적(항상 사용할 수 있는)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보급된 국가에서도 에너지의 품질과 적절한 가격 유지는 난제로 남아있다(IEA, 2017_[26]). 더욱이, 현대적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청정에너지로 대체하거나 전체 에너지 수요를 줄임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 및 지역의 대기오염물질을 포함한 에너지 사용에 따른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억제해야 한다(OECD, 2016_[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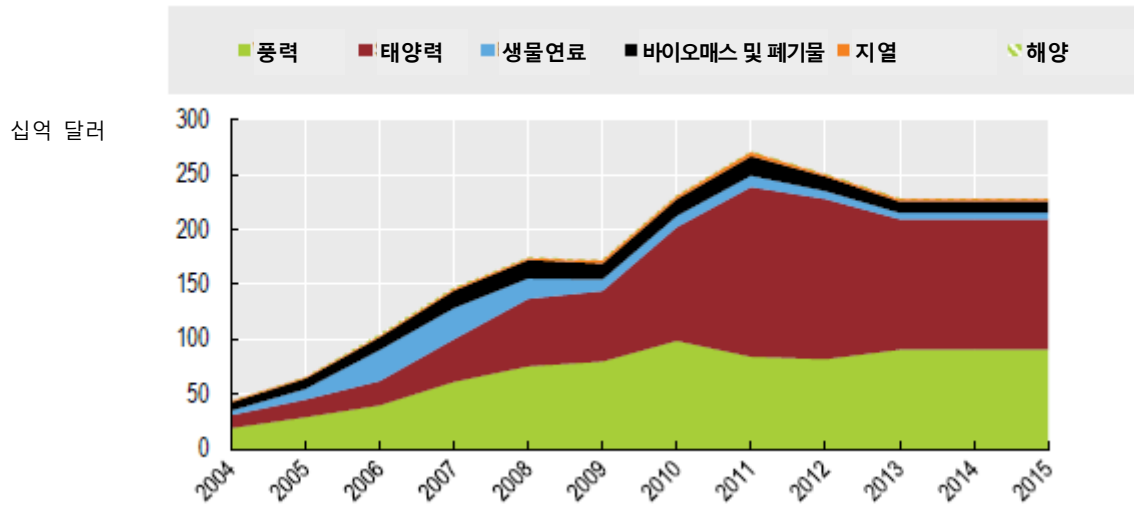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은 관련 SDG를 달성하는데 필수 불가결하다. 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달성(SDG 8), 지속 가능한 도시 건설(SDG 11),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 보장(SDG 12) 및 기후변화 대응(SDG 13)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6년의 GDP 한 단위 생산에 드는 일차 에너지 수요량 척도인 세계 에너지 원단위(energy intensity)는 2.0% 낮아졌다(IEA, 2017_[28]). IEA의 보고에 의하면 에너지 원단위를 낮추기 위한 전반적인 발전은 2015년 2.8% 낮아진 것과 비교하여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 경제의 변화를 에너지 원단위가 감소한 원인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2015년에 주로 중국의 상황변화에 따라 철강과 시멘트 생산량이 2~3% 감소하였다(IEA, 2016_[16]). SDG 달성에 대한 2017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에너지 효율성 개선율을 두 배로 높이는 세부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세계적으로 충분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UN ECOSOC, 2017_[7]).

IEA는 장기적으로는 세계 모든 지역의 GDP 에너지 원단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2014년부터 2040까지 매년 평균 3.5%씩 에너지 원단위를 개선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도가 매년 3.0%로 그 뒤를 이을 전망이다. 세계 에너지 원단위는 2040년까지는 2014년 대비 60% 이상 감소할 것이지만, 2010년부터 2030년까지의 목표는 매년 평균 2.1% 개선인데 비하여 IEA 새로운 정책 시나리오의 추정치는 동일기간에 대하여 매년 1.9% 개선에 그쳐, SDG 7 목표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차이는 작지만, SDG 7.3 세부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며, 세계 모든 지역에서 더욱 엄격한 에너지 효율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IEA, 2016_[16]).

재생에너지는 탄소 배출량이 적고 더욱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에 필수적이다. 2017년 OECD 녹색성장 지표에 따르면 2005년 이후 국내외의 재생에너지 투자는 네 배 이상 증가하였다(도표 1.3). 2015년에는 풍력(38%)과 태양에너지(56%)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가 집중되었다. 전 세계의 재생 가능한 자원을 활용한 전력 생산에 대한 투자는 풍력 및 태양광발전 원가의 하락에 힘입어 화석연료기술에 대한 투자를 능가하였다(OECD, 2017_[3]).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열과 수송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력부문의 기술진보와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조합에 따른 이득은 SDG 7.2 목표달성에 필요한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친다(IEA and the World Bank, 2017_[30]).

도표 1.3. 재생에너지 부문별 투자 현황

세계 전체, 2004-2015



출처: (OECD, 2017^[31]).

다른 지속가능개발목표(SDG)와의 주요 상호작용

에너지의 중요성은 SDG 7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에너지는 IEA의 세계 에너지전망 2017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다른 SDG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SDG 3에는 가정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청결한 조리시설의 미보급이 그 주된 원인)을 줄이는 세부목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SDG 11에는 기후변화 적응 및 도시와 주거지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SDG 12에는 유해하고 비능률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삭감을 위한 세부목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SDG 13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편적인 에너지 사용을 보장할 정책은 다른 SDG를 달성하기 위한 요건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현대적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품질이 낮고 비싼 석유 같은 에너지의 구매에 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지출해야 하는 빈곤 가정의 빈곤퇴치(SDG 1) 등과 같은 각국이 직면하는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다. 양질의 교육 제공(SDG 4)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의 9천만 명의 초등학교 취학 아동들이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학교에 다니면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미래의 경제적 가능성을 박탈당하고 있다(IEA, 2017^[26]). 표 1.5에는 에너지에 관한 SDG 7과 다른 SDG 간의 주요 상호연계성이 제시되어 있다.

표 1.5.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에너지에 대한 SDG 7

목표	SDG 7와의 관련성
SDG 1. 빈곤퇴치	에너지는 기본적 서비스에 속하므로 보편적인 에너지 공급은 기본적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SDG 14의 달성에 기여한다.
SDG 2. 기아퇴치	전력의 공급은 관개, 기계화 및 냉장보관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킨다. 에너지효율 개선은 에너지 투입량을 줄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SDG 3. 건강과 복지증진	에너지는 인체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주된 대기오염원이다. 에너지 공급,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다.
SDG 4. 양질의 교육	안정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할 수 없는 국가에서 에너지 공급을 보장함으로써 교육적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SDG 5. 양성평등	바이오매스를 사용하여 조리를 하는 가정에서는 매일 땀감을 구하는데 1.4시간, 효율이 낮은 스토브로 조리하는데 몇 시간을 할애하며 주로 여성이 그 일을 부담한다.
SDG 6.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	에너지 생산, 화석연료 채광, 바이오연료 공급원료의 관계에 물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재생에너지 활용과 에너지효율 향상은 에너지 생산에 대한 물 수요를 줄임(비효율적인 화석연료에 의한 에너지 공급시스템에 비하여)으로써 물 사용, 부족 및 관리와 관련된 세부목표 달성에 힘을 보탬 수 있을 것이다.
SDG 8. 완전고용과 경제성장	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에너지 설비의 설계, 제작 및 설치를 통해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할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SDG 9. 산업, 혁신 및 사회기반시설	회복력이 좋은 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혁신의 장려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존 기반시설의 개선은 에너지 조합에서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여 에너지 공급에 관한 SDG 7의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SDG 10. 불평등 해소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고 특정한 종류의 재생에너지(농업과 삼림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에너지 등) 비중 확대는 농촌의 빈곤층에게 교육, 의료, 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득과 평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SDG 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에너지는 도시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도시가 성장하고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한다. 특히 청정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은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오염이 적으며 보다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환경을 조성한다.
SDG 12.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빈곤층에 대한 부정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이며 시장을 왜곡하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술 및 소비양식의 효율적인 활용에 기여할 수 있다.
SDG 13.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는 세계적인 온실가스(GHG)의 주된 배출원이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에 충분하지는 않다.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임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SDG 14. 해양 생태계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술 및 소비양식을 확산시켜(탄소배출량을 줄임으로써) 해양 산성화를 방지할 수 있다.
SDG 15. 육지 생태계	수력발전용 댐 같이 재생에너지 생산 확충을 위한 토지이용 변화는 육지 생태계 보호, 삼림파괴 방지 및 생물 다양성 손상 방지를 위한 세부목표들과 대립될 수 있다.
SDG 16. 평화, 정의 및 제도	보편적인 에너지 공급,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의 모든 계층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이 있으며, 투명한 기관이 필요하다.
SDG 17. 제휴	모두를 위한 적절한 가격의, 믿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필요한 재무적 자원을 동원하고 자발적으로 지식과 혁신기술을 공유하여야 한다.

출처: (ICSU, 2017^[31]) 수정

에너지에 관한 SDG 7, 기후변화에 관한 SDG 13, 건강(대기오염)에 관한 SDG 3 및 도시에 관한 SDG 11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분야의 상호관련성은 파리협약에도 검토되었다. 파리협약의 목적은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범세계적인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이고 이런 목적은 빈곤 퇴치를 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과 노력의 맥락에서 명시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다(IEA, 2017_[28]). IEA의 세계 에너지전망 2017에는 에너지와 밀접하게 관련된 3개의 SDG 즉, SDG 13, SDG 3 및 SDG 11의 개선상황 측정기준을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시나리오가 소개되었는데 이것은 에너지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통합적인 새로운 접근법이다(박스 1.5).

**박스 1.5. IEA 지속 가능한 개발 시나리오:
기후, 대기오염 및 보편적 에너지 이용의 통합**

IEA는 세계 에너지전망 2017(WEO 2017)을 통하여 상호 관련 주요 SDG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법을 제공하는 지속 가능 개발 시나리오를 소개한다. 즉, 통합적인 접근법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SDG 13), 대기오염을 방지하여 건강에 기여하며(SDG 3.9), 보편적인 에너지 보급을 달성(SDG 7.1)하는 것이다. 현행 및 이미 정해진 정책계획을 조사하는 다른 WEO 2017 시나리오와는 달리 지속 가능 개발 시나리오는 바람직한 결과에서 출발하여 그 도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한다. 이러한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파리협약에 따라 초기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극대화하고 이후 빠르게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속 가능 개발 시나리오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보편적인 에너지 이용과 청결한 조리는 기후변화 대응목표 달성을 방해하지 않고 최소의 비용으로 대기오염을 상당히 줄이면서 달성할 수 있다.
- SDG 7에 규정된 2030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목표는 달성되었거나 초과 달성되었다.

- 2040년까지 모든 수단을 마련하여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석탄 수요가 격감하며 석유 소비가 절정에 달하여 저탄소 에너지원이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두 배로 증가하여 40%가 된다.
- 2040년까지 전력생산은 신재생 발전(60% 이상), 원자력(15%),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6%)에 의존하여 거의 탈 탄소화되며, 산업부문의 배출량 저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전기차가 신속하게 주류에 편입되지만, 교통부문 탈 탄소화를 위해서는 전 분야 특히 도로화물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효율 척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출처: (IEA, 2017[28]).

이러한 목표 중 어느 한 목표를 실행하면 다른 목표의 달성에 기여한다. 예를 들면, 청결한 조리시설이 보편적으로 보급되면 전통적인 조리 연료인 고체 바이오매스의 사용이 전반적으로 감소함으로써 가정 에너지 관련 대기오염원이 제거된다. 전통적인 조리 연료인 바이오매스 사용이 중지되면 액체 석유가스로 대체될 경우에도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여 순 기후변화 이득을 가져온다. SDG 세부목표들 사이의 또 다른 중요한 시너지 효과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대한 공동의 이득을 취하면서 보편적인 전력 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최소 비용의 선택으로서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발전의 보급이 포함된다. 보다 효율이 높은 기술을 보급하고 최종 소비자의 친환경 전화를 포함하여 연료 연소에 의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어야 하는 기후변화 대응요건은 오염물질 배출 감소 측면에서 공동의 이득을 가져온다(IEA, 2017_[28]). 이는 또한 조리를 고체 바이오매스에 의존하고 조명에 촛불, 석유 기타 오염원이 되는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매년 280만 명이 조기에 사망하는 사실을 고려할 때 건강 관련 세부목표(SDG 3.9)의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IEA, 2017_[26]). 통합된 정책 결정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특정 목표를 분리하여 집중할 경우 에너지 부문의 경로를 속박하여 다른 목표의 달성을 방해하거나, 적어도 비용이 더 들게 하거나 달성을 곤란하게 할 위험이 있다(IEA, 2017_[28]).

에너지와 물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법은 일련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필수 불가결하다.

에너지 접근, 에너지 안전 또는 에너지 사용의 환경 영향과 관련된 에너지 시스템의 취약성은 물의 가용성, 변동성 및 예측 가능성의 변화로 인하여 악화될 수 있다(OECD, 2016_[12]). 에너지와 물의 연관성 관리는 한 부문의 개발이 다른 부문에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에 관한 목표(SDG 6)와 적절한 가격의 청정에너지 공급 목표(SDG 7) 간에는 적절히 관리하면 이 두 목표에 속한 세부목표 모두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연결 관계가 존재한다. 또한 통합적인 방식으로 검토하면 양 시스템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에너지와 물 절감방안도 많이 찾아낼 수 있다.

예를 들면, 농부들에게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물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지속

불가능한 속도로 지하수를 사용하도록 부추기는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물의 남용에 대한 우려 외에 고농도의 비료와 살충제가 함유된 폐수의 잠재적인 유출 및 수로를 오염시킬 수 있는 토양침식에 기인한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저탄소 경로로 이행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특정한 경우에 물 부족을 악화시키거나 물의 가용성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풍력 또는 태양광발전(PV) 등의 기술은 물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지만, 탈 탄소경로가 생물 연료에 의존할수록 더 많은 물을 소비하게 된다(IEA, 2016^[16]).

농촌지역에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관개, 기계화 및 냉장보관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으며 식량 안전을 높이고, 생활 수준 향상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며, 기후에 대한 취약성을 해소할 수 있다.

에너지는 도시에 필수불가결하다.

도시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형태와 규모는 경제, 환경 및 주민의 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주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도시는 주로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혼잡 및 소음을 포함한 부정적인 영향의 원인을 제공하며 그 영향으로 곤란을 겪는다. 에너지와 관련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71%가 도시의 에너지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시의 에너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활동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에너지 가격변동의 영향을 받는다.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면 공급체인을 통한 생산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구가 그 영향을 받는다. 도시의 에너지 수요는 도시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도 도시의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재생에너지를 도시에 보급하여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Sugahara and Bermont, 2016^[32]).

정책 및 거버넌스를 통한 대응

IEA의 추정에 의하면 모두에게 전력과 청결한 조리시설을 공급하려면 2030년까지 7,860억 달러의 누적투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는 IEA 새로운 정책 시나리오에 의한 연간 추산액 250억 달러 외에 연간 31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여야 함을 의미하며 추가 투자대상 대부분은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모두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려면 민간부문, 특히 가용자금이 풍부한 장기 투자자와 아울러 개발은행, 정부, 양자간 개발원조 등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민간부문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모델이 개발되고 창의적인 제휴가 이루어짐에 따라 대규모 기반시설부터 소규모 목표 프로젝트를 망라한 잠재적 투자풀이 확대되고 있다(IEA, 2017^[26]).

재생에너지 투자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직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장애물은 국제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과 화석연료 보조금을 포함한 시장과 정부의 실패에서 발생한다. 청정에너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국내 정책들의 초안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이다(OECD, 2015^[33]). 청정에너지 기반시설 투자를 위한 OECD 정책지침은 정부가 청정에너지 기반시설을 위한 자원조달과 개발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한다. 동 지침은 또한 정책입안자가 신재생 에너지 자원을 이용한 전력생산, 전력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 특히 투자정책, 투자유치와 촉진, 경쟁정책, 금융시장정책 및 공공 거버넌스의 5개 분야에서의 개선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기반시설에의 민간투자를 증진하고자 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점검표도 제공한다. 동 지침에서는 청정에너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역협력 등의 범분야적 문제도 다루고 있다(OECD, 2015^[33]).

투자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SDG 7을 달성하고 보편적인 접근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지역의 상황에 부합하여야 하며, 확고한 정치적 공약, 지원하고 조력하는 규제 틀, 부정합(저탄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조정)과 정치경제학적 장애물 제거, 민간부문의 참여, 적합한 자원조달 방안과 투자, 능력 배양 및 지역사회, 특히 여성과의 긴밀한 초기 협의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SDG 7을 달성하고 모두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그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경험에서 나온 일반적인 교훈이 있다. 그러한 교훈은 박스 1.6에 수록되어 있다.

박스 1.6.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적절한 가격의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 습득한 교훈

IEA는 분석을 통하여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는 지속가능개발목표의 대원칙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핵심 조치를 부각하고 있다.

- **새로운 참가자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면서 광범위한 솔루션과 사업모델의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을 실행한다.** 발전이 이루어진 경우는 정책이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광범위한 재무 흐름으로부터 비용효율이 높은 투자를 장려하고, 지역사회를 포함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

- **독립형 전원(off-grid) 투자를 위한 안정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분산형 전원의 전력망 연결을 보장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전력공급을 촉진한다.** 기존 전력망과 분산형 솔루션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각국의 여건에 따라 상대적 비중이 결정된다. 두 부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통합을 고려하여 조직하고 유연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회복할 수 있게 모두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 **에너지 효율을 에너지 공급정책의 핵심요소로 규정한다.** 발광다이오드(LED) 같은 고효율 기기와 조명장치를 사용하면 소비자는 적은 투자로 더 많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쉽게 수용할 수 있고 분산형 솔루션을 보다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다.
- **전체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에너지 이용 정책과 세부목표에 생산적 이용을 포함한다.** 전화 전략 수립에는 가정의 전화와 더불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하여 에너지 보급을 활용하는 다른 개발 목표와 기회를 고려하여야 한다. 모두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실행한 조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행한 조치를 보완할 수 있다.
- **청결한 조리여건으로의 이행을 장려한다.** 과제가 중요하지만 청결한 조리환경의 보급은 전력 공급보다 관심을 덜 받고 있다. 고체 바이오매스의 사용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정책과 프로그램에 지역의 필요와 기대를 반영하고, 사회적,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며, 건강상의 위험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가정조리 문제의 의사 결정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IEA, 2017[26]).

탄소배출권 가격제는 생산자와 가정을 저탄소, 저오염 행동과 투자로 유도하기 위한 강력하고 비용효율이 높은 수단이 될 수 있다. 탄소가격제는 각국이 효과적이고 점진적인 탄소배출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저비용 수단이다. 탄소가격제는 오염도가 낮은 에너지로의 대체와 전체적인 에너지 수요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OECD, 2016_[29]). 세금과 높은 가격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 인구집단과 관련된 문제는 목표 이득 획득방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Flues and van Dender, 2017_[34]). 그러나 현재 세금 또는 배출권 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시행되고 있는 탄소가격제는 그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41개국의 탄소배출권 가격의 90%가 배출권 원가의 매우 보수적인 추정값 이하로 책정되어 있다(OECD, 2016_[29]).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및 주거지 조성

도시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개발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시는 성장과 복지의 중요한 동인이다. 도시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80%를 생산한다. OECD

회원국 전체의 2%에 불과한 대도시 지역에서 전체 부의 약 3분의 1을 생산한다. 인도와 중국에서는 5개 대도시의 경제가 국내총생산의 15%를 차지한다(OECD, 2013^[35]). 전 세계의 도시는 또한 막대한 에너지 소비로 인해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한다. 도시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과 그에 따른 온실가스(GHG) 배출량의 약 70%를 점유한다(OECD, 2017^[36]). 동시에 도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개인의 소득증대, 교육 또는 구직 수요를 감당할 수용력이 커서 사회적 이동을 촉진한다(OECD, 2016^[11]).

도시는 경제성장 및 불평등에 집중한다.. 예를 들면, 소득 불평등 정도는 전국 평균보다 도시의 경우 높고 도시가 커질수록 높아진다. 보건, 주택, 교육 및 고용 분야를 망라한 복지 수준은 도시 내 및 도시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지방정부 또한 완전성, 지속 가능성 및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국가에 따라서 도시가 교통, 토지이용, 주택, 교육, 노동력 개발, 의료 및 기타 공공서비스 외 수많은 분야에 관련된 책임을 일정하게 분담하고 있다. 이는 도시가 불평등 및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는 도시와 도시개발이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별도의 도시 목표(SDG 11)는 2030 의제가 도시 분야만을 특정하여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 입안된 것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한 개발과 SDG 달성의 동인으로서의 도시의 역할(박스 1.7)을 강조한다. 실제로 기반이 되는 정책 및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정부의 각 계층이 분담하고 있으며 17개의 SDG 목표의 바탕을 이루는 169개 세부목표의 65%는 지방 또는 지역정부의 적절한 참여 또는 조정이 없다면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SDSN, 2016^[37]). 예를 들면, 2015년, OCED 지역에서 총 공공투자의 59.3%를, 전 세계에서는 거의 40%를 하위국가 정부가 담당하고 있었다(OECD/UCLG, 2016^[38]). 그러한 투자 대부분은 해당 도시 또는 지역이 특화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로서 특정 SDG(예를 들면, 교육, 보건, 사회기반시설, 식수, 위생시설, 고체폐기물 관리, 교통 및 주택 등)의 주제와도 일치하는 경우도 많다.

**박스 1.7. SDG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이 좋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및 주거지 조성**

11.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충분하고 안전하며 적절한 가격의 주택, 기초 서비스를 제공하고 빈민가를 개량한다.

11.2 2030년까지 도로안전을 향상하고 특히 여자, 아동, 장애인 및 노인 등 취약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배려하여 대중교통을 확장함으로써 모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가격으로 이용이 쉽고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한다.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화를 촉진하고 참여적이고, 통합된, 지속 가능한 인간 주거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한다.

11.4 세계의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노력을 강화한다.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 중점을 두고 수해를 포함한 재난에 의한 사망자와 이재민의 규모 및 세계의 국내총생산에 대비한 경제적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11.6 2030년까지 대기질과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관리에 특히 중점을 두고 도시의 1인당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줄인다.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 아동, 노인 및 장애인에 중점을 두고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공공시설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실행수단에 관한 세부목표

11.a 국가 및 지방 개발계획을 강화함으로써 도시, 도시 외곽 및 농촌지역 간의 긍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연결을 지원한다.

11.b 2020년까지 포괄성, 자원 효율성,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재난 회복력과 관련된 통합적인 정책과 계획을 채택, 실행하고 재난위험 저감을 위한 센다이 강령 2015-2030에 따라 모든 계층에서 전체적인 재난위험 관리를 개발하고 시행하는 도시와 주거지의 수를 획기적으로 늘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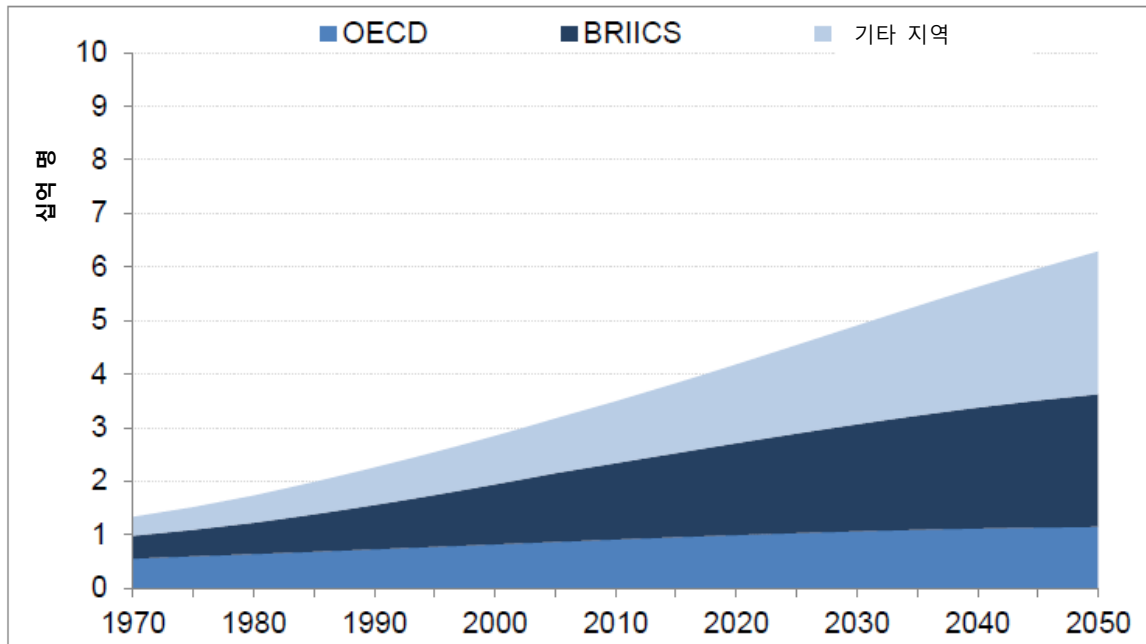
11.c 최빈국인 개도국이 현지 자재를 활용하여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이 좋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재정적 및 기술적 원조를 통하여 지원한다.

출처: (UNGA, 2015_[4]).

도시화와 관련된 과제

세계 인구는 점점 도시화된 곳에서 살고 있다(도표 1.4). 197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36%인 13억 명이 도시에 살고 있었다. 2009년에 그 비율은 50%까지 높아졌다(OECD, 2012_[14]). 2015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54%인 약 40억 명이 도시에 살고 있었다(UN ECOSOC, 2017_[7]). 이러한 추세는 지속하여 2030년에는 60%, 2050년에는 7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OECD, 2012_[14]). 2050년의 도시 거주 절대 인구는 28억 명으로 2010년부터 2050년까지의 인구증가분(22억 명 이상)이 모두 도시인구로 흡수된 셈이다. 같은 기간 농촌인구는 6억 명이 감소할 전망이다. 도시인구는 1950년의 10억 명 미만에서 150년 후인 2100년에는 90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다(OECD, 2015_[39]).

도표 1.4. 지역별 도시인구(1970-2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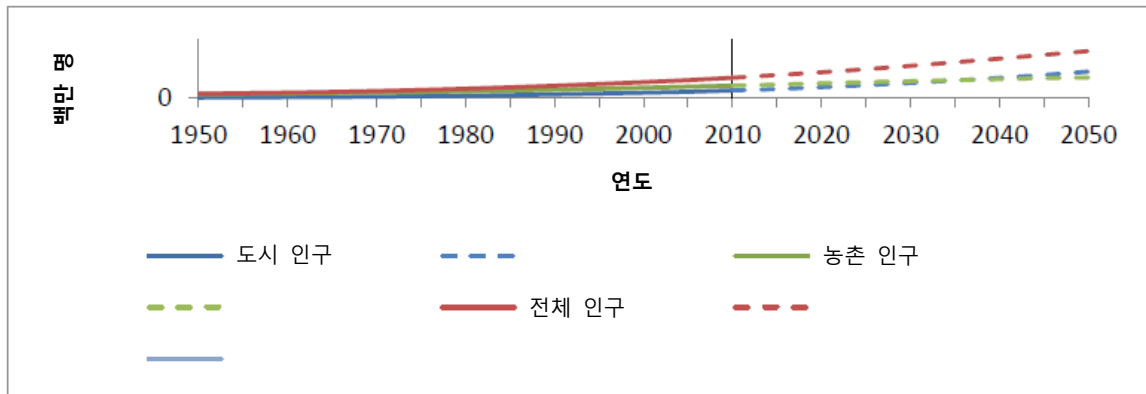
출처: (OECD, 2012_[14]).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570126>

OECD 회원국을 통틀어 대도시권(500,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 집합체로 정의된)의 면적은 전체 국토의 4%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대략 절반이 거주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OECD 회원국들은 특히 도시화의 정도가 심하여 전체인구의 80%가 도시에, 70%가 대도시권에 거주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도시화 정도는 약 80%에 달한다. OECD 회원국의 도시인구 비율은 2050년에 전체인구의 8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OECD, 2015_[39]).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도시화율이 낮은 지역이지만 현재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OECD, 2015_[39]). 도시거주 인구 비율은 1950년의 14%에서 현재 40%로 증가하였다. 2030년대 중반에는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50%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도표 1.5). 도시화는 계속되어 2050년경에 56% 근처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AfDB/OECD/UNDP, 2016_[40]).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2010년의 도시거주자는 전체 인구의 37%를 차지하였으나, 2050년에는 6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OECD, 2012_[14]).

도표 1.5. 아프리카의 도시, 지방 및 전체 인구 성장 추이(1950-2050)



출처: (AfDB/OECD/UNDP, 2016_[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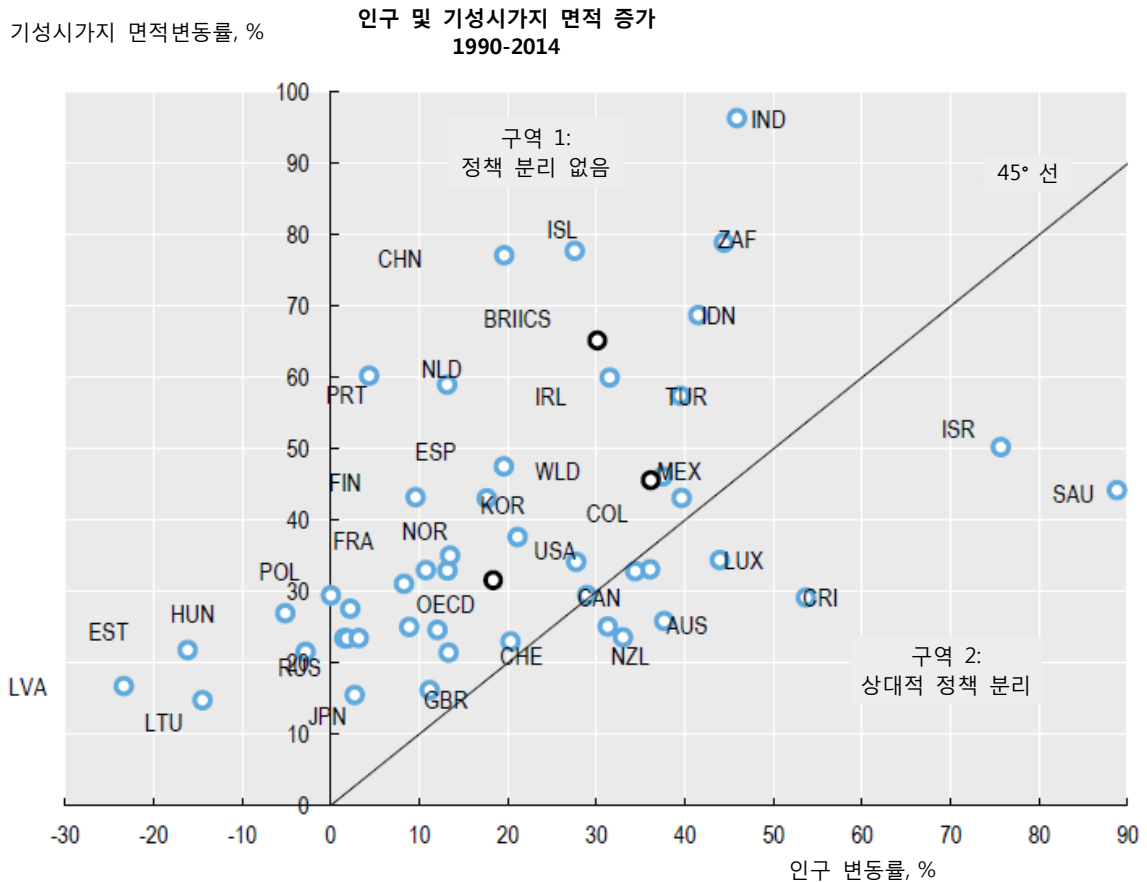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350529>

빠른 도시화에 의해 과제와 기회가 동시에 발생한다. 중요한 과제로는 빈민가 거주자의 증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불충분한 기초 서비스와 사회기반시설, 낙후된 교통 시스템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오염 및 관련된 환경위험이 악화하여 도시가 재난에 더욱 취약하게 된다. 주택이 열악하고 물, 위생시설, 폐기물 관리 서비스가 불충분한 도시 빈민가는 인체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욱 과감한 도시개발 및 환경관리 정책을 실행하지 않으면 계속되는 도시화로 인해 문제가 확대된다. 이는 평균 GDP 수준이 증가하더라도 도시 빈민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러하다(OECD, 2012_[14]).

개발도상국의 빈민가 거주인구의 비율은 2000년의 39%에서 2014년에는 30%로 하락하였다(UN ECOSOC, 2017_[7]). 어느 정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슬럼가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는 도시화의 가속화, 인구증가, 적절한 토지 및 주택정책의 부재로 인하여 계속 늘어났다. 전 세계적으로 슬럼가 거주인구(도시 주민)는 2000년의 7억9천2백만 명보다 2014년에는 8억8천만 명으로 늘어났다(UN ECOSOC, 2016_[6]). 아프리카에서는 빈민가에 거주하는 주민의 62%가 깨끗한 물, 위생시설, 교육 및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5년 동안 빈민가에 거주하는 절대 인구는 1990년의 6억5천만 명에서 오늘날에는 거의 10억 명으로 늘어났다(Clos, 2016_[41]). 여러 아프리카 국가가 2050년까지 빈민 인구가 세 배로 늘어날 현실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AfDB/OECD/UNDP, 2016_[40]).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도시용 부지면적이 도시인구 증가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그 결과 도시가 커짐에 따라 밀도는 낮아지고 무계획적이고 무분별한 확장이 이루어졌다(UN ECOSOC, 2017_[7]). 통제되지 않은 무분별한 도시의 확장은 지속 가능한 개발에 필요한 몇 가지 핵심 결정요인의 기반을 약화했다. 예를 들면, 도시가 무분별하게 10% 확장될 경우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7% 증가하였다(UN ECOSOC, 2016_[6]). 많은 OECD 회원국 도시가 기성 시가지의 성장이 인구증가를 앞지르면서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있다. OECD 회원국을 통틀어 보면, 현재 기성 시가지가 전체 도시면적의 1.11%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1990년 이후 30% 증가한 것이다(도표 1.6)(OECD, 2017_[3]).

도표 1.6. 국민 1인당 기성 시가지 증가세(기성 도시화된 국가 포함, 1990-2014)



출처: (OECD, 2017_[42]).

주석: 이스라엘에 대한 통계자료는 이스라엘 당국이 그 책임하에 제공한다. OECD가 동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국제법에 따른 골란 고원, 동예루살렘 및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지위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예상되는 도시화 속도는 긍정적 및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도시지역에 경제활동이 집중됨으로써 도시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정반대로, 경제활동의 집중은 더 높은 수준의 대기오염을 초래하고 빈민가의 환경조건을 악화시켜 인체의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OECD, 2012_[14]).

대기오염은 전 세계 모든 지역, 특히 대도시와 인구 밀집지역의 중요한 환경 보건 위험요소다. 대기오염은 곡물 수확량, 생물 다양성, 토지와 물, 인간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시야를 악화하고 문화유산을 포함한 건물 및 자재에 영향을 미치는 등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경제적 비용이 증가한다. OECD 회원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사망 및 질병 포함)에 든 비용은 2010년에 1조7천억 달러에 달하였다. 2010년 중국의 대기오염의 건강 영향에 소요된 비용은 1조4천억 달러, 인도는 5천억 달러로 추정된다(OECD, 2016_[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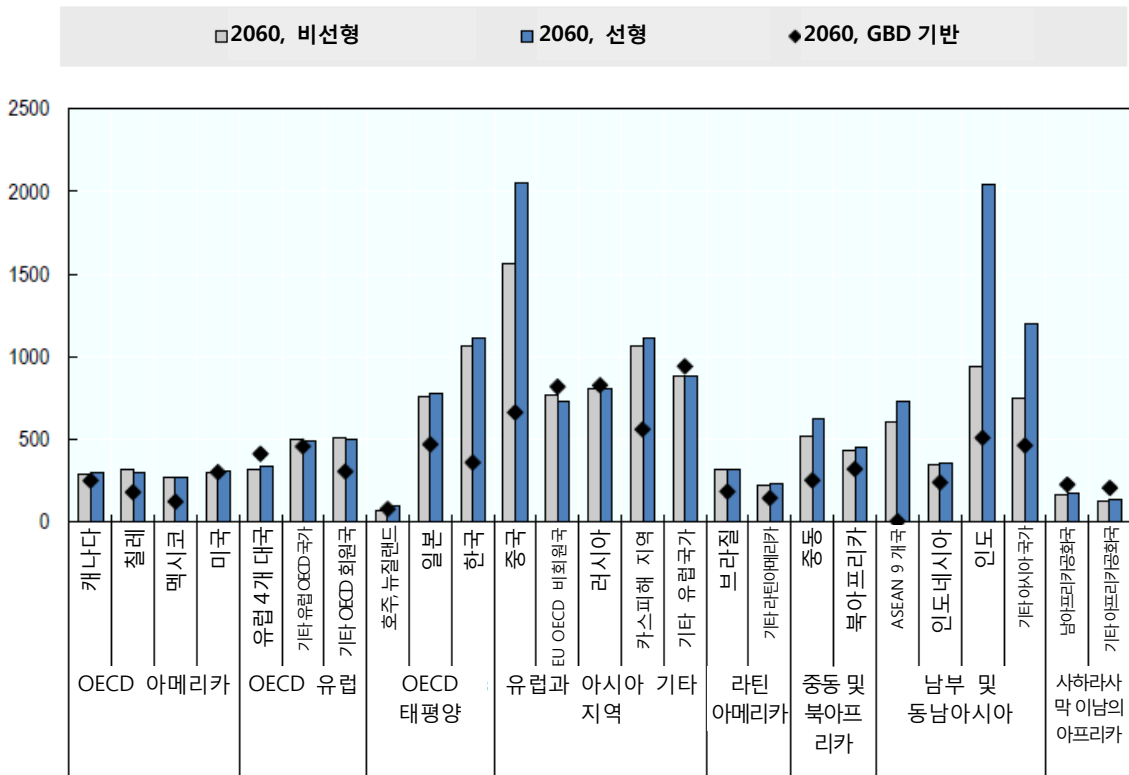
대기오염은 대부분 일종의 “도시 문제”에 해당된다. SDG 달성에 대한 최근의 발전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도시 주민 10명 중 9명이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공기를 호흡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UN ECOSOC, 2017₍₇₎). 같은 해에 전 세계 도시인구의 절반가량이 오염도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최대기준치보다 적어도 2.5배 높은 공기에 노출되어 있음이 밝혀졌다(UN ECOSOC, 2016₍₆₎). 소득수준이 중간 이하인 국가의 도시의 98%와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의 도시의 56%가 WHO 대기질 지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OECD, 2016₍₄₃₎).

대기오염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매년 4백4십만 명이 넘는 조기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OECD, 2017₍₃₎). 2060년에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매년 6백만 명에서 9백만 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GDP의 1%에 해당하는 2조6천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OECD는 2060년까지 오염된 공기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2배, 심지어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4, 5초마다 조기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의미다(OECD, 2016₍₄₃₎). 인도와 중국은 인구 백만 명당 가장 많은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대조적으로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인구 백만 명 당 조기 사망자 발생률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도표 1.7).

도표 1.7. 대기오염물질 입자 및 오존 노출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

육외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구 백만 명 당 연간 사망자 수



출처: (OECD, 2016₍₄₃₎).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357356>

지난 수십 년간 심화된 소득 불평등 정도는 평균적으로 해당 국가의 도시에서 더 높다. 더욱이, 도시가 성장할수록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화한다. 코펜하겐, 브뤼셀, 파리 및

산티아고는 해당 국가의 도시 중에서 지니계수가 가장 높다(OECD, 2016_[44]). 도시에서의 거주지역은 소득수준에 못지않게 또는 그 이상으로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수명을 예로 들면, 볼티모어와 런던은 거주지역에 따라 무려 20년이나 차이가 난다. 소득, 일자리 및 건강을 모두 고려할 경우 소득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보다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한 국가 내에서 지역별로 더 뚜렷한 차이를 보일 것이며 이로써 복지 수준의 차이가 지역에서의 부유함의 집중 또는 배제를 증폭시킴을 알 수 있다(OECD, 2016_[44]).

더욱이 도시는 경제적 경계선에 의해 분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세대에 걸쳐 불이익이 재생산될 수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소득수준, 인종 또는 종족 등의 특징이 같은 개인들이 공간적으로 집단을 이루는 주거지 분화는 그 추세, 과제 및 동인이 국가별로 다르지만 많은 OECD 회원국에서 증가해 왔다(OECD, 2016_[44]). OECD 자료에 의하면 소득에 의한 분화가 가장 심한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도시와 분화의 정도가 가장 낮은 미국의 도시는 서로 비교할만한 수준에 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OECD, 2016_[44]).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개 양질의 공공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기회를 살릴 수가 없다. 이러한 불이익은 다음 세대까지 압박하여 사회적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교통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교통수단이 부족하거나 접근하기 불편하면 직장, 교육기관, 의료시설 및 소셜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이 제한됨으로써 “빈곤의 덫”이 발생할 수 있다(ITF, 2017_[45]).

도시의 역할과 다른 지속가능개발목표(SDG)와의 주요 상호작용

도시와 관련된 SDG는 전체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도시에 사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와 관련된 SDG의 달성을 통해 더욱 넓은 국가적 차원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SDG는 특정 장소의 특별한 조건이 중요한 경우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들을 다룬다. 예를 들면, 지속 가능하고 통합적인 도시화 과정은 이산화탄소 배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개선된 농촌 개발을 통해 농촌지역의 식량 안전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다. 편협한 방식으로 세부목표에 집중하면 다른 세부목표의 성공을 방해하는 식으로 특정 세부목표를 지지하게 되는 잠재적으로 예상과는 반대되는 결과는 물론, 합동 조치에 의한 복합적인 이득 모두 소홀히 다루게 된다(OECD, 2016_[46]). 따라서 도시를 대상으로 SDG를 실행하면서 SDG를 정부와 사회의 모든 계층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고도의 정책일관성을 필요로 하는 긴밀하게 서로 연관된 독립적인 목표의 틀로 인식하여야 한다.

SDG 달성을 위한 도시의 역할은 SDG 11의 범위를 넘어선다. 도시는 17개 SDG 모두의 달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일부 도시와 지역은 이미 이러한 방향에서 SDG의 현지화에 착수하였다(뉴욕과 메델린의 두 흥미로운 사례 등). 이러한 주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030 의제를 정책 결정, 계획 및 투자전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도시(특히 중소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를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OECD 및 제후 국가 간의 또는 내부의 조치에서는 조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일관성도 크게 부족하다.

도시의 통합적인 물관리는 물에 관한 세계적 목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는 SDG 6과 SDG 11에 반영된 바와 같이 도시의 물관리에 관련된 조치를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도시는 장래에 물이 “지나치게 많은”(즉, 홍수), “지나치게 적은”(부족 및 가뭄) 및 “지나치게 오염된” 위험에 점점 더 노출될 것이므로, 회복력을 높이고 변화하는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는 거버넌스 틀을 개발하여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OECD, 2016^[23]).

일부 국가에서는 도시화로 인해 수질오염과 물 부족이 심화되었다. 196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지하수 고갈률은 두 배로 증가하여 전 세계적으로 매년 280km³를 초과하게 되었다. 지하수 고갈은 향후 수십 년간 많은 지역에서 도시 용수공급에 대한 가장 큰 위협요인이 될 것이며, 대체 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체비용이 증가할 것이다(OECD, 2017^[47]). 대도시에 대한 오염과 지하 수위의 영향은 해당 지역의 인구증가와 물관리 정책의 효율성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물 정책의 분열로 인해 물 관리 거버넌스에서 조정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는 드러난 물 문제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다.

수질오염은 좋지 않은 위생시설과 불완전한 폐수처리로 인해서도 발생하였다. 많은 도시에서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폐수가 지하수, 강 및 해안지대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폐수의 90%가 처리되지 않은 채로 방류되어 콜레라와 장티푸스 등의 질병을 확산시킨다. 오염된 물을 식수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물 부족이 심해진다. 그러나, 일부 도시에서는 수원이 상당히 원거리에 위치하여 물 부족이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폐수 문제는 대도시 자체의 고유한 문제라기 보다는 단지 부실한 정책과 조정의 실패에 기인한 문제이다(OECD, 2017^[47]).

도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의제 추진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도시의 에너지 소비는 주로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그에 따른 온실가스(GHG) 배출과 대기오염을 포함한 부정적인 환경 영향에 시달리고 있다. 2006년부터 2030년까지 도시의 에너지 수요는 5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에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7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71%가 도시의 에너지 사용으로 발생한다. 2016년의 도시 에너지 수요에서의 화석연료의 비중은 86%로서 도시 이외 지역의 69%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Sugahara and Bermont, 2016^[32]).

도시의 에너지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도시 에너지의 지속 가능한 관리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도시주민의 복지증진과 SDG 7 같은 세계 수준의 에너지 목표는 물론 국가 에너지 정책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소비 절약, 도시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 회복력을 배양하기 위한 에너지 관리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고 도시가 만성적인 경제적, 환경적 및 사회적 압박을 극복하고 적응하며, 충격을 예상하고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관된 에너지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교통은 전 세계 탈 탄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도시에는 이동성에 대해 새롭고 막대한 수요가 발생하여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공평한 교통수단 확보가 더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다. 빠른 도시화, 소득증대

및 자가용 소유 증가 등의 요인이 결합하여 배출량, 혼잡 및 공중보건 문제를 일으킨다. 교통 부문에서의 배출량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의 배출량은 70억5천만 톤에 달하여 전 세계 연료 연소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3%, 또는 인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8%를 차지하였다. 선진국의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도 증가한 여행과 화물 이동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OECD 회원국 국민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평균 2.8t과 비교하여 OECD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0.5t에 지나지 않는다. 선진국의 배출량은 OECD 회원국과 맞먹는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ITF, 2017_[45]).

42개 OECD 회원국 및 제후 국가에서 도로교통에 사용된 에너지는 다른 부문에 비해 실질적으로 높게 과세하여(OECD, 2016_[29], OECD, 2013_[48], OECD, 2015_[49]) 정부에 유용한 재원을 공급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에너지의 외부비용이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재정수입도 올리고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교통 문제는 17개 SDG 중 7개의 SDG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5개 세부목표에서 직접 다루고, 7개 세부목표에서는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다(표 1.6). 이 세부목표들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며 그 어떤 문제보다도 도로 안전을 다루고 있고, 세계 도로 정책의 가시성, 긴급성 및 이상을 높이고 있다(세부목표 3.6). 이는 오늘날 매년 120만 명이 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수백만 명이 다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 또 다른 세부목표(11.2)에서는 도시 대중교통을 완전히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 세부목표는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해 안전하며 적절한 가격으로 이용이 쉽고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도로안전, 교통기반시설 개발 및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특별히 배려할 필요성을 다루고 있다. 동 목표에서는 정책과 투자의 초점을 시간 절약과 교통 수요에서 접근 편의성으로 이동시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는 모두에 대한 일자리, 서비스 및 기타 기회에의 공평한 접근 보장이 여행시간 또는 1인당 여행 거리의 사소한 변경보다 우선한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을 적용하면 정책평가 과정은 물론 교통기반시설과 서비스의 인지된 역할이 근본적으로 변화된다. 이러한 SDG 목표는 향후 10년에서 15년 동안 전 세계의 이동성을 탈바꿈할 경로를 설정하게 된다(ITF, 2017_[45]).

표 1.6.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의 교통 관련 세부목표

목표	세부목표
SDG 2 기아퇴치	세부목표 2.3 농업생산성과 소규모 식품생산업자의 소득을 두 배로 향상시킨다.
SDG 3 건강과 복지증진	세부목표 3.6 전 세계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부상을 반으로 줄인다. 세부목표 3.9 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줄인다.
SDG 7 적절한 가격의 청정에너지	세부목표 7.3 전 세계 에너지 효율을 두 배로 향상시킨다.
SDG 9 산업, 혁신 및 사회기반시설	세부목표 9.1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이 좋은 사회기반시설을 개발한다.
SDG 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세부목표 11.2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적절한 가격으로 이용이 쉽고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을 제공한다. 세부목표 11.6 도시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줄인다.
SDG 12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세부목표 12.c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정상화한다.
SDG 13 기후변화 대응	세부목표 13.1 회복력을 강화한다. 세부목표 13.2 기후변화 대응조치를 국가계획에 통합시킨다.

출처: (ITF, 2017^[45])

정책 및 거버넌스를 통한 대응

도시인구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도시의 계획과 관리방식은 SDG 목표 달성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인 넓은 문제점을 나타낼 될 것이다. SDG 11에서 요구되는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의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의 계획, 자원조달 및 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단편적이고 지속 불가능한 도시개발 양식이 고착되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 증가, 불충분한 물 공급 및 위생시설, 대기질 저하, 비효율적이고 자동차에 의존하는 교통망 및 많은 지역에서 무허가 거주지 및 판자촌을 발생시킴으로써 많은 SDG 목표와 세부목표의 달성에 영향을 미친다(OECD, 2015^[39]).

국가도시정책의 개발은 지방, 국가 및 세계 목표 달성에 필요 불가결하다.

더욱 생산적이고, 포용적이며, 회복력이 좋은 도시개발을 촉진할 공동의 비전을 실현하려는 다양한 수행 주체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조정하여 입안한 일관된 일련의 의사결정 집합으로 정의되는 국가도시정책(NUP)은 국가 및 세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화의 역학관계를 이용하려는 필수적인 정책 수단으로 국제사회는 인식하고 있다. NUP는 지방 도시정책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를 보완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OECD 2017^[50]). 2017년 5월 현재, 149개국이 국가 수준의 도시정책을 실행하거나 개발하고 있다(UN ECOSOC, 2017^[7]). 전 세계 도시인구의 75%가 그러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

명확한 NUP를 지닌 OECD 회원국 대다수가 아직 정책 순환주기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33%가 입안 단계에 있으며 33%는 실행단계에 있다. 4개국만이 감시 및 평가단계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의 경험은 NUP 과정을 강화하려고 하는 다른 국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NUP는 주로 다양한 부처 간의 조정을 통하여 개발, 실행, 감시, 평가되므로 부처 간의 조정을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성공적인 실행에 필수 불가결하다. NUP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의 정부 각 계층, 민간 부문, 시민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OECD 회원국의 대다수는 참여적 접근법을 채용,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하여 NUP를 입안하였다. 그러나 NUP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명시적인 전략으로 만들기까지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그러한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SDG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협약 같은 국제적 협약의 달성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OECD 2017^[50]).

중앙정부와 하위국가 정부의 우선순위 조정은 통합적인 실행에 필수 불가결하다.

SDG는 세계 각국의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 대도시권은 각국의 경제적 번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OECD 자료를 검토하면 지역과 지방정부가 현재 및 미래세대의 복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하위국가 정부는 예산의 70%를 교육, 보건, 경제적 및 사회적 비용지출에 투입하고 있다. 국민에 가장 근접해 있는 행정 단위로서 지방 정부는 지속 가능한 개발 격차와 필요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하위국가 정부 간의 우선순위 조정과 실행을 위한 역량과 자원 확보는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부문 및 정부 계층 간 조정 부족, 형식주의, 과도한 행정절차는 하위국가 정부 수준에서의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OECD, 2016^[51]).

SDG에 명시된 많은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수준에서, 특히 도시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서비스와 기반시설에 대한 접근 개선, 기후변화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충격에 대한 도시의 회복력 개선, 빠르게 증가하는 도시인구의 수용 준비를 위한 공공투자와 민간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관협력사업(PPPs)의 공적 거버넌스를 위한 OECD 원칙에는 공익을 위한 적절한 활용을 포함한 민관협력사업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행정 단위 간 효과적인 공공투자를 위한 OECD 권고사항은 각국 정부가 공공투자 역량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고 개선을 위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OECD는 모범사례, 자료 및 지표를 수집하는 실행 수단을 이용하는 장소에 특화된 연구를 통하여 국가, 지역 및 도시와 협력하고 있다.

SDG에 대한 지역적 접근법을 채용함으로써 도시에서 SDG를 실행함에서의 수직적 및 수평적 조정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지역적 접근법은 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과 학습 수단인 자료의 생산과 공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소 기반의 지표를 지원한다. SDG에 대한 지역적 접근법은 또한 가장 취약한 집단 또는 낙후된 지역에 대한 자원(재정적, 인적, 기술적/기반시설 등)의 배분 및 대상 선정을 지원한다. 또한 SDG 달성에 따른 책무성과 성과를 증진하기 위한 풀뿌리 지역사회를 포함한 지방 및 지역기관의 참여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OECD는 도시와 지역의 SDG “현지화”를 지원하고자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대한 지역적 접근법: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하는 도시와 지역의 역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목표 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소비와 생산양식의 변경은 지속 가능한 개발로의 변환을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사회와 경제주체의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양식은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의 원천인

천연자원 자산 기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천연자원에서 추출한 원자재를 경제활동과 관련 생산 및 소비과정에 사용함으로써 개별 국가 또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고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사회적 및 경제적 결과를 초래한다. 오염과 폐기물을 생성하며, 장기적으로 공기, 토양 및 수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의 추출, 가공, 수송, 사용 및 처리와 관련된 환경적 압박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천연자원과 원재료를 경제 과정을 통해 관리하고 사용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본질적인 요소다.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SCP)의 촉진은 사회적, 환경적 필요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좌우된다. 미래세대의 복지를 위하여 천연자원을 보존하면서 경제성장을 지속 불가능한 자원 사용과 환경 악화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모든 국가가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SDG 12가 포함된 2030 의제에서는 국제적 및 국내적 실행을 위한 전반적인 우선 과제로서의 SCP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박스 1.8).

박스 1.8. SDG 12: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유형 보장

12.1 개발도상국의 개발 정도와 역량을 고려하여 개발도상국 주도하에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개년 프로그램 틀을 실행한다.

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효율적인 사용을 달성한다.

12.3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의 1인당 음식물 쓰레기를 반으로 줄이고 수확 후 손실을 포함한 생산과 공급사슬 상의 식품손실을 줄인다.

12.4 2030년까지 합의된 국제적 틀에 따른 화학약품과 모든 폐기물의 수명주기에 걸친 친환경적 관리를 달성하고 인체 건강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 물 및 토양에의 유출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12.5 2030년까지 예방, 저감,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12.6 기업, 특히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이 지속 가능한 실무를 채택하고 보고 주기에 지속 가능성 정보를 포함하도록 장려한다.

12.7 국가 정책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 가능한 공공조달 실무를 장려한다.

12.8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지속 가능한 개발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양식에 대한 관련 정보와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실행수단에 대한 세부목표

12.a 개발도상국이 더욱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양식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학적, 기술적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12.b 고용을 창출하고 지방 문화와 제품을 홍보할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육성과 관련된

지속 가능한 개발 효과를 감시할 수단을 개발하고 활용한다.

12.c 개발도상국의 구체적인 필요와 조건을 고려하고 빈곤층과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발에 대한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그 환경적 영향을 반영한 세제개혁과 불합리한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포함하여 각국의 사정에 따라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음으로써 낭비적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정상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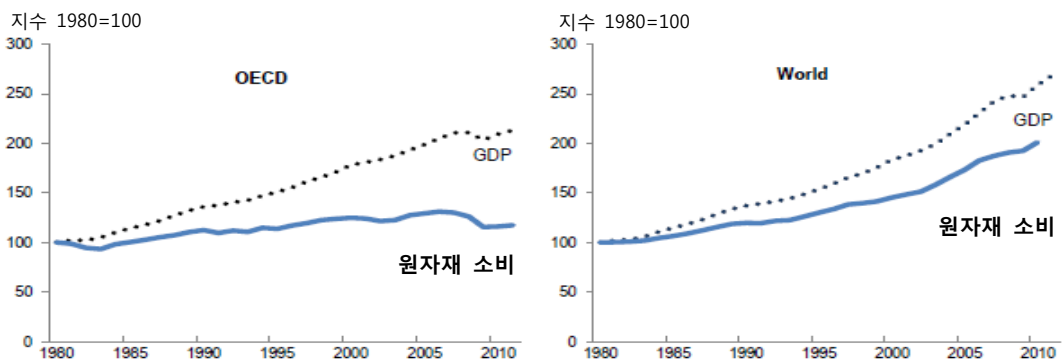
출처: (UNGA, 2015_[4]).

주요 과제

지난 수십 년간 원자재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증가하였다. OECD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천연자원으로부터 추출하여 소비한 원자재는 2010년에 거의 720억 미터톤(Gt)에 달하였다(OECD, 2015_[52]). 이는 1900년대 초의 추정 추출량 7 Gt보다 열 배로 증가한 양이다. 신흥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선진국의 지속적인 높은 원자재 소비가 이러한 증가의 주된 원인의 하나다. 건축용 원자재, 화석연료, 조리용 바이오매스는 전 세계 원자재 추출량의 80%를 차지한다(OECD, 2015_[52]). 2010년에 OECD 회원국은 전 세계의 국내추출 원자재 사용량(DEU)의 27%를 점유하였고(1980년의 46%에 비해), BRIICS 국가(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는 51%를 차지(1980년의 30%에 비해)하였다(OECD, 2015_[52]).

지속 가능한 개발의 추진과 SDG 달성에 필수적인 경제성장으로부터 원자재 추출과 소비를 정책적으로 분리하는 일은 발전되고 있다. OECD의 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의 원자재 생산성은 1980년부터 2010년 사이에 거의 30%가 개선되어 1980년의 킬로그램당 0.7달러(2005년 달러 및 PPPs 기준)에서 2010년에는 킬로그램당 1달러로 증가하였다(OECD, 2015_[52]). 이는 세계 경제가 2010년에 1kg의 원자재로 1980년에 비해 30%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였다는 의미다. OECD 회원국은 1990년에 비해 50%, 2000년에 비해 30% 더 많은 사용원자재 단위당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였다(도표 1.8). OECD 회원국의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자원 집약적 산업이 OECD 비회원국으로 이전되어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OECD, 2015_[52]).

도표 1.8. 정책 분리(decoupling) 동향: OECD 및 세계(1980-2010)



출처: (OECD, 2015_[52]).

각국의 자원 생산성 개선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1인당 원자재 사용량은 여전히 많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사이에 1인당 국내원자재 소비량(DMC)(DEU)은 1인당 연간 약 8t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지난 1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10년에는 1인당 연간 DMC가 10t을 초과하였으며 이는 한 사람이 매일 12kg의 건축용 원자재, 7kg의 조리용 및 사료용 바이오매스, 5.3kg의 화석연료 함유재 및 3kg의 금속을 포함한 29kg의 원자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미사용 국내추출량(UDE)을 포함할 경우 2010년의 1인당 연간 원자재 사용량은 1980년의 13.6 t에서 거의 17t(1인당 일일 46.6kg)으로 증가하였다.

2016년도 SDG 이행상황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상대적으로 안정된 아프리카(1인당 약 4t)와 1인당 10.7t에서 7.7t으로 감소한 오세아니아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선진국의 1인당 원자재 사용량은 증가하였다(UN ECOSOC, 2016^[6]). OECD 국가의 평균적인 국민은 하루 10kg의 바이오매스, 17kg의 건축용 원자재, 5kg의 금속과 약 13kg의 화석연료를 포함하여 46kg의 원자재(세계 평균보다 60% 더 많은)를 소비한다(OECD, 2015^[52]).

전 세계의 원자재 수요 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라 경제활동에 의한 폐기물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원자재 추출량의 약 5분의 1이 폐기물로 전환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OECD 회원국의 폐기물 발생량이 전 세계 발생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OECD, 2015^[52]). OECD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발생량은 6억5천만 톤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OECD 국가에 사는 사람은 연간 평균 520kg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며 이는 1990년보다 20kg이 늘었으나 2000년에 비해 30kg이 줄어든 분량이다(OECD, 2015^[53]).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 형태 중의 하나는 전자폐기물(전기 및 전자폐기물)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자제품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여 전자기기의 유효수명이 점점 단축됨으로써 전자폐기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5천만 톤 가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산업용 원자재의 주요 2차 공급원이 되고 있다(OECD, 2015^[52]).

또 하나의 중요한 폐기물은 음식물 쓰레기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인간이 소비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음식의 3분의 1이 없어지거나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FAO, 2013^[54]). 음식물의 손실과 낭비로 식품안전에 관한 SDG 2의 달성이 어려워지고 식품공급과 관련된 에너지 손실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OECD, 2017^[55]). 선진국의 식품 낭비 감소가 후진국의 식품 불안을 직접 해소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제한된 물, 토지 및 생물 다양성 자원에 대한 경쟁을 완화함으로써 이러한 자원을 그만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Bagherzadeh, Inamura and Jeong, 2014^[56]). FAO에 따르면, 생산되었으나 소비되지 않은 식품 관련 탄소축적은 이산화탄소 33억톤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식품 낭비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배출원이다(FAO, 2013^[54]).

몇몇 추정치에 의하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수확하는 신선 식품(과일 및 채소)의 30% 이상이 없어진다고 한다. 유통 경로상에서 식품 서비스 및 소비자 부문인 소매 단계의 멸실률이 20%로 가장 높지만, 선진국에서는 생산자로부터 소매상으로의 유통 체계에서의 멸실률이 22%로 가장 높다. 유럽에서는 EU-28 국가의 연간 식품 낭비량은 연간 약 8천8백만 톤으로서 1,430억 유로에 해당하며 이 중 70%는 소비자, 소매 및 식품 서비스 부문에서

발생하고, 30%는 가공 및 생산부문에서 발생한다(OECD, 2017^[55]). 식품 공급 체인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식품 낭비와 손실을 줄임으로써 가용식품의 공급량을 늘리고 천연자원과 기후에 대한 압박을 줄일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이산화탄소와 기타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경제성장과 정책적으로 분리하고, 전체적인 배출 수준을 줄이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 교통 및 에너지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에는 전 세계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90년보다 58% 증가한 320억3천8백만 톤에 달하여 최고 기록을 달성하였다. OECD 회원국의 생산 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8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다. BRIICS 국가의 배출량은 지속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종수요의 관점에서 보면, OECD 회원국에서 국내 최종 수요 충족을 위해 발생시킨 총배출량은 국내 생산으로부터의 배출량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국내 상품 및 서비스 최종수요 충족으로 인한 배출량이 국내 생산 과정에서의 배출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순 수입국”이다(OECD, 2017^[3]).

발전소, 차량, 기계장치 및 가정에서의 화석연료 연소는 전 세계 인공 온실가스(GHG)의 주요 배출원이다. 화석연료와 바이오매스의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점유한다(OECD, 2017^[3]). OECD 회원국과 6개 주요 신흥국은 화석연료의 추출, 정제 및 연소에 대한 보조금으로 모두 2천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OECD, 2015^[57]). 이는 국제사회가 2020년까지 매년 1천억 달러씩 적립을 요구하고 있는 기후재정 목표를 충족시키고도 남는 금액이다. 최근 OECD와 IEA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면, BAU(Business as Usual: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2020년에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3%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OECD, 2017^[55]).

다른 지속가능개발목표(SDG)와의 주요 상호작용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에 관한 SDG 12는 2030 의제의 전환적인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적인 임무를 지닌다. SDG 12는 변환을 위한 핵심적인 동인 중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는데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보장하고 자연자산 기반을 장기적으로 복구하고 보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SDG 12의 추진은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하고, 천연자원,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을 압박하는 소비와 생산의 주요 동인에 대한 검토를 수반한다. SDG 12를 추진하면서 빈곤퇴치에서 환경보호에 이르기까지 모든 목표 분야 간의 주요 상호연계성을 고려한다. 표 1.7에는 변환을 위한 동인으로서의 SDG 12의 적합성뿐만 아니라 다른 목표들과의 예상되는 상호작용이 제시되어 있다.

자원 효율성은 변환을 위한 필수적 요소다.

“줄이고, 다시 쓰고, 재활용”하는 방식을 통한 자원 효율성 개선은 절반에 해당하는 SDG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1990년 이후로 전 세계의 자원 사용량은 GDP의 증가와 더불어 폭넓게 증가해 왔다. 전 세계의 자원 사용량은 2050년까지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OECD, 2017[58]). 주된 과제는 원자재가 수명주기(추출, 수송, 제조, 소비, 회수 및 처리)와 공급사슬의 전 단계에 걸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피하고 관련된 부정적인 환경 영향(개발/생산 및 유통/판매 모두에 대한)을 줄이며, 원시 천연자원에 대한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OECD, 2017_[3]).

원자재의 생산, 소비 및 최종처리 관리와 관련된 에너지 소요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제품과 연료의 생산, 제품의 수송, 곡물과 식품의 생산 및 저장, 수명주기에 대한 시스템적 관점을 견지하여야 한다. 4개 OECD 회원국에서 원자재 관리 활동과 관련된 수명주기 온실가스 배출은 전체 국내 배출량의 55%에서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원자재 자원 효율성 개선을 통해 배출량을 감축시킬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시사한다(OECD, 2017[58]). 자원 효율성은 SDG 전체에 적용되는 보다 더 지속 가능한 경로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기준이다. SDG 12를 제외한 8개 SDG는 자원 효율성 또는 지속 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직접 다루는 세부목표를 포함한다(표 1.7).

표 1.7. 지속가능개발목표 및 자원효율성

목표	지속 가능한 자원의 사용과 관련된 세부목표
SDG 2 기아퇴치	세부목표 2.4: 2030년까지 생산성과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생태계 보존에 도움이 되며, 기후변화, 기상이변, 가뭄, 홍수 및 기타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하고, 토지와 토양의 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지속 가능한 식품생산 시스템을 확립하고 회복력이 좋은 농업정책을 실행한다.
SDG 6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	세부목표 6.4: 2030년까지 모든 부문의 물 사용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담수 공급과 회수를 보장하며, 물 부족을 겪는 사람들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인다.
SDG 7 적절한 가격의 청정에너지	세부목표 7.3: 전 세계 에너지 효율을 두 배로 향상한다.
SDG 8 완전고용과 경제	세부목표 8.4: 선진국 주도하에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관한 10개년 프로그램 틀에 따라 2030년까지 소비와 생산의 자원 효율성을 점진적으로 높이며, 경제성장을 환경 악화와 정책적으로 분리하려고 노력한다.
SDG 9 산업, 혁신 및 사회기반시설	세부목표 9.4: 2030년까지 각국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모두 참여하여 자원사용 효율을 높이고, 청정하고 친환경적인 기술과 공정을 채택함으로써 사회기반 시설을 개량하고 산업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SDG 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세부목표 11.b: 2020년까지 포용성, 자원 효율성,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재난 회복력과 관련된 통합적인 정책과 계획을 채택, 실행하고 재난위험 저감을 위한 센다이 강령 2015-2030에 따라 모든 계층에서 전체적인 재난위험 관리를 개발하고 시행하는 도시와 주거지의 수를 획기적으로 늘린다.
SDG 14 해양 생태계	세부목표 14.4: 2020년까지 수확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불법, 미신고 및 무단조업과 파괴적인 조업방식을 종식하며, 과학적인 관리계획을 실행하여 가능한 한 단기간 내에 적어도 생물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 지속 가능한 최대 어획량을 늘릴 수 있는 수준까지 어족자원을 복구한다. 세부목표 14.6: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인 개도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차별대우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어업보조금 협상의 중요한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2020년까지 조업능력 과잉과 남획을 조장하는 특정 유형의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불법, 미신고 및 무단조업을 조장하는 보조금을 폐지하며, 그 신규 도입을 금지한다.

SDG 15 육지 생태계

세부목표 15.1: 2020년까지 국제협약상의 의무에 따라 육지 및 내륙, 특히 삼림, 습지, 산악 및 건조지의 담수 생태계와 관련 지역의 보존, 복원 및 지속 가능한 사용을 보장한다.

출처: (OECD, 2016_[59])

농업 및 공업부문의 수자원 사용효율 향상과 수질오염 저감은 여러 SDG의 추진에 매우 중요하다.

농업용수의 지속 가능한 관리는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고 수자원을 타 부문과 공유하며 수계의 환경적 및 사회적 편익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농업부문은 많은 지역에서 수자원을 가장 많이, 종종 가장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오염시킨다. 전체 취수량의 약 70%가, OECD 회원국에서는 40% 이상이 경작에 사용되며 과다한 양분, 살충제, 기타 오염물질로 수질을 오염시킨다. 최근 OECD 국가의 농업지역은 점증하는 물 부족 현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생산의 담수 의존도는 이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 도시인구 밀도와 에너지 및 공업부문의 물 수요 증가로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 간의 수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염 원인행위의 증가로 많은 지역에서 수질 또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은 많은 지역에서 농업에 영향을 미쳐 천수답 및 관개지의 곡물 생산성과 축산업 생산성을 악화시키고, 더 나아가 시장, 무역 및 광의의 식량 안전에까지 영향을 준다(OECD, 2016_[60]).

공업부문에서의 물 사용은 수질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대규모 제조업과 광업은 미량원소와 수은, 아연, 비소 등의 중금속을 주변의 수원으로 유출할 수 있다. 그러한 원소는 수자원에 자연적으로 극소량이 발생할 수 있지만, 농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독성이 강해진다. 산업공해는 또한 물을 산성화시킨다. 채굴작업으로 노출된 황산염을 함유한 암석이 물과 반응하여 황산이 생성되어 산성광산배수가 유출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화석연료의 연소로 생성된 아황산가스가 물에 용해되어 산성비가 되어 지표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로 인해 호수와 강의 수소이온농도가 떨어져 재앙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OECD, 2013_[8]).

경제 개발과 번영, 사회적 규범과 환경적 필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부문의 변혁이 필요하다.

에너지의 생산과 사용에서 주로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체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이는 에너지 부문의 높은 화석연료 연소 의존도를 반영한다(IEA/IRANA, 2017_[61]). SDG뿐만 아니라 파리협약에서 제시된 지구 온도를 2°C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수십 년 내에 에너지 및 산업시스템의 전환이 필수 불가결하다. 전 세계적으로 청정에너지원의 사용을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써 전 세계 에너지밀도를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세계가 사용된 각 에너지 단위당 GDP를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수년간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하여 중요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2016년에 전 세계 GDP는 약 3% 증가하였으나, IEA의 예비조사에 의하면 2016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2 Gt를 약간 상회하여 3년 연속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 증가 및 에너지효율 향상(SDG 7.2 및 7.3에 목표로 설정된)에 반영된 시장 역학, 기술진보 및 정책실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OECD, 2017^[28]).

IEA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에너지효율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2016년의 전 세계 에너지사용량은 12%가 증가하였을 것이며 이는 에너지 시장에 유럽연합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과 유사한 정도라고 한다. 신흥국가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의 증가는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상쇄되었다. 효율의 향상에 따른 에너지밀도 감소는 지속적인 재생에너지와 기타 저공해 연료의 사용 확대와 결합하여 GDP 증가로 인한 배출량 증가를 상쇄시키고 있다(IEA, 2017^[62]).

화석연료 보조금은 에너지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조장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가시켜 에너지 시장을 교란한다.

화석연료 보조금은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방지하며 더욱 청정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로의 이행 노력(SDG 7)을 방해한다.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4년의 예를 들면 5천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후 IEA의 추산에 의하면 전 세계 화석연료 소비 보조금의 규모는 화석연료 가격하락과 일부 국가에서 추진한 보조금 개혁에 힘입어 2015년에 3,100억 달러, 2016년에는 2,600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석유 보조금이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11%에 해당하는 전체의 40%를 차지(1,050억 달러)한 반면에, 전력보조금은 가장 많은 1,070억 달러를 차지(전 세계 전력소비량의 16%에 해당)하였다. 천연가스 소비보조금도 거의 500억 달러에 달하는(가스 소비량의 22%에 지급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한 규모다. 석탄 소비 보조금은 2016년 기준 20억 달러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IEA, 2017^[28]).

화석연료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은 종종 에너지 빈곤 완화 또는 경제개발 촉진이라는 고유한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고 대신에 에너지 낭비를 조장하며 시장에 전달된 정보(market signals)를 모호하게 만들어 가격 변동성에 영향을 끼치며, 연료 밀반입을 조장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향상기술의 경쟁력을 저해한다. 그러한 보조금은 거래와 경쟁력 왜곡에 따른 사회적 비용, 자원의 남용으로 인한 환경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전 세계로 파급되는 탄소배출을 증가시키고, 보조금으로 인해 빈곤층의 희생으로 부유층이 이득을 볼 경우의 재분배 비용을 발생시키며, 생활에 영향을 주는 건강문제를 유발한다. 또 화석연료 보조금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유인책과 함께 제공되는 경우도 있어 정책일관성이 무너지고 생산자에게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고 있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고, 투자를 유인하며,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분야의 성장과 고용을 촉진할 수 있다(OECD, 2017^[55]). 또한 연료 보조금 개혁은 특히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프로그램을 신장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성과를 내도록 재정적 여유를 제공할 수 있다.

정책 및 거버넌스를 통한 대응

지속 가능한 결과를 달성하고 효과적인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공 조달 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 세계의 정부는 매년 약 9조5천억 달러를 공공계약에 지출한다. 이는 공공구매가 평균적으로 GDP의 12%~20%를 차지하며(OECD, 2016_[63]), OECD 회원국 재정지출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의미한다(OECD, 2016_[64]). 정부는 녹색성장과 지속 가능한 개발, 중소기업 육성, 혁신 또는 기업 윤리 규범 등의 추가적인 정책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공공구매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OECD, 2015_[65]). 일본의 녹색구매법 등과 같이 각국 정부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녹색구매를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녹색 공공구매를 통하여 공공구매를 위한 기준을 확립하고 투자를 유인하며 녹색 제품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다(OECD, 2016_[59]).

OECD 공공조달위원회 권고안은 정부의 모든 계층과 공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조달제도의 현대화를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OECD는 또한 조달제도의 품질과 유효성을 평가하고 확인된 장단점을 토대로 전략을 수립하여 개혁을 실행할 보편적인 수단인 조달제도 평가방법론(MAPS)을 개발하였다. MAPS는 소득수준 또는 발전단계와 무관하게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다. 각국이 MAPS를 활용하면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에 관한 SDG 12(특히, 지속 가능한 공공조달 실무에 관한 세부목표 12.7) 및 평화, 정의 및 강력한 제도에 관한 SDG 16(구체적으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투명한 제도에 관한 목표 16.6)의 달성에 도움이 된다.

기업의 참여를 통한 기업운영의 부정적 영향 해소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기업의 무책임한 관행은 경제적 손실, 환경파괴, 노사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OECD는 경제의 모든 부문과 산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감 있는 기업행동을 장려하고 조장할 수단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수단에는 정보공개, 인권,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부정부패, 소비자 보호, 과학과 기술, 경쟁 및 과세를 포함한 모든 핵심 분야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 *다국적기업에 대한 OECD 지침(MNE 지침)* 이 포함된다. MNE 지침은 유엔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의 권고사항(UNGPs)에 완전히 부합한다. MNE 지침에는 기업이 자신들이 유발하거나 원인을 제공한 부정적 영향을 회피하고 해소하거나, 거래 관계에 의해 자신의 제품, 운영 또는 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완화하기를 바라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한 취지에서 기업은 운영 및 거래 관계 이행 과정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한다. 동 지침을 따르는 각국은 지침의 활용을 장려하고 문의 사항에 답변하며 기업이 MNE 지침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국가 대표창구를 설치할 것을 약속한다(Blue and Tebar Less, 2016_[66]).

분쟁지역 및 고위험 지역에서 채굴과 광물거래에 종사하는 기업은 심각한 인권침해 및 분쟁을 포함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그에 연루될 위험이 높다. *분쟁 및 고위험 지역의 책임 있는 광물 공급사슬에 관한 OECD 정밀실사 지침*은 기업이 공급자 선정을 포함한 공급원 결정과 관련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분쟁을 회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천적인 틀을 제공한다². 동 지침에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3T) 및 금의 각 공급사슬에 관한 특성에 맞는 권고사항이 부록으로 제시되어 있다. 동 지침에서는 공급자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통된 참고문헌을 제공하며 정밀실사 책임의 상호관련성도 인식하면서 업계의 관심을

제련업자와 정제업자 등과 같은 효과적인 개입 지점(leverage points)에 집중시킨다. 동 지침의 실행프로그램에 500명이 넘는 이해관계자가 관여하고 있으며 세계 광물 공급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침 비준수자들의 참여까지 끌어냈다(OECD, 2016_[67]).

채굴사업 또한 중대한 사회적, 환경적 발자국을 남길 수 있으며 종종 인권침해, 경제적 퇴보, 환경파괴 같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할 위험이 높다. 법적 요건과는 별도로 채굴 사업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잠재적인 공헌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OECD는 *채굴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관계자 참여에 관한 OECD 정밀실사 지침*을 제정하였다. 채굴부문 기업에는 석유, 가스 및 광물의 탐사, 개발, 추출, 가공, 수송 또는 저장과 관련된 모든 기업이 포함된다.

농산물 공급사슬 상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고용을 창출하고 농업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증대시키고 공급사슬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지식, 기술 및 자원조달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에 지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로써 식품과 영양 안전을 증진하고 해당 국가의 발전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국내 토지법에 의해 비공식적 토지보유권이 인정되고 보호되지 않는 경우 토지가 취득되면 관습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사회가 정당한 보상 없이 퇴거를 당하게 됨으로써 소득의 감소, 취약성 심화 및 식품 불안 등이 유발된다. *책임 있는 농산물 공급사슬에 관한 OECD-FAO 지침*은 기업이 농산물 공급사슬과 관련된 기존의 기업 행위규범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 지침에는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 지침, 농업 및 식품시스템에 대한 책임 있는 투자에 관한 원칙, 국가 식품안전과 관련된 토지, 어업 및 임업권의 책임 있는 협치에 관한 임의 지침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기업은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OECD/FAO, 2016_[68]).

생산과 소비과정에서의 유독성 물질, 폐기물 및 오염물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향상시키는 열쇠가 된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개발을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에서 천연자원 및 유독성 물질의 사용과 폐기물 및 오염물질의 생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UN ECOSOC, 2016_[6]). OECD는 산업활동의 환경적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을 촉진할 도구로서 화학물질 배출 및 이동량 정보시스템(PRTR)의 개발을 권장한다. 2018년 채택된 PRTR 제정 및 실행위원회의 수정 권고안은 SDG 세부목표 3.9, 6.3, 9.4, 12.14, 12.5, 12.8 및 16.10의 달성을 위한 PRTR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원국들이 PRTR을 제정하고 실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OECD는 PRTR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수단과 지침을 개발하여 회원국들의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OECD는 또한 제휴 기관과 협력하여 화학물질 관리 틀을 개발하는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방법에는 *화학물질 관리 의사결정을 위한 IOMC 틀박스* 및 *OECD 환경위험평가도구(ERAT)*가 포함된다. IOMC 틀박스는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국가적 문제와 목적을 다루기 위한 최상의 방법과 지침을 선택할 수 있는 원스톱 슝을 제공한다. 틀박스를 통해 사용자는 가용 자원을 고려하여 각국의 실정에 맞는 비용효율이 높은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다. 틀박스에서 위험기반 실행 방법과 쉽게 실행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먼저 활용할 수 있다.

ERAT는 화학물질의 환경위험평가를 위한 실용적인 방법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의 시스템이다. 툴박스를 통하여 사용자는 1) 유해요소의 확인, 유해요소의 특성화, 노출평가 및 위험의 특성화의 4개 단계를 포함하는 일반적 위험평가절차, 2) 환경에 의도적으로 살포된 특정 살충제를 고려한 살충제 위험평가절차, 3) 직물염료 위험평가, 살충제 위험평가, 환경품질 기준 수립, 허가서에 규정된 대기오염 한도 준수, 금속 위험평가를 위한 성분의 지속, 생물축적, 유독 특성의 초기 검사 등 도구박스 사용법에 관한 여섯 가지 예시를 활용할 수 있다.

OECD는 또한 화학물질 성분 정보에 관한 세계적인 포털인 eChemPortal을 개발하였다. 사용자는 이 포털을 통하여 기존의 건강 및 환경 영향 정보에 접근하여 화학물질의 위험평가를 수행하거나 검토할 수 있다. OECD는 이외에도 각국 정부가 등록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화학물질의 위험평가와 위험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도구에는 시험방법, 다양한 주제(위험평가, 노출, 위험관리, 위험 정보전달)에 대한 지침서와 모범사례, 툴박스 및 정보 포털이 포함되어 있다.

목표 15: 육지 생태계

생물 다양성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다. 생물 다양성은 식량 공급, 물의 정화, 홍수 및 가뭄 조절, 영양소 순환 및 기후조절 등의 중요한 생태계 기능의 토대가 된다. 이러한 기능은 또한 경제활동의 주된 기반이 된다. 생물 다양성협약(CBD)에 따라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복구하며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지속가능개발목표 에는 해양(SDG 14) 및 육지 생태계(SDG 15)에 관련된 목표를 명시하여 이러한 요청을 재확인하고 있다(OECD, 2017_[69]). SDG 15에서는 국제사회가 “육지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구하며, 지속 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고, 삼림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며, 사막화를 방지하고, 토지 황폐화를 방지하고 복원하며, 생물 다양성 상실을 방지”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박스 1.9). 국제적인 수준에서 생물 다양성협약의 당사자들은 2011-20 아이치(愛知/Aichi) 생물 다양성 목표를 달성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동 목표의 대부분이 SDG에 반영되어 있다(OECD, 2017_[69]).

박스 1.9. SDG 15: 육지 생태계의 보호, 복구 및 지속 가능한 이용 촉진, 삼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방지 및 복원, 생물 다양성 상실 방지

15.1 2020년까지 국제협약상의 의무에 따라 육지 및 내륙, 특히 삼림, 습지, 산악 및 건조지의 담수 생태계와 관련 지역의 보존, 복구 및 지속 가능한 사용을 보장한다.

15.2 2020년까지 모든 형태의 삼림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관리의 실행을 촉진하고, 산림파괴를 방지하며, 황폐해진 삼림을 복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조림과 재식림을 획기적으로 늘린다.

15.3 2030년까지 사막화를 방지하고, 사막화, 가뭄 및 홍수의 영향을 받은 토지를 포함하여 황폐해진 토지와 토양을 복원하며, 황폐한 토지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15.4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개발에 필수적인 혜택을 제공할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생물 다양성을 포함한 산악 생태계를 보존한다.

15.5 자연서식지의 황폐화를 줄이고 생물 다양성의 상실을 방지하며, 2020년까지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고 멸종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

15.6 유전자자원의 활용으로 발생하는 혜택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장려하고 국제적인 합의에 따라 유전자자원예의 적절한 접근을 촉진한다.

15.7 보호종 동식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하고 불법적인 야생동물 제품 수요와 공급을 통제한다.

15.8 2020년까지 침투외래종의 육지 및 물 생태계 침입을 방지하고 그 영향을 완화하며, 우선 근절대상 종을 통제하고 제거할 조치를 도입한다.

15.9 2020년까지 생태계화 생물 다양성 가치를 국가 및 지방계획, 개발과정, 빈곤 완화전략 및 계정에 통합시킨다.

실행수단에 관한 세부목표

15.a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모든 원천으로부터 상당한 재무 자원을 조달하고 증가시킨다.

15.b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해 모든 계층과 원천으로부터 상당한 재무자원을 조달하고 개발도상국이 보존과 재조림을 포함한 산림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유인책을 제공한다.

15.c 지속 가능한 생계수단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량 향상을 포함한 보호종의 밀렵과 밀거래 근절 노력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출처: (UNGA, 2015_[4]).

주요 과제

생물 다양성과 관련 생태계는 소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유류와 조류의 약 20%, 거의 40%의 파충류, 양서류의 3분의 1 및 해양 어류의 4분의 1이 이미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다(OECD, 2016_[70]). 2016년 유엔 SDG 발전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주로 저지대 삼림벌채로 인해 양서류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조류와 포유류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다(UN ECOISOC, 2016_[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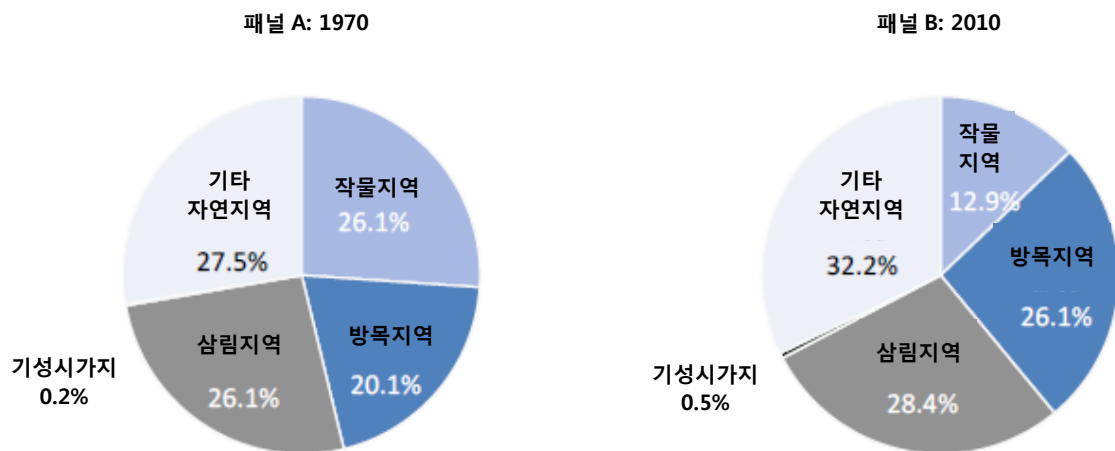
OECD 2050년 환경전망에서는 현상유지 시나리오, 즉 새로운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부터 2050년까지 전 세계 생물 다양성의 10%가 대부분

2030년 이전에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원시림은 2050년까지 모든 지역에서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OECD, 2012_[14]).

육지 생물 다양성 손상의 주된 동인은 토지용도 변경과 관리, 즉 식량, 바이오에너지용 곡물 및 가축사육을 위한 자연 생태계의 훼손이다(OECD, 2012_[14]). 농업은 토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간 활동이다. 현재 지표면의 약 33%가 작물생산과 가축사육에 사용되고 있다(도표 1.9). 생산량 증가의 80%는 기존 토지의 수확량 증대를 통하여, 20%는 농지확장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1970년부터 2010년 사이에 농업의 토지사용(작물생산 및 방목용 토지) 점유율은 4%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삼림 지역의 개간을 통해 달성되었다. 지난 10년간의 확장 속도는 둔화하였다(OECD, 2017_[13]). 도시의 성장, 무분별한 확장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로 인한 토지피복 변경과 분할 또한 생물 다양성을 위협한다(도시화에 따른 과제 관련 장을 참고).

삼림벌채와 훼손은 해결되지 않은 중대한 문제다. 기후변화 정부 간 패널에 따르면 삼림 벌채와 훼손은 두 번째 주된 인위적 이산화탄소 배출원이다. 삼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생물 다양성 보호와 관련하여 일부 발전이 있었다. 유엔의 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 삼림 지역의 순손실 면적은 1990년대의 연간 730만 헥타르에서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연간 330만 헥타르로 감소하였다(UN ECOISOC, 2016_[6]).

도표 1.9. 세계의 토지 이용(197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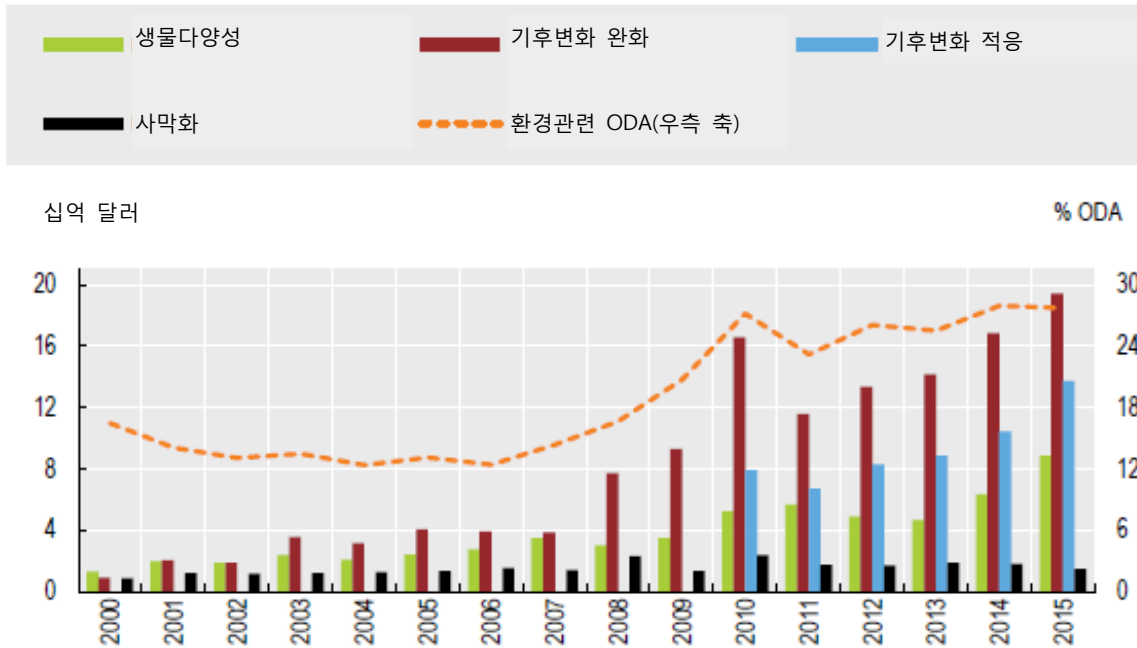
출처: (OECD, 2017_[13]).

생물 다양성 손상과 생태계 훼손은 인체 건강, 복지 및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큰 비용이 든다. 특히 천연자원에 주로 의존하는 농촌의 빈곤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12억 명에 달하는 극빈층의 약 90%가 삼림자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OECD, 2013_[71]).

공적개발원조(ODA)는 개발도상국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ODA는 소득수준이 중하위인 많은 국가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금원이다(Drutschinin and Ockenden, 2015_[72]).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ODA는 2012~2013년의 60억 달러에서 2014~2015년에는 연간 87억 달러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 대한 ODA가 가장 많은 31%를 차지하고 있다(OECD, 2016_[73]). 2015년 기준, 355억 달러인 전체 환경 관련 ODA에서 생물 다양성 관련 ODA의 비중은 작다(OECD, 2017_[3]). 같은 해에 이러한 기금 대부분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배정되었다(도표 1.10). SDG의 생물 다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국내 및 해외의 모든 원천으로부터 대규모의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도표 1.10. 환경적인 목적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주석: 지표는 프로젝트 수준의 자료로 구성되었다. PPPs를 사용하여 2014년 미국 달러로 표시함.

출처: (OECD, 2017_[3]).

다른 지속가능개발목표(SDG)와의 주요 상호작용

인간의 복지에 필요한 자연자산 기반의 핵심 구성요소인 생물 다양성은 2030 의제와 SDG 달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생물 다양성과 SDG간의 주요 연관성은 표 1.8에 제시되어 있다.

표 1.8.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대한 생물 다양성의 기여도

목표	생물 다양성의 역할
SDG 1. 빈곤퇴치	대다수가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농촌 빈곤층에게 생물 다양성은 자원과 소득을 제공한다.
SDG 2. 기아퇴치	건강한 생태계에서는 농경지 단위 면적당 식량을 더 생산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도 개선할 수 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의 대부분은 삼림, 초원, 대양 및 강 등의 자연생태계에서 획득한 식량에 의존한다. 생물 다양성은 또한 농업 생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분, 토양비옥도 및 수질 유지 등의 생태계 기능을 지원한다. 농업에 있어서 유전 및 생태계 다양성을 유지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시장 변동성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할 수 있다.

SDG 3. 건강과 복지증진	건강한 생태계는 특정한 대기, 물 및 토양오염원을 격리하고 제거함으로써 오염의 확산과 영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SDG 5. 양성평등	생물 다양성과 관련 생태계 기능이 상실되면 여성과 여아가 담당하는 식량, 연료 및 물의 조달 시간이 증가함으로써 양성 불평등이 영구화될 수 있다.
SDG 6.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	생태계는 수량과 수질을 유지하고 물과 관련된 위험과 재난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SDG 8. 완전고용과 경제성장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는 농업, 임업, 어업 및 수산증식, 에너지, 관광, 교통 및 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국내 및 국제적 경제활동의 토대가 된다.
SDG 9. 산업, 혁신 및 사회기반시설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는 믿을 수 있고 비용 효율이 높은 자연적 기반시설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산호초, 망그로브 숲은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홍수로부터 연안을 보호한다.
SDG 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생물자원은 도시에서 소비하는 다양한 식품, 건축자재, 에너지 및 의약품의 공급원천이 된다.
SDG 12.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현재의 지속 불가능한 소비 및 생산양식을 유지하면 산업과 공동체가 의존하는 생태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SDG 13. 기후변화 대응	삼림, 이탄지, 습지, 대양과 연안 생태계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탄소저장소다. 생물 다양성은 홍수와 가뭄 및 기후조절 같은 중요한 생태계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회복력 배양에 도움을 준다.
SDG 14. 해양 생태계	생명 다양성은 식량과 약품 용도로 수확하는 기타의 종은 물론 모든 어로 및 수산증식 활동의 토대가 된다.
SDG 15. 육지 생태계	수력발전용 댐 같이 재생에너지 생산 확충을 위한 토지이용 변화는 육지 생태계 보호, 삼림파괴 방지 및 생물 다양성 손상 방지를 위한 세부목표들과 대립될 수 있다.
SDG 16. 평화, 정의 및 제도	천연자원을 둘러싼 분쟁, 환경파괴 및 오염은 사회불안과 폭력을 야기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출처: (CBD/FAO/the World Bank/UNEP/UNDP, 2017^[74]) 수정.

토지이용, 농업, 삼림 및 생태계의 상호연계성 문제에 고심하는 것은 생물 다양성 목표와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열쇠가 된다.

토지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방식은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기능(침식 위험, 홍수로부터의 보호)부터 토양, 물 및 대기질까지 영향을 미친다(OECD, 2017^[3]). 토지 이용은 또한 개인과 집단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며 환경적 지속 가능성, 경제성장 및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OECD, 2017^[75]). 역사적으로, 주로 농경지 확보를 위한 토지 용도변경과 서식지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은 생물 다양성 손상의 주된 동인이었다(OECD, 2016^[76]). 농업, 임업 및 기타 토지 이용은 전 세계 인위적 온실가스의 25%를 배출하는 원천이며 농업이 그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토지 부문(농경지, 삼림, 토양)은 온실가스의 배출원(즉, 가축과 쌀로부터의 메탄, 비료사용에 의한 아산화질소)이기도 하지만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삼림 및 토양의 탄소 비축)이기도 하다(OECD, 2017^[58]).

농경지 이용과 생산방식은 생물 다양성에 긍정적 및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방목과 전통적인 건초제조와 같은 저밀도 농업 방식은 새로운 종으로 이루어진 자연과 유사한 다양한 서식지를 형성하고 지원한다. 그러나 집약화(다량의 비료 및 살충제 사용), 전문화(윤작 및 작물-가축 혼합농법의 축소), 합리화(울타리, 썰기 기타 경계 서식지 제거) 같은 현대식 농법은 이러한 자연과 유사한 서식지와 관련된 종에 해를 끼친다. 예를 들면, 해충과 잡초 등 원하지 않는 종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와 제초제는 관련이 없는

종에도 해독을 기침으로써 생태계 내의 먹이그물, 경쟁 및 공생관계에 연쇄반응을 유발한다(Lankoski, 2016^[77]).

2050년에 9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세계인구의 늘어난 식량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향후 40년간 농업생산량은 60%가 증가하여야 한다(OECD, 2013^[78]). 지금까지는 증가한 식량 수요를 농경지 확장보다는 수확률 향상을 통해 충족시켜 왔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대부분 곡물의 수확률은 감소해 왔다. 따라서 수확률이 신속하게 개선되지 않으면 농경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메탄과 아산화질소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바이오에너지 수요도 금세기에 빠르게 증가하여(OECD, 2017^[58]) 바이오에너지 생산과 식량 안전 간의 잠재적인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농업(SDG 2.4) 및 기술혁신은 토지, 삼림 및 생태계에 관한 SDG 15와 같이 천연자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SDG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하다. 이에는 농작물과 가축의 생산성 증대(지역적인 위험에 대한 회복력이 있고 아산화질소의 생성을 방지하는 다양한 농작물의 개발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비료 사용, 토양 관리 개선, 반추동물과 논·밭의 메탄(CH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농업 및 천연비료 관리 등이 포함된다. 농경지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지속 가능한 농법을 활용하면 연간 1천억 달러가 소요되는 삼림파괴(SDG 15.2) 및 광범위한 토양 황폐화(SDG 15.3)의 방지 및 복원에 도움이 된다(OECD, 2017^[58]).

건강한 생태계는 물 관련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건강한 생태계는 물흐름의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생태계는 유출(보존 지역으로부터 흐르는 강의 홍수 수위)을 줄이며, 물의 토양침투를 촉진(지하수 보충에 기여)한다. 생태계는 수자원을 정화하여 수질을 향상시킨다. 예를 들면, 거의 1백만 명의 도시 주민이 폐수 집수와 정화를 자연 습지에 의존하고 있다. 건강한 생태계는 또한 물 안전의 파급효과로서 식량안전과 기후 안전을 증진한다. 예를 들면, 건강한 생태계는 농경지 단위당 수확량을 증가시키며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OECD, 2013^[8]).

이와 반대로, 생태계에 압박이 가해지면 담수 시스템(강, 호수, 대수층)의 부족, 과잉, 오염, 기타 위험이 증가한다. 예를 들면, OECD 회원국의 특정 지역에서 농업용수의 과다한 개발로 인해 강, 호수 및 습지의 담수량이 최소 수준 이하로 떨어져 생태계가 손상되고 레저활동, 어업, 문화 활동에의 활용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OECD, 2010^[79]).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수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는 수자원을 둘러싸고 경쟁과 압박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핵심 과제는 소비 목적의 물 수요와 환경적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환경적 필요 충족을 위한 수자원이 부족하면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과도한 취수로 인해 호수와 습지의 담수량이 감소하여 생태계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장 악명 높은 사례는 한때 세계 최대 담수호의 하나였던 아랄해의 경우로서, 관개 목적으로 주요 지류의 방향을 돌림으로써 현재 그 크기가 1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남아있는 물의 수질도 염도가 높아져 악화되었다(OECD, 2013^[8]).

정책 및 거버넌스를 통한 대응

생물 다양성의 부문 정책 주류화

생물 다양성 손상 및 황폐화의 주요 동인의 대다수는 다른 부문의 정책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중심적인 과제는 생물 다양성 정책 목적을 경제개발 전략 및 부문 정책에 통합시키고 주류로 편입시키는 것이다(Karousakis et al., 2012_[80]). 생물 다양성이 지방, 지역 및 세계적 규모로 공공의 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기능을 개발전략, 계획, 정책과 예산, 부문별 계획 및 정책, 하부국가의 전략, 계획 및 정책, 개발 협력 프로그램 등의 정책과 계획에 주류로 편입시키는 데 있어서 정부가 모든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진입점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Drutschinin et al., 2015_[8]). OECD는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의 사용에 관한 권고사항*을 통해 회원국이 생물 다양성 목적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부문 정책을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생물 다양성 관리를 위해 적절하게 설계된 경제적 수단을 더욱 폭넓고 일관성 있게 활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표 1.9에는 이러한 생물 다양성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몇 가지 정책 수단이 제시되어 있으며, 규제적 접근법(즉, 명령과 통제), 경제적 수단, 정보 및 기타수단으로 구분되어 있다(OECD, 2013_[71]).

표 1.9.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수단

규제적(명령과 통제) 접근법	경제적 수단	정보 및 기타 수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멸종 위기 종 거래 및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¹	가격에 기반한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지하수 취수, 살충제 및 비료사용) ▪ 부과금 또는 수수료(천연자원 이용, 국립공원 입장, 수렵 및 낚시 면허 수수료) ▪ 생물 다양성 촉진 보조금 	친환경 라벨 표시 및 인증(유기농산물 라벨 부착, 지속 가능한 기준에 의해 채취한 어류 및 목재 라벨 부착)
접근의 제한 또는 금지(보호구역, 수로 번의 법정 완충지대)	환경에 해로운 보조금 개혁	녹색 공공구매(지속 가능한 기준에 의해 채취한 목재)
허가 및 할당(별목 및 어획)	생태계 기능에 대한 대금 지급	자발적 접근법(자연보호관련 기업 간 및 정부 간 협약 또는 자발적 상쇄제도)
품질, 수량 및 설계기준(상업용 어망 기술 사양)	생물 다양성 상계/바이오뱅크	기업 환경회계
공간계획(생태 이동통로)		
계획 도구 및 요건 (환경영향평가[EIAs] 및 전략환경평가(SEA))	거래 가능 허가(양도 가능 개별 어획 할당량, 거래 가능 개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 증서 ▪ 불이행 벌과금 ▪ 이행보증서 	

¹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출처: (OECD, 2-13_[71])

예를 들면 생물 다양성 상쇄는 개발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광업, 사회기반시설, 수력발전 및 농업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의 영향에 대한 보상기법으로 이용되어 왔다(OECD, 2016^[82]). OECD 는 환경 정책수단 데이터베이스(PINE)를 통하여 80 개국에서 활용하는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 등 여섯 가지 유형의 생물 다양성 관련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다.³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 적용

토지이용계획은 17개 SDG 중 6개 SDG의 달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6개 SDG에는 에너지 공급에 관한 SDG 7, 회복력이 좋은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SDG9, 포용적인 도시에 관한 SDG 11, 기후변화 완화에 관한 SDG 13 및 생태계 보호에 관한 SDG 15가 포함된다. 국가 계획시스템에 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을 통합한다는 것은 계획과정에서 경제성장, 환경보호 및 사회통합의 지속 가능한 개발의 세 차원을 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공간계획과 관련된 중요한 과제에 해당한다.

지속 가능한 개발의 세 차원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일부 토지이용계획의 경직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정교한 계획수단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진화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필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간계획은 또한 계획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부계층 간의 수직적 조정과 다양한 부문 간의 수평적 조정을 제공하여야 한다(OECD, 2017^[75]). 표 1.10에는 계획과정에 지속 가능성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몇 가지 기본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표 1.10.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계획 원칙

원칙 및 관련 SDG	내용
생물 다양성 지원 (SDG 15 육지 생태계)	토지 이용과 개발 활동은 생태계의 필수적인 순환과 생명 유지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이러한 활동은 도시형태에 맞게 변형하기보다는 생태계의 과정을 모방하여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수질을 유지하고 홍수를 방지하는 필수적인 생태계 기능을 보호하고 복구함은 물론 생물 다양성을 존중하고 보존하며 지속 가능한 자원개발을 제고해야 한다.
살기 좋은 건조환경(建造環境) (SDG 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바람직한 주민의 활동에 적합한 물리적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사람과 도시 형태 사이의 적합성을 증진하도록 개발의 위치, 형태, 밀도, 조합, 비율과 품질이 확보되어야 하며, 토지이용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사회의 결합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애착을 증진하는 도시형태의 특별한 물리적 특성을 보호하도록 장소의 특징을 유지해야 한다.
지역의 지속 가능성 (SDG 12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지역 경제는 자연환경의 제약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미래의 경제발전을 위한 자산인 천연자원 기반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자연의 필수적인 생산물과 과정은 자연의 재생속도보다 빠르게 소진시켜서는 안 된다. 폐기물의 배출은 자연의 적응속도에 맞추어야 한다. 지역 경제는 또한 지역에 특화된 필요와 염원에 부응하는 구축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다양한 주택과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여야 한다.
공평성 (SDG 1 빈곤퇴치) (SDG 10 불평등 해소)	토지이용 양식을 결정함에 있어 저소득층의 여건을 인식하고 개선하여야 하며 기초적인 수준의 환경 위생과 인간 존엄성이 박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 및 경제적 자원에 대한 공평한 접근은 빈곤을 퇴치하고 최소수혜자의 필요를 배려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

오염자 부담원칙 (SDG 12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지역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염자(또는 과실 있는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을 정당하게 고려하여 오염 및 기타 피해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책임감 있는 지역주의 (SDG 12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지역사회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타인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인 개발자에게 오염자(또는 과실 있는 관계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듯이 지역 관할권을 지닌 행정기관 및 법적기관도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

출처: (OECD, 2017^[75]) 수정.

토지이용계획 정책은 또한 도시지역에서의 에너지 및 탄소 집약적 행동의 고착화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배출에 대해 가격을 매기는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생산자와 가정의 오염을 줄이는 행동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보호구역 지정으로 생물 다양성 손상을 줄일 수 있다.

2017년 SDG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육지 및 담수 환경의 15%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DESAs, 2017^[83]).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 육지, 담수 및 산지의 생물 다양성 보호구역의 면적은 각각 35%에서 47%, 32%에서 43%, 39%에서 49%로 늘어났다(UN ECOSO, 2017^[7]). 지리, 생태 및 지역의 기존 주거지 양식의 차이에 따라 국가별로 보호구역의 범위와 관리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다(OECD, 2017^[3]). OECD는 각국의 육지와 해양 보호구역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일관된 내용을 파악하고, 보존 노력의 범위와 초점을 이해할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생물 다양성 협약의 아이치 목표, SDG, 특히 SDG 세부목표 14.5, SDG 세부목표 15.1 및 SDG 세부목표 15.4의 발전상황을 감시하는데 도움이 된다(Mackie et al., 2017^[84]).

각주

¹ 세계에너지전망(World Energy Outlook)의 새로운 정책 시나리오는 IEA의 기준 시나리오의 역할을 한다. 동 시나리오는 공약 실행을 위한 조치가 확인되거나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각국이 선언한 온실가스 감축 약속 및 화석연료 보조금의 점진적 폐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정책 공약과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² 분쟁 및 고위험 지역의 책임 있는 광물 공급사슬에 관한 정밀실사 지침에 관한 OECD 권고안은 2011년 5월 26일, 장관급 협의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12년 7월 17일 개정을 통해 금에 관한 부록이 포함되었다[C/MIN(2011)12/FINAL].

³ PINE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https://pinedatabase.oecd.org/>를 참고한다.

참고문헌

AfDB/OECD/UNDP(2016), *African Economic Outlook 2016: Sustainable Cities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aeo-2016-en>. [40]

Bagherzadeh, M., M. Inamura and H. Jeong(2014), "Food Waste Along the Food Chain", [56]

- OECD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Papers*, No. 71,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jxrcmftzj36-en>.
- Bule, T. and C. Tebar Less(2016),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responsible [66]business conduct", in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6: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s Business Opportunit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dcr-2016-12-en>.
- CBD/FAO/the World Bank/UNEP/UNDP(2017), "Biodiversity an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Montreal, [74]
<https://www.cbd.int/development/doc/biodiversity-2030-agenda-policy-brief-en.pdf>.
- Clos, J.(2016), "A New Urban Agenda for the 21st century: The role of urbanisation in sustainable development", in *OECD Regional Outlook 2016: Productive Regions for Inclusive Societ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60245-9-en>. 41]
- DESA(2017),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17*, UN, New York, [83]
<http://dx.doi.org/10.18356/4d038e1e-en>.
- Drutschinin, A. et al.(2015), "Biodiversity and Development Co-operation",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Working Papers*, No. 21, OECD Publishing, Paris, [81]
<http://dx.doi.org/10.1787/5js1sqkvts0v-en>.
- Drutschinin, A. and S. Ockenden(2015), "Financing for Development in Support of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Working Paper*, No. 23, OECD, Paris, <http://www.oecd-ilibrary.org/docserver/download/5js03h0nwxmqen.pdf?expires=1519531919&id=id&accname=guest&checksum=F018084AA09E7D7F0D93C72FA68B2C26> (accessed on 25 February 2018). [72]
- FAO(2013), *Food wastage footprint: Impacts on natural resources - Summary report*, FAO, Rome, [54]
<http://www.fao.org/docrep/018/i3347e/i3347e.pdf>.
- Flues, F. and K. van Dender(2017), "The impact of energy taxes on the affordability of Domestic energy", *OECD Taxation Working Papers*, No. 30, OECD Publishing, Paris, [34]
<http://dx.doi.org/10.1787/08705547-en>.
- Hutton, G. and M. Varughese(2016), "The Costs of Meeting the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Targets on Drinking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World Bank/Water and Sanitation Program, [17]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415441467988938343/pdf/103171-PUBBox394556B-PUBLIC-EPI-K8543-ADD-SERIES.pdf>.
- ICSU(2017), *A Guide to SDG Interactios: From Science to Implementation*, 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Paris, [31]
<https://www.icsu.org/cms/2017/05/SDG-Guide-to-Interactions.pdf>.

- IEA(2017), *Energy Efficiency 2017*, IEA,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84234-en>. [62]
- IEA(2017), *World Energy Outlook 2017*, OECD Publishing, Paris/IEA, Paris, [28]
<http://dx.doi.org/10.1787/weo-2017-en>.
- IEA(2017), *World Energy Outlook Special Report: Energy Access Outlook 2017. From Poverty to Prosperity*, IEA, Paris, [26]
http://www.iea.org/publications/freepublications/publication/WEO2017SpecialReport_EnergyAccessOutlook.pdf.
- IEA(2016), *World Energy Outlook 2016*, IEA, Paris, <http://dx.doi.org/10.1787/weo-2016-en>. [16]
- IEA and the World Bank(2017), *Sustainable Energy for All 2017: Progress toward Sustainable Energy*, International Energy Agency(IEA) and the World Bank, Washington, [30]
<http://dx.doi.org/10.1596/978-1-4648-1084-8>.
- IEA/IRENA(2017), *Perspectives for the Energy Transition: Investment needs for a low-carbon energy system*, https://www.energiewende2017.com/wp-content/uploads/2017/03/Perspectives-for-the-Energy-Transition_WEB.pdf. [61]
- ITF(2017), *ITF Transport Outlook 2017*, OECD Publishing, Paris, [45]
<http://dx.doi.org/10.1787/9789282108000-en>.
- Karousakis, K. et al.(2012), "Biodiversity", in *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50: The Consequences of Inaction*,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nv_outlook-2012-7-en. [80]
- Lankoski, J.(2016), "Alternative Payment Approaches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in Agriculture", *OECD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Papers*, No. 93, OECD Publishing, Paris, [77]
<http://dx.doi.org/10.1787/5jm22p4ptg33-en>.
- Mackie, A. et al.(2017), "Indicators on Terrestrial and Marine Protected Areas: Methodology and Results for OECD and G20 countries", *OECD Environment Working Papers*, No. 126,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0796071-en>. [84]
- OECD(2017), *Diffuse Pollution, Degraded Waters: Emerging Policy Solutions*, OECD Studies on Water,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69064-en>. [10]
- OECD(2017), *Financing water and sanit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key trends and figures*, <http://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cetopics/Financing%20water%20and%20sanitation%20in%20developing%20countries%20-%20key%20trends%20and%20figures.pdf>. [85]
- OECD(2017), *Green Growth Indicators 2017*, OECD Green Growth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68586-en>. [3]

- OECD(2017), *Green Growth Indicators 2017 highlights*, [42]
http://www.oecd.org/environment/indicators-modellingoutlooks/Highlights_Green_Growth_Indicators_2017.pdf.
- OECD(2017), *Groundwater Allocation: Managing Growing Pressures on Quantity and Quality*, OECD Studies on Water, OECD Publishing, Paris, [47]
<http://dx.doi.org/10.1787/9789264281554-en>.
- OECD(2017), *Improving Energy Efficiency in the Agro-food Chain*, OECD Green [55]
 Growth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78530-en>.
- OECD(2017), *Investing in Climate, Investing in Growth*, OECD Publishing, Paris, [58]
<http://dx.doi.org/10.1787/9789264273528-en>.
- OECD(2017), *National Urban Policy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50]
<http://dx.doi.org/10.1787/9789264271906-en>.
- OECD(2017),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New Zealand 2017*, OECD [36]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68203-en>.
- OECD(2017), *The Governance of Land Use in OECD Countries: Policy Analysis and [75]*
Recommendation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68609-en>.
- OECD(2017), *The Land-Water-Energy Nexus: Biophysical and Economic Consequences*, [13]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79360-en>.
- OECD(2017), *The Political Economy of Biodiversity Policy Reform*, OECD Publishing, Paris, [69]
<http://dx.doi.org/10.1787/9789264269545-en>.
- OECD(2017), *Water Risk Hotspots for Agriculture*, OECD Studies on Water, OECD [15]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79551-en>.
- OECD(2016), *“Agriculture and Water”*, *Agriculture Policy Note*, [60]
<http://www.oecd.org/tad/policynotes/agriculture-water.pdf>.
- OECD(2016), *A New Rural Development Paradigm for the 21st Century: A Toolkit for [27]*
Developing Countries, Development Centre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52271-en>.
- OECD(2016), *Alternative Futures for Global Food and Agriculture*, OECD Publishing, Paris, [76]
<http://dx.doi.org/10.1787/9789264247826-en>.
- OECD(2016), *Annual Report on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016*, [67]
<http://www.oecd.org/daf/inv/mne/2016-Annual-Report-MNE-Guidelines-EN.pdf>.
- OECD(2016), *Biodiversity Offsets: Effective Design and Implementation*, OECD Publishing, [82]

-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22519-en>.
- OECD(2016), "Biodiversity-relat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ECD DAC Statistics*, [73]
<http://oe.cd/RioMarkers> (accessed on 23 February 2018).
- OECD(2016), *Biodiversity-relat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2015*, [87]
<https://www.oecd.org/dac/environment-development/Biodiversity-related-ODA.pdf>.
- OECD(2016), *Effective Carbon Rates: Pricing CO2 through Taxes and Emissions Trading System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60115-en>. [29]
- OECD(2016), *Making Cities Work for All: Data and Actions for Inclusive Growth*, OECD [1]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63260-en>.
- OECD(2016), *Making Cities Work for All: Data and Actions for Inclusive Growth*, OECD [44]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63260-en>.
- OECD(2016), *Methodology for Assessing Procurement Systems(MAPS)*, OECD, Paris, [63]
<https://www.oecd.org/gov/public-procurement/Methodology-Assessment-Procurement-System-Revised-Draft-July-2016.pdf>.
- OECD(2016), *OECD Council Recommendation on Water*, [18]
<http://www.oecd.org/environment/resources/Council-Recommendation-on-water.pdf>.
- OECD(2016), *OECD Regional Outlook 2016: Productive Regions for Inclusive Societies*, [46]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60245-en>.
- OECD(2016), *OECD Regions at a Glance 2016*, OECD Publishing, Paris, [51]
http://dx.doi.org/10.1787/reg_glance-2016-en.
- OECD(2016),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2016*, OECD Publishing, [70]
Paris, http://dx.doi.org/10.1787/sti_in_outlook-2016-en.
- OECD(2016), *Policy Guidance on Resource Efficiency*, OECD Publishing, Paris, [59]
<http://dx.doi.org/10.1787/9789264257344-en>.
- OECD(2016), *Policy Guidance on Resource Efficiency*, OECD Publishing, Paris, [64]
<http://dx.doi.org/10.1787/9789264257344-en>.
- OECD(2016),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Outdoor Air Pollution*, OECD Publishing, Paris, [43]
<http://dx.doi.org/10.1787/9789264257474-en>.
- OECD(2016), *Water Governance in Cities*, OECD Studies on Water, OECD Publishing, Paris, [23]
<http://dx.doi.org/10.1787/9789264251090-en>.
- OECD(2016), "Water-energy nexus", in *World Energy Outlook 2016*, OECD Publishing, Paris, [12]
<http://dx.doi.org/10.1787/weo-2016-11-en>.

- OECD(2015), *Environment at a Glance 2015: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53]
<http://dx.doi.org/10.1787/9789264235199-en>.
- OECD(2015), *Material Resources, Productivity and the Environment*, OECD Green Growth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90504-en>. [52]
- OECD(2015), *OECD Companion to the Inventory of Support Measures for Fossil Fuels 2015*, OECD Publishing, Paris. [57]
- OECD(2015), *OECD Principles on Water Governance*, OECD, Paris, [21]
<http://www.oecd.org/cfe/regional-policy/OECD-Principles-on-Water-Governance-brochure.pdf>.
- OECD(2015), *Policy Guidance for Investment in Clean Energy Infrastructure: Expanding Access to Clean Energy for Green Growth and Development*, OECD Publishing, Paris, [33]
<http://dx.doi.org/10.1787/9789264212664-en>.
- OECD(2015), *Stakeholder Engagement for Inclusive Water Governance*,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31122-en>. [25]
- OECD(2015), "Strategic public procurement", in *Government at a Glance 201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gov_glance-2015-43-en. [65]
- OECD(2015), *Taxing Energy Use 2015 : OECD and Selected Partner Economies*, OECD Publishing, Paris. [49]
- OECD(2015), *The Metropolitan Century: Understanding Urbanisation and its Consequenc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28733-en>. [39]
- OECD(2015), *Water Resources Allocation: Sharing Risks and Opportunities*, OECD Studies on Water,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29631-en>. [11]
- OECD(2013), *Global Food Security: Challenges for the Food and Agricultural System*,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95363-en>. [78]
- OECD(2013), *Green Growth in Cities*, OECD Green Growth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95325-en>. [35]
- OECD(2013), *Scaling-up Finance Mechanisms for Biodiversity*,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93833-en>. [71]
- OECD(2013), *Taxing Energy Use: A Graphical Analysi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83933-en>. [48]
- OECD(2013), *Water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to Navigate Uncharted Wate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0449-en>. [9]

- OECD(2013), *Water Security for Better Lives*, OECD Studies on Water,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2405-en>. [8]
- OECD(2012), *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50: The Consequences of Inaction*,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22246-en>. [14]
- OECD(2012), "Global water demand: Baseline , 2000 and 2050", in *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50: The Consequences of Inaction*,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nv_outlook-2012-graph3-en. [86]
- OECD(2012), *Water Governance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 Multi-level Approach*, OECD Studies on Water,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74542-en>. [24]
- OECD(2011), *Benefits of Investing in Water and Sanitation: An OECD Perspective*, OECD Studies on Water,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00817-en>. [2]
- OECD(2011), *Water Governance in OECD Countries: A Multi-level Approach*, OECD Studies on Water,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19284-en>. [22]
- OECD(2010),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in Agriculture*, OECD Studies on Water,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83578-en>. [79]
- OECD(2009), *Managing Water for All: An OECD Perspective on Pricing and Financing*, OECD Studies on Water,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59498-en>. [20]
- OECD/FAO(2016), *OECD-FAO Guidance for Responsible Agricultural Supply Chain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51052-en>. [68]
- OECD/UCLG(2016), *Subnational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Structure and finance*, OECD, Paris, <https://www.oecd.org/regional/regional-policy/Subnational-Governments-Around-the-World-%20Part-I.pdf>. [38]
- Sadoff, E.(2015), *Securing Water, Sustaining Growth: Report of the GWP/OECD Task Force on Water Security and Sustainable Growth*, University of Oxford, UK, <http://www.gwp.org/globalassets/global/about-gwp/publications/the-global-dialogue/securingwater-sustaining-growth.pdf>. [19]
- SDSN(2016), "Getting Started with the SDG in Cities. A guide for stakeholders", <http://unsdsn.org/wp-content/uploads/2016/07/9.1.8.-Cities-SDG-Guide.pdf>. [37]
- Sugahara, M. and L. Bermont(2016), "Energy and Resilient Cities", *OECD Regional Development Working Papers*, No. 2016/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jlwj0rl3745-en>. [32]

- UN ECOSOC(2017), *E/2017/66: Progress toward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https://unstats.un.org/SDG/files/report/2017/secretary-general-sdg-report-2017--EN.pdf>. [7]
- UN ECOSOC(2016), *E/2016/75: Progress toward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ECOSOC, New York, <https://unstats.un.org/SDG/files/report/2017/secretary-general-sdg-report-2017--EN.pdf>. [6]
- UNGA(2015), *A/70/L.1: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A/RES/70/1&Lang=E. [4]
- WHO/UNICEF(2015), *Progress on sanitation and drinking water – 2015 update and MDG assessment*. [5]

제2장. SDG의 일관된 실행을 위한 8개 기초요소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의 회원국이 제출한 대부분의 국가평가 보고서(VNRs)에 따르면 정책일관성 확보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의 실행에 있어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다. 본 장에서는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에 보고서(VNRs)를 제출한 국가들(벨기에,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및 터키 등 20개 OECD 회원국)의 SDG 실행을 위한 제도적인 틀과 관련된 계획 그리고 초기적 조치에 대해 살펴본다. 본 장에서는 SDG 세부목표 17.14에서 요구되는 PCSD를 위한 모범적인 제도적 실무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렌즈로 이를 구성하는 8개의 핵심 원칙을 적용한다. 실행을 위한 접근법과 메커니즘이 국가별로 다르다는 점을 논증하기 위해 국가평가보고서(VNRs)에서는 몇 가지 사례를 인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장에는 또한 SDG의 일관된 실행을 위한 분석 도구를 개발한 두 기관(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확보 파트너십의 회원)의 기고문이 게재되어 있다. 본 장의 내용은 제3장에 게재된 국가별 현황을 토대로 보완하였다.

서론

2030 의제가 채택된 지 2년이 넘은 지금 많은 국가가 아직도 SDG의 통합된 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직화라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SDG 간의 복잡한 상호 연관성으로 인하여 많은 정부에서 부문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책적 상호의존성이 주목 받고 있다. 2030 의제는 각국 정부가 정책 및 제도적 고립을 탈피하여 참여 확대, 합의 도출 그리고 기관 및 수행주체 전체에 대한 주도권 창출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책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실행방식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의 유엔회원국이 제출한 65건의 국가평가 보고서(VNRs) 대부분이 정책일관성 확보를 지속가능개발목표(SDG)의 실행에 있어 가장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UNDESA, 2017^[1]). 실무적으로는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을 조정하여 기존의 제도에 지속가능개발목표를 효과적으로 통합시키며 부서 간 협력을 촉진하고 전 세계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고려하는 행정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책일관성 확보에 있어 모든 경우에 들어맞는 한가지 접근법은 없다. 각국은 각자에게 적합한 제도적 메커니즘과 일련의 조치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본 장의 목적은 어떤 방법이 작동하고 어떤 방법이 그렇지 않은지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강조하고, 다른 국가들이 전략적 틀을 개선하고, 제도적 메커니즘과 모니터링 및 보고 시스템을 강화하며, 국경을 초월한 영향을 해결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궁극적으로 SDG 실행에서 정책일관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SDG 실행에 있어 정책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에 국가평가보고서(VNRs)를 제출한 벨기에,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및 터키 등 20개 OECD 회원국이 사용한 SDG 실행을 위한 제도적 틀의 적용계획과 그 첫 단계에 대해 살펴본다. VNRs 및 기타 공식 정보원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SDG 세부목표 17.14에서 요구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SD) 확보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과 실무를 강조하는데 이것은 모범 실무지침 또는 도구의 토대를 구성하는 것이다.

본 장은 OECD 가 2016 년에 개발한 각국이 행정 및 정치적 전통과 관계없이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PCSD 틀의 8 개 기초요소인 1) 정치적 약속과 지도력, 2) 정책 통합, 3) 장기 계획의 대상 기간, 4) 잠재적 정책 효과의 분석 및 평가, 5) 정책 및 제도적 조정, 6) 하위국가 정부 및 지방정부의 참여, 7)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8) 모니터링 및 보고로 구성되어 있다. 본 장에는 SDG 의 일관된 실행을 위한 분석 도구를 개발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확보 파트너십 회원인 스톡홀름 환경연구소(SEI)와 국제 응용시스템 분석연구소(IIASA)의 기고문이 게재되어 있다. 본 장의 내용은 8 개 PCSD 기초요소에 상응하는 제도적 실무와 메커니즘을 조명하고 있는 19 개국의 국가별 개요를 제시한 제 3 장을 토대로 보완되었다.

정책일관성과 지속가능개발목표

세부목표 17.14에 구체화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SD)은 모든 SDG 실행 수단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PCSD는 목표 분야 간의 중요한 상호관련성을 확인하고, 잠재적인 절충점을 관리하며, 시너지 효과를 촉진하고,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박스 2.1). 한 부문의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다른 부문의 노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함으로써 PCSD는 더욱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아 퇴치와 관련된 SDG 세부목표 2.1의 달성을 위한 농민 지원프로그램에 따라 농작물과 가축 생산을 위한 삼림파괴가 증가함으로써 생물 다양성 손상을 방지(SDG 세부목표 15.5)하기 위한 노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OECD는 농업을 위한 토지용도 변경이 전 세계적인 생물 다양성 손상의 주된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관성은 정책의 모순적이고 비일관적 집행 방지하고, 비효율적인 비용지출을 줄이며, 목표달성에 부정적인 영향과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박스 2.1.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이란 무엇인가?

OECD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SD)을 국내 및 국제적인 정책 결정의 모든 단계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의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측면을 조직적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접근법 및 정책 도구로 정의한다. PCSD의 주요 세 가지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정책 분야에 걸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 2) 절충점을 파악하여 국내 정책의 목표와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조정한다.
- 3) 국내 정책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제거한다.

출처: (OECD, 2014_[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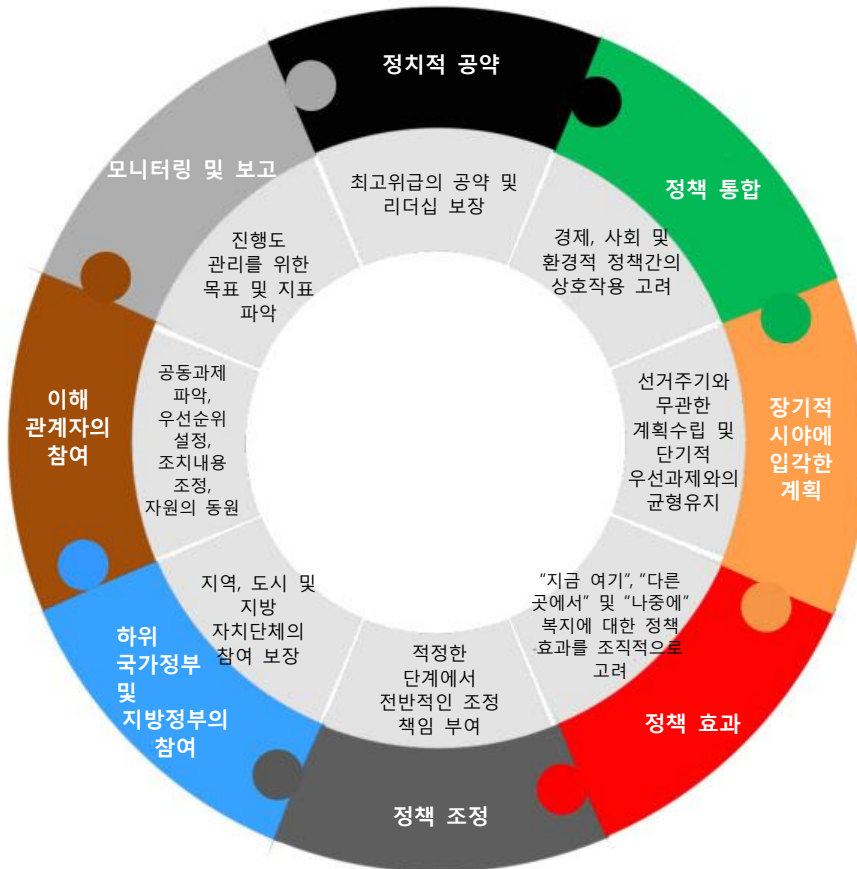
OECD 회원국이 2016년과 2017년에 HLPF에 제출한 국가평가보고서(VNRs)에는 SDG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확립한 다양한 제도적 메커니즘이 기술되어 있다(부록 2.A 참고). 이들 국가의 대부분은 1992년 리오 지구 정상회담에서 조인된 의제 21에 대한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다. 핵심적인 문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메커니즘을 어떻게 활용하여 SDG를 일관성 있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8개 기초요소

정책일관성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정부의 정치적인 선택의 결과이다. SDG 세부목표 17.14에서 요구하는 PCSD 확보 여부는 서로 상충하는 국내 및 국제적 우선 과제, 상반되는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문제, 경합하는 부문의 이해관계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단기 우선 과제와 장기적 정책 방향의 조화를 포함한 상호대립적 정책적 압박을 예견하고, 균형을 잡고, 조정하는 메커니즘에 의해 좌우된다.

OECD 회원국의 의제 21에 따른 국내 지속 가능 발전전략(NSDS)의 실행뿐만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의 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확보 경험을 바탕으로 OECD는 일관된 SDG 실행에 필수 불가결한 8개의 기초요소를 도출하였다(도표 2.1). 동 기초요소는 정책일관성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장치, 과정 및 방식을 표현하며 각국의 행정 및 정치적 전통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다.

도표 2.1.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8개 기초요소



출처: (OECD, 2017[4]).

이러한 기초요소를 살펴보면 다양한 제도적 메커니즘이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 결합하여 1) 정부 전체의 실행력 결집, 2) 경제적, 환경적 및 사회적 문제의 균형 유지, 3) 단기 및 장기적 우선 과제의 조정, 4) 국내 정책의 국경을 초월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해소, 5) 부문 간의 조직적인 상호 지원 노력, 6) 하위국가 정부 및 지방정부 수준의 참여, 7) 정부 외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8) 일관된 정책 결정을 위한 모니터링 및 보고의 측면에서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정책일관성 확보에 기여하는지 알 수 있다. 이들간 특별한 정책의 순서는 없으나,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달성이 꾸준히 이어지려면 8개 기초요소 모두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정치적 약속

정책일관성은 확고한 정치적 약속과 리더십에서 시작된다. 최고위급에서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표명된 정치적 공약은 정책 목적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필수적인 토대가 된다. 정치적 공약은 정당 간의 폭넓은 합의, 의회의 지원, 전략적 틀, 일정이 명시된 실행계획 및 유인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OECD, 2010^[5]). 어떠한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경로로 이행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SDG를 달성하며, 정부 전체의 실행력을 결집하고, 기관 및 참여자 전체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논의의 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이 필요하다. 각 부처의 정책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지방,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공약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본 장에서 다루고 있는 20개 OECD 회원국은 국내 및 국제적 포럼에서 2030 의제와 SDG에 대한 확고한 정치적 약속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 예를 들면, 멕시코의 대통령은 2016년 제71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2030 의제를 “국가적인 약속”으로 간주하여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단언하였다(UNGA, 2016^[6]). 이 약속을 토대로 멕시코는 SDG 실행을 위해 기존의 국가 및 부문 계획을 조정하고, 제도적 및 법적 틀을 적용하여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회원국이 새로운 지속 가능 발전전략을 수립하였고 그 중 일부는 보다 구체적인 국가적 실행계획을 입안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HLPF에의 국가평가보고서 제출과 같은 폭넓은 협의와 명확한 공약의 표명을 바탕으로 계획이 도출되었다. 멕시코와 스위스는 2018년에 두 번째의 VNR을 제출할 예정이다.

1992년 리우회의를 위해 수립한 지속 가능 발전전략을 수정하여 실행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은 국가도 있다. 예를 들면, **에스토니아**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30 의제와 SDG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에스토니아 21*에 대한 검토를 개시하였다. **한국**에서는 SDG를 국가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틀로서 5년 단위로 갱신되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를 2016년 1월에 수립하였다. **스위스**는 중장기(2016-19)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방위원회의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SDG에 대한 기여를 명시한 지속 가능 발전 전략을 개정하였다.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은 갱신 과정에서 2030 의제와 SDG의 통합적이며 다층적이고 장기적인 특성이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증진되었다(박스 2.2).

박스 2.2. 2030 의제와 SDG간 조정을 위한 국가전략 수정

벨기에 -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2017년 승인된 국가 지속 가능 발전전략은 연방과 지방 수준의 정부의 수행주체들이 모든 노력을 SDG에 집중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정책 수립을 위한 일관된 접근법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는 포용적인 틀을 제공한다. 새로운 특기 사항으로는 정권 임기 중 2회에 걸쳐 집행현황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고 주요 이해관계자를 폭넓게 논의에 참여시킨다는 관계 당국의 약속이다(PMO Belgium, 2017^[7]).

체코 - 2030 의제의 원칙, 목표 및 세부목표에 맞추어 2010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틀을 개정하였다. 2017년 4월에 채택한 *체코 2030*에는 사람과 사회, 경제, 회복력이 좋은 생태계, 지역과 지방자치단체, 세계적 발전 및 좋은 거버넌스 등 6개

국가 정책 우선 분야가 명시되어 있다. *체코 2030*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시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97개의 구체적인 목표를 규정하고 있으며 분야별, 지역 및 지방 전략을 위한 매우 중요한 틀을 제공하고 있다(Czech Republic, 2017^[8]).

독일 - 2017년 1월, 연방정부는 2002년 채택된 이후 가장 광범위하게 증진된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의 개정판을 승인하였다. 동 전략은 광범위한 정책 분야를 망라하는 구체적 세부목표와 조치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모든 연방기관은 해당 분야의 활동을 통하여 세부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요청 받는다. 동 전략은 1) 국내 효과를 위해 독일이 취할 조치, 2) 세계적 효과를 위해 취할 조치 및 3) 상호협력의 형태에 의한 다른 국가에 대한 지원(독일이 취할 조치) 등 세 가지 수준에서 17개 SDG 실행을 위해 취할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다(Germany, 2016^[9]). 신정부의 연정 조약을 통하여 독일은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가치 있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조약은 2030 의제의 실행과 지속 가능한 개발의 촉진은 정부 행위의 척도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탈리아 - 개정된 국가 지속 가능 발전전략 2018/2030은 사람, 지구, 번영, 평화 및 협력의 다섯 가지 핵심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의 네 분야는 주로 국내문제를 다루며 마지막 한 분야는 국제협력과 관련된 원칙과 목적을 다룬다. 이 전략의 실행은 국가 개혁계획과 경제 및 재정문건 같은 기존의 국가 계획문건과 연계하여 이루어진다(Italy, 2017^[10]).

슬로베니아 - 2017년 12월에 채택된 *슬로베니아 발전전략 2030*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에 대응하는 포용적인 개발 틀을 제공한다. 동 전략의 주된 목적인 “모두가 최고의 삶의 질을 누리는 슬로베니아”는 운영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 부문, 지역 및 자치단체의 전략이 뒷받침된 균형 잡힌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발전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Republic of Slovenia, 2017^[11]).

스웨덴 - 2003년 의회가 채택한 국제개발정책은 2015년에 시작되어 2030 의제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틀을 스웨덴에게 제공한다(Sweden, 2017^[12]).

일부 국가에서는 SDG 및 2030 의제의 핵심 원칙을 기존의 국가발전계획에 통합시켰다. 멕시코는 국가발전계획(NDP)을 2030 의제를 달성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과 조치를 지도할 매우 중요한 틀로 활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멕시코**는 2017년, 17개 SDG와 2030 의제의 주요 원칙을 반영하여 국가계획법을 개정하여 장래의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2030 의제의 원칙을 통합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지침을 제정하였다(Mexico, 2017^[13]).

마찬가지로, **네덜란드**는 2030 의제의 비전과 핵심 원칙을 기존의 국가계획에 통합시키고 있다. 2017년 10월에 의회에 제출된 연정 합의서인 “미래에 대한 확신”은 1) 주요 공공서비스 투자, 2) 모두를 위한 안전 증진과 경제적 기회 보장, 3) 기후변화 대응과 네덜란드의 지속 가능한 미래 보장 및 4) 지도하는 틀로서 SDG와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네덜란드의 세계적

역할을 강화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2017^[14]). **포르투갈**은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지구(Planet), 평화(Peace) 및 협력(Partnership)의 5P로 정의된 주제별 분야를 중심으로 2030 의제를 국가계획 및 정책에 통합시켰다(Portugal, 2017^[15]). **터키** 정부는 SDG를 제11차 국가발전계획(2019~2023)을 위한 장기적 비전 수립에 주요 항목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모든 정부 정책 분야를 망라하는 명확하게 정의된 목적을 지닌 구체적인 일정이 명시된 실행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정치적 약속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다. 일부 국가들은 포용적인 전략적 틀에 추가하여 2030 의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박스 2.3). **프랑스**는 각 단계(정의, 실행, 감시 및 평가, 주기적 검토)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SDG를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개발하고 있다(OECD, 2017^[4]). **노르웨이**는 예산과 연계된 SDG에 대한 국가적 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 **스위스**의 지속 가능 발전전략 2016-2019에는 SDG와 밀접하게 관련된 9개 주제 분야인 소비와 생산(SDG 12), 도시개발, 이동성 및 사회기반시설(SDG 9 및 11), 에너지와 기후(SDG 7 및 13), 천연자원(SDG 2, 6, 14 및 15), 경제 및 재정시스템(SDG 8, 10, 16 및 17), 교육, 연구 및 혁신(SDG 4), 사회보장(SDG 1 및 16), 사회통합과 양성평등(SDG 5, 10 및 16) 및 건강(SDG 3)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박스 2.3. SDG 실행을 위한 국가별 행동 계획

체코 - 체코 2030의 실행계획은 전략적인 구체적 목표와 기타 부문 전략, 구상, 프로그램 목적 간의 준수를 보장하고 기존의 정책 차이(policy gaps)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메커니즘과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일이 포함된다(Czech Republic, 2017^[8]).

덴마크 - 정부는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지구(Planet), 평화(Peace) 및 협력(Partnership)의 5P에 중점을 둔 실행계획을 구상했다. 협력은 여러 부문에 포괄적으로 관련되지만, 다른 차원을 위해 정부는 강점이 있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SDG를 달성하기 위한 총 37개의 구체적인 국가적 세부목표를 개발했다(Denmark, 2017^[16]).

핀란드 - 2017년에 의회에 제출된 정부 계획에는 2030년까지의 실행, 국가 차원의 이행점검(follow-up) 및 검토(review up)를 위한 틀이 포함되어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탄소 중립적이고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핀란드 및 2) 비차별적이고 평등하며 유능한 핀란드이다(PMO Finland, 2017^[17]).

이탈리아 - 장관협의회가 국가 지속 가능 발전전략(NSDS)을 승인함에 따라 NSDS 목적에 미치는 정책 영향을 측정할 분석모델을 포함한 모니터링 및 검토 메커니즘과 아울러 2030년까지의 계수적이고 정량적인 세부목표가 포함된 미래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Italy, 2017^[10]).

일본 - 2016년 12월, 수상이 주재하는 내각 기구인 “SDG 추진본부”는 2030 의제 실행과 관련된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전략에 해당하는 *SDG 실행 지침*을 채택하였다. 동 지침에는 비전, 다섯 가지 실행 원칙, 여덟 개 우선 분야와 이행점검 및 검토과정을 위한 접근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부록에는 국내 및 국제적으로 실행할 140개의 구체적인 조치가 수록되어 있다(Japan, 2017^[18]).

룩셈부르크 - 격차 분석과 아울러 SDG를 통합하는 기존의 정책과 국제적인 약속의 내용을 토대로 2018년 제3차 지속 가능한 발전 국가계획 준비가 구체화될 예정이다. 국가계획에는 국내 및 국제적 수준에서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룩셈부르크의 우선 분야가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목적이 규정되어 있으며, 실행에 필요한 조치와 수단이 제시하고 있다.

멕시코 - 대통령실의 조정하에 광범위한 협의 과정을 거쳐 2030 의제 실행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새로운 전략에는 미래 국가발전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 비전이 반영될 예정이다. 2030 의제 국가위원회가 그 실행 책임을 맡고 있다.

명확하게 기술된 공약과 정부 내외의 광범위한 소통은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행정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지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본 장에서 다른 국가들 중 절반이 정책일관성을 SDG 실행을 위한 전략과 계획 또는 개발 협력 정책의 요소로 명시적으로 공약하였다(박스 2.4).

박스 2.4. 정책일관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공약한 국가

벨기에 -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약속은 2007년부터 연방정부, 지역사회(플라망어, 프랑스어 및 독일어 사용) 및 지역(왈로니아, 플랑드르 및 수도 브뤼셀)이 준수하여야 하는 벨기에 헌법에 정식으로 명시되어 있다. 2013년의 개발협력법에는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4년에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PCD 준수에 관한 정부 간 선언이 서명되었다. 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에 관한 기존 공약과 제도적 구조를 2030 의제의 새로운 실제상황에 적응시키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체코 - 체코 2030에 서술된 매우 중요한 틀은 지속 가능한 개발과 복지를 핵심으로 하여 PCSD를 국가, 지역 및 지방정책 수립을 위한 지도 원칙으로 사용한다(Czech Republic, 2017^[8]).

덴마크 - 정부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을 지원하며 각 부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정책 결정에 반영한다. 정부는 SDG 실행계획의 일환으로서 새로운 제정법과 주요 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한다(Denmark, 2017^[16]).

핀란드 - 2017년에 의회에 제출된 2030 의제에 관한 정부 계획은 2030년까지의 실행, 국가 차원의 이행점검 및 검토를 위한 틀이다. 동 계획은 또한 국내 및 국제적 약속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을 명백히 약속하고 있다(PMO Finland, 2017).

독일 - 국가 지속 가능 발전전략에는 2030 의제를 정책일관성 확보, 특히 SDG 17.14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기회로 삼겠다는 연방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조직의 상호의존성 증대에 비추어 보다 높은 수준의 정책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분야를 통합하였다. 각 부처의 핵심 담당자로 지속 가능한 발전 부처 코디네이터를 임명하였다.

룩셈부르크 - 2017년 5월에 채택된 2030 의제 실행에 관한 보고서는 정책일관성과 범정부적인 참여의 필요성을 다루었다(Luxembourg, 2017_[19]). 실행 전략인 지속 가능 발전 국가계획에서도 정책일관성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부서간 지속 가능한 발전위원회와 부처간 개발 협력 위원회 간에 긴밀한 협력관계가 형성되었다. SDG 실행을 위한 개발협력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OECD, 2017_[20]).

네덜란드 - 2016년, 네덜란드는 SDG에 대응하는 일정이 명시된 목표와 실행조치가 포함된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한 실행계획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무역협정, 탈세/절세, 투자 보호, 기후변화, 송금비용, 지속 가능한 가치사슬(기업 행동규범 포함), 의료 및 식품안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행계획은 새로운 대외무역 및 협력정책을 반영하여 2018년에 개정될 예정이다.

포르투갈 - 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국가 계획은 SDG 실행을 위한 국내 우선과제와 연계되었으며 앞으로 이를 통해 다양한 부처, 국회 및 제3국 대표간의 공동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Portugal, 2017_[15]).

슬로베니아 - 새로운 슬로베니아 발전전략 2030 은 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확보의 중요성과 수평적 및 다층적 협력 메커니즘 확립, 다양한 분야에 관련된 주제와 중앙계획에 대한 이해, 국내정책의 조정과 감시 및 국내와 국제 개발목표의 조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epublic of Slovenia, 2017_[11]).

스웨덴 - 2015년에 재수립된 세계 발전정책(PGD)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일관성의 중심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2030 의제를 채택한 후 모든 부처는 처음으로 세계적 목표와 연계된 PGD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명시된 내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수평적 및 수직적 정책일관성 확보는 도전적인 과제지만 SDG 실행과 관련된 절충과 시너지 효과를 파악할 기회로 간주된다.

정책 통합

각국은 2030 의제를 채택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차원에서 균형을 이룬 통합적인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고 “의제를 자국 내에서 지역 및 세계 수준에서 실행”할 것을 공약했다(UNGA, 2015_[21]). 정책 통합은 정책 결정의 전 단계에서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고 절충뿐만 아니라 종종 상반되는 지속 가능한 개발 분야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책일관성은 통합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다. 하나의 SDG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다른 SDG의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SDG 7)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SDG 8), 지속 가능한 도시 건설(SDG 11),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 보장(SDG 12) 및 기후변화 대응(SDG 13)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입안하여야 한다. 또한 한가지 목표의 발전이 다른 목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전력 및 청결한 조리법의 보편적인 이용(SDG 7)을 보장하는 조치가 기후변화 대응 목표의 달성(SDG 13)에 지장을 주거나 대기오염을 악화시켜 건강(SDG 3)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책을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및 제도가 1) 우선순위의 공유에 바탕을 둔 부문 간 협력이라는 새로운 논리에 의해 실행되고, 2) 부문별 목적을 중요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목표(SDG 같은)에 맞게 정리하기 위한 전략적 틀과 권한이 필요하다. 이는 SDG를 각 정부 기관의 임무에 반영하기 위한 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치를 의미한다. 또한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고, 계획, 예산편성, 입법, 부문 프로그램 및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사결정과정(부처 간, 다중 이해관계자)이 필요하다. 정책 우선순위 결정 시에는 국제적인 의무 이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책 통합은 수직적(국제, 국가, 하부국가 및 지방정부 수준에 걸쳐) 및 수평적(정책공동체와 정부 기관에 걸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OECD, 2002_[22]).

1992년 리우 지구 정상회담에서 조인된 의제 21의 일환으로 수립된 국가 지속 가능 발전전략(NSDS)의 실행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책 통합을 달성하기는 대단히 어렵다(OECD, 2005_[23]). 대부분의 NSDS는 경제적 및 사회적 측면의 통합을 시도하면서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은 통합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환경문제로 인식되어 대부분의 경우 환경부처가 국내 여건에 중점을 두고 주도해 왔다.

2030 의제의 통합적인 성격에 맞게 각국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문제를 보다 일관되고 균형 있는 방식으로 수용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박스 2.5) **네덜란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주요 정책 책임을 최근 개칭한 경제기후정책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Climate Policy)에 부여하였으며, 주요 임무는 상충을 피하고 시너지 효과를 증진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외무역 및 개발 협력 관련 정책 책임을 한 명의 장관에게 일임하였다. **한국**은 경제 및 사회발전 목표를 포함하고, SDG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제3차 지속 가능 발전 기본계획 2016-2035를 확대 개편하였다.

일부 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을 국내의 제정법에 반영하였다. **벨기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연방, 지역사회 및 지역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인 정책 목적으로 설정하도록 헌법에 규정하였다. **칠레**는 최근 교육, 노동 및 조세 분야에서 2030 의제와 SDG를 지원하는 일련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다른 국가들도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지침을 제정하거나 실무단을 구성하였다. **스위스**의 지속 가능 발전전략 2016~2019에 포함된 지침은 연방위원회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연방의 부문 정책에 주류로 편입시키는 방식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터키**는 개발부(Ministry of

Development)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단을 구성하여 SDG를 국가발전계획, 지역계획, 연간 프로그램 및 부문 전략을 포함한 모든 단계의 공식 문건에 통합하도록 하였다.

국가 예산은 정부의 주요 정책이자 우선순위 설정 문건으로서 정책 통합과 일관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예산편성 과정을 통하여 SDG 프로그램과 실행조치를 조정하는 국가들도 있다. **멕시코**는 연방 정부 기관이 SDG를 권한을 부여 받은 계획영역에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항목, 기한 및 실행조치가 명시된 규정을 2018 회계연도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하였다. **노르웨이**에서는 재무부가 SDG 실행을 위한 예산조정 책임을 지고 있다. 재무부가 17개 목표별로 조정 부처 한 곳에 할당하면 이 조정 부처는 관련 세부목표의 이행에 관여하는 다른 부처와 협력하게끔 되어 있다. 각 부처의 발전상황 보고서는 재무부가 종합하여 국가 예산 연간 백서에 담아 의회에 제출한다.

박스 2.5. 정책 통합 사례

벨기에 - 지속가능발전 연방연구소(FISD)는 정부 부처와 기타 이해관계자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각자의 핵심분야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규제행위의 사전적 영향평가 및 벨기에 2030 전망을 위한 연방 장기비전 기술서 또한 정책 통합을 지원한다.

덴마크 - 정부는 이미 새로운 법률안을 경제적, 환경적 및 양성평등 영향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을 지원하며 각 부처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핀란드 - 정부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 발전 목적을 정부 부처의 성과목표와 성과관리에 포함할 예정이다. 성과목표에 포함된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 실행을 촉진하고 감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다양한 행정분야의 점검지표를 예산편성과정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독일 - 독일 지속 가능 발전전략의 12개 관리규칙에 지속 가능한 정책 결정을 위한 일반 요건을 규정하였다. 새로운 전략에 의하면, 모든 법률과 명령의 초기 단계부터 지속 가능성에 관한 지침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속 가능한 개발은 제안된 법률과 규정의 영향 평가에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연방정부 부처의 공동 의사규칙에 명시되어 있다(Germany, 2016^[9]). 2018년 3월, 제안된 모든 법률 및 규정과 SDG와 독일 지속 가능 발전전략의 모든 목표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온라인 도구(www.enap.bund.de)가 개발되어 지속 가능성 영향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 - 2016년 *SDG 실행 지침*은 “소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회복력이 가능하게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발전을 달성하는 미래를 향한 선도자가 되기 위한” 일본의 열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동 지침은 정책 통합을 위한 틀을 제공하며 정부와 관련 기관이 계획, 전략 및 정책에 SDG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유도한다(Japan, 2017^[18]).

장기 계획의 대상 기간

2030 의제를 채택한 국가는 “모든 사람의 이익과 현재 및 미래 세대를 위해 의제를 실행”할 것을 공약하였다(UNGA, 2015_[21]). SDG는 세대를 초월하여 약속을 유지할 예방적인 결정과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장기적인 관점을 견지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 의사결정은 4년에서 6년 사이의 선거주기를 넘어서 실행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이는 세대를 초월하여 장기적 시야를 고려하기에는 모자라는 시간이다. 핵심 과제는 선거주기, 정부 프로그램 또는 내각 구성과 관계없이 SDG 실행 노력이 지속하고 단기적 우선 목표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일부 국가들은 2030 의제에 힘입어 20년 또는 30년의 시간 단위를 국가 전략에 적용하였다(박스 2.6).

박스 2.6. SDG 이행을 위한 장기 계획의 대상 기간

벨기에 - 지속 가능한 발전 연방 비전은 2050년까지의 장기적인 전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부서 간 회의(IMCSD)는 존속기한이 없다.

핀란드 - 지속 가능한 발전 국가위원회의 실행계획에 명시된 비전과 목표인 *우리가 바라는 2050년의 핀란드 -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사회의 약속*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장기적인 틀을 제공한다. 동 계획에는 SDG 실행을 위한 예측 활동의 보다 긴밀한 조정, 정부 관리의 능력개발 및 장기적인 실행 여건 조성을 포함한 몇 가지의 핵심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독일 - 독일 지속 가능 발전전략의 첫 번째 관리규칙은 “각 세대는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미래 세대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예측 가능한 미래의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정 규정의 장기적인 효과는 지속 가능 영향 평가에서 명시적으로 고려한다.

이탈리아 - 국가 지속 가능 발전전략 2018/2030은 2030 의제를 토대로 장기적 비전 실현을 위한 경로를 설정한다.

슬로베니아 - 최근 채택된 슬로베니아 발전전략 2030은 SDG에 대응한 국가의 전반적인 개발 틀로서 슬로베니아 비전 2050에 대한 실행계획이다. 슬로베니아 비전 2050은 포용적인 과정을 거쳐 수립되었으며, 국가의 장기적인 방향설정을 위한 핵심 틀이다(Republic of Slovenia, 2017_[11]).

정책 효과

각국은 2030 의제를 채택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향한 길을 같이 출발하여 전 세계의 발전을 공동으로 추구하는데 헌신”할 것을 확인하였다(UNGA, 2015_[21]). 이로써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를 위한 공동 목표와 아울러 지속 가능 개발의 국제적인 성격이 주목 받는다.

SDG를 실행하면서 자국의 발전경로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며 국내 정책이 다른 국가의 국민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상호연결성이 증대함에 따라 다양한 전파경로를 통해 각국은 필연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OECD, 2017^[4]). 전파경로에는 자금이동 또는 소득 이전(공적 개발원조, 송금, 차관), 재화와 용역의 수출입(“여기”의 경제활동은 “다른 곳”의 천연자원에 영향을 준다). 이주(“두뇌 유출”) 및 지식 이전 등이 포함된다. 정책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역량을 구축하는 일은 정책일관성 제고에 필수 불가결 하다. 평가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소비와 생산양식의 국경을 초월한 영향을 파악하여 정책 목적을 개선하고 수정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국경을 초월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고 최소화하는 것은 PCSD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기초요소다. SDG 세부목표의 발전상황 측정(Measuring Distance to the SDG Targets)에 관한 OECD 연구의 일환으로 활용 가능한 지표에 근거하여 SDG 목표 안에서 국경을 초월한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틀 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더욱 광범위한 영향평가 형식을 채택하려 하고 있다(박스 2.7). 예를 들면, 핀란드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 국가위원회와 발전정책위원회가 일원화된 국가 실행계획에 따라 국내 및 국제적으로 SDG를 실행하기 위하여 협력을 강화하였다.

박스 2.7. 국경을 초월한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책

벨기에 - 2013년 지속 가능한 발전 연방 비전의 채택으로 2014년에 사전적 영향평가 도구인 지속 가능 영향평가(SIA)가 규제영향평가(RIA)에 포함되었다. RIA를 통하여 예비 법안이 지속 가능한 개발의 요소(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및 공공서비스에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영향을 평가한다. 이는 PCSD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체코 - 체코는 자국 정책의 국경을 초월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확보에 필요한 제도적, 분석적 통제 메커니즘을 강화하려고 한다. 체코는 특히 국가기관 공급사슬 내에서의 인권 보장을 추진한다. 사전 영향평가를 좀더 개선하고 사후 평가를 향상하면 정책의 질이 개선될 것이다.

덴마크 - 정부는 이미 새로운 법률안의 경제적, 환경적 및 양성평등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SDG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덴마크의 사정과 관련이 있고 그 영향이 큰 경우에 새로운 법률안과 SDG와 관련된 주요 계획의 결과를 평가한다(Denmark, 2017^[16]).

핀란드 - 2030 의제 정부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영향평가를 주요 정책과 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를 조정하고 목표와 국가 및 세계적 수준에서 취한 실행조치 간의 일관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법안 작성을 위한 현행 영향평가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PMO Finland, 2017^[17]).

독일 - 독일 지속 가능 발전전략의 관리규칙 12는 독일 내에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 발생할 부담을 고려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독일은 새로운 전략을 통하여 독일에만 영향을 주는 조치,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조치, 특히 전 세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 및 다른 국가를 확고하게 지원하고 공동으로, 특히 상호 개발 협력의 맥락에서 실행하는 조치 등 세 가지 수준에서 SDG의 달성에 기여하려고 한다.

룩셈부르크 - 개발협력위원회(CID)는 정책일관성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실행방법을 채택하였다. 주제가 파악되면 CID에서 논의하여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CID는 또한 공통 연금 보상기금, 경제협력 협정, 공통 농업정책, 조세정책, COP21 및 사회 보호 등과 같은 연간 논의 주제의 목록을 제시한다. CID의 구성원은 국경 및 세대를 초월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에 대하여 입안단계에서 검토를 제안할 수 있다. 시민사회도 CID가 논의 주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네덜란드 - 2016년 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확보 실행계획에는 네덜란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8개의 SDG 관련 주제의 예상되는 국경을 초월한,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이 기술되어 있다. PCD에 관한 2017년 연차보고서에는 각 주제의 다양한 영향에 대한 상세한 내용, 3가지 주제(WTO/TRIPS 협정에 의한 의료서비스 제공, 송금비용, 절세)간의 이해충돌에 대한 검토 내용 및 각 주제에 대한 네덜란드의 정책일관성 확보 추진 방식이 수록되어 있다(Dutc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7^[24]).

정책 및 제도적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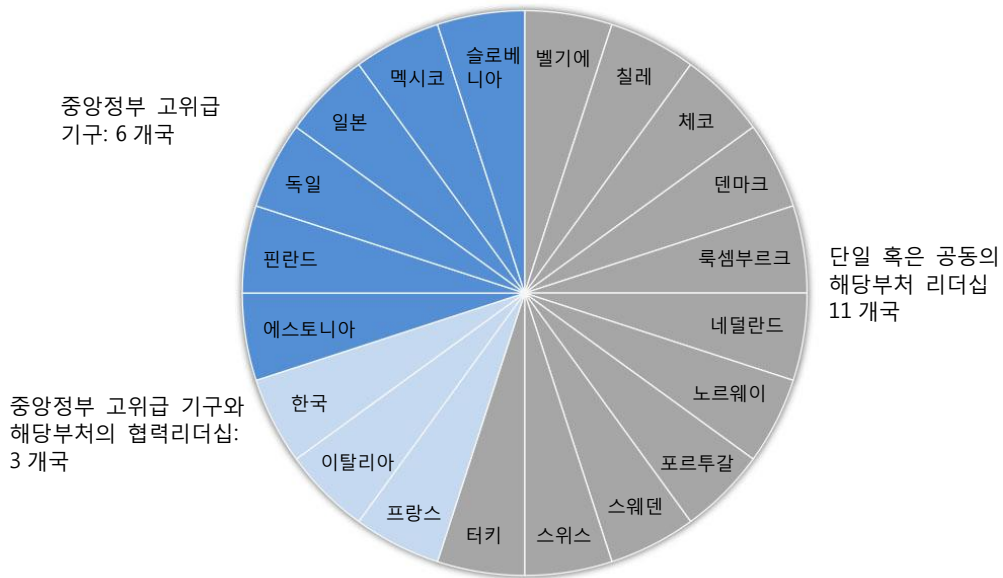
여러 부문에 관련된 SDG의 특성으로 인하여 정책 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조정이라는 과제가 대두된다. 정부는 수평적(특정 분야의 기관 간) 조정 및 수직적(국가, 하부국가 및 지방 정부 간) 조정을 위한 기존 메커니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조정 메커니즘을 활용하면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및 기타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SDG 실행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책임을 정의하고 분배하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할 수 있다. 정부 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을 광범위하게 참여시키면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표출시키며, 잠재적인 절충을 해소하고, 대중의 인식을 증대시키며,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SDG 실행의 계획 및 조정에 대한 OECD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31개국 중 19개국이 중앙정부 고위급 기구(Centre of Government, CoG)의 역할을 인정하였으며 이곳에서 SDG 실행을 주도하고 조정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OECD, 2016^[25]). 국가평가보고서(VNR)를 제출한 OECD 회원국 중 9개국에서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이 독자적으로 또는 해당부처의 지원을 받아 SDG 실행을 주도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에서는 관련 부처 간 협력을 전제로 조정 책임을 해당 부처에 부여하였다.

도표 2.2. SDG 실행 조정 리더십

2016년과 2017년에 VNR을 제출한 OECD 회원국



주석: VNRs 및 (OECD, 2016[25])에 수록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

출처: (OECD, 2017[26]) 수정.

정책 부조화와 다른 부문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을 해결할 명확한 권한이 주어진다면 두 가지 접근법 모두 정책일관성 확보에 효과적이다.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1) 행정 전반에 걸친 조정을 책임지는 기관의 중립성과 개입 권한, 2) 정책 부조화와 이해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기관의 권한, 3)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변화를 줄 수 있는 능력과 자원 및 4) 공동 과제를 확인하고 새로운 의제에 대한 주도권을 확립하려는 방안으로서의 외부 수행주체의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정치적 리더십을 확보하고 부문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최고위급의 중앙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한 국가들도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은 2016년에 SDG 실행을 위한 정부 부처와 정부 기관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상이 주도하고 전 부처가 참여하는 새로운 내각 기구인 "SDG 추진본부"를 창설하였다(Japan, 2017[18]). 이와 마찬가지로,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멕시코 및 슬로베니아도 국가수반이 직접 SDG 실행의 전반적인 조정 책임을 지고 있다(박스 2.8).

박스 2.8. 최고위급 중앙 조정 메커니즘을 지닌 국가

에스토니아 -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가적 조정 메커니즘은 중앙 정부 하에서 행정기관 전략부서가 주도한다.

핀란드 - SDG의 국가적인 실행에 대한 조정은 총리실(PMO)이 주관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 위원회의 조정사무국은 2016년에 실행의 계획, 준비, 조정 및 보장 책임과 함께 환경부로부터 총리실로 이관되었다. 각 부처의 지속 가능한 개발 전담부서로 구성된 부처 간 조정 네트워크가 총리실을 지원한다.

독일 - 수상이 주재하는 정부 장관위원회는 지속 가능 발전전략의 중앙 조정자 역할을 수행한다. 그 역할은 모든 정책 분야에 전략이 적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모든 부처는 해당 분야에서 SDG와 2030 의제에 기여할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Germany, 2016_[9]).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장 실무단(UAL-AG)이 구성되었다. 실무단은 각 부처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상의 지휘하에 각 부처와 관련된 모든 지속 가능 발전과제를 처리한다. UAL-AG의 전략적이며 콘텐츠와 관련된 업무는 국가전략의 구조에서 중심적인 인터페이스 역할을 고려하여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멕시코 - 대통령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민간부문 및 학계 간의 유대 강화를 위한 메커니즘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국가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 위원회는 대통령이 주재하며 각 부처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위원회의 임무는 2030 의제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의 입안, 실행 및 평가를 위한 행위를 조정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한다.

슬로베니아 - 발전 및 유럽통합 정책실을 2030 의제 실행 조정기관으로 지정하였다. 2030 의제 목표의 국가 수준에서의 달성을 감시하는 조정기관이 발전을 책임지고 있다. 정부 부처 및 부서 간의 소통과 유대강화는 상설 발전계획 부서 간 실무단이 수행한다. 실무단은 슬로베니아의 중앙 전략 및 실행 문건에 대한 효과적인 조정과 적극적인 기여를 보장하고, 문건 초안에 2030 의제가 반영되도록 하고 개별 분야에서 2030 의제의 중요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정부 최고위급 기구와 각 부처가 공동으로 SDG 실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지속가능개발일반위원회(CGDD)가 그러한 노력을 조정하며 국제적인 업무는 유럽 및 외무부(MEAE)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처리한다. **이탈리아**에서는 수상이 국가지속가능개발전략(NSDS)의 조정과 관리를 지휘하며 국내 및 국제적 문제에 대하여 환경 국토해양부와 외무부의 지원을 받는다. 재무부는 NSDG 실행과 공식적인 경제정책 간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Italy, 2017_[10]).

일부 국가에서는 외무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칠레**에서는 경제 기업개발관광부, 사회개발부 및 환경부로 구성된 2030 의제 실행 국가 위원회를 외무부가 주재한다(Chile, 2017_[27]). **네덜란드**는 해외무역 및 개발협력부가 전반적인 조정을 담당한다. 정부 각 부처와 네덜란드 지방자치단체협회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SDG 담당자 네트워크가 결성되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동 네트워크는 국가적 SDG 실행을 위해 특별히 임명된 고위급 코디네이터가 소규모 사무국의 지원을 받아 주재한다(Kingdom of the Netherland, 2017_[28]).

포르투갈에서는 외무부가 기획 및 사회기반 시설부와 공동으로 조정을 수행한다. 이는 2030 의제의 국내 및 국제 목표를 긴밀하게 조정하고 유엔기구와의 체계적인 협의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2016년에 최초로 2030 의제 이행을 위한 정부 내부지침이 장관협의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부처 간 외교정책위원회가 내부 실행을 감독하며 부처 간 협력정책위원회가 SDG의 개발 협력에의 반영과 외부 실행을 감독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체계적인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부 부서의 담당자 네트워크도 구성되었다(Portugal, 2017_[15]).

마찬가지로, **스웨덴**에서는 행정부가 국가 수준에서의 2030 의제 실행 조정과 촉진을 수행할 책임을 지고, 국제개발 협력 및 기후부가 세계적 발전정책 및 개발 협력을 통하여 국제적인 실행을 책임지고 있다(Sweden, 2017_[12]). 2030 의제 이행을 위한 부처 간 실무단과 아울러 재무부, 외무부, 환경에너지부 및 기업혁신부의 사무국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구성되었다.

룩셈부르크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사회기반 시설부가 주재하는 조정, 계획 및 평가 메커니즘을 확립하였다. 2030 의제의 통합적인 성격을 더욱 잘 반영하고 정부 간 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부처 간 지속가능개발위원회(ICSD)의 구성, 조직 및 기능을 변경하였다. 개발협력국장을 ICSD의 부위원장으로 임명하여 SDG의 국내 및 국제적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통합하도록 하였다. ICSD와 부처 간 개발 협력위원회 간의 협력을 강화하였다(OECD, 2017_[20]). **체코**에서는 환경부가 2030 의제를 실행할 책임을 지고 있다. 환경부 장관 및 제1차관이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주재한다.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는 재무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덴마크**에서는 재무부가 국가적 실행을 조정할 책임을 지고 있다. 각 부처는 관련 SDG를 고려하여 정책을 입안하며, 부처 간 실무단이 그 조정을 지원한다. 외무부는 SDG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인 참여 및 유엔과 기타 국제적 포럼에 관련된 SDG 실행을 책임지고 있다. 두 부처 모두 긴밀하게 조정 노력을 다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17개 목표별로 점검할 책임을 특정 조정 부처에 분담하고 있다. 이들 조정 부처는 다양한 세부목표 점검을 맡고 있는 다른 부처와 협의한다. 각 부처는 매년 발전상황을 노르웨이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포함해 보고한다. 재무부는 각 부처의 주요사항을 국가 예산 백서에 요약하여 게재한다.

벨기에와 스위스에서는 여러 부문에 관련된 기구가 조정을 지원한다. **벨기에**는 SDG 실행의 중심적인 조정 메커니즘으로 다양한 수준(연방, 지역사회 및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과 개발 협력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들을 소집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부처 간 회의(IMCSD)를 재개하였다. 지속가능개발위원회(ICSD)는 연방 정부 부처 간의 조정을 지원한다. 자문 성격의 지속가능개발연방위원회와 개발정책일관성(PCD) 자문위원회는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지원한다. **스위스**의 부처 간 메커니즘은 SDG 실행을 조정한다. 국토부(환경 및 사회기반 시설부)의 전담부서가 환경, 보건, 통계, 농업 및 외교 관련 지도기관의 지원을 받아 개발협력청(외무부) 내의 부처와 공동으로 활동을 조정한다.

하위국가 정부 및 지방정부의 참여

2030 의제는 “정부와 공공기관은 지역 및 지방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의제를 실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UNGA, 2015_[21]). 하위국가 정부 및 지방정부는 SDG 달성에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전환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하다.

지방정부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정부 계층으로서 지속 가능한 개발 필요와 격차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실제로 대다수 주요 정책 및 투자는 행정 단위 간에 책임을 분담한다. 17개 SDG의 근간이 되는 169개 세부목표의 65%가 지방정부 및 하위국가 정부의 적절한 참여와 조정 없이는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SDSN, 2016_[29]). 2015년 OECD 지역의 전체 공공투자의 59.3%, 세계 전 지역 전체 공공투자의 거의 40%가 하위국가 정부에 의해 이루어졌다(OECD/UCLG, 2016_[30]). 대부분의 투자는 해당 도시 또는 지역의 핵심능력과 특성에 맞고 SDG의 항목(즉, 교육, 보건, 사회기반시설, 식수, 위생시설, 고체폐기물 관리, 교통 및 주택)에 맞는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집중되었다.

일부 국가들은 의제 21을 위해 개발된 기존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국가와 지방의 SDG 실행을 조정하고 있다. 벨기에¹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개발 협력을 책임지고 있는 연방, 지역 및 공동체 장관급으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 부처간회의(IMCSD)를 SDG 실행의 중심적인 조정 메커니즘으로 활용하고 있다. 에스토니아의 지방자치단체는 의제 21과 관련된 과정에서 채택된 실행계획 및 지방 제정법에 지속 가능한 발전의 주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핀란드의 도시 및 지역은 지속가능개발국가위원회에 대표자를 파견하였다. 노르웨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기 협의회와 같은 기존의 메커니즘을 지역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 증진에 활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터키는 기존의 기구와 고위급 위원회를 활용하여 지역의 SDG를 추진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SDG 실행을 위해 국가, 하위국가 정부, 지방의 행정 단위를 연결하고 조정할 메커니즘을 창설하거나 강화하고 있다(박스 2.9).

박스 2.9. SDG 실행에 하위국가 정부 및 지방정부의 참여

체코 - 체코 2030에는 지방 및 지역 기관과의 협력이 포함되었다. 지속가능개발행정위원회에는 주제별 지속가능지방자치단체위원회가 포함되어 지방자치단체 소속 협회들을 대표하고 있다. 2017년에는 8개의 지역 수도에서 개최된 다자간회의에 지방자치단체, 지역, 기타 지역 및 지방의 수행주체의 대표자들이 참여하였다.

덴마크 - 정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다음 해 예산을 심의한다. 2018년 예산안의 지방정부와의 합의는 2017년 6월1일에 이루어졌으며, 지역 정부와의 합의는 2017년 6월6일에 이루어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은 SDG를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정책 결정에 통합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독일 - 2017년 1월에 채택한 독일의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은 연방정부, 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정 메커니즘을 만들어 냈다. 조정 메커니즘에는 시장이 주도하는 지속가능네트워크 및 독일 지속가능개발위원회가 창안한 지속가능전략지역허브(RENN) 그리고 연방-주 경험 풀(Federal-Länder Experience Pool)이 포함된다. 연방-주 경험

풀은 연방 및 주정부 수준의 현행 지속 가능한 개발 관련 문제에 관한 정기적인 정보제공의 장을 제공한다. 현재 16개 주 가운데 13개 주가 독자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을 수립하였거나 수립 중에 있다.

이탈리아 - 국가 및 지역 간 회의와 국가 제정법에 따라 정부는 지방과 지역정부가 지역 수준에서 국가 지속 가능 발전전략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을 장려한다(Italy, 2017_[10]).

멕시코 - 최근 창설된 대통령 주도의 2030 의제 국가위원회는 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조정 노력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국가주지사회의(CONAGO)는 2017년에 2030 의제 준수를 위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지금까지 국가 주지사회 소속의 17개 주가 지역 및 지방 수준에서의 SDG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주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네덜란드 - 네덜란드 지방자치단체협회(VNG)는 지방자치단체가 SDG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여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계적 목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해관계자의 참여

2030 의제는 “모든 국가와 모든 이해관계자가 서로 협력하여 본 계획을 실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UNGA, 2015_[21]). 정책일관성 확보에 대한 주된 장애물은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SDG를 일관성 있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공동 과제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정책과 실행 행위를 조정하고,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대화와 참여를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것이 “모든 계층의 공감적이고, 포용적이며, 참여적이고, 대표성이 있는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SDG 세부목표 16.7의 정신이다(UNGA, 2015_[21]).

기업과 산업, 시민사회, 과학 및 학계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SDG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에는 자원 동원, 해결책 및 혁신 방법 제공, 생산방식 및 생활양식 변경, 발언권이 약한 지역사회와 지역의 관심 사항과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교환 및 책무성 보장에 도움이 되는 주창 활동 및 책무성 등이 포함된다. 국내 SDG 계획 및 전략을 수립, 실행 및 감시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치는 것은 이제 국내 정책 수립과정의 고유한 특성이 되었다(박스 2.10).

벨기에의 자문위원회는 지속 가능발전 연방위원회 또는 개발정책일관성 자문위원회 같은 시민사회와 학계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수상이 주도하는 메커니즘인 지속가능개발위원회와 의회 기구인 개발정책위원회가 모두 시민사회, 민간 부문 및 이익집단 등의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있다. 두 위원회 모두 SDG 실행을 지원하고 촉진한다. **프랑스**에서는 개발 및 국제연대를 위한 국가협의회(CNDSI)와 생태학적 전환을 위한 국가협의회(CNTE)가 시민사회, 민간 부문 및 시민이 참여하는 주요 토론장의 역할을

담당한다.

박스 2.10. 국가 SDG 계획 및 전략에 이해관계자 참여

체코 - 지속가능개발정부위원회 산하의 9개 위원회와 실무단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의 수백 명의 전문가 참여, 수 차례의 다자간 회의, 지역 공청회, CSO 플랫폼 협의 및 상하 양원의 심의를 거쳐 *체코 2030*이 수립되었다. 정부는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증진을 통해 그리고 SDG에 대하여 민간단체, 기타 수행주체 및 개인의 자발적인 약속을 격려하는 식으로 민간 부문과의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덴마크 - 몇몇 대기업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실행을 포함하여 SDG를 사업모델, 전략 및 투자에 통합시키고 있으며 유엔 글로벌컴팩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제휴 기관과 공동으로 기업의 SDG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워크숍을 주최하고 있다(Denmark, 2017_[16]).

핀란드 -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사회의 약속은 시민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운영 도구를 제공한다. 2016년, 기업, 학교, 비정부단체, 관공서, 노동조합, 정당, 도시 및 개인으로부터 400건이 넘는 SDG 추진 공약이 접수되었다(PMO Finland, 2017_[17]).

독일 - 연방정부는 정부가 사회의 이해관계자들에게 2030 의제 실행의 발전상황을 설명하는 정기적 대화 창구인 지속 가능성 포럼을 창설하였다. 사회단체 또한 2030 의제 실행을 위해 각자가 취한 조치내용을 보고하고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발전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또 다른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중요한 장치는 지속가능개발위원회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이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의 세 측면을 다루고 있다. 동 위원회는 2001년부터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연방정부에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다.

이탈리아 - 국가지속가능개발전략(NSDS) 실행을 위해 모든 정부 부처, 지역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다단계 협의 과정을 개발하였다. 200개가 넘는 비정부단체가 2030 의제의 비전을 NSDS에 반영하기 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해관계자들은 SDG 및 NSDS의 실행과 관련된 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이에는 150개가 넘는 경제 및 사회분야 단체가 가입하고 있는 이탈리아 지속가능개발동맹(ASviS)이 포함된다.

일본 - SDG 실행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관련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와 기관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SDG 추진 간담회*를 개설하였다. 간담회는 SDG 실행지침을 제정하고 국가평가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정부는 또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유인하려는 방법으로 SDG 실행과 주류화에 기여한 민간기업 및 기타 단체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일본 SDG 대상"도 제정하였다(Japan, 2017_[18]).

네덜란드 - 외무부는 SDG 실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다중 이해관계자 플랫폼인 네덜란드의 *SDG 헌장*을 제정하였다. 네덜란드 기업, 비정부단체, 지식연구소 및 독지가를 포함한 100개 조직이 참여를 신청하였다. 최근 개설된 *SDG Gateway*는 다양한 부문에서 활동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로 예비 파트너를 서로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이다(Kingdom of the Netherlands, 2017_[28]).

모니터링 및 보고

정확한 정보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확보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SDG를 일관성 있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감독기관과 일반 대중에 보고하며, 잠재적으로 부정적이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고려하여 실행조치와 부문 정책을 조정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감시 및 보고 시스템을 통하여 1) 정책을 조정하고 실행을 위한 보다 통합적인 접근법을 강화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의 성과, 2)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책 간의 중요한 절충과 시너지 효과, 3) 국내 실행조치의 국경을 초월하는 영향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제4장에 소개된 PCSD의 발전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3단계 틀을 참고하라.

일부 국가들은 2030 의제에 따라 모니터링 및 보고 시스템을 강화하여 SDG 실행에의 정책일관성 확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하고 있다(박스 2.11). 예를 들면, 독일 정부는 국내 정책이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국제적 측면을 강화한다는 견지에서 독일 지속 가능 발전전략의 국가적 목표와 지표를 개정하고 있다.

박스 2.11. 정책일관성 확보 수단으로서의 모니터링 및 보고 시스템

핀란드 - 정부 실행계획은 SDG 실행 보고서가 핀란드 국외를 포함하여 발전이 뒤처질 위험에 처한 집단을 파악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PMO Finland, 2017_[17]).

독일 - 독일 지속 가능 발전전략에는 국가적 목표와 30개의 새로운 지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국경을 초월하여 영향을 미치는 국내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는 LDCs로부터의 수입량 증대 목표와 지속 가능한 공공구매, 식품 손실, 기아퇴치에 관한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Germany, 2016_[9]).

네덜란드 - 2016년에 의회에 제출된 PCD 실행계획에 명시된 8개 주제의 발전상황을 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연차보고서를 통해 모니터링한다. 실행계획에는 관련 SDG와 연계된 이러한 주제의 구체적인 목표와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2017년 보고서에는 세 가지 주제(의료 제공, 송금비용 및 절세)의 상충과 시너지 효과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네덜란드가 이러한 주제를 어떻게 합심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보여준다(Dutc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7_[24]).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분야 협력기관의 기고문

아래 기고문에 제시된 의견과 논쟁은 저자의 견해이며 OECD 또는 회원국 정부의 공식 견해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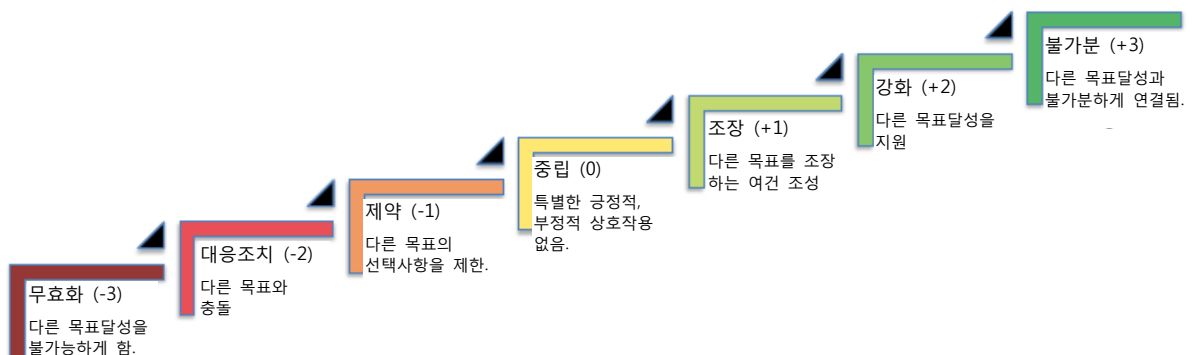
SDG 상호작용 틀의 적용: 사전 습득한 교훈

스톡홀름 환경연구소(SEI)

2030 의제 및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차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해 균형 잡힌 통합적인 접근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SDG를 국가계획과 예산에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목표를 설명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SDG의 실행순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로써 전 세계의 정부에 대해 명확한 실행 과제가 부여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스톡홀름 환경연구소(SEI)는 국제학술연합회의 연구 파트너와 공동으로 SDG 세부목표 간의 상호작용을 도표화하고 분석하기 위한 개념 틀을 개발하였다(Nilsson, Griggs and Visbeck, 2016_[31]). 이 틀은 긍정적 및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모두 포착한 일곱 가지의 단계를 제시하며 시너지 효과와 절충 측면에 한정된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현재의 경향을 초월하여 상호작용을 보다 상세하게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도표 2.3). 이 틀은 SDG 간의 상호작용을 탐구하고 평가하여 정책 입안자들이 17개 SDG 전체에 대한 발전을 이끌어 낼 더욱 일관되고 자원 효율적인 정책 초안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표 2.3. SDG 상호작용의 7 가지 유형분류체계



출처: (Nilsson, Griggs and Visbeck, 2016_[31]) 수정.

2016년, SEI 연구진은 교차영향분석과 네트워크 이론분석을 사용하여 34개의 SDG 세부목표 간의 상호작용의 조직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틀을 한 국가(스웨덴)에 적용하였다(Weitz et al., 2017_[32]). 지난해 SEI는 정책입안자들이 사용할 수 있고 유용한 방법론을 개선할 목적으로 예비연구를 하였다.

2017년 12월, 이해관계자 워크숍에서 처음으로 이 틀이 적용되었는데 즉, 몽골 정부는 몽골

UNDP의 지원 아래에 몽골 정부의 국가 지속 가능 발전비전 2030의 세부목표에 적용하였다. 또한 UNDP 및 스리랑카 빈곤분석센터(CEPA)와 공동으로 SEI는 스리랑카 정부가 이 틀을 사용하여 SDG 세부목표를 국가 발전전략에 반영하여 정책일관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는 2017년에 개시하여 2018년 하반기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동 프로젝트의 결과물 중의 하나는 SDG 상호작용 체계 적용에 관심이 있는 국가를 위한 지침이 될 것이다. SDG 상호작용을 평가하기 위한 틀과 방법이 진행되면서 몽골과 스리랑카를 대상으로 시행한 예비연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예비적 고찰결과가 드러났다.

약속 및 확고한 분야별 참여 보장

SDG 상호작용 틀에는 확고한 정부의 약속이 요구된다. 적용 과정에서 준비, 중점을 두어야 할 세부목표 선정, 상호작용에 대한 평점 부과 및 조사결과의 실제 정책 반영 등 소요 시간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여야 한다. 분야별 전문가가 상호작용에 평점을 부여할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통하여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특정 분야중심의 편견이 배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나 분야가 배제될 경우 결과의 질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

세부목표 선정을 위한 전략적 과정 설계

이 틀은 보다 일관된 SDG의 실행을 강화하는 정책입안 과정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방법론(통상적으로 소집단인 169개의 SDG 세부목표는 상호작용 틀을 이용하여 분석한다)을 적용하여 분석할 세부목표를 선정함에 있어 정부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정책에 가장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평가를 위한 세부목표 선정이 SDG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공식 절차와 연계될 경우 이 과정은 정치적인 성격을 띠게 되며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 포용성과 실행가능성 간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절차를 세심하고 적절하게 계획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국가수요에 맞게 틀 조정

SDG 상호작용 틀의 핵심 강점은 다양한 국가적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틀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책 과정의 형태에 따라 조정안이 선택된다는 점이다. 이런 강점은 몽골 예비조사에서 강조되었는데 이 경우 상호작용 틀은 SDG 세부목표보다는 국가개발계획에서 파생된 세부목표에 적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SDG 상호작용 워크숍의 후속조치로서 동 방법론을 수정하여 개별 부문계획에 대한 접근법에 적용하였다. 아울러 다음에 열거하는 과정에도 이 틀을 적용할 수 있다.

- 중간 점검 시 국가 또는 부문 별 세부목표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논의를 개시하거나 국가 또는 부문 별로 새로운 개발정책을 입안하는 과정
- 행정 부처와 조정 메커니즘 간의 협력관계(예를 들면, 2030 의제 실행을 책임질 실무단 조직 결성을 위한)를 확인하는 과정.
- 정부 내 주창 활동에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 부처를 통틀어 특히 중요하다고 고려되는 정책 사안에 더욱 중점을 두는 과정.

-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연례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에 제출할 국가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

과정 자체에 대한 가치 부여

SDG 상호작용 틀을 적용하는 과정은 정책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최종 결과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적용 과정에서 다양한 부문별 중점사항을 보유한 정부의 이해관계자들은 함께 모여 세부목표 간의 상호관계를 면밀히 연구한다. 정부가 상호작용에 대한 지식을 늘리기 위한 적용범위 확정작업(scoping exercise)으로서 SDG 상호작용 틀은 다른 공식적인 토론회 보다는 덜 정치적이 될 수 있는 분야간 대화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한다.

과도한 복잡화 지양

성공적이고 유의미한 평가 과정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충분히 높은 수준의 약속과 참여를 유지하려면 요구사항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포용적이고 포괄적이며 근거가 확실한 주장에 근거한 과정과 증거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인데 아울러 이해관계자들을 당혹하게 할 정도로 복잡하거나 시간이 소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상호작용 틀을 적용한 경험은 현재까지는 고무적이다. 일관된 SDG 실행을 지원할 사용자 친화적이고 유용한 접근법의 개발에 공동으로 노력을 다한 결과,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 SEI는 정부 이해관계자와 연구 및 정책 협력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접근법을 시험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현실은 게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Gerid Hager(국제 응용시스템 분석연구소 - IIASA)

Dr. Piotr Magnuszewski(시스템 솔루션센터 - CRS, IIASA)

어린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생활의 복잡함을 배우는가? 군대는 복잡하고 고도로 불확실한 임무수행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조종사와 외과의사는 생명이 달려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어떠한 훈련을 받는가?

한 가지 방법은 역할 연기와 자유로운 탐구 즉,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모의실험과 실습을 통하여 모의 환경에서 실행 전략을 학습하고 시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과 훈련 시뮬레이션은 집단적으로 공유되고 의식적으로 재현된 실생활 속의 체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참가자는 관심분야의 행동을 시험하고 새로운 전략을 과감하게 시도하거나 미묘한 차이를 탐구할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안전한 모의 환경에서 현실 세계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손쉽게 고찰할 수 있다.

그러면 정책 및 의사결정자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고도로 상호 연결된 복잡한 세상의 복잡한 거버넌스를 다룰 준비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정책 및 의사결정자들이 역할 연기와 모의 게임을 통하여 2030 의제의 과제와 그 너머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량을 연마할 것을 제안한다.

지속가능개발목표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접근법을 통해서만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이

좋은 사회로 전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세계 및 지역의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공동 의사결정과 타인과의 소통, 산업, 부문 및 이해관계자에 걸친 상호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책 및 의사결정자들은 이러한 세계적이고 고도의 상호 연결된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현실 속에서 행동하여야 하며 우리 시대가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확보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SDG의 상호 연결된 실상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여전히 어려우며, 실무자들은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확실한 도구와 지침 및 통합적이고 일관된 정책 결정을 보편적 실무로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을 갈구하고 있다.

시스템 솔루션센터(CRS)와 국제 응용시스템 분석연구소(IIASA)는 정책입안자의 능력배양을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 분석 및 시뮬레이션 기법의 이점에 집단 시나리오 구축과 창의적인 역할 연기의 역학을 결부시킨 혁신적인 훈련인 “세계의 미래 - 지속가능개발목표 게임”을 공동 개발하였다. 2017년부터 DG DEVCO,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유럽대외관계청, OECD 및 Alpbach 유럽 포럼의 수많은 관계자들이 “세계의 미래” 게임에 참여하였다. 참여한 사람들의 반응과 감상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였다.

“현실을 단순화시킨 형태일지라도 정책입안자로서 행동으로 옮겨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해야 하는 정책의 복잡성에 직면하게 된 것은 나에게겐 소박하고 경이로운 경험이었다.” DG DEVCO, EC 소속의 한 참여자.

“정책결정이 실제로는 시스템과 장려책에 대한 이해 부족과 타인의 활동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에 바탕을 둔 대단히 산만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깨달았다.” OECD 소속의 한 참여자.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계의 미래” 게임의 목적은 실무자들이 세계적인 시스템의 복잡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 정책, 지역 및 시간에 걸쳐 목표 달성을 추진하는 행위 간의 상호의존성을 파악하여 인정하고, 시너지 효과, 절충 및 피드백을 좀더 잘 이해하며, 협상 형태, 효과적인 소통과 협력에 대해 숙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게임의 과정을 통하여 SDG 실행에 대한 소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다양한 실무 분야와 정책부문의 관계자들이 진지하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훌륭한 방안이라는 점을 널리 인정받았다. 좀더 많은 정책입안자들이 재미있고 진지한 게임과 모의훈련에 참여하여 보다 지속 가능한 실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한 기량을 연마하고 향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현실을 게임이 아니지만 게임을 통해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

참고문헌

- Chile(2017), *Informe Nacional Voluntario. Chile: Agenda 2030. Objetivos de Desarrollo Sostenible*, Consejo Nacional para la Implementación de la Agenda 2030 y el Desarrollo Sostenible,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5776Chile.pdf>. [27]
- Czech Republic(2017), *National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fice of the Government of the Czech Republic Government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ague,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5717Czech_Republic.pdf. [8]
- Denmark(2017), *Report for the Voluntary National Review. Denmark's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inistry of Finance,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6013Denmark.pdf>. [16]
- Dutch Ministry of Foreign Affairs(2017), *Letter to the President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n the Annual Report on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PCD)*, Minister for Foreign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https://www.government.nl/documents/parliamentarydocuments/2017/11/14/letter-to-the-president-of-the-house-of-representatives-on-the-annualreport-on-policy-coherence-for-development-pcd>(accessed on 16 March 2018). [24]
- Germany(2016), *German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New Version 2016*, The Federal Government, https://www.bundesregierung.de/Content/DE/_Anlagen/Nachhaltigkeitwiederhergestellt/2017-06-20-nachhaltigkeit-neuaufgabe-engl.pdf?__blob=publicationFile&v=2 (accessed on 13 February 2018). [9]
-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2017), *Coalition Agreement: Confidence in the Future*, <https://www.kabinetsformatie2017.nl/documenten/verslagen/2017/10/10/coalition-agreementconfidence-in-the-future>(accessed on 16 March 2018). [14]
- Italy(2017), *Voluntary National Review Italy.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Italian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Land and Sea,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6341Italy.pdf>. [10]
- Japan(2017), *Japan's Voluntary National Review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6445JapanVNR2017.pdf>. [18]
- Kingdom of the Netherlands(2017),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ingdom of the Netherlands. United Nations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17*,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6109Netherlands.pdf>. [28]

- Luxembourg(2017), *Mise en oeuvre de l'Agenda 2030 au et par le Luxembourg: "Transformer les vies tout en preservant la planète. Adopté par le Gouvernement en Conseil en date du 12 mai 2017,* [19]
http://www.gouvernement.lu/7018419/rapport_meo_Agenda2030.pdf.
- Mexico(2017), *Guía para incorporar el enfoque de la Agenda 2030 en la elaboración de planes estatales y municipales de desarrollo*, Oficina de la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Ciudad de México, [13]
https://www.gob.mx/cms/uploads/attachment/file/255731/Gu_a_enfoque_A2030_para_entidades_y_municipios_comp.pdf.
- Nilsson, M., D. Griggs and M. Visbeck(2016), "Map the interactions betwee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Nature*, Vol. 584, pp. 320-322, <http://dx.doi.org/10.1038/534320a>. [31]
- OECD(2017), *Government at a Glance 2017*, OECD Publishing, Paris, [26]
http://dx.doi.org/10.1787/gov_glance-2017-en.
- OECD(2017),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Luxembourg 2017*,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20]
<http://dx.doi.org/10.1787/9789264284364-en>.
- OECD(2017),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7: Eradicating Poverty and Promoting Prosperity*, OECD Publishing, Paris, [4]
<http://dx.doi.org/10.1787/9789264272576-en>.
- OECD(2016), *Better Polic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6: A New Framework for Policy Coherence*,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56996-en>. [2]
- OECD(2016), *OECD Survey on Planning and Co-ordina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 First results and key issues*, OECD, Paris, [25]
<https://www.oecd.org/gov/cob-sdg-survey-overview-ofresults.pdf>.
- OECD(2014), *Better Policies for Development 2014: Policy Coherence and Illicit Financial Flow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10325-en>. [3]
- OECD(2010),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Good Institutional Practices in Promoting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C(2010)41]*, OECD, Paris, [5]
<https://legalinstruments.oecd.org/Instruments/ShowInstrumentView.aspx?InstrumentID=260>
 (accessed on 10 February 2018).
- OECD(2005), *Sustainable Development in OECD Countries: Getting the Policies Right*,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16958-en>. [23]
- OECD(2002),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ive OECD Case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94748-en>. [22]

- OECD/UCLG(2016), *Subnational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Structure and finance*, [30]
OECD, Paris, <https://www.oecd.org/regional/regional-policy/Subnational-Governments-Around-the-World-%20Part-I.pdf>.
- PMO Belgium(2017), *Pathways to Sustainable Development. First Belgian National Voluntary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7]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5721Belgium_Rev.pdf.
- PMO Finland(2017), *Government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in Finland – Long-term, Coherent and Inclusive Action*, [17]
https://julkaisut.valtioneuvosto.fi/bitstream/handle/10024/79455/VNK_J1117_Government_Report_2030Agenda_KANSILLA_netti.pdf?sequence=1
(accessed on 13 February 2018).
- Portugal(2017), *Portugal. National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n the occasion of the Voluntary National Review at the United Nations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15]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5766Portugal2017_EN_REV_FINAL_29_06_2017.pdf.
- Republic of Slovenia(2017), *Slovenian Development Strategy 2030*, Government Office for Development and European Cohesion Policy, Ljubljana, [11]
http://www.vlada.si/fileadmin/dokumenti/si/projekti/2017/srs2030/en/Slovenia_2030.pdf.
- SDSN(2016), "Getting Started with the SDG in Cities. A guide for stakeholders", [29]
<http://unsdsn.org/wp-content/uploads/2016/07/9.1.8.-Cities-SDG-Guide.pdf>.
- Sweden(2017), *Sweden and the 2030 Agenda. Report to the UN High-Level Political Forum 2017 on Sustainable Development*, [12]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6033Sweden.pdf>.
- UNDESA(2017), *Synthesis of Voluntary National Reviews 2017*, UNDESA, New York, [1]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7109Synthesis_Report_VNRs_2017.pdf.
- UNGA(2016), *Statement by Mr. Enrique Peña Nieto, President of Mexico, during the General Debate of the 71th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20 September*, [6]
<https://gadebate.un.org/en/71/mexico>(accessed on 16 April 2018).
- UNGA(2015), *A/70/L.1: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1]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A/RES/70/1&Lang=E.
- Weitz, N. et al.(2017), "Towards systemic and contextual priority setting for implementing the 2030 Agenda", *Sustainability Science*, [32]
<http://dx.doi.org/10.1007/s11625-017-0470-0>.

부록 2.A

OECD 20개 회원국의 SDG 실행을 위한 주된 제도적 메커니즘

	전략적 체계/실행 계획	조정/참여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	국제 협력
벨기에	국가 지속 가능 발전전략 (2017년 승인) 연방 지속 가능 발전전략 플랑드르 지속 가능 발전전략 알로니아 지속 가능 발전전략 브뤼셀 수도지역 전략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부처 간 회의(IMCSD)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협력을 위해 연방, 지역 및 지역사회의 장관이 참여.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부처 간 위원회(ICSD) 지속 가능 발전 연방협의회 지속 가능 발전 연방연구소(IFSD) 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자문협의회 지역 및 지방정부에서 취한 조치는 http://www.SDG.be 에 게재.	
칠레	에너지 2050 정부 프로그램 (2012-2018)	외무부장관, 경제사업개발관광부장관, 사회개발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으로 구성된 2030 의제 실행을 위한 국가 위원회 23개 부처가 참여하는 SDG 정부 네트워크 시민사회가 조직한 “지속 가능한 칠레를 위한 대화” 국가 원주민협의회 경제부 지속 가능 발전 사회적책임 협의회	
체코	“체코 2030”(2017년 4월 채택)	제1부수상과 환경부장관이 주재하는 지속 가능발전 정부위원회(GCSD) 지속 가능 발전국 부처 간 발전협력 협의회	새로운 체코 2018-2030 발전협력전략에 SDG 반영 예정.
덴마크	국가 SDG 실행계획	재무부(국가적 실행 조정 담당) 외무부(2030 의제와 SDG를 지원하는 국제협력 담당) 부처 간 SDG 실무단	개발정책 및 인도적 지원 전략 새로운 발전전략 “세계 2030” 에스토니아 발전협력 및 인도적 지원전략 2016-2020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지속 가능 발전전략, <i>지속 가능한 에스토니아 21</i>	정부 전략적이 주관하는 부처 간 실무단 에스토니아 지속 가능 발전위원회	
핀란드	<i>우리가 원하는 핀란드 2050</i> (2016년 개정) 2030 의제 정부계획(2017년 의회 제출)	총리실이 국가적 실행 조정 담당. 각 부처의 관심사항이 반영된 부처 간 조정 네트워크를 통하여 총리실을 지원. 지속 가능발전 국가위원회(NCSD) 개발정책위원회(DPC)	2030 의제에 따른 국제개발정책(2016년 개정)
프랑스	지속 가능한 개발로의 생태학적 전환을 위한 국가전략 2015-2020 국가개혁 프로그램(EU의 10년 고용 및 성장전략인 유럽 2020의 프랑스 판)	총리가 유럽 및 외무부(MEAE)장관과 협력하여 구성한 지속 가능발전 일반위원회(CGDD) 지속 가능발전 담당 고위관리 네트워크 발전과 국제연대를 위한 국가협의회(CNDSI) 생태학적 전환을 위한 국가협의회(CNTE)	프랑스 발전전략, 다년간 개발 및 국제연대 정책법 (2014)
독일	독일 지속 가능 발전전략 (2017년 1월 채택)	연방 수상이 주도하는 정부장관 위원회 지속 가능 발전에 관한 의회 자문위원회 지속 가능발전위원회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부처 코디네이터 지속 가능발전 국장 실무단(UAL-AG)	
이탈리아	국가 지속 가능 발전전략 2017/2030(NSDS) 실행계획(입안 중) 국가 개혁프로그램 및 경제, 재정문건	환경국토해양부와 외무부의 지원 하에 수상이 조정을 주도. 재무부에 NSDS 실행과 공식 경제정책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임무 부여.	이탈리아 발전협력 3개년 전략 계획문건(2016-18)
일본	SDG 실행 지침 SDG 실행 계획 2018	수상이 주도하는 내각기구 “SDG 추진본부” 민관협력 실행계획(PPAP) SDG 추진 원탁회의 “일본 SDG 대상”	

룩셈부르크	지속 가능 발전 국가계획 국가 지속 가능 발전정책의 조정에 관한 법률 (2004년 6월 25일)	부처 간 지속 가능 발전위원회 지속 가능발전 최고회의 개발협력을 위한 부처 간 위원회	
멕시코	국가발전계획 2030 의제 실행 국가전략 (입안 중) SDG 감시 국가 플랫폼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국가위원회 (2017년 발족) 상원 SDG 관련 입법 점검 실무단 주지사 협회 산하의 2030 의제 준수위원회	
네덜란드	네덜란드 연정 협약	해외무역 및 개발협력부를 SDG 코디네이터가 지원. SDG 코디네이터는 SDG의 일관된 실행을 지원할 부처 간 분야별 실무단을 지휘.	보다 폭넓은 외교정책에 포함된 해외무역 및 개발협력에 관한 신정책은 SDG를 지도 틀로 채택. SDG에 대응한 발전을 위한 책임관성에 관한 실행 계획 및 연차보고서
노르웨이	국가 지속 가능 발전전략 (2011년 갱신)	재무부 및 조정 부처 The Storting(노르웨이 의회) 외무부가 주도하는 부처 담당자 그룹	
포르투갈	지속가능개발목표 의 일부가 이미 헌법에 반영됨. 2030 의제 이행을 위한 정부 간 지침을 2016년에 장관 협의회에서 채택.	외무부와 기획 및 사회기반시설부가 조정을 주도. 2개 위원회가 1) 외교정책의 부처 간 조정, 2) 협력정책을 관장. 정부 부서 간 주제별 네트워크	
한국	2015 지속 가능 발전법 제3차 지속 가능발전 기본계획	지속 가능발전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외교부 및 환경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비전 2050 슬로베니아 발전전략 2030	정부 발전위원회	
스웨덴	세계 발전정책(PGU)	행정부 장관 국제개발협력 및 기후부 장관 2030 의제 협의회 2030 의제 부처 간 실무단 지속 가능발전 과학위원회 이해관계자 국가위원회	
스위스	지속 가능 발전전략(SDS) 2016-2019	부처 간 지속 가능발전위원회(ISDC) 2030 의제 국가 실무단	
터키	제10차 국가발전계획 2014-2018 및 주요 변환 프로그램 제11차 국가발전계획	최고 계획회의 개발부(주관부서) 개발부가 주도하는 지속 가능발전 조정위원회 터키 협력조정청	개발협력에 관한 법적 틀 (2011년)

출처: OECD PCD Unit, VNRs 수록 내용 참고.

제3장. 국가별 현황: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매커니즘

본 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와 관련된 19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일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및 스위스)의 실무와 제도적 매커니즘을 기술한 국가별 현황을 소개한다. 이를 위하여 비공식적인 국가별(전 OECD 회원국 포함) 정책일관성 담당자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제2장에서 확인한 8개 구성요소와 관련된 질문과 일관된 정책결정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한 응답내용을 활용하였다. 본 장에서는 보다 일관된 SDG 실행을 위해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이해를 증진할 목적으로 각국의 실무와 제도적 매커니즘을 조명한다. 본 장의 결론 부분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 파트너십 기관회원의 기고문 3편이 수록되는데 여기서 네팔과 파키스탄의 간략한 국가 현황과 브라질의 수직적 정책일관성에 관한 사례연구를 제시한다.

서론

지속가능개발목표(SDG)에는 모든 국가가 모든 SDG에 적용되는 실행 수단으로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SD)을 제고하도록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부목표(SDG 17.14)가 포함되어 있다. 각국은 모든 SDG를 망라하여 시너지 효과가 있는 실행조치의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회피할 수 없는 절충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도적 및 정책적 고립에서 탈피할 필요성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다. PCSD 세부목표의 이행상황을 측정하기 위해 제안된 세계적 지표는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 매커니즘을 갖춘 국가의 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수준에서 SDG 17.14 세부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과 이행상황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한 실무 지침 개발뿐만 아니라 긴밀하게 상호연관된 SDG의 실행에 있어서 제도적 정책일관성을 지원할 수 있는 매커니즘의 유형을 지금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본 장의 목적은 SDG 실행에 있어서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매커니즘(구조, 과정 및 운영방법)을 국가별 현재 경험으로부터 얻은 사례를 통해 조명함으로써 매커니즘의 유형을 밝히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제2장에 소개된 8개 구성요소를 토대로 확보한 정보에 근거하여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일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및 스위스 19개국의 국가별 현황을 소개한다. 각국의 현황은 비공식적인 정책일관성 담당자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8개 PCSD 구성요소의 2030 의제에의 적용에 관한 2017년 설문조사 응답내용에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본 장에는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 파트너십 회원인 네팔 비정부단체연합(NFN), 사회정책 및 개발센터(SPDC) 및 Núcleo Girassol(Universidade Federal Fluminense)이 제출한 네팔과 파키스탄의 간략한 국가별 현황과 브라질의 수직적 정책일관성에 관한 사례연구 등 3편의 기고문이 게재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와 관련한 다양한 노력, 매커니즘 및 도구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본다. 유일무이한 청사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는 각자의 국가적 환경에 적합한 정책일관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매커니즘을 결정해야 한다. 국가는 정책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든 아니든 그에 대한 경험의 상호교환과 논의를 통해 SDG의 일관된 실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해결책을 확인하고 노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1)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범적인 제도 실무에 관한 2010년 OECD 위원회 권고안의 개정판을 공지하고, 2)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유엔 고위급정치포럼의 주제별 검토를 위한 분석자료를 제공하며, 3) SDG 세부목표 17.14의 세계적 지표 방법론 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스트리아

SDG를 모든 부처의 정책에 통합하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의 시행으로 정부 간 정책일관성에 대한 약속이 강화되었다. 2016년 1월, 오스트리아 장관협의회는 모든 부처가 SDG를 각자의 관련 정책과 전략에 통합하고 필요할 경우 2030 의제의 일관된 실행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 따라서 각 부처는 소관 분야에 해당하는 SDG를 달성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Statistik Austria, 2018^[1]). 2017년에 발간된 *개요 2016 - 오스트리아 연방 부처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 실행에 대한 기여*는 이러한 정치적 약속의 산물이며 SDG 실행을 위한 국가적 책임과 정책과정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Bundeskanzleramt Österreich, 2017^[2]). 이리하여 비록 국제적 수준에 특별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SDG 실행에 있어서의 정책일관성의 적합성은 체계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PCSD에 대한 분명한 약속은 현행 오스트리아 개발정책에 관한 3개년 프로그램 2016-2018에도 명시되어 있다(Federal Ministry for Europe, 2016^[3]). 차기 3개년 프로그램 2019-2021에는 보다 더 강한 약속이 통합될 예정이다(OECD, 2017^[4]).

새로 구성된 부처간 실무단은 잠재적 상충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SDG와 관련된 국내 및 국제적 목적을 참작한다. 정보 공유를 통해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연방 수상실과 외무부가 공동으로 주재하는 부처간 실무단이 구성되어 사회에서 SDG를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SDG의 실행을 지원한다(Bundeskanzleramt Österreich, 2017^[2]). 각 부처의 SDG 담당자는 정기 회의에 참석하여 다양한 정책목적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각각의 상충되는 점과 시너지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동 회의에서 PCSD의 국제적 관점도 논의한다. 오스트리아 개발청(ADA)은 일관된 정책을 장려하고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7개 원칙(주도권, 해를 끼치지 않음, 공평, 평등과 무차별, 참가와 포용, 책무와 투명성, 권한위임, 지속 가능성)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표 3.1. PCSD 확보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오스트리아)

구성요소	오스트리아
정치적 약속	2003년의 개발협력에 관한 연방법률에 의거, PCSD는 국내 및 국제적 수준에서 법적인 의무가 되었다. 2016년 1월, 연방정부는 모든 부처가 2030 의제와 SDG의 원칙을 각자의 관련 전략과 프로그램에 통합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 PCSD에 대한 약속은 오스트리아 개발정책에 관한 3개년 프로그램 2016-2018에 명시되었다.
정책 통합	정책 수준에서는 개발정책자문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및 의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운영 수준에서는 부처간 실무단, 평가 및 선별된 주제 플랫폼을 통하여 SDG를 국제정책에 통합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한다. SDG를 각 부처의 프로그램에 통합하도록 한 장관협의회의 지시를 근거로 각 부처의 SDG 담당자가 정보와 목적의 교환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절충안과 시너지 효과를 참작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 부문에 관련된 개발협력 문제(성별 및 환경)는 다양한 수준에서의 정책적 논의는 물론 프로그래밍, 계획 및 모니터링 과정에 주요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세대간 시간 프레임	필요할 경우 새로운 정책과 전략에 세대간 시간 프레임을 통합시켜야 한다. 각 부처는 선거 주기와 관계없이 SDG와 관련 프로그램 및 전략을 통합시킬 의무가 있다.
정책 효과	잠재적 정책 효과는 기존의 부처간 공통 전략지침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다양한 실무단에서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조정	연방 수상실과 외무부가 공동으로 주재하는 각 부처의 SDG 담당자로 구성된 부처간 실무단이 SDG 실행을 조정하고 진도보고서를 제출하며 정보를 공유한다. 모든 부처가 부처간 실무단에 참여하여 SDG 실행과 관련된 국내 및 국제적 목적을 검토한다. 특정 분야의 국제정책에 대하여는 3개년 프로그램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부서가 PCSD를 확보할 책임도 부담한다.

지방 참여	주(오스트리아의 지역)의 연락사무소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2016-2018 및 2019-2021 3개년 프로그램의 수립을 위한 문서 수신처 목록과 실무단에 포함되어 있다. 외무부의 후원으로 주,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들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SDG를 달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행정 단위에서 수행된 실행조치를 조정하기 위한 연례 회의가 개최된다. 외무부는 또한 대민 홍보의 일환으로 조직된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의 참여	주요 국가정책 틀과 전략은 우수한 이해관계자 자문단과의 폭넓은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된다. 정부 부처, 기타 정부단체 및 기관, 민간 부문, 학계, 정당 및 이익단체(오스트리아 산업연합-IV 및 오스트리아 경제회의소-WKÖ 등과 같은)가 2019-2021 3개년 프로그램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오스트리아에서의 2030 의제 실행을 지원하는 시민사회 플랫폼인 오스트리아 SDG 감시는 2017년 9월에 온라인으로 전환하였다.
모니터링 및 보고	부처간 실무단은 국가적 SDG 실행을 감시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이행보고서를 작성한다. 오스트리아 통계청은 최초로 국가적 SDG 지표를 개발했지만 SDG 17.14에 관한 국가적 지표는 제외되었다. 오스트리아 개발청(ADA)은 현장 사무소가 동등한 협력관계에 기초한 지방의 협력을 확보하도록 지시하면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통제를 책임지고 있다.

출처: OECD(2017[4]), Bundeskanzleramt Österreich(2017[2]).

벨기에

모든 수준에서 강화된 정치적 약속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향한 오랜 전통으로 수평적 및 수직적 일관성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SD)에 대한 공약은 2007년부터 벨기에 헌법에 명시되었으며, 연방정부, 지역사회(플랑머, 프랑스어 및 독일어 사용) 및 지역(왈로니아, 플랑드르 및 수도 브뤼셀)은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하여야 한다. 2030 의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 단위에서 채택한 기존의 다양한 지속가능개발(SD) 전략에 의존하여야 한다. 연방 수준에서 55개 장기 목적, 일련의 지표 및 연방계획을 망라한 이 전략을 위한 2050비전(2050-time horizon Vision for SD)이 2013년에 채택되었다(IFDD, 2018[5]). 연방 전략은 1997년부터 5개년 정책학습 주기(“보고-계획-이행-확인-실행”)를 통하여 실행되었다. 지역 수준의 주요 전략 틀에는 2016년 승인된 제2차 왈론 SD 전략, 플랑드르 지역을 위한 장기 전략인 플랑드르 비전 2050(박스 3.1), 브뤼셀 수도지역이 채택한 지역 SD 계획 및 독일어권 지역사회의 제2차 지역개발 계획이 포함된다.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과 관련된 기존의 공약과 제도적 구조를 2030 의제의 새로운 실상에 적용하기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매우 중요한 새로운 전략 틀은 벨기에가 2030 의제와 SDG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한다. 2017년에 승인된 최초의 지속가능개발국가전략(NSDS)은 주요 정부의 수행주체들이 연방과 지역 수준에서 벨기에의 여건에 맞게 SDG를 달성하도록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우선과제에는 지속 가능한 식량, 지속 가능한 건물 및 주택, 지속 가능한 공공구매, 실행 수단, 인식제고 및 추적조사 지원이 포함된다. NSDS에 서명한 사람들은 보다 강화된 형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 NSDS에는 정권 임기 중 2회에 걸쳐 국가 2030 의제 실행보고서를 상원과 하원에 동시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Kingdom of Belgium, 2017_[6]).

모든 수준에서 다방면에 걸친 실행과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적 틀은 정책일관성을 높인다. SD와 개발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 지역 및 지역사회 장관으로 구성된 지속가능개발부처간회의(IMCSD)은 SDG 실행을 위한 중앙 조정 매커니즘으로 재개되었다. 연방 SD 연구소가 주재하는 지속가능개발위원회(ICSD)는 연방정부 부서간의 조정을 제공한다. 다양한 매커니즘을 통하여 각 권력계층 간의 조정을 지원하며, 자문 성격의 지속가능개발 이해관계자 연방협의회 및 개발정책일관성(PCD) 자문위원회 등의 다양한 사회단체의 참여를 지원한다. 제도적 틀은 지방, 지역, 국가 및 국제적 실행 간의 효과적인 인터페이스를 국가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부문 간 조치와 국내정책의 국경을 초월한 영향을 평가할 역량이 증진된다는 전제 하에 PCSD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표 3.2. PCSD 확보를 위한 제도적 매커니즘(벨기에)

구성요소	벨기에
정치적 약속	다양한 연방기관에 걸친 법적 및 전략적 틀에는 정책일관성에 대한 벨기에 정부의 약속이 반영되어 있다. 2013년의 개발협력법에는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4년에 PCD 준수에 관한 정부간(연방정부 및 지방정부 포함)선언이 서명되었다. PCSD와 관련된 제도적 구조를 2030 의제의 새로운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정책 통합	연방 수준에서의 통합은 지속가능개발위원회(ICSD)를 통해 이루어진다. SD 공공서비스는 2013년에 지속가능개발 연방연구소(FISD)로서 영구적인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정부 부처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핵심 업무에 SD를 통합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방기획국(FPB)의 지속가능개발 태스크포스(TFSD)는 현황 보고, 정책 평가와 예측을 수행하면서 정책 통합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정책 수단으로는 사회통합 촉진, 경제의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과제에 대한 적응, 환경보호 및 사회적 책임완수를 중점적으로 다룬 벨기에 2030 전망에 대한 장기비전 기술서가 있다. 왈로니아에서는 2013년에 왈론 행정부 내에 독립적인 SD 자문부서가 설치되었다. 동 자문부서는 정부, 행정부의 요청 또는 자체 판단에 따라 SD 및 SDG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플랑드르에서는 지속가능개발 전담 실무단이 플랑드르 정책과 관련된 목표에의 SDG 통합, 더 나아가, 그 실행을 지원하고 있다. 브뤼셀 수도지역에서는 PCSD 개선을 위한 지역기관들간의 공식적인 협이가 가능하도록 2017년 여름에 개발원조에 관한 새로운 법안이 채택되었다.
세대간 시간 프레임	강력한 법적 기반의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연방 수준의 비전은 2050년까지의 장기적인 전망에 기반을 두고 있어 선거 주기를 완전히 초월한다. 지속가능개발부처간회의(IMCSD)는 존속기한이 없다.
정책 효과	지속가능개발연방장기비전(2013년)에는 새로운 사전 영향평가 도구가 포함되어 있다. 지속가능영향평가(SIA)는 2014년 1월에 규제영향평가(RIA)에 통합되었다. RIA를 통하여 예비 법안이 지속 가능한 개발(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과 공공서비스의 요소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정책일관성을 향상시킨다.
조정	SD 및 개발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 지역 및 지역사회 장관들로 구성된 IMCSD는 중앙 조정 매커니즘이다. 일부 대표자들은 IMCSD와 ICSD에 모두 참석한다. 성별, 빈곤, 지속 가능한 평화 또는 기후와 평화의 관련성에 대한 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부처간에 별도의 조정 플랫폼이 존재한다. 연방 및 지역 수행주체들은 다자간 조정회의에 참석하여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및 정치적 정책목적 간의 절충안과 시너지 효과를 규명하고 토의한다.
지방 참여	IMCSC는 지지와 인식제고를 위한 행사에 지방과 지역정부 대표자들을 초청하여 참여하도록 한다.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도 벨기에 최초의 VNR 작성에 참여하였다. 기타 수행주체를 포함하여

지역과 지방정부가 취한 실행조치는 웹사이트인 www.SDG.be에 게시되어 있다.

이해관계자의 참여	벨기에는 정부 내외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정책결정의 모든 단계에서 참여 과정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속가능개발 연방협의회 또는 개발정책일관성 자문위원회 등 시민사회와 학계의 자문위원회가 PCSD에 기여하고 있다.
모니터링 및 보고	연방기회국은 정권 임기 중 2회에 걸쳐 벨기에의 SDG 집행보고서를 발간한다. 현재 지표를 갱신하고 있는 중이다. NSDS 또한 의회 임기 중 2회에 걸쳐 일반대중에게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연방 수준에서는 ICSD 내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는 행정부에 대한 연간 보고를 시행한다. SD를 위한 2050 비전의 관련지표는 www.indicators.be 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석: 벨기에의 제도적 구조에 따르면 연방정부, 커뮤니티 및 지역사회는 법률적으로 동등하게 취급된다. 해당분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지만 계층이나 위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의 참여”라는 용어는 지방국가기관(도시 및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된다.

출처: OECD(2017^[7]), Kingdom of Belgium(2017^[6]).

박스 3.1. 벨기에의 정책 고립 타파

연방 수준

외무부, 개발협력부 및 국방부가 공동으로 입안한 새로운 포괄적 접근법 전략노트에는 벨기에 외교정책에 대한 일관된 접근법이 기술되어 있다. 복잡한 상황이 통상 전혀 성격(정치적, 사회적, 생태적, 경제적, 군사적, 안전 등)이 다른 문제를 유발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포괄적 접근법에서는 외교, 국방 및 법의 지배에 개발을 접목시켰다. 전략노트는 2030 의제와 SDG를 위해 이미 개발한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특히 SDG 16), 다양한 정책적 고립을 지속적으로 타파하는데 도움이 된다. 최근의 사례로 이라크와 사헬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벨기에의 기여를 들 수 있으며, 항구적인 대화, 평가 및 벨기에의 접근법 조정을 위해 관련된 모든 부서가 공동으로 중요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상호간의 노력을 조정하였다.

외무부는 시너지 효과의 측면에서 내부 조직구조를 개편하여 환경 및 기후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동 주제의 개발 및 다면적인 측면을 다루게 하였다.

지역 수준

플랑드르 비전 2050에서는 여러 정책분야에 관련되고 다양한 분야의 장관의 참여가 필요한 순환적인 경제, 스마트한 생활, 4차 산업혁명, 평생학습 및 동적인 전문경력, 2050년의 의료 및 공생, 교통과 이동성 및 에너지 등 일곱 개의 전환 우선과제를 핵심 계획으로 설정하였다. 전체를 망라한 실행 접근법보다는 지역적 과제의 해결과 주요 기회 분야에서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 여론이 지속 가능한 경로로의 이행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부문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신속하게 얻게 된다. 또한 결과에 대한 각자의 책임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면서도 모든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학습을 촉진한다.

출처: OECD(2017[7]).

체코

개정된 포괄적 틀과 정책일관성에 대한 약속을 통하여 정부는 2030 의제를 일과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과 복지를 그 핵심으로 하는 *체코 2030* 전략은 PCSD를 국가, 지역 및 지방정책 수립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한다(Office of the Government of the Czech Republic, 2017^[8]). 2018년 4월부터 제1부수상과 환경부 장관이 주재하는 지속가능개발정부위원회(GCSD)가 정부 내에서 PCSD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PCSD에 대한 공약은 체코 개발협력전략 2018-2030에서 재확인된다. 공약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PCSD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공서비스의 부문간 협력을 중시하는 행정 문화의 조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조정기관은 국내 및 국외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공유 접근법을 감안한다. 환경부는 지속가능개발정부위원회(GCSD)의 지원을 받아 SDG 실행과정을 주도한다. GCSD는 중앙 행정기관간의 부문 정책간 조정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정부 부처와 기타 이해관계자는 9개의 주제별 위원회를 통하여 GCSD의 역할에 기여한다(박스 3.2). GCSD 위원회간의 조정을 담당할 공식적인 매커니즘 확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GCSD가 정책의 입안과 실행에 있어서의 중복 또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와 정부 부처간에서 중재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OECD, 2017^[9]). GCSD와 개발협력위원회간에 효과적인 인터페이스를 유지함으로써 PCSD에 대한 통일된 접근법을 지원하고 DAC 검토 결과 주요 과제로 확인된 국내 및 국제적 실행조치간의 시너지 효과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OECD, 2016^[10]).

시너지 효과와 상충관계뿐만 아니라 우선과제에 중점을 둔 모니터링 및 보고 시스템도 정책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체코 2030*에는 주제별 시너지 효과를 확인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관리하며 일관된 보고를 위한 사람과 사회, 경제, 회복력이 좋은 생태계, 지역과 지방자치단체, 세계적 개발과 모범적 거버넌스 등 6개의 우선과제가 명시되어 있다. 체코 2030에 명시된 97개 세부목표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지표를 바탕으로 *삶의 질과 그 지속 가능성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연 2회 정부에 제출한다. GCSD 위원회들은 해당 분야의 자료수집과 지표작성 책임을 지고 있다. 국무성의 지속가능개발국이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관련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GCSD의 최종 승인을 받아 정부에 제출한다. 체코 통계청은 관련 자료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반적인 지표의 틀을 조정할 책임을 지고 있다(Office of the Government of the Czech Republic, 2017^[11]).

표 3.3. PCSD 확보를 위한 제도적 매커니즘(체코)

구성요소	체코
정치적 약속	PCSD에 대한 약속은 정부의 전략 및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전략 틀인 <i>체코 2030</i> 에 반영되어 있다. 두 개의 국가 전략 우선분야(모범적 거버넌스, 글로벌 발전)에는 PCSD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정책 통합	정부 자문기관 및 부처간 조정기구의 부처간 부문별 문건에 대한 정기적인 토의는 정책 통합을 위한 기본적인 매커니즘을 제공한다. 다양한 정책목적 간의 절충안/시너지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정책 격차분석을 토대로 실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책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
세대간 시간 프레임	의제와 정치적 영역 모두에 걸친 이해관계자 및 비공식 수행주체 네트워크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i>체코 2030</i> 의 특성에 의해 장기적인 관점이 보장된다. 그러나 반기별 모니터링보고서는 미래의 정부를 위한 수정 매커니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 효과	기존의 정책 영향평가 도구(RIA, SIA, EIA)를 활용한다. 분석능력 향상 정도를 감안하여 정책의 국경을 초월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적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조정	PCSD를 담당하는 정부 기구인 지속가능개발정부위원회(GCSD)는 참여 과정을 통하여 정치인의 지지와 참여를 확보하고자 한다. 제1부수상과 환경부 장관이 주재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여하는 GCSD는 새로운 협력관계를 수립하고 국가 전략적 틀을 개발하는 협의를 위한 주요 포럼이다. 조정을 위한 장래의 구상에는 관련 부처의 PCSD 담당자 지정과 품질관리기법을 적용한 전략수립을 위한 제도적 역량 배양이 포함된다.
지방 참여	지역과 지방자치단체는 체코 2030의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지속가능개발국은 지역 및 지방의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2017년에 8회의 지역 원탁회의/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협회와 단체를 대표하는 3개 주요 지방자치단체협회 및 지속가능 지방자치단체위원회의 대표자들이 GCSD에 참여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의 참여	의제설정 단계에서 SDG 실행을 지원하고 <i>체코 2030</i> 의 입안에 기여한 개발협력 체코포럼(FoRS), Glopolis 싱크 탱크, Mej se k svetu 시민사회단체 컨소시엄, 카롤로 대학 환경센터, 사회적 책임 및 그린서클 협회 등의 이해 관계자 포럼, 학술단체, 임의단체가 있다.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 또한 민간 부문과의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PCSD 정부기구는 이해관계자간의 논의와 중재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감시 및 보고	국가적 목표 달성 진척도는 지속가능개발국이 작성하는 반기별 <i>삶의 질과 그 지속 가능성에 관한 분석 보고서</i> 를 통하여 모니터링한다. 목표 운영을 위한 지표는 국가 전략에 명시되어 있다. 체코 통계청은 관련 자료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GCSD는 국가 수준의 실행을 검토하고 공약 유지를 장려한다. 대사관은 해당 분야의 진행상황을 외무부에 보고한다.

출처: OECD(2017[9]), Office of the Government of the Czech Republic(2017[11]).

박스 3.2. SDG 실행을 위한 우선순위 확인 및 설정

2015년 7월, 체코 정부는 수상에게 2010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국가 전략 틀을 개정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동 개정의 목적은 지속 가능한 개발과 복지를 위한 핵심 우선분야와 장기 목적을 설정하고, SDG를 국가정책에 주류로 편입시키며, 체코의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 추세와 아울러 기회와 위협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5년 중반에 수상은 모든 정부 자문기관과 주요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에 국가 장기개발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관련 자료는 지역개발부가를 계기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인 전략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수집하였다. 2015년 10월15일까지 40개 단체와 기관이 172건의 자료를 제공하였다.

지속가능개발정부위원회(GCSD)는 자료를 편집하고 평가하였다. 전략적 관리 및 예측을 전담하는 6개 학술단체와 싱크 탱크로 구성된 국가 예측 네트워크가 GCSD를 지원 하였다. 델파이 방식을 활용한 분석을 토대로 관련 자료를 선별하고 부여된 유사한 키워드를 기준으로 여섯 개 핵심분야로 분류하였다. 선정한 분야는 2015년 12월에 개최된 지속가능개발 포럼에서 소개하였으며 관련 GCSD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쳤다.

그 다음 거의 2년에 걸쳐 *체코 2030*의 입안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6회의 원탁회의(핵심분야당 1회), 8회의 지역 원탁회의, 2회의 공청회, 상하 양원과의 협의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의 협의를 조직하고 시행하였다. 전체적으로 약 500여명의 전문가와 100개의 단체가 입안과정에 참여하였다.

출처: OECD(2017[9]).

에스토니아

지속 가능한 에스토니아 21 전략에 따라 지속 가능한 개발과 정책일관성을 위해 오래된 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있다. 2015년에 의회가 채택한 *지속 가능한 에스토니아 21*은 SDG 달성을 위한 전략적 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Estonian Government, 2015_[12]). 지속가능개발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에스토니아 21*를 검토하여 2030 의제와 부합하도록 실행 매커니즘을 구축하였다. 2018년에 개시되는 새로운 계획기간에 대비하여 SDG가 정부의 부문 및 주제별 전략과 실행계획에 통합될 예정이다. 에스토니아는 또한 2020년까지 정책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초의 틀을 구축할 것을 약속하였다(Government Office Republic of Estonia, 2016_[13]).

모든 수준에서의 기존 조정 매커니즘은 정책일관성과 정책 통합을 지원한다. 국무성

전략실은 중앙정부 수준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관련 업무를 조정한다. 또한 우선과제를 조정하고 다양한 수평적 계획문건의 일관성을 보장함으로써 기타의 전략(에스토니아 2020, 에스토니아 유럽연합 정책 등)도 조정한다. 각 부처와 에스토니아 통계청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부처간 실무단은 *지속 가능한 에스토니아 21*의 실행을 지원하고, 국가 지속가능개발지표를 개발하며, VNR을 작성한다. 자문성격의 비정부 통솔기구인 지속가능개발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에스토니아 21*의 실행을 모니터링한다. 지속가능개발위원회는 연간 4회 또는 5회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가 채택하기 전에 전략적 실행계획을 검토하여 정책 권고안이 포함된 연구보고서를 발간한다(OECD, 2017^[14]). 조정 매커니즘을 강화하고 정보공유와 책임분담의 한계를 넘어섬으로써 부문에 특화된 정책간의 일관성을 더 제고할 수 있다(OECD, 2017^[15]).

모든 전략계획 문건과 EU 성명서에서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영향평가는 일관성 향상을 지원한다. 영향평가에서 다루는 분야는 인구구성 영향을 포함한 사회적 영향, 안보와 외교정책, 경제, 생활과 자연환경, 지역개발, 정부기관의 조직과 지방정부가 포함된다. 또한 전략계획 문건과 지방계획 작성 시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환경 포함)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OECD, 2017^[14]).

표 3.4. PCSD 확보를 위한 제도적 매커니즘(에스토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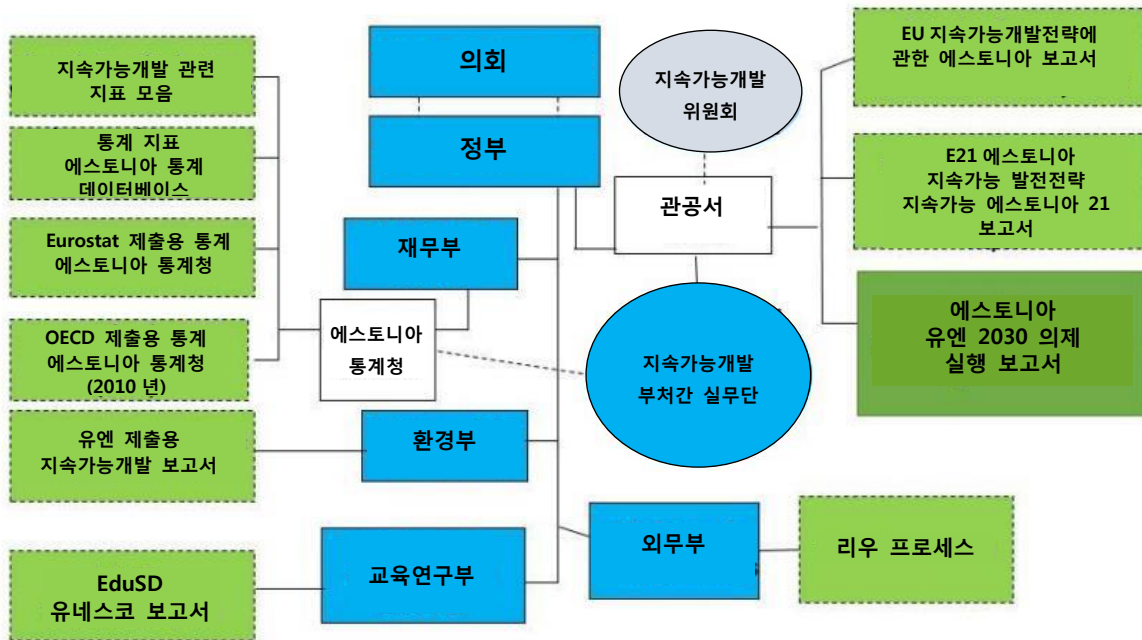
구성요소	에스토니아
정치적 약속	의회는 1995년에 지속가능개발법을 채택하였으며, 2005년에는 SDG 실행을 위한 전략적 틀로 역할을 하며, 2016년도 VNR에 규정된 바에 따라 2030 의제의 국가 실행에 있어 PCSD 제고를 위한 요청이 포함된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인 <i>지속 가능한 에스토니아 21</i> 을 채택하였다. 에스토니아의 정책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초의 틀은 2020년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정책 통합	2018년부터 개정되는 SDG를 부문별 전략과 개발계획에 통합될 예정이다(일부 정책에는 이미 SDG를 반영하였다). 각 부처는 해당 정책분야의 SDG를 주도적으로 달성할 책임을 진다.
세대간 시간 프레임	새로운 장기 전략문건과 실행계획은 SDG를 통합한다. 전략계획, 영향평가 및 이해관계자 참여는 포괄적으로 장기적 관점을 견지한다.
정책 효과	정부의 모든 전략적 개발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사회경제적 영향평가도 실시하여야 한다. 법무부와 국무성이 이러한 영향평가 시스템을 개선할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개발계획과 계획에 대한 세부목표에 대한 연례적인 감시를 통하여 의도하지 않은 효과와 발생 가능한 저항을 파악할 수 있다.
조정	국무성 전략실은 지속 가능한 개발 관련업무를 조정하고 각 부처 및 에스토니아 통계청의 대표자들이 특정한 사안을 처리하는 부처간 실무단과 비정부 이해관계자 단체인 에스토니아 지속가능개발위원회 등의 단체간의 정보교환을 촉진시킨다. 국무성 전략실은 2030 의제의 실행과 관련된 조정뿐만 아니라 기타 전략(에스토니아 2020, 에스토니아 EU 정책)과 관련된 조정도 수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수평적 계획문건의 일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지방 참여	1996년에 결성된 에스토니아 지속가능개발위원회에 지방정부의 대표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의 참여	비정부 통솔 단체인 지속가능개발위원회는 연간 4회 또는 5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다. 동 위원회는 주제별 토론회를 통하여 정책 권고안이 포함된 연구보고서를 발간한다. 동 위원회는 학계

및 산업부문, 청년과 지방 거버넌스를 결속시키고 다양한 지속 가능개발 부문에 비정부 단체들을 연계시킨다. 참여활성화법에 따라 정부기관은 정책의 영향을 받는 이익단체와 일반대중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킬 의무가 있다.

모니터링 및 ECSD는 2017년 12월에 유엔의 국제적 목표와 부합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대한 새로운 보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승인하였다. 새로운 지속가능개발목표 목록을 토대로 2018년에 에스토니아의 지속가능개발지표에 관한 통계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출처: OECD(2017[14]).

도표 3.1. 에스토니아의 SDG 실행을 위한 주요 제도적 매커니즘, 정책문서 및 주요 수행주체



출처: Government Office Republic of Estonia(2016[13]).

핀란드

최고위층의 정치적 약속과 범 정부적인 전략적 틀은 정책일관성을 가장 중요시한다. 총리실(PMO)은 국내의 2030 의제 실행을 주도한다. 2014년에 채택되고 2016년에 개정된 우리가 원하는 핀란드 2050 은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필수과제를 조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Nation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16_[16]). 전략은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범 사회적인 공약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적 틀을 제공한다, 2017년에 의회에 제출한 정부의 2030 의제 계획은 2030년까지의 실행, 국가 수준의 추적조사를 위한 틀이다. 동 계획은 1) 탄소중립적이고 자원효율적인 핀란드 및 2) 차별이 없고 평등하며 유능한 핀란드 등 두 가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동 계획은 또한 국내 및 국제적 공약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일관성에 대한 명확한 공약을 명시하고 있다(PMO Finland, 2017^[17]). 핀란드의 외교안보정책의 중요한 부분인 개발정책에는 2030 의제 및 SDG의 우선 분야인 양성평등과 여아 및 여성의 역량강화, 개발도상국의 고용, 생계 및 복지 원천 창출 지원, 민주적이고 기능을 발휘하는 사회, 보다 나은 식량안전과 물 및 에너지 이용 및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PMO Finland, 2016^[18]).

정부 내의 조정기능 증진을 통하여 정책일관성을 보강하고 정책 통합을 촉진시킨다. 총리실은 국내의 SDG 실행을 조정한다. 각 부처의 지속가능개발 담당자로 구성된 부처간 조정 네트워크는 총리실의 조정 기능을 지원한다. 총리가 주도하는 이해관계자 포럼인 지속가능개발국가위원회(NCSD)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다양한 수준의 핀란드 정책, 조치 및 일상업무에 통합하여 공공과 민간부문, 시민사회단체, 학계,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을 연계한다. 의회 기구인 개발정책위원회(DPC)는 개발정책의 관점에서 SDG 실행을 추적하고 정부 계획의 실행이 개발정책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한다(PMO Finland, 2016^[18]). 2030 의제 채택 이후 두 위원회간의 협력은 강화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은 외무부의 소관으로서 식량안전, 통상지원, 이민, 조세 및 개발, 평화와 개발 등의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다(OECD, 2017^[19]). 2030 의제 채택으로 모든 정부기관이 책임을 분담하게 되었다.

체계적이고 참여적인 추적조사와 리뷰는 **모든 수준에서 이해관계자 참여와 정책일관성을 높인다.** 핀란드는 증거 기반을 구축하고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광범위한 정보 출처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출처에는 과학적 패널, 싱크 탱크, 연구기관, 시민참여 및 활동적인 시민사회가 포함된다. 2030 의제의 실행현황은 정부의 연차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보고된다. 2017년부터 정부 각 부처는 2030 의제 추진을 위해 취한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핀란드의 국제 개발공약의 이행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DPC는 2030 의제의 국내 실행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추적조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핀란드는 또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국내 추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박스 3.3). 핀란드는 미래의 일관된 SDG 실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핵심 구성요소를 운영하고 있다.

표 3.5. PCSD 확보를 위한 제도적 매커니즘(핀란드)

구성요소	핀란드
정치적 약속	2017년 의회에 제출된 정부의 2030 의제 실행계획에는 PCSD에 대한 명확한 공약이 명시되어 있다. 동 계획에는 구체적 조치와 국내 및 국제적 공약이 포함되어 있다.
정책 통합	모든 정부 부처는 매년 2030 의제 실행과 관련하여 수립한 정책과 취한 조치를 종합하여 정부의 연례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연간 예산안과 추적지표에 지속 가능한 개발의 촉진과 감시에 필수적인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절충안과 시너지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부처별로 상이한 몇 가지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절충안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와 뿌리깊은 이념적 차이를 수반하기 때문에 파악된 경우에도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의 대부분은 정치적(정부 부처)수준에서 다루어지며 궁극적으로 해결된다.
세대간 시간 프레임	정부의 실행계획은 2050년까지 적용되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사회의 약속에 규정된 장기적인 비전, 원칙 및 목표에 근거한다. 동 계획에는 세대간의 논쟁과 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2017년에 정부는 정치적 계획과정에 청년층의

	참여를 독려하고 의사결정에 장기적인 관점을 접목하기 위해 2030 의제 청년그룹을 창설하였다.
정책 효과	정부는 2030 의제 실행계획에서 의도하지 않은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지속가능개발 영향평가 도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공약하였다. SDG의 원칙을 반영하고 국내 및 국제적 수준에서 취한 조치들간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안 작성을 위한 기존의 영향평가 과정이 개선될 예정이다. 총리실은 또한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주요 정책과 법안 발의 시 지속가능개발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가 수준의 추적 시스템에는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국경과 세대를 초월한 문제에 관한 지표가 포함된다.
조정	총리실이 주도하는 부처간 네트워크는 부처간의 수평적 조정을 지원한다. 총리가 주재하는 NCSD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전략적 목적을 모든 부문 정책과 조치에 통합시키려고 노력하며, 국내 및 국제 협력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목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이러한 매커니즘의 권한은 중재보다는 정보 공유, 역량 축적 및 조정으로까지 확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CSD는 공통된 이해와 합의를 성공적으로 도출함으로써 행정과 보다 광범위한 사회에서 교착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지방 참여	총리실은 2030 의제의 실행에 대한 인식과 도시 및 지역의 공약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역 수준의 로드쇼를 개최하였다. 도시와 군 지역은 NCSD에 대표자를 파견하여 사회의 약속 틀 하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운영관련 공약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해관계자의 참여	참여를 독려하는 주요 수단 중의 하나는 단체와 활동적인 시민들에게 스스로 지속 가능한 목표를 추진할 기회를 제공하는 운영관련 공약이다. 운영관련 공약을 통하여 다양한 수행주체들은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2030 의제의 실행에 참여할 수 있었다. 기업, 학교, 비정부 단체, 행정부, 노동조합, 정당, 도시 및 개인 등 사회의 전 부문에 걸쳐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실행조치에 대해 750건이 넘는 공약이 집행되었다. 핀란드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국가적 추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지역, 교회와 연구개발부문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기업과 산업(농업 분야 포함)계 소속 16개 기관, 3개의 대규모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청년부문, 28개의 비정부 단체(환경, 여성, 아동, 사미 토착민, 소말리아 난민, 스포츠, 교육, 소비자, 장애인협회 외 기타 다수)의 대표자들이 NCSD에 참여하고 있다. 2014년에 발족한 지속가능개발 전문가 패널은 정부와 NCSD의 활동을 지원하고 비판하기도 한다. 동 패널은 다양한 전공분야로부터 초빙된 8명의 저명한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2017년 봄부터 2030 의제 청년그룹을 통하여 다양한 배경과 지역 출신의 20명의 청년들과 협력관계를 수립하였다.
모니터링 및 보고	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에 포함된 연간 2030 의제 이행보고서는 모든 정책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또한 정부 예산안에는 2030 의제가 예산, 계획 및 실행에 반영된 방식에 관한 각 부처의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2019년부터 매 4년마다 총선이 실시되는 해에 핀란드의 지속가능개발 정책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PMO, NCSD 및 개발정책위원회는 지속가능개발지표,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자료 평가와 기고문을 토대로 현황 및 추세를 토의할 연례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한다. 지속적인 연간 주기 검토를 통하여 참여방식의 검토 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박스 3.3)

출처: OECD(2017[20]), PMO Finland(2016[18]),(PMO Finland, 2017[21]).

박스 3.3.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참여방식의 추적조사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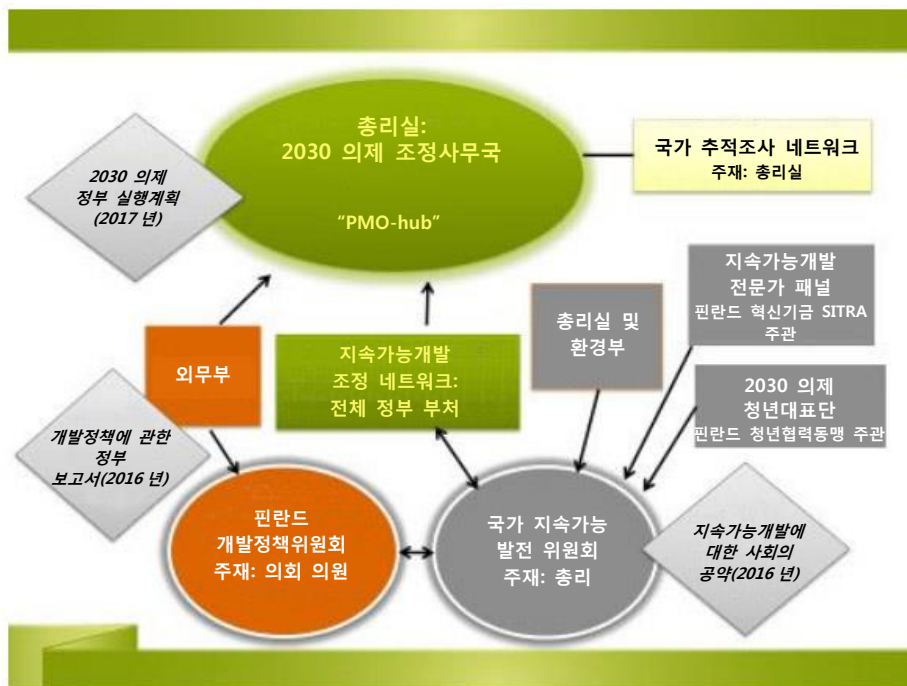
핀란드의 국가 추적조사 시스템은 장기 전략적 틀의 8개 목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정책 결정은 10개의 지표 바스켓을 통해 8개 목적과 연계되며 지표 바스켓은 4개 내지 5개의 지표로 구성되며 하나 이상의 목적과 연계되어 있다. 바스켓은 해석에 관련된 논의를 위한 틀 역할을 하며 정치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실체에 중점을 둔다.

관련 기관은 연간 1회 각 바스켓의 지표를 검토, 해석하고 갱신한다. 그 목적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관점에서 지표 값 변동의 의미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이어서 모든 사람이 상이한 해석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보를 소개할 수 있도록 일반대중 및 이해 관계자와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러한 과정을 정치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수집에 도움이 된다.

공개 토론은 총리실의 지속가능개발 웹사이트(kestavakehitys.fi/seudanta)에서 매월 새로운 바스켓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NCSD와 PMO는 모든 바스켓을 갱신한 후 지속 가능한 개발의 현황과 미래를 조명하기 위한 연례행사를 조직한다. 동 행사는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 대한 의회의 심의와 동시에 진행된다.

출처: PMO Finland(2017[21]).

도표 3.2. 핀란드의 2030 의제 실행을 위한 주요 제도적 매커니즘, 정책문서 및 주요 수행주체



출처: 핀란드 총리실

독일

최고위층의 공약을 수반한 통일된 전략은 PCSD를 향상시킨다. 2017년 1월에 내각이 채택한 독일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은 연방수상실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2030 의제를 실행하기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다. 동 전략은 조직의 상호의존성 증대에 비추어 보다 높은 수준의 정책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분야를 통합하고 있으며, 2030 의제를 정책일관성 확보, 특히 SDG 17.14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German Federal Government, 2016_[22]). 동 전략은 PCSD에 대한 독일의 공약을 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훌륭한 기반이 된다(OECD, 2015_[23]).

중앙정부 고위급 기구는 이슈 기반한 접근법을 통하여 PCSD를 향상시키며 전부처 지원방식을 활용한다. 국무장관 위원회(SSC)는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의 중앙 조정기관이다. 동 위원회는 각 부처의 대표자로 구성되며 연방 수상실장이 주재한다. 독일은 범 정부적인 접근법을 적용하여 모든 부처가 SSC 회의를 주관하며 전략의 실행 및 추가 개발을 지원하는 SD 실무단(UAL-AG)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SSC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여러 부문에 걸친 이슈와 부문별 과제를 다루며 전원 합의에 의해 주제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틀을 수립하거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한다. 독일은 최초 국가평가보고서 제출 이후 각 부처에 SD 조정관을 지정하는 등 다수의 메커니즘을 실행하였으나, 사회의 이해 관계자들의 잠재력을 더 활용할 여지가 있다(German Federal Government, 2016_[24]). 따라서 SSC 회의 준비를 지원하는 사회의 수행주체("대화 그룹")로 상설 실무단을 구성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OECD, 2017_[25]).

국내 및 국경을 초월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한 지표는 PCSD 발전상황 조사를 위한 모범 사례가 된다. 독일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은 63개의 주요 지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SDG에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지표관련 세부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정부와 통계청의 대표자로 구성된 부처간 실무단이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고 채택하며, 연방 통계청은 2년마다 이행상황을 보고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정의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국내정책의 국경을 초월한 영향과 관련된 주제를 포함하여 13개의 주제와 30개의 지표가 전략에 추가되었다. 두 가지 세부목표를 예시하면 하나는 저개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을 높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섬유 파트너십 가입을 확대하는 것이다(Destatis, 2017_[26]).

표 3.6. PCSD 확보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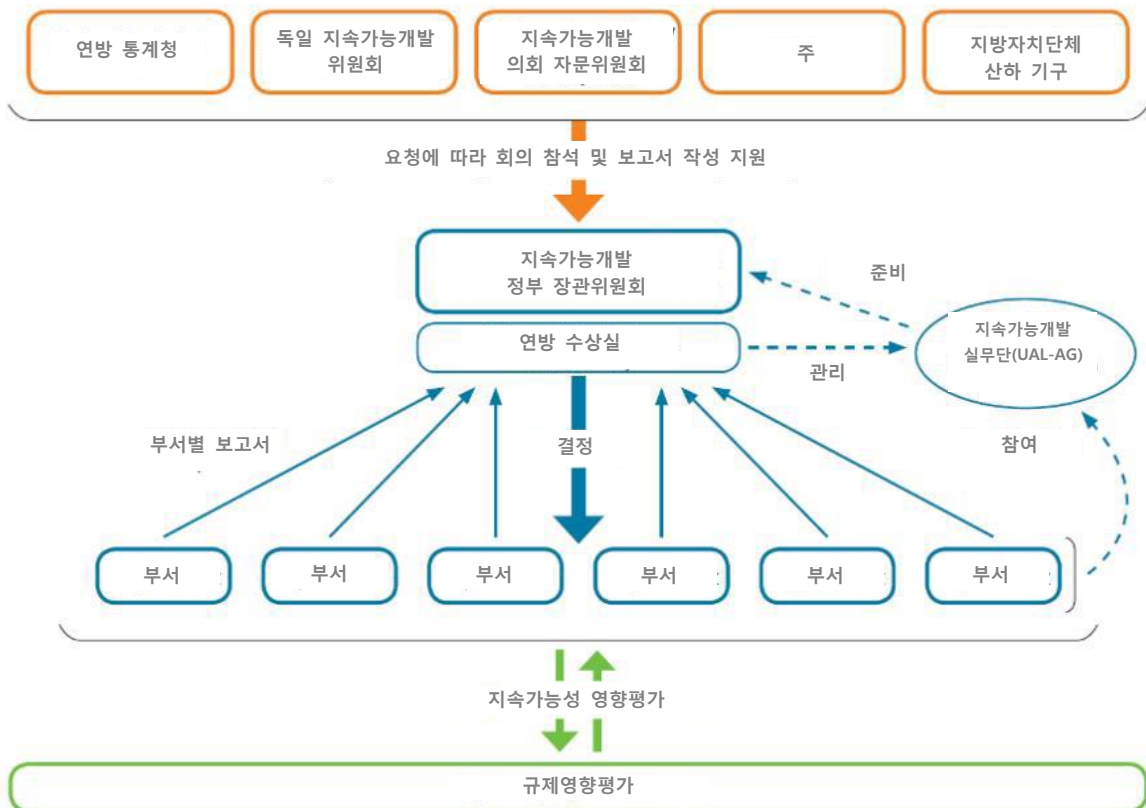
구성요소	독일
정치적 약속	수상은 2030 의제의 야심찬 실행에 대한 공약을 거듭 천명하였다. 연방 수상실은 2030 의제를 실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틀인 독일의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을 담당하고 있다.
정책 통합	모든 정부 부처는 각자의 정책 분야 내에서 독일의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의 실행에 기여할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새로 임명된 부처 SD 조정관은 각 부처 내의 정책 통합과 조정을 강화한다.
세대간	의회 및 주요 정당간에 SDG 실행과 지속 가능한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폭넓은 합의가 존재한다. 독일 SD 전략의 첫 번째 관리규칙에는 세대간 공정성이 핵심 원칙으로 포함되어 있다. 특정

시간 프레임	규정이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장기적인 영향은 지속가능개발 영향평가의 대상이다. 세대간 관점은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20a조)에도 반영되어 있다.
정책 효과	새로운 법률 및 규정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속가능개발 영향평가(SIA)를 실시하여야 한다. SIA는 세대 및 국경을 초월한 관점이 반영된 지표, 세부목표 및 관리규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18년 3월부터 법률과 해당 SIA를 온라인(www.enap.bund.de)을 통해 대조할 수 있다.
조정	연방 수상실이 주재하는 국무장관 위원회(SSC)는 독일 SD 전략/SDG 실행의 중앙 조정기관이다. 연방 수상실이 주재하는 지속가능개발 상설 실무단(UAL-AG, 부국장 수준)은 모든 부처의 참여 하에 SSC 회의를 주관한다. SSC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여러 부문에 걸친 문제와 부문별 과제를 다루며 전원 합의에 의해 주제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틀을 수립하거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한다. 조정 매커니즘은 의사결정, 정보공유 및 협의를 지향한다.
지방 참여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SSC 회의에 참석한다. 16개 주 가운데 13개 주가 자체 SD 전략을 수립하였거나 수립 과정에 있다. 연방-주 간 SD 경험 공유는 연방과 주간의 정기적인 의사소통 공간을 제공한다. 지속가능개발위원회는 지속 가능성 시장 네트워크 및 지역 중심의 창설을 통해 수직적 통합을 지원한다. 독일도시연합과 독일 시군 지방자치단체연합을 포함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한 부처간 실무단(IMA Stadt)은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2030 의제 실행을 촉진한다. 하나의 세계 서비스기관 공동체(SKEW)는 지역사회 수준의 개발협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해관계자의 참여	독립적인 지속가능개발위원회는 지속가능개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연방정부에 자문을 제공한다. 2016년에 마지막으로 수상이 임명한 3년 임기의 16명의 위원은 전문 분야 및 개인의 배경에 따라 SD의 세 분야를 전담한다. 수상은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지속 가능성 포럼을 개최하여 독일 SD 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제공한다.
모니터링 및 보고	GSD 전략에는 국내 및 국제적 지표와 세부목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 2030년까지의 장기적 목표가 명시되어 있다. 연방 통계청은 63개 지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세부목표가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일기 기호로 표시한 독립적인 지표보고서를 발간한다. 그 결과는 SCC의 의제 설정과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방 하원의 SD에 관한 의회자문위원회는 국가, 유럽 및 국제적 수준에서 연방정부의 지속 가능성 정책을 감시한다. 독일의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은 4년마다 재검토한다. 2018년에 최초로 갱신할 것이며 2020에는 포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출처: OECD(2017[25]).

도표 3.3. 독일의 SDG 실행을 위한 제도적 매커니즘

지속가능성 관리



출처:(German Federal Government, 2016[22]).

박스 3.4. 지속 가능한 코코아 생산에 대한 독일의 발의안

각국은 PCSD를 통하여 국내정책의 국경을 초월한 영향을 검토할 수 있다. 이에는 통상협정뿐만 아니라 국가의 생산 및 소비양식도 포함된다. 지속 가능한 코코아에 관한 독일의 계획(GISCO)는 코코아, 초콜릿, 제과업계, 독일 소매식품업계 및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계획이다. 동 계획에 따라 지속 가능한 코코아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독일과 생산국의 관련 수행주체들 간의 제휴관계를 확립한다. GISCO는 현재 7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관심 있는 단체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GISCO는 코코아 생산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개선하고 코코아 생산국의 자연자원과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며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코코아 생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연방 식품농업부와 연방 경제협력개발부가 GISCO에서 연방정부를 대표하고 있다. 동 계획은 부처간 조정이 이해관계자와 국경을 초월한

관점을 포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동시에 여러 가지 SDG를 지원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출처: OECD(2017[25]), German Federal Government(2016[22]).

그리스

새로운 전략, SDG를 고려한 공공 서비스 및 입법 과정을 통하여 전체 정책 주기에 걸쳐 정책 통합과 일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현재 수립 중인 국가성장전략은 국가적 환경을 고려한 SDG 실행을 위한 분석들의 역할을 한다. 정책일관성, 통합적인 계획과 조정은 중요한 실행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내각사무처(GSG)는 기존 법률의 사후 평가 및 법안 작성과 관련된 규제 영향평가 보고서에 2030 의제와 SDG에 반영된 지속가능개발의 세 가지 차원이 체계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GSG는 국립행정학교 및 지방정부(EKDDA)와 협력하여 지속가능개발의 세 차원의 통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PSCD 및 SDG를 담당하는 부문과 정부 계층의 정책입안자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세미나를 개최한다(박스 3.5).

정부 고위급 기구의 항구적인 조정 매커니즘을 통해 정책일관성 확보 노력을 위한 헌신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2016년 12월, 법률에 의해 SDG 실행과 관련된 조정 책임은 GSG에 부여되었다. GSG는 정치수뇌부 및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바탕으로 범 정부적인 접근법을 촉진하고, 중복과 불일치를 예방하고 해결하며, SDG를 주제별 제정법과 부문 정책에 주류로 편입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GSG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처간 SDG 조정 네트워크가 2016년에 구성되었다. 외무부는 SDG의 국제적인 분야를 책임지며, 환경에너지부는 주제별로 7개 SDG(6, 7, 11, 12, 13, 14의 일부와 15)의 실행 책임을 지면서 조정 네트워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GSG는 지역 및 지방 수준에서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SDG 실행을 위해 그리스 지역협회(ENPE) 및 그리스 지방자치단체연합(KEDE)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GSG는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시민사회 및 사회적 파트너, 민간 부문, 학계 등)를 실행 과정에 참여시키며 ELSTAT(통계기관)와 협력하여 SDG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표 3.7. PCSD 확보를 위한 제도적 매커니즘(그리스)

구성요소	그리스
정치적 약속	현재 수립중인 그리스 국가성장전략에 2030 의제와 SDG를 전면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동 전략적 틀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정책일관성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 SDG 실행을 위해 최고위급 정치지도부의 공약과 범 정부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고위 정부부처, 즉 내각사무처가 국가 수준에서의 SDG의 전반적인 조정 및 실행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정책 통합	2016년에 구축된 부처간 SDG 조정 네트워크는 분야별 제정법, 전략, 정책 및 계획에 SDG를 주류로 편입시키고, 지속가능개발의 세 차원을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소규모의 개입 및 활동에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EIA) 및 대규모 프로젝트 대상의 전략환경평가의 두 가지 수단을 활용한다. 시너지 효과, 상호연관성 및 장애를 파악하고 순환 경제의 촉진 등 특정한 문제와 관련된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 부처간 위원회를 설치한다.
세대간 시간 프레임	GSG는 항구적인 기구로서 SDG 실행을 위한 최고위층의 공약 및 노력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정책 효과	새로운 법률 채택 전에 실시하는 규제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내 및 국제 정책의 입안과 관련된 국경과 세대를 초월한 잠재적 효과를 분석한다. 또한 기존 법률의 사후 평가 시에도 지속 가능한 개발의 세 차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속적인 감시, 검토 및 보고를 통하여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킨다.
조정	조정을 책임지는 중앙정부의 기구는 내각사무처(GSG) 소속의 유럽 및 국제부문 제도조정실이다. 각 부처의 대표자로 구성된 부처간 조정 네트워크는 각 부처 해당 SGD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주제별 제정법, 정책 및 계획에 주류로 편입시키는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GSG의 조정활동을 지원한다. 그리스 통계청, 부통령 및 조정담당 비서를 포함한 기타 정부기관 소속 대표자들 또한 동 네트워크에 참여한다. 동 네트워크는 정책, 목적 및 수단의 우선순위를 조정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다른 부처와 함께 부처간 조정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재무부는 재무자원의 배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유하도록 한다. 부문과 거버넌스의 모든 수준에서 SDG를 실행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조정 매커니즘은 국가별 우선과제와 환경에 적합한 국내 및 국제적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방 참여	GSG는 SDG 및 PCSD 달성을 위해 그리스 지역협회(ENPE) 및 그리스 지방자치단체연합(KEDE)과 같은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또한 지방과 지역정부의 대표자들은 상호 학습과 모범사례 공유를 위한 다양한 SDG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방 및 지역정부 대표자들이 제공한 정보는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이해관계자의 참여	SDG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협의회 또는 고위급 행사를 활용한다. 현재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1) SDG 및 PCSD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모든 정당대표가 참여하는 의회위원회의 창설 및 2) 이해관계자의 SDG 실행과 관련된 모범 실무를 장려하기 위하여 논의를 하거나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폭넓은 참여의 장을 제공하는 온라인 상담 플랫폼 등 두 가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국가의 일반정책, 특히 경제 및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사회의 의견 수렴을 책임지고 있는 헌법상 기관인 그리스 경제사회위원회(ESC)는 다양한 계층과 부문에서의 SDG 실행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협의와 대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모니터링 및 보고	GSG는 ELSTAT(통계기관)와 협력하여 국가 수준에서 SDG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가 SDG 실행계획(2019년에 수립될 예정임)의 실행 현황에 대한 진도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하고 정치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스 의회는 SDG 실행의 추적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OECD(2017[27]).

박스 3.5. 정책일관성 지지 측면에서 공공서비스의 문화적 변화 촉진

내각사무처(GSG) 소속의 유럽 및 국제부문 제도조정실은 국립행정학교 및 지방정부(EKDDA)와 협력하여 2017년 11월에 고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SDG의 국내, 유럽 및 정치적 차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3일간의 SDG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GSG 규정개선실은 지속가능개발의 세 차원(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차원)의 규정개선 도구에의 통합의 중요성을 조명하기 위한 세미나를 별도로 개최하였다. 이러한 교육훈련 세미나를 통하여 정부 부처와 지역 및 지방정부의 고위 공무원들은 2030 의제의 비전, 원칙 및 핵심 우선과제를 완전히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세미나는 PCSD 및 SDG에 대한 책임과 공약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부문과 정부 계층의 고위 정책입안자들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출처: OECD(2017[27]).

일본

구체적 실행계획이 뒷받침된 최고위층에서의 부처간 조정은 정책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기반을 제공한다. 정부는 2016년 5월에 SDG 추진본부(박스 3.6)을 설치하였다. 내각 장관 전원으로 구성된 이 새로운 기구는 수상이 주도한다. 동 기구는 SDG 실행에 대한 범 정부적인 접근법을 보장하고 부처간 협력을 조장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한다(Government of Japan, 2017_[28]). SDG 추진본부는 2017년 12월에 1) SDG에 대응하는 사회 5.0의 추진, 2) SDG를 통한 지역활성화 및 3) 여성과 미래 세대의 능력 배양 등 세 가지의 과제에 중점을 둔 *SDG 실행계획 2018*을 채택하였다. 일본은 여러 부문과 관련된 이러한 세 과제를 설정함으로써 동 과제들의 불가분성과 실행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OECD, 2017_[29]). 실행계획에는 또한 *SDG 실행지침*에 따른 8개 우선 분야별로 분류된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정부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실행지침은 SDG 추진을 위한 정책 통합을 지원한다. SDG 추진본부는 2016년 12월에 *SDG 실행지침*을 채택하였다. 지침에는 비전¹, 5개 실행원칙(보편성, 포용성, 참가, 통합, 투명성과 책임성), 8개 우선 분야(국내 및 국제협력을 통해 실행할 140 항목의 구체적 조치 포함) 및 추적조사 과정에 대한 접근법이 명시되어 있다. *지침*은 정부 부처와 정부기관의 계획, 전략 및 정책에 SDG를 반영시키기 위한 틀을 제공한다. 또한 일본 국내외의 현황 분석자료를 토대로 SDG 실행을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하여 모든 정부 부처와 정부기관을 동원하고자 한다(Jap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7_[30]).

장기적인 국가 우선과제를 설정함으로써 정치리더십이 2030 의제 및 SDG를 보다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 수준에서 SDG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면서 1) 모든 사람의 능력 배양, 2) 건강 및 장수 보장, 3) 성장시장 창출, 농촌지역 활성화 및 과학, 기술과 혁신 증진, 4)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이 좋은 토지 이용, 양질의 사회기반시설 구축, 5) 에너지

보존, 신재생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및 건전한 물질순환 사회, 6) 생물다양성, 삼림, 해양을 포함한 환경보호, 7) 평화롭고 안전하며 안정된 사회 구축 및 8) SDG 실행 수단 및 틀(framework) 강화 등 8개 우선 분야를 지정하고 모든 부처가 기여하도록 요청하였다. 이행상황에 대한 추적조사는 2019년에 처음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개발도상국의 SDG 실행 시스템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을 제고(세부목표 17.14)할 계획이다(Jap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7^[30]).

표 3.8. PCSD 확보를 위한 제도적 매커니즘(일본)

구성요소	일본
정치적 약속	2016년에 정부는 최고위층에서의 공약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부처로 구성되고 수상이 주도하는 SDG 추진 본부를 설치하였다. 새로운 국가 전략인 <i>실행 지침</i> 에는 국가적 우선과제와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SDG 추진본부는 2017년 12월에 SDG 실행계획 2018을 채택하였다.
정책 통합	일본 정부와 SDG 추진본부는 경제, 사회 및 환경의 세 가지 차원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인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정된 8개 우선 분야간의 상호작용과 시너지 효과를 촉진한다. <i>SDG 실행지침</i> 은 정부 부처와 정부기관의 계획, 전략 및 정책에 SDG를 반영시키기 위한 틀을 제공한다.
세대간	SDG 추진본부는 장기적인 지원을 보장받는 새로운 정부 기구다.
시간 프레임	
정책 효과	SDG 추진본부는 국내 및 국제 문제를 담당하는 모든 부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SDG 실행을 위한 국내 및 국제적 협력의 정책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조정	SDG 추진본부는 연 2회 회의를 개최하여 SDG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정책 및 구체적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결정한다. 내각의 중심적 위치에 있으므로 관련 정부기관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조성하고 정보 공유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 참여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SDG를 전략과 정책에 반영하도록 장려한다. 본부는 <i>SDG 실행계획 2018</i> 에서 “SDG 추진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일본 SDG 모델의 세 가지 기본방향 중의 하나로 설정한다. 본부는 “지방정부의 SDG 모델” 프로젝트를 창설하여 중앙정부 전체가 선정된 지방정부의 SDG 실행을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다른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해관계자의 참여	본부는 관련 정부기관, NGOs/NPOs, 학계, 민간 부문 및 국제기구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SDG 추진 원탁회의를 통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장려한다. SDG 추진 원탁회의는 SDG의 달성에 대한 실행 검토도 수행한다. 본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단체의 모범 사례를 조명하여 “일본 SDG 대상”을 수여한다. 최초의 시상식은 2017년 12월에 개최되었다. SDG 추진 원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i>실행 지침</i> 의 작성에도 활용되었다.
모니터링 및 보고	SDG 추진본부는 SDG 실행지침에 따라 취해진 조치의 발전상황을 감시한다. 감시 대상에는 특히 지침의 부록에 수록된 140건의 조치내용이 포함된다. 발전상황에 대한 추적조사는 2019년에 처음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일본은 통계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세계적 SDG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많은 핵심성과지표(KPIs)를 채용할 예정이다. 2019 HLPF 종료 후, 총회의장이 조직하는 HLPF의 4년 주기를 감안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출처: OECD(2017[29]), Government of Japan(2017[28]).

박스 3.6. 일본 사회의 SDG 증진

SDG 추진본부는 2030 의제 및 SDG 실행지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책임을 진다. 본부는 SDG 참여에 대한 공공의 이해와 지지를 증진하기 위한 국민운동으로 SDG 관련 조치의 홍보를 위한 의사소통 활동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한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포상과 SDG 로고 및 브랜드 사용 권장을 통해 민간 부문을 포함한 실행 수행주체들간의 모범사례 공유를 장려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지속가능개발 교육(ESD)을 촉진하고 학교, 가정, 직장 및 지역 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의 SDG 관련 학습을 장려한다. 이는 2030년 이후 사회를 이끌어 나갈 아동들에게 지속 가능한 사회와 세상을 창조할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함이다.

SDG 실행계획 2018은 HLPF, G20, 2019 도쿄 아프리카개발 국제회의(TICAD), 2020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 2025 Expo 입찰 등의 국제행사를 SDG와 그 실행에 대한 인식을 보다 더 제고할 수 있는 적절한 계기로 인식하고 있다.

출처: OECD(2017[29]).

리투아니아

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의 일관성에 대한 공약은 보다 통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좋은 기반이 된다. 2011년에 마지막으로 수정된 지속가능개발전략(NSSD)은 국가적 공약과 SDG 및 PCSD 실행을 보장하는 리투아니아의 주된 전략 문건이다. 동 문건은 SDG와 부합하며, 정책일관성에 대한 공약을 주된 실행 원칙으로 강조한다(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ithuania, 2011_[31]). 장기 전략 문건인 *Lithuania 2030*에는 개발 및 행복지수에서 유럽 상위 10위 이내로 진입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가 명시되어 있다(State Progress Council, 2012_[32]). 정부는 현재 감독기구인 국가개발위원회와 동 전략을 개편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최초로 정책 지침과 실행 조치가 명시된 2017-2019 정부간 개발협력 실행계획을 채택하였다. 외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이해관계자 포럼(국가개발협력위원회, NDCC)은 개발협력에 있어서의 PCD를 책임지고 있다. 포럼은 적어도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외무부에 개발협력 정책을 제안한다. 부처간 협력을 통하여 PCSD에 대한 내부 및 외부 공약간의 인터페이스를 강화하고 있다.

제도적 매커니즘을 발전시킴으로써 국가 수준에서의 정책일관성을 위한 조정 체계를 증진하고 통합할 수 있다. 환경부(MoE)는 국가 전략 실행을 조정하고 지속가능개발국가위원회(NCSD)의 사무국 기능을 수행한다. NCSD는 수상이 주재하며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비정부단체, 학계 및 기업의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2016년 8월에 NCSD는 사회적 소외 방지와 빈곤 추방, 건강한 생활양식, 에너지 효율과 기후변화,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질의 교육 및 개발 협력 등 리투아니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여섯 개 분야를 지정하였다. 환경부는 정부간 실무단을 구성하여 리투아니아의 SDG 실행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현재 국가개발위원회와 NCSD를 통합하여 2030 의제 실행을 전담할 통일된 기구를 창설하고 분쟁 발생시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를 포함시키는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편으로 일관된 정책을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다. 리투아니아는 장차 총리실의 역할을 강화하고 NCSD를 환경부보다 상위의 기관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다른 나라에서도 효과적인 조정이 촉진되었다(UNDP, 2017^[33]).

현재의 부서간 협력을 통하여 미래에 정책일관성을 추진하기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MoE를 비롯한 모든 정부 부처는 SDG를 국내 실정에 맞게 개편하기 위하여 17개 SDG와 국가 전략 및 기타 전략문건간의 일관성을 조사하고 평가하였다(OECD, 2017^[34]). 현재 총리실과 환경부(VNR 작성을 위한 조정 책임을 지는)를 포함한 기관간 실무단의 회의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있다. 환경부는 2년에 1회 NSSD의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국가통계청은 지속가능개발 지표의 수집, 편집 및 발간 책임을 지고 있다.

표 3.9. PCSD 확보를 위한 제도적 매커니즘(리투아니아)

구성요소	리투아니아
정치적 약속	2011년 지속가능개발전략(NSSD)는 정책일관성을 주된 실행원칙으로 규정한다(19.6). 수상이 주재하는 지속가능개발국가위원회(NCSD)는 장관 또는 차관급 정치지도자가 참여한다. 리투아니아는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보다 더 활발히 하고 정책일관성을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정책 통합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실행조치를 포괄적 전략문건에 반영하는 것은 국가전략의 일관성과 상호보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원칙이다. 더 나아가, 전략은 지속 가능한 개발 관련 주요 조항을 특별 부문계획, 프로그램,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 계획서 및 기타 법령에 통합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 지속가능개발전략(NSSD)에 제시된 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을 반영하여야 하는 각 부처의 부문별 전략과 계획 문건을 통하여 절충안과 시너지 효과를 파악한다.
세대간 시간 프레임	정부는 주된 장기전략 문건인 국가개발전략 리투아니아 2030 SDG와 관련 원칙을 반영하여 수정할 계획이다. 2050년까지의 새로운 목표를 수립할 계획이다.
정책 효과	균형 잡힌 영향평가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정책 효과를 확인한다. 또한 사전 의사소통은 환경평가절차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경제활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국경을 초월한 효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초기단계에서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통지한다.
조정	수상이 주재하는 NCSD는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비정부단체, 학계 및 기업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지침을 제공하며, 고위 정치지도자로 구성되어 상충되는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치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가지속가능개발전략을 조정을 책임지고 있으며 NCSD의 사무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관간 정보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지방 참여	지역,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는 SDG 실행에 밀접하게 참여하고 있다. PCSD는 고도로 도시화된 지역에서 특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통합적인 국토투자(ITIs)는 5개 주요 도시의 도시계획에 환경적 측면을 반영하도록 보장한다.
이해관계자의	비정부단체, 기업, 학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들이 NCSD를 구성함으로써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유용한 플랫폼을 형성한다. 비정부단체는 정부간 실무단에도

참여	참여하고 있다. 리투아니아의 국가 비정부 개발협력단체 플랫폼(NGDO)은 21개의 개발 및 교육관련 비정부단체를 규합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제고하고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현재 국제 개발협력 활동에 민간 부문이 보다 긴밀하고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모니터링 및 보고	환경부는 NSSD의 실행을 조정하고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각자의 전문 분야의 발전상황을 감시하고 있다. 개발 지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측면이 반영된다. 리투아니아는 자료수집과 분석을 개시하였으며 이미 절반이 넘는 지속가능개발 지표를 공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통계청은 웹사이트인 Official Statistics Portal(OSP)에서 이러한 지표를 수집, 편집 및 발간할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2년에 1회 국가 지속가능개발전략의 이행상황을 정부에 보고하고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부처별 연례 보고서에 지표달성에 관한 정보를 반영시킨다.

출처: OECD(2017[34]),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ithuania(2011[31]).

박스 3.7. 일관된 환경정책을 위한 부처간 협력

통합적인 접근법을 적용함으로써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생태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다. 리투아니아에서는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각 부처의 해당 정책에 환경적 측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부기관이 실행조치에 대한 조정을 수행하고 있다. 각 부처는 상호 협력하여 환경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규범, 기준, 규칙을 제정한다. 최적가용기법(BAT), 효과적인 오염방지 기법의 활용을 촉진하고, 생산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접근법을 고려하여, 교통, 산업, 에너지, 건설, 농업, 주택, 관광, 의료보호 및 기타 부문에 통합적인 접근법을 적용한다. 리투아니아는 물, 공기 및 토양보존과 폐기물 처리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오염방지 및 통제시스템을 실행하였다. 동 시스템은 다음의 3가지의 원칙에 따라 이행된다. 1) BAT를 적용하며, 자연자원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에너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2)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사용, 재활용, 수리 또는 처분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며, 3) 유해 성분의 사용을 줄이고 점진적으로 무해한 성분으로 교체한다. 제안된 경제활동의 환경영향평가에는 실행 전에 환경 및 건강에 대한 영향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법률 No. I-1495, 2016년 4월 최종 개정). 이러한 조치로 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지방, 지역 및 국가 수준에서 포용적이고 대표성이 있는 의사결정을 보장할 수 있다.

출처: OECD(2017[34]).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는 명확한 공약을 기초로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과정에 참여해 왔다. 2018에 수립될 제3차 국가 지속가능개발계획(NPSD)을 추진하기 위한 접근법에서는 2030 의제에 부응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의 세 차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을 지정하고 PCSD를 더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2017^[35]. 정부가 2017년 5월에 채택한 2030 의제 실행에 관한 보고서는 SDG 17.14를 지원할 매커니즘 및 제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동 보고서는 SDG 실행을 위한 범 정부적인 접근법과 모든 가용자원의 동원과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정 및 효율을 증진시킬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Grand-Duchy of Luxembourg, 2017^[36]). 2017년도 국가평가보고서(VNR)에는 SDG 실행에 있어 국내 및 국제적인 정책일관성을 최대화할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다(Grand-Duchy of Luxembourg, 2017^[37]).

부처간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준비를 통해 SDG 이행을 위한 국내 및 국제정책 간의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다. 모든 정부 부처와 기관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지속가능개발 위원회(ICSD)는 국내 지속가능개발 정책의 중심적인 조정기관이다. 2004년에 설치된 ICSD는 SDG 실행을 촉진 및 감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뿐만 아니라 NPSD를 통한 PCSD 확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 예정이다. 개발협력부처간위원회(ICD)는 연간 6회의 회의를 통하여 절충안과 시너지 효과를 확인하고 논의하며 PCD에 관한 임의적 권고사항을 정부에 제시한다. 동 위원회는 2014년에 시민사회와의 협의, 주제 선정, 분석 및 결론 도출과 관련하여 새로운 운영방식을 채택하였다. ICSD의 구성원들은 ICD에도 참여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같다(OECD, 2017^[35]). SDG 실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모순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을 부여하면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OECD, 2017^[38]).

표 3.10. PCSD 확보를 위한 제도적 매커니즘(룩셈부르크)

구성요소	룩셈부르크
정치적 약속	2030 의제의 실행 전략인 제3차 국가 지속가능개발계획(NPSD)을 수립하고 있으며 PCSD를 다룰 예정이다. 2012년부터 개발협력 부처간 위원회(ICD)가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 받고 PCD를 처리하고 있으며, 현행 2013-2018 정부 개발프로그램에 명확한 약속이 제시되어 있다.
정책 통합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지속가능개발위원회(ICSD)를 통하여 국가 지속가능개발계획(NPSD)을 수립하고 있다. ICSD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부문 정책과의 통합을 지원한다. 각 부처는 ICD의 권고사항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한 후속적인 PCD 실행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세대간 시간 프레임	대다수의 정당과 국민은 SDG 실행이 필수불가결하다고 간주하고 있다. 단기 및 장기적 이익간의 트레이드 오프는 정부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유형의 혜택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적 목표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정책 효과	ICD는 국경 및 세대를 초월한 효과를 사전에 파악하여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다. ICD는 파악된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논의하여 정부에 대한 임의적 권고사항을 작성한다. 정부는 정책일관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정책의 국내 및 국경을 초월한 효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지속 가능성 점검 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조정	각 부처의 부서로 구성된 지속가능개발위원회(ICSD)는 국가 지속가능개발계획(PNDD) 및 국가 지속가능개발 실행보고서를 작성한다. 지속가능개발 사회기반시설부의 환경부서는 SDG 실행을 조정하고 ICSD를 주재한다. 개발협력 부처간 위원회(ICD)는 2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하여 PCD를

	포함한 국제 개발협력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ICD는 정보를 공유하며, 정부에 대한 임의적 권고사항을 작성하며, 부처간에 발생할 수도 있는 의견불일치를 중재한다. ICD의 구성원들은 ICSD에도 참여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같다.
지방 참여	PNDD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 수준에서도 실행된다. 룩셈부르크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시장을 겸하고 있어 의회에서 지방의 관심사를 심의할 수 있다. 정기적인 협의과정을 통하여 지방 수준에서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의 참여	룩셈부르크의 상위 비정부단체(Cercle.lu)의 보고서인 공정한 정치 지표의 발간과 이어진 2017년 12월의 의회 심의는 다음 회기의 보다 더 심도 있는 PCD와 SDG 심의를 위한 첫 번째 조치였다. 외교유럽부는 이러한 지지활동을 지원한다. ICD는 개발 및 협력분야에서 활동중인 비정부단체를 토론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심의할 우선과제를 발굴하도록 하고 있다. 지속가능개발에 관한 검토, 논의, 자문/의견 제시를 위한 또 하나의 플랫폼인 지속가능개발 최고회의는 시민사회와 민간 부문의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한다.
감시 및 보고	ICD는 2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록과 연례보고서는 일반대중이 열람할 수 있고 의회에 제출된다. 의회는 또한 ICD의 임의적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공정한 정치 지표 등을 통한 비정부단체의 정책 영향 감시활동을 재정적 및 정치적으로 적극 권장하고 지원한다.

출처: OECD(2017[35]).

박스 3.8. 기후변화대책 재정지원을 위한 조정 노력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일관성과 범 정부적인 접근법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개발 사회기반시설부의 환경부서, 외교유럽부의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국, 재무부를 포함한 다수의 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일관성 향상을 위해 부문별 전문가의 상호교류를 도입하였다. 환경부서는 개발협력부처간위원회(ICD), 룩셈부르크 개발 시행청 및 감사위원회에 참여한다.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국은 지속가능개발위원회(ICSD) 및 기후 및 에너지기금(FCE)에 참여한다.

전략 및 기준에 있어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FCE는 2017년 5월에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국과 협력하여 국제 기후변화 재정지원을 위한 전략과 자격 기준을 채택하였다. ICD 또한 환경 및 기후정책을 위한 일련의 기준을 채택하였다.

수직적 일관성 또한 향상되었다. 룩셈부르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후협약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및 기후정책의 실행 지침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건물, 공공조명시설 및 공영차량 관리에 "에너지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협력과 다양한 수행주체의 참여를 통하여 에너지 및 기후정책 실행 노력이 강화되었다.

출처: OECD(2017[35]).

멕시코

실행 전략이 뒷받침된 정부의 2030 의제에 대한 명확한 공약은 연방,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조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멕시코 대통령은 2016년 제71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멕시코는 2030 의제 실행을 “국가 공약”²으로 지정했음을 확인하였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민간 부문과 학계간의 연대 매커니즘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 국가위원회가 2017년에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의 주요 목적은 “2030 의제 이행을 위한 [...] 정책의 [...] 입안, 실행 및 평가를 위한 행위를 조정하기”³ 위함이다. 대통령실의 조정하에 2030 의제 실행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새로운 전략에는 연방, 지역 및 지방수준에서의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토대로 결정한 국가적 우선과제, 세부목표, 공공정책, 구체적 실행조치와 지표를 명시할 예정이다. 국가주지사회의(CONAGO)는 2030 의제 준수 집행위원회를 설치하였고 현재까지 32개 주 가운데 21개 주가 주 수준에서 2030 의제를 실행하기 위한 지방 협의회를 설치하였다. 같은 취지로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에 관련 실무지침이 반영되었다(Government of Mexico, 2017^[39]). 마지막으로, 상원은 SDG에 대한 법률적 추적조사 실무단을 결성하였다.

최고위층의 지도력은 2030 의제에 대한 공약이 국정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된다. 대통령실은 국가적 실행에 대한 조정을 주도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2030 의제 국가위원회는 명확한 전략적 비전으로 국가계획을 개선하기 위한 매커니즘으로 설치되었다. 2030 의제 실행을 위한 새로운 국가전략에는 미래 국가개발계획(NDP)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 비전이 반영되어 있다.

국가 계획 및 예산편성 과정은 정책 통합과 일관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국가계획법은 현행 및 후속 연방 행정부가 2030 의제의 원칙을 고려하도록 2017년에 개정되었다. 동 법률은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세 차원(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을 통합한다. 마지막으로 개정 계획법은 20년간의 전망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통계지리연구소가 주도하는 SDG 기술특별위원회(CTEODS)는 재무부와 공동으로 SDG 달성 지원을 위한 계획, 재정관리, 정책입안 및 감시를 통합하기 위한 틀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 따라 재무부는 UNDP와 협력하여 전략적 계획, 감시 및 평가를 강화할 목적으로 SDG와 예산 배분을 연계시키는 매커니즘을 만들어냈다(박스 3.9).

표 3.11. PCSD 확보를 위한 제도적 매커니즘(멕시코)

구성요소	멕시코
정치적 약속	멕시코는 2030 의제를 “국가 공약”으로 간주한다. 새로운 2030 의제 국가위원회가 2017년에 설치되었다. 연방정부는 대통령실이 50개 이상의 다양한 연방행정부 부서와 협력하여 개발하고 있는 2030 의제 실행을 위한 국가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로운 전략에는 이해관계자와의 폭넓은 협의와 대화를 통하여 결정된 국가적 우선과제와 세부목표가 명시될 예정이다.
정책 통합	2017년 하반기에 지속가능개발의 세 가지 차원과 2030 의제의 핵심원칙을 국가개발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계획법을 개정하였다. 동 법률은 장차 정부가 취할 조치를 위한 준거의 역할을 할 것이다. 2018 회계연도 계획 및 예산편성지침에 행정부의 승인된 계획을 SDG와 연계시키기 위한 조항을 반영하였다. 멕시코 개발협력청(AMEXCID) 또한 개발협력 프로젝트의 입안과 감시를 조정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연계시키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세대간 시간 프레임	2030 의제 국가위원회의 목적은 6년의 대통령 임기를 초월하는 중장기 전략적 비전을 토대로 계획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2030의제 실행을 위한 새로운 국가전략에는 미래 NDPs 수립에 지침이 될 장기적 비전이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개정된 계획법은 20년간의 전망에 기초하여 6개년 계획에 전략적 비전이 구현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에 입각한 관점을 도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책 효과	각 정부기관은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를 감안하여 정책을 변경할 책임을 진다. 새로운 2030 의제 국가위원회는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조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할 수 있다.
조정	대통령실은 실행과 관련된 조정을 주도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2030 의제 국가위원회는 각 부처 장관 전원으로 구성된다. 동 위원회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민간 부문과 학계간의 연대 매커니즘이다. 국가위원회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실행할 책임을 진다. 상원은 정부의 SDG 실행 노력에 발맞추어 34개 위원회로 구성된 SDG에 대한 법률적 추적조사 실무단을 결성하였다. 2015년에 구성된 SDG 기술특별위원회(CTEODS)는 SDG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정책의 입안과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수집, 통합, 생산, 처리, 조직화, 분석하기 위한 기관간의 공동 활동을 조정한다. CTEODS는 대통령실, 통계지리연구소 및 멕시코 국가 인구위원회가 주도한다. 25개 정부기관이 CTEODS에 참여하고 있다.
지방 참여	2030 의제 국가위원회는 연방,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대화를 장려하고 노력을 조정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기존의 국가주지사회의(CONAGO)는 2030 의제 준수 집행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현재까지 21개 주정부가 지역 및 지방 수준의 SDG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주정부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45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멕시코 지방자치단체 국가회의(INAFED) 또한 지방 수행주체들의 참여를 위한 매커니즘으로 활용된다.
이해관계자의 참여	시민사회, 학계 및 민간 부문은 2030 의제 국가위원회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한다. 또한 SDG 협상과정에서 멕시코의 공식적인 입장을 결정하는데 기여하였다. 대통령실은 몇 개 주에서 300명 이상의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일련의 지역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회도 개최하였다. AMEXCID는 2030 의제를 기반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모델에 SDG를 반영하고 국제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설계할 것인가와 관련한 정보 교환을 위해 지속 가능성(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물, 재정 수용성 등), 기업조직, 기업재단 분야 50개 이상의 선도 기업으로 구성된 대화와 행동을 위한 플랫폼인 “지속 가능성 연맹”을 결성하였다. 시민사회의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사회의 역량 강화 훈련을 통하여 국제 개발협력을 위한 첫째 단계에 착수하였다.
모니터링 및 보고	멕시코는 SDG 달성 발전상황을 측정하고 조사하기 위한 국가 지속가능개발목표 조사 플랫폼을 개발하였다(www.agenda2030.mx). 동 플랫폼은 CTEODS의 소관으로 INEGI가 운영하고 있으며

SDG 정보시스템(SIODS)에 기반을 두고 있다. 동 플랫폼은 국가,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별로 분리된 지역별 자료와 함께 자료 시각화 도구를 제공한다. 멕시코 SDG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또 다른 웹사이트(www.gob.mx/agenda2030)도 개설하였다.

출처: OECD(2017[40]).

박스 3.9. 멕시코의 SDG 실행을 위한 예산조정

대통령실, 통계지리연구소 및 재무부는 유엔개발계획의 지원 하에 SDG와 멕시코의 예산을 연계시키는 매커니즘을 정의하고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 목적은 결과기반의 관리 관점에서 SDG 실행에 기여할 특정 예산항목의 적합한 배분액을 추산하기 위함이었다.

멕시코는 현재의 예산과 SDG간의 간접적인 연관성을 감안하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구조의 핵심 구성요소인 1) 국가계획, 2) 예산계획에 기초한 프로그램구조, 3) 성과평가 시스템 및 4) 회계조정을 활용하였다.

- 1) 연결: 각 부처는 각자의 계획을 SDG에 일치시키기 위해 성과평가 시스템과 국가계획을 적용하였다.
- 2) 계량화: 세부 목표별 투자금액과 전체 투자금액을 추산하기 위해 SDG 세부목표 달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계획을 파악하였다. 102개의 SDG 세부목표를 다양한 주제(하부 목표)에 따라 보다 더 세분하여 특정 계획과 연결된 세부목표를 더 정확하게 표시하였다.

상기 절차를 수행한 결과, 멕시코는 다음 사항에 필요한 정보를 개선하였다.

- 현재의 국가계획(중기)과 장기 SDG간의 관련성 파악
- 정부계획과 연계된 SDG의 비율 및 각 SDG와 연계된 정부계획의 건수 측정
- 출발점과 달성한 성과의 공유
- 각 SDG에 현재 투자된 금액의 초기 분석에 기초한 공공정책 결정과 예산배분

출처: Mexican Ministry of Finance(2017[41]).

네덜란드

국외에서의 일관된 개발정책에 대한 노력과 이행 경험으로부터 국내 정책에 PCSD 렌즈를 적용하기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둔 2017-2021 네덜란드 연정합의서인 “미래에 대한 확신”은 본질적으로 SDG와 밀접하게 연계된 정책과 실행조치들을 제안하고 있다. 동 합의서는 또한 내부 및 외부적인 일관성을 강조한다. 국제적인 공약과 관련하여 국제무역과 개발협력에 관한 정책노트는 명백하게 SDG를 지도 틀로 받아들인다(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2017_[42]). 2016년부터 개시되는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에 관한 국가 실행계획에는 국제무역협정, 의료제공, 조세회피, 지속 가능한 가치사슬, 송금거래비용, 기후변화, 투자보호 및 식량안전의 8개 우선 분야에 중점을 둔 SDG와 연계된 목표들이 포함되어 있다(OECD, 2017_[43]). 이러한 문제 기반의 접근법은 시너지 효과 및 상충점 파악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모니터링하는데 유용하다(Dutc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7_[44]). 2030 의제의 채택으로 반복되는 과제를 포함한 정책일관성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났다(Kingdom of the Netherlands, 2017_[45]). 이를 위하여 네덜란드는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에 참여하고 공동으로 논문 발간 자금을 지원하였다(Dutc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7_[44]).⁴

장관협의회는 정책일관성을 보장하며 국제무역개발협력부는 SDG 실행의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네덜란드 정부의 집행위원회로서 장관협의회는 법률과 정책의 입안을 주도하며 국경과 세대를 초월한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의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차원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법을 실행하는 위치에 있다. 수상과 부수상이 주도하며, 매주 회의를 개최하여 제안된 결정사항을 논의한다(OECD, 2017_[46]). 특히 원조, 무역 및 외교분야의 유효성과 정책일관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제기후변화부 장관과 국제무역개발협력부 장관에게 여러 부문에 걸친 권한을 명확하게 부여하였다(OECD, 2017_[43]). 기존 소관업무에 따라 SDG 실행 책임을 각 부처에 부여함으로써 견고한 추진 발판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책제안을 명확하게 조정하고 평가하여 충돌이나 중복을 방지하여야 한다(Netherlands Court of Audit, 2017_[47]).

범 사회적인 참여와 전문지식을 통해 효과적인 모니터링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 네덜란드 통계청(CBS)은 *SDG의 측정: 네덜란드의 초기 상황*에 SDG 감시를 위한 수행주체와 자료 출처를 명시하였다(Statistics Netherlands, 2017_[48]). 2018년 3월에 발간된 2차 보고서에서는 SDG 17.14를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Statistics Netherlands, 2017_[49]). SDG 실행 및 정책일관성에 관한 두 건의 연례보고서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SDG 실행에 협력하고자 하는 기업, 비정부단체, 연구기관 및 독지가들은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인 SDG Charter와 SDG Gateway를 통해 소통한다. 또한 네덜란드의 2017년 VNR에 기술된 바와 같이 수많은 지방자치 단체가 온라인을 통해 지방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표 3.12. PCSD 확보를 위한 제도적 매커니즘(네덜란드)

구성요소	네덜란드
정치적 약속	네덜란드는 2016년에 SDG와 연계되고 일정이 명시되었으며 목표와 실행조치가 포함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에 관한 실행계획을 채택하였는데 이것은 무역협정, 탈세/절세, 투자보호, 기후변화, 송금비용, 지속 가능한 가치사슬(기업윤리강령 포함), 의료제공 및 식량안전에 중점을 둔 것이다.
정책 통합	장관은 해당 정책분야의 SDG 실행 책임을 진다. 각 부처에는 SDG 실행 담당자가 있다. 여러 부문에 걸친 권한을 명확하게 부여 받은 경제기후변화부 장관과 국제무역개발협력부 장관이 여러 정책영역에 걸쳐 일관성 확보를 지원한다.
세대간 시간 프레임	VNR는 기 합의된 정책과 배분결정은 새로운 연정합의서를 체결할 경우 다시 고려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정책 효과	정부의 미래계획에는 일반적으로 추세분석이 포함된다.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국경을 초월한 효과는 8개 우선과제를 SDG와 연계시킨 2016년 네덜란드 PCD 실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필요 시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
조정	국제무역개발협력부 장관은 각 부처의 SDG 실행을 감독하며 특별 SDG 조정관이 이를 지원한다. 조정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가 포함된 각 부처의 SDG 담당자로 구성된 부처간 실무단의 정기 회의를 주재하고 SDG 실행의 발전상황을 논의한다. 중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위급 정책직위(국장급)에서 처리하며 장관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장관협의회에서는 다양한 부처별 정책 영역간의 절충안을 논의하며 필요 시 표결에 부친다. 또한 2015년부터 국제협력실 국제협력국의 PCD 담당자가 주도하는 주제별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이 국제정책의 일관성 문제를 조정한다. 동 그룹은 의제를 설정하고, 목적을 제안하며, 각 부처간의 논의를 지도한다. SDG 조정관의 범위에는 공동 및 차별화된 방식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이해관계자도 포함된다.
지방 참여	네덜란드의 지방기관(국제 VNG: 네덜란드 지방자치단체협회의 국제협력기관)의 대표자는 SDG 담당자로 구성된 부처간 실무단 회의에 참석한다. 분권화된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주 및 수도국)은 최초의 의회 제출 SDG 보고서의 해당 부분을 작성하였다. 향후에는 전체 388개 지방자치단체의 SDG 실행에 관한 통계보고서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해관계자의 참여	외무부는 협력을 통해 SDG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130개 이상의 네덜란드 기업, 비정부단체, 연구기관 및 독지가들이 활용하는 이해관계자 플랫폼인 SDG Charter를 구축하였다. 최근 개설된 SDG Gateway는 다양한 부문에 걸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모니터링 및 보고	의회에 제출하는(결산보고일 이전) SDG 연례보고서와 PCD 연례보고서는 보고 매커니즘의 역할을 한다. 네덜란드 통계청은 2016년 11월에 네덜란드의 기준 시점을 설정하였다. 2018년 3월에 보다 더 폭넓은 자료에 기반한 2차 측정자료를 발간하였으며 유럽국가간 비교내역과 현재까지의 발전상황에 대한 개요도 제공하였다. SDG, 진행중인 사업 및 적극적인 기여방안 등에 대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sdgnederland.nl 에 게재되어 있다.

출처: OECD(2017[46]).

박스 3.10. 일관된 정책 평가를 위한 제안: SDG 시험

국제무역개발부 장관은 의회의 요청에 따라 정부 부서간에 “SDG 시험”(또는 “확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부처와 협력하여 이러한 수단을 활용하면 새로운 정책의 SDG 부합여부를 사전에 평가할 수 있어 정책일관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한 시험의 장단점은 이미 정책서한을 통해 2017년 9월에 의회에 통지하였다. 국제무역개발부는 검토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였다(국제무역 및 개발협력 예산 심의 - 2017년 11월23일).

출처: OECD(2017_[46]).

폴란드

국가전략 및 다년도 개발협력계획은 일관된 SDG 실행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제공한다. 장관협의회가 2017년 2월에 채택한 책임 있는 개발전략(SRD)은 2030 의제 실행을 지원한다. 동 전략에는 2030년까지의 폴란드의 경제적, 사회적 및 공간적 개발을 위한 새로운 모델의 원칙, 우선순위, 목적 및 실행수단이 명시되어 있다(OECD, 2017_[50]). 동 전략은 또한 각 공공기관의 역할과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방안이 정의된 조직적이고 통합적인 실행을 위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SRD에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프로젝트 접근법에 의해 실행된다. 제2차 다년도 개발협력계획 2016-2020 에서는 정책일관성을 개발협력의 원칙으로 반영하여 SDG 실행 지원 및 세계적 목표와의 일관성 보장과 명확하게 연계시키고 있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5_[51]). 폴란드는 정책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우선 분야로 1) 불법적인 자금 흐름, 구체적으로 탈세/절세 및 돈세탁 방지와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강령과 관련된 기준과 원칙 수립을 지정하였다. 두 우선과제는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연간 실행계획에 따라 실행하고 있다(OECD, 2017_[52])(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6_[53]).

다양한 부처간 매커니즘간의 효과적인 인터페이스는 국내 및 국제적인 일관된 실행 확보를 지원한다. 기업기술부는 국가적 SDG 실행을 조정한다. 외무부(MFA)는 PCD를 위한 기존의 두 가지 우선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에 중점을 둔 국내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각 부처의 담당자는 PCD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각 부처는 SDG와 부문 정책간의 일관성을 유지할 책임을 진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5_[51]). 몇 개의 제도적 기구에서 PCD 관련 과제를 논의한다. 개발협력계획위원회는 PCD 우선 분야에 관한 연간 실행계획을 정의하고 논의한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5_[51]). 장관협의회 경제위원회(ECCM)와 개발정책 조정위원회(CCDP)는 정보교환과 상이한 입장간의 합의 도출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2030 의제와 SRD를 결합하기 위하여 CCDP 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학계 및 사회경제 공동체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특별 태스크포스를 설치하였다. 외무부는 동 태스크포스에 참여하여 회의에서 PCD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도록 지도한다(OECD, 2017_[50]).

규제영향평가는 국내정책의 국경을 초월한 영향을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폴란드는 규제영향평가지침을 수정하였는데 이것은 우선 고려대상 국가의 사회경제적 개발에 폴란드 국내 규정이 미치는 국경을 초월한 영향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OECD, 2017_[52]). 이는 장래의 정책과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 PCSD 감시를 위한 중요한 조치다. 투자경제개발부 장관은 매년 SRD 이행 상황을 보고한다. 보고서는 의견수렴을 위해 CCDP에 제출되고, 장관협의회가 실행을 감독하고 모니터링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폴란드는 PCD를 위한 부처별 조치보고서와 연간 실행계획 이행보고서를 개발협력계획위원회, OECD 및 EC에 제출한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5_[51]).

표 3.13. PCSD 확보를 위한 제도적 매커니즘(폴란드)

구성요소	폴란드
정치적 약속	2017년 2월에 채택된 책임 있는 개발전략(SRD)은 SDG 달성을 위한 폴란드의 현행 틀이다.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원칙은 다년도 개발협력계획 2016-2020에 반영되었으며 장관협의회는 이를 채택하였다.
정책 통합	정부 행정기관(각 부처)은 부문 정책이 SDG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세계적 개발에 기여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진다.
세대간 시간 프레임	2017년 SRD는 2030년까지의 전망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8년에 장기 국가개발구상을 수립할 계획이다. 다년도 예산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장관협의회 경제위원회(ECCM)는 장기적 지속가능목표와 모순되는 즉흥적인 정치적 결정을 방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책 효과	폴란드는 사전 환경영향평가, SRD 준수 평가 및 개발협력 우선 고려대상 국가들에 대한 폴란드 국내정책의 영향 평가를 포함한 정책 효과 평가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RIAs 지침에는 국내규정이 폴란드의 우선 고려대상 국가의 사회경제적 개발에 미치는 국경을 초월한 영향에 대한 고려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조정	투자경제개발부는 SRD 실행을 조정하고, 기업기술부는 국내의 SDG 실행을 조정한다. 외무부는 개발협력을 조정하고 개발도상국에 중점을 두면서(지정된 우선분야 내에서) 국내정책과 SDG간의 일관성을 보장한다. 국무차관 중에서 임명된 국제 개발협력을 위한 국가 조정관은 외무부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양한 부처(투자경제개발부 및 기업기술부 포함), 의회, 비정부단체, 고용주단체 및 학계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개발협력계획위원회(DCPB)를 주도한다. DCPB는 개발협력 우선과제를 정의하고 논의하며, 이해관계 충돌과 불일치를 해결한다. 장관협의회 경제위원회(ECCM)와 개발정책 조정위원회(CCDP)는 정보교환과 상이한 입장간의 합의 도출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CCDP 내에는 외무부를 포함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학계 및 사회경제 분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설치되어 있다. 각 부처의 PCD 담당자는 PCD에 대한 내부 조정 책임을 진다.
지방 참여	개발프로젝트(SRD 및 기타 전략의) 계획은 지방정부, 사회경제분야 파트너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공동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포럼인 중앙 및 지방자치정부 연합위원회(KWRiST)와의 협의를 통하여 수립한다. SRD와 2030 의제의 통합(CCDP에서의)을 위한 태스크포스는 그 중에서도 지방정부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해관계자의 참여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는 중앙정부 수준의 사회적 대화협의회와 지역 사회적 대화협의회와 같은 포럼을 통해 이루어진다. 3자 산업팀(정부, 고용주 및 노동조합을 대표하는)은 동 포럼에 참여하여 특정 부문/산업의 운영과 관련된 상이한 이해관계를 논의하고 조정한다. 협의회는 또한 지역 SRD 시범 프로젝트의 실행과 감시도 지원한다.
모니터링 및	투자경제개발부는 매년 SRD 이행 발전상황을 보고하며 CCDP 및 장관협의회에 보고서를

보고 제출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각 우선 분야 조정관은 PCD 우선과제의 실행을 감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개발협력계획위원회에 제출한다. PCD 우선 분야 실행을 위한 새로운 연간 실행계획에는 SDG 실행을 강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반영한다.

출처: OECD(2017[52]), Ministry of Foreign Affairs(2015[51]).

박스 3.11. 통합 해결책을 통한 지역개발 지원

폴란드 정부는 투자경제개발부 주관으로 책임 있는 개발전략(SRD)의 전략계획의 일환으로 실레지아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다른 부처(즉 에너지부), 카토비체 사회적 대화 기관장협의회(VCSO) 등의 이해관계자 및 실레지아의 파트너들과의 협의를 거치는 조건으로 장관협의회가 2018년 2월14일 채택하였다. 동 문건에서 가장 중요한 개발프로젝트의 목표와 활동의 개발 및 확인을 위한 출발점은 2016년에 VCSO 위원들이 서명한 “실레지아 주의 통합개발정책에 관한 협정”이었다.

SRD에서 실레지아는 적응과 구조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가 수준에서 개입해야 할 핵심 지역의 하나로 인정되었다. 실레지아는 폴란드의 가장 번창한 경제지역이었으나 최근에는 성장 둔화와 주민의 생활수준 하락을 겪고 있다. 정부의 실레지아 프로그램에는 일련의 통합적인 투자 및 온건한 운영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역 정부정책에서 국내 및 유럽의 프로그램과 제도의 자금원천 모두를 활용하는 최초의 프로그램이다. 동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지역의 경제적 프로파일을 변경하여 광업과 금속가공 같은 지역의 전통적인 경제부문을 더 생산성이 높고, 포용적이고, 혁신적이며 기술적으로 진보된 부문의 새로운 벤처사업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출처:(OECD, 2017[52]).

포르투갈

기존 법률을 기반으로 SDG 실행을 위한 정책일관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 2030 의제는 정부의 최고위층에서 정책일관성을 고려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확보를 위한 기존의 법률과 매커니즘에 정착된 정치적 약속은 2030 의제에 따라 제정된 새로운 정부간 지침에서 재확인되고 있다. 2010년부터 장관협의회 결의안 82/2010은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정책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틀을 제공하고, 포르투갈 협력전략계획 2014-2020은 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일관성을 추진해왔다. 2015년에 2030 의제를 채택함에 따라 장관협의회는 SDG 실행의 국내와 국제적 차원을 긴밀하게 조정할 필요성을 고려한 정부간 지침을 2016년에 채택하였다. 동 지침은

포르투갈의 2017년 국가평가보고서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한 PCSD를 보다 더 발전시킬 것이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Portugal, 2017_[54]).

SDG 실행의 내부 및 외부적 차원을 더 잘 조정하고 정책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적 매커니즘을 수정하고 있다. 외무부는 2016년 채택된 정부간 지침에 따라 기획 및 사회기반 시설부와 공동으로 SDG의 전반적인 실행을 조정한다. 두 개의 지원기관인 부처간 외교정책위원회(ICPF)와 부처간 협력정책위원회(CIC)가 내부 및 외부 차원의 조정을 각각 책임진다. 협력 및 언어연구소(Camões I.P.)가 주도하는 다양한 정부 부서 담당자 네트워크는 정책적 함의에 관한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 정책일관성 문제를 정책분야별 주요한 부분으로 포함시키며, 상이한 정책목적 간의 잠재적인 시너지 효과와 상충관계를 확인한다.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향상을 위한 국가계획과 더불어 PCSD 우선과제를 설정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부문간 협력과 통합이 보다 더 강화될 것이다(OECD, 2017_[55]).

국가통계연구소(포르투갈 통계청)는 적합한 자료 출처를 확인하고 모니터링 및 보고의 다양한 단계에 걸쳐 일관성 증진을 지원한다. 포르투갈 통계청은 각 부처의 통계부서와 국가 수준에서 SDG 실행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D) 및 Eurostat와 공동으로 지역 및 세계적 SDG 계획을 모니터링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포르투갈에서의 SDG 감시를 위해 사용 가능한 지표와 자료출처에 대한 국내 및 세계적인 매핑 처리가 가능했다. 기존의 모든 정보는 일반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확인된 지표를 개관할 수 있도록 포르투갈 통계청 웹사이트의 단일 SDG 플랫폼에 게재되어 있다(OECD, 2017_[55]).

표 3.14. PCSD 확보를 위한 제도적 매커니즘(포르투갈)

구성요소	포르투갈
정치적 약속	장관협의회 결의안 82/2010은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에 대한 법률적 틀을 제공한다. PCD를 위한 매커니즘은 2010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동 법률적 틀은 개발도상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내정책간의 일관성 확보 필요성을 인정한다. 포르투갈 협력전략계획 2014-2020 또한 PCD에 대한 정치적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 PCSD의 중요성은 포르투갈의 2017년 국가평가보고서(VNR)에서 확인되었다.
정책 통합	정부의 전반적인 입법절차는 장관협의회 결의안과 국무장관 결의안의 각 부처 회람을 통해 정책 통합에 기여한다. 협력 및 언어연구소(Camões I.P.)는 정책 의도, 시너지 효과 및 절충안과 관련된 정보 공유와 부처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각 부처 담당자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주도한다. 통합적인 정책분석을 강화하기 위하여 PCSD 우선과제를 설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세대간 시간 프레임	SDG에 대한 정치적 약속은 공공이 감시하고 지지하며 장기로서 선거 주기를 초월한다. 포르투갈의 개발협력 차원에서 제후국가의 구조적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적인 지리적 공약은 보호된다.
정책 효과	Camões I.P.는 잠재적인 부정적 효과의 징후를 알릴 책임을 진다. 이는 기존 대화 및 조정 매커니즘을 활용하여 문제의 정책을 관장하는 부처의 시정조치를 장려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위에 언급한 PCSD 우선과제 설정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도 부정적 영향의 확인을 촉진할 수 있다.
조정	외무부는 기획 및 사회기반시설부와 공동으로 2016년에 채택된 2030 의제의 실행을 위한 정부간 지침의 조정 및 제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부처간 외교정책위원회(ICPF)는 국내 실행에 대한 조정 책임을 지고, 명확한 PCD 권한을 위임 받은 부처간 협력정책위원회(CIC)가

	개발협력정책의 외부적 차원의 조정 책임을 진다. 또한 각 SDG를 그 실행, 감시 및 검토 책임을 지고 있는 조정 부처에 할당하였다.
지방 참여	포르투갈의 2017년 VNR은 지방정부가 관할지역내에서 지방자치체에 따른 다양한 계획을 통하여 2030 의제를 실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지방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수행주체와의 혁신적인 제휴관계 확립을 우선과제의 하나로 설정하였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Portugal, 2017 ^[1]).
이해관계자의 참여	2017년 VNR의 작성은 2016년에 개최된 2030 의제 실행에 관한 공개협의회에 힘입은 바가 크다. Camões I.P.와 유엔 서유럽 지역정보센터의 지원 하에 몇 개의 비정부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한 협의회는 정기적인 "비공식 보고서" 작성을 목적으로 2030 의제의 조작성, 평가 및 감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다중 이해관계자 워크숍과 세미나, 더 많은 시민을 접촉하기 위한 온라인 조사도 수 차례 시행되었다.
모니터링 및 보고	국가통계연구소(포르투갈 통계청)는 공식통계를 생산하고 분석하는 중앙기관이다. 이를 토대로 다른 부처의 통계부서와 2030 의제의 실행에 참여하는 다른 정부기관을 긴밀하게 조정한다. 포르투갈 통계청의 웹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SDG 파일을 검색하여 SDG 지표를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출처: OECD(2017[55]).

슬로바키아

정책일관성은 2017년 7월에 채택된 슬로바키아 2030 의제 실행 전략의 지도원칙 중의 하나다. 슬로바키아는 현재 SDG 달성을 위하여 제한된 수의 국가적 우선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는 모든 관련 부처가 참여하여 장기적 우선과제와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 PCSD는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며 SDG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매커니즘이다. 정부는 이행조치가 수평적, 수직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조정 매커니즘은 정책일관성 지도 원칙의 운영을 지원한다. 투자 및 정보화를 위한 부총리실(DPMO)은 국가 수준에서의 2030 의제 실행 책임을 진다. DPMO는 정치 지도자들을 참여시키고 2030 의제 정부위원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부 정책을 조정한다. 이러한 매커니즘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장기적인 국가 우선과제 설정과정에서의 의견 불일치를 중재하며, SDG 실행과 관련된 국내 및 국제적 목적을 고려한다. DPMO는 2018년 중반까지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국가 우선과제의 최종안을 제시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외교유럽부는 2030 의제의 외부적 차원에 대한 책임을 지며 DPMO와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

표 3.15. PCSD 확보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슬로바키아)

구성요소	슬로바키아
정치적 약속	정책일관성은 2017년 7월에 채택된 슬로바키아 2030 의제 실행 전략의 지도원칙 중의 하나다. 국가 우선과제는 2018년 중반까지 제시될 예정이다.
정책 통합	투자 및 정보화를 위한 부총리실(DPMO)의 대표자들이 실무단에서 국가 전략문건을 작성하고 있다.

세대간 시간 프레임	제안된 2030 의제 모니터링 기준은 선거주기를 초월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조정기관(DPMO)이 의무적으로 반년에 한 번씩 장기적 우선과제의 진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각 선거주기 말에는 전 정부의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정책 효과	국내정책의 다른 국가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와 해결방법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조정	DPMO는 SDG 의제의 일부분으로서의 PCSD를 책임지고 있다. DPMO는 주요 이해관계자(고용주 협회, 학계, 비정부단체)를 포함하는 2030 의제 정부위원회를 통해 정치 지도자들을 참여시킨다. 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 정부정책간의 조정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PMO는 사안별로 개최되는 2030 의제 및 국가투자계획 실무단 회의를 통해 전문가 수준에서의 부처간 활동을 지원한다.
지방 참여	장기적인 국가 우선과제의 설정 과정은 지역개발 전략의 수립과 병행하여 진행된다.
이해관계자의 참여	슬로바키아는 계속 진행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우선과제 설정과정에서 공약의 지속성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자 한다. 여기에는 학계, 비정부단체, 민간 부문, 고용주 협회, 도시협회 등이 포함된다. 현재 이해관계자들은 상설 이해관계자 참여과정을 통해 참여하고 있다.
모니터링 및 보고	DPMO는 장기적 우선과제에 대한 진도평가를 반년마다 한 번씩 실시할 예정이다.

출처: OECD(2017[56]).

슬로베니아

SDG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개발전략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확보의 기반을 조성한다. 2017년 12월에 정부가 채택한 *슬로베니아 개발전략 2030*은 슬로베니아의 비전에 기반을 두고 SDG를 통합시키고 있다. 동 전략은 모두에게 양호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목적을 설정하고 모두를 위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도로 생산적인 경제, 회복력 좋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책임 있는 사회, 잘 보존된 자연환경, 협조에 의해 운영되는 효율적이고 충분한 거버넌스, 삶을 위한 학습과 삶을 통한 학습의 다섯 가지 전략적 방침과 각 SDG에 연계된 12개의 상호 관련된 국가적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전략은 상호연관성과 여러 부문에 관련된 요소를 고려하고 국가 수준에서 정책을 통합할 필요성을 조명하고 있다. 전략은 또한 수평적이고 다양한 계층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매커니즘의 확립 필요성을 강조한다. 실행은 4개년 국가개발정책계획(NDPP), 중기 재정전략 및 그에 상응하는 수평적, 부문별, 지역별 및 지방자치단체별 전략, 계획 및 운영수단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lovenia, 2017_[57]).

새로운 제도적 매커니즘은 조정,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정책일관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초, 정부는 통합적인 접근법을 촉진하고 정책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정책에 관한 부처간 상설 실무단(IMWG)을 구성하였다. 실무단은 개발 및 유럽통합정책실이 관장하며 개발 정책 및 2030 의제 담당자 역할을 수행하는 각 부서당 2명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국가통계청과 거시경제 분석 및 개발연구소의 대표자들 또한 IMWG의 구성원이 된다(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lovenia, 2017_[58]). 실무단은 *슬로베니아 개발전략 2030*

및 VNR 작성을 위한 수평적 협력 확보 매커니즘으로 운영된다. IMWG에 정책 중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정책일관성 확보 노력이 증진될 수 있다(OECD, 2017^[59]). 정부는 슬로베니아 개발전략 2030의 실행을 감독하기 위해 특별 자문기구인 개발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 시민사회, 지역과 지방 공동체 및 정부 대표자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위원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실행격차를 주시하고 감사대상 결정을 위한 핵심적인 기준으로 삼아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분야를 지적한다(OECD, 2017^[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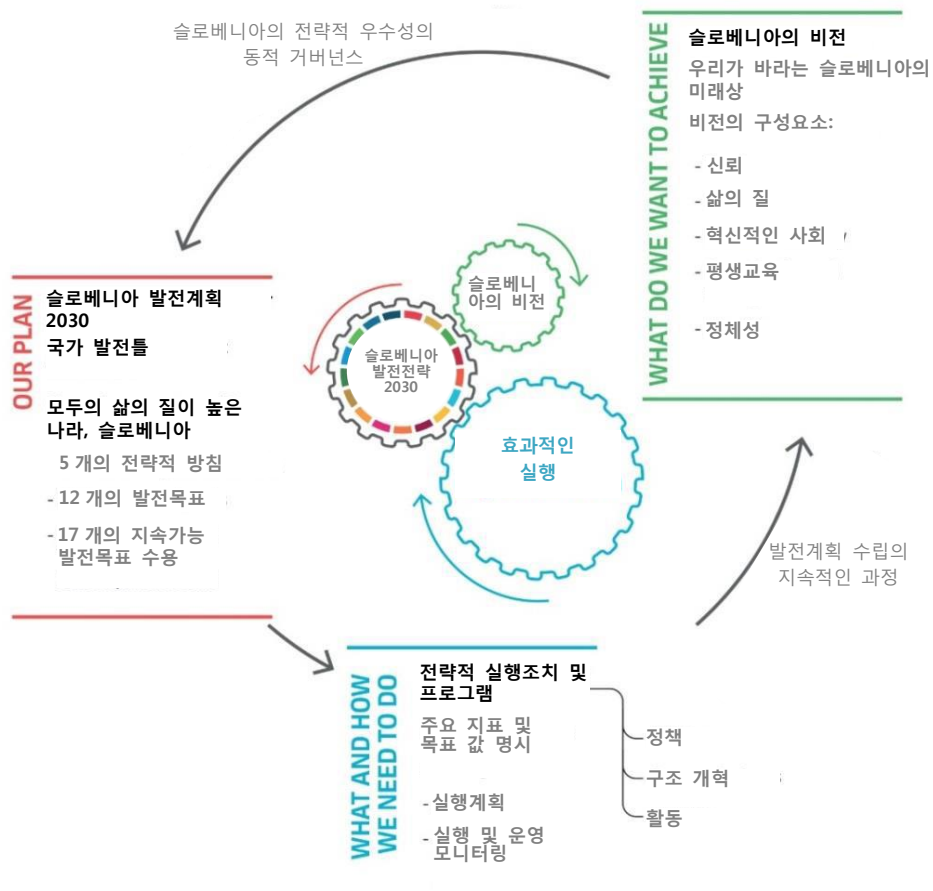
표 3.16. PCSD 확보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슬로베니아)

구성요소	슬로베니아
정치적 약속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보다 일관성 있고 집중적인 정책 계획에 대한 공약은 2017년 12월에 채택된 새로운 슬로베니아 개발전략 2030에 표명되어 있다. 더 나아가 슬로베니아는 슬로베니아 비전 2050에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명시하였다. 지속가능개발계획(실행계획의 수립을 통한 슬로베니아 개발전략 2030의 실행)과 예산주기를 통합시키기 위해 공공재정법을 개정하였다.
정책 통합	정책의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차원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한 정책을 제안하고 국제적 참여와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부문,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은 슬로베니아 개발전략 2030을 지원한다. 중기 재정전략은 예산편성 과정을 통하여 통합적인 실행을 지원한다.
세대간 시간 프레임	슬로베니아 비전 2050 및 슬로베니아 개발전략 2030은 현 정부의 임기를 초월하는 목적들로 구성된 2030 의제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접근법에 의해 수립되었다. 개발정책에 관한 부처간 실무단은 상설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정책 효과	정책 효과는 경제적 가치 평가와 마찬가지로 환경 및 규제 영향평가의 일부분으로 간주된다. 실행과 관련된 잠재적인 부정적 효과에 관한 정보를 반영하여 정책을 조정하는 매커니즘을 개발하고 있다.
조정	개발 및 유럽통합정책실은 슬로베니아의 2030 의제의 실행, 조정 및 모니터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개발정책에 관한 부처간 상설 실무단은 정책실을 지원하며 월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정보 공유와 정책 갈등 해소를 통해 정책일관성을 촉진한다. 실무단은 2030 의제를 위한 개발 정책 담당자 역할을 수행하는 각 부서당 2명의 대표자로 구성되며 국가통계청과 거시경제 분석 및 개발연구소의 대표자도 참여한다. 정책실은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며 EU 문건의 실행을 관리한다. 이러한 조정 매커니즘의 목적은 외무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SDG 실행과 관련된 국내 및 국제적 목표 모두를 고려하는 것이다.
지방 참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중앙조직은 슬로베니아 비전 2050 및 슬로베니아 개발전략 2030의 수립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이해관계자와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개발위원회의 일원이 된다. 지방 수행주체들은 행사와 회의를 공동으로 준비하면서 회의/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의 참여	새로운 국가개발전략에 의거 정부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규합하고 부처간 실무단에 대한 자문위원회,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을 위한 포럼 및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할 개발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및 보고	개발위원회는 2030 의제의 실행을 감시하고 연례보고서를 발간할 책임을 진다. 슬로베니아 개발전략 2030은 각 SDG에 대응하는 다섯 개 전략적 방침과 12개 개발목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최초의 평가지표를 제공한다. 최고 감사기관(SAI)는 국가적 감시와 실행 노력을 지원한다.

감사원은 감사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실행 격차를 확인하고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분야를 지적한다. 보고서는 과거에 발생한 문제 해결에도 중요하나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제시한다.

출처: OECD(2017[60]),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lovenia(2018[61]).

도표 3.4. 슬로베니아의 개발계획 모델



출처: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lovenia(2017[57]).

스페인

새로운 고위급 부처간 매커니즘은 SDG의 국내 정책의제에 대한 적합성을 증진시키고 정부의 역량을 동원하는데 도움이 된다. 2017년 9월에 SDG 실행을 조정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경제경제위원회 산하에 2030 의제 고위급 실무단(HLG)이 구성되었다. 외무부 장관이 HLG의 의장이 되며, 농어업식품환경부 장관과 공공건설부 장관이 부의장으로 활동한다. HLG는 수상실의 경제국장, 국제협력 및 이베로-아메리카 차관, 국토관리 차관 및

국가통계연구소를 포함한 각 부처의 국장급 대표자로 구성된다. 민간 부문, 시민사회단체, 의회, 학계 및 전문가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HLG의 주요 기능은 SDG 및 세부목표의 국가 공공정책 틀로의 통합을 촉진하고 다양한 부문 정책과 입법계획간의 일관성을 조정하고 보장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을 촉진하고, UNHLPF에 제출하는 국가평가보고서를 작성하며, 국제 포럼에서 2030 의제 및 SDG에 대한 스페인의 입장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것이다(BOE, 2017_[62]).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을 추구해 온 오래 전통은 2030 의제에 적합한 정책일관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스페인은 PCD에 대한 공약을 법적 틀에 반영한 얼마 안 되는 국가들 중의 하나다(OECD, 2013_[63]).⁵ 스페인은 또한 PCD의 세 요소인 법적 근거가 뒷받침된 정치적 약속, PCD 향상을 위한 구체적 권한이 부여된 조정 매커니즘(PCD 전담부서, 담당자 네트워크, 지역간 협력위원회, 부처간 협력 및 개발협력위원회 포함) 및 의회와 일반대중에 대한 격년 보고 의무를 구비하고 있다(OECD, 2016_[64]). 스페인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PCD에서 PCSD로 이행하고 있다. 새로 구성된 2030 의제 HLG는 그 주요 기능 중의 하나로 부문 정책과 입법계획간의 일관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행정 단위의 기존 협의기구는 SDG 실행을 위한 수직적 일관성 확보에 필수 불가결하다. 정부에는 2030 의제의 실행을 다루고 일관성 제고에 기여하는 협의기구가 다양한 행정 단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대표회의는 행정권의 최고위층에서 운영된다(지역대표는 소관 권한과 지역 면에서 국가의 수상에 버금가는 역할을 한다). 이 회의체는 중앙정부와 지역의 대표간 대화를 위한 포럼을 제공한다.
- 장관급의 부문별 회의. 이 기구는 지역 수준에서도 동일하게 운영되며 도시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 지역협의회로 칭하는 지역기구로서 소도시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를 최적화하기 위해 지역과 지방자치단체의 중간 단계에서 운영된다.
- 지방의회의 상원으로 지방의회에 의해 임명된 상원의원으로 구성된다. 동 의회는 스페인의 법률을 최종 승인한다. 상원은 2017년에 SDG 및 국가,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함축성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연구회를 구성하였다.

표 3.17. PCSD 확보를 위한 제도적 매커니즘(스페인)

구성요소	스페인
정치적 약속	스페인은 2030 의제 실행과 정책일관성 향상에 적극 참여해왔다. 스페인은 폭넓은 협의를 바탕으로 2015년 국제회의에서의 국가적 입장을 결정하였다. SDG 실행에 있어서의 정책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급 부처간 실무단을 구성하여 최초의 국가평가보고서 작성, 실행계획 및 새로운 지속가능개발국가전략(NSDS)의 수립 임무를 부여하였다. NSDS의 조정과 추적조사를 위한 상하양원 공동위원회, 외교협력부 소속의 지속가능개발총국 등과 같은 기타 매커니즘을 확립하여 SDG 실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30 의제 대사도 임명하였다. 현재 2030 의제 실행계획을 입안 중이며 2018년 7월에 HLPF에 제출할 예정이다. 스페인 협력 V 종합계획(2017-2020)에

	2030 의제를 반영하여 PCD에서 PCSD로의 이행에 대한 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 통합	최근에 구성된 2030 의제 고위급 실무단의 주된 임무는 SDG 및 세부목표를 국가 공공정책 틀로 통합 시키는 것이다. 스페인의 실행 로드맵, 목표 및 세부목표를 정의하기 위한 SDG 대비 정책 활동을 도식화하는 작업은 잠재적 시너지 효과와 절충 내용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세대간 시간 프레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과 스페인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장기 비전에 대한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법적 구속력 없는 공식 요청서가 의회 내 전 교섭단체의 지지를 받아 2017년 12월에 통과되었다. 동 요청서는 정부가 2030 의제 달성을 위한 스페인의 국가 지속가능 개발전략을 공표하고, 계획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며, 지역간 조정 보장, 구체적으로 PCSD를 제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책 효과	스페인 2030 의제와 관련된 정책의 입안, 실행 및 평가 과정에서 사전 영향분석, 이해관계충돌 해결 매커니즘, 추적조사, 편차 수정을 위한 사후분석 및 조정 또는 교정 매커니즘 등과 같은 주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공식적인 의회의 통제와 같은 기존 매커니즘도 활용할 예정이다. 기타의 매커니즘으로는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공동체의 미래" http://futuroencomun.net/), 투명한 통제 매커니즘의 확립("Poletika" http://poletika.org/) 및 민간 부문 참여("Forética": http://www.foretica.org/) 등이 있다.
조정	SDG 실행 조정을 위해 2030 의제 고위급 실무단(HLG)이 구성되었다. HLG의 주요 기능은 SDG 및 세부목표의 국가 공공정책 틀로의 통합을 촉진하고 다양한 부문 정책과 입법계획간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일관된 SDG 실행을 지원하는 기존 매커니즘에는 정책일관성 담당자 네트워크, 부처간 개발협력위원회, 개발협력위원회 등이 포함된다.
지방 참여	최근에 구성된 2030 의제 고위급 실무단은 정부간 구조에서 지역,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성을 고려한다. 지역은 2030 의제의 실행과 관련된 조정, 감시 및 평가과정에 참여한다. 정부에는 2030 의제의 실행을 다루고 일관성 향상에 기여하는 지역대표회의 같은 다양한 협의기구가 상이한 행정 단위 가운데 구성되어 있다.
이해관계자의 참여	SDG 현지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민간기업 및 학계를 망라한 다양한 계층의 제도적 연합체 결성을 위한 세계적 포럼이 2018년에 개최될 예정이다.
모니터링 및 보고	2030 의제 고위급 실무단은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공적개발원조 및 비공적개발 원조)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HLG는 또한 이행상황 조사를 위한 기준치와 지표를 개발하고 UN, EU 및 OECD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주석: 정치적 약속에 관하여는 Senado de España. Sesión plenaria número 31, miércoles 21 de febrero de 2018. Comisión Mixta de los Diputados-Senado para la Coordinación y Seguimiento de la Estrategia española para alcanzar los Objetivos de Desarrollo Sostenible(ODS): http://www.senado.es/web/actividadparlamentaria/actualidad/video/index.html?s=12_S000040_031_01&ig=640637를 참고하라.

출처: OECD(2017[65]).

스웨덴

새로운 국가 실행계획은 세계개발정책(PGD)을 일관된 범 정부적인 역량 결집을 위한 핵심 도구로 적용한다. PGD에 의해 각 부처는 최초로 2030 의제와 연계된 PGD 실행을 위한 구체적 목표와 명확한 책임이 명시된 내부 실행계획을 수립할 권한을 부여 받았다(Government of Sweden, 2017^[66]). 계획 수립과정은 통해 2014-2016 기간 동안 부문간 및 국내와 국제적 우선과제간의 잠재적인 이해관계 충돌을 예상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가장 최근의 정부 문건인 *2030 의제 실행을 통한 세계적 개발을 위한 스웨덴의 정책* 에는 모든 SDG와 관련된 2016-2017 기간 중의 정부의 활동실적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2030 의제와 세계적 목표와 관련된 PGU와의 활동내용을 예시로 보고하고 있다. 정부는 동 문건의 한 장을 할애하여 동 기간 동안 특히 실행 의지를 보인 여권신장 외교정책, 지속 가능한 사업,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기후와 해양 및 자본 도피와 탈세 등 다섯 개 분야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보고하면서 정부 내의 상충되는 목적으로 인해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 개발을 달성할 기회가 제한되거나 관련성이나 시너지 효과가 존재하는 분야를 규명하였다. 또한 동 문건에는 각각의 세계적 목표에 해당하는 PGD 분야의 소관 부처가 명시되어 있다. 이리하여 정책일관성은 PGD의 근간으로 간주되게 되었다(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8_[67]).

의회에 제출하는 격년 보고서는 이해관계 충돌을 처리함에 있어 투명성을 증진하고 정책일관성을 위한 조정을 강화한다. 재무부의 행정담당 장관은 2030 의제의 국내 실행을 조정할 책임을 지고 있다. 모든 부처의 정책담당관/분석관은 부처간 실무단 회의에 매월 참석한다. 또한 재무부, 외무부, 환경에너지부, 사회부 및 기업혁신부 차관은 연 3회 또는 4회 개최되는 2030 의제 협의 회의에 참석한다. 외무부의 국제 개발협력 및 기후 담당 장관은 스웨덴의 국제적 SDG 실행에 대한 기여를 책임지고 있다. 외무부의 PCSD 조정팀은 문건 검토와 2030 의제와 관련된 주류화의 수준과 PCSD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각 부처를 지도한다. 그러나 소관 정책 분야에 대한 정책을 채택하고 잠재적인 갈등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책임은 각 부처가 부담한다.

표 3.18. PCSD 확보를 위한 제도적 매커니즘(스웨덴)

구성요소	스웨덴
정치적 약속	2014년에 다시 수립된 세계개발정책(PGD)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스웨덴 정부 부처와 각 기관들의 실행의욕을 고무하고 지식을 신장시키기 위함이다.
정책 통합	모든 부처는 SDG와 연계된 결정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개발정책과 PCSD의 내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세대간 시간 프레임	PGD는 모든 정당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책 효과	국경과 세대를 초월한 잠재적인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과제는 각 부처가 수립한 실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조정	재무부의 행정 담당 장관은 2030 의제의 국내 실행 및 조정을 책임지고 있다. 정부는 외무부 국제 개발협력 국장의 주도하에 모든 관련 부처의 부서장급 세계개발정책 책임자로 구성되는 2030 의제 부처간 자문단을 구성하였다. 외무부는 국제적 SDG 실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외무부의 PCSD 조정팀은 국제적 실행을 위한 역량개발과 방법론적 지원을 각 부처에 제공한다. PCSD는 각 부처의 요청에 따라 문건과 2030 의제 또는 PCSD의 주류화에 대한 결정을 검토함으로써 소통과 실행계획에 기여한다. 그러나 소관 분야에 대한 정책을 채택하고 잠재적인 갈등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책임은 각 부처가 부담한다.
지방 참여	정부는 스웨덴 사회의 참여를 통한 2030 의제 실행을 장려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국가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포괄적 실행계획에 대한 제안서를 포함한 몇 건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6개 지방자치단체와 19개 자치단체 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2030 의제를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활동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해관계자의 참여 지방자치단체, 학계, 민간 부문 및 노동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이해관계자 국가위원회가 개최하는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다. 2015년 설치된 지속가능개발 과학위원회에는 저명한 연구원 패널이 참여하여 정부와 과학계의 대화를 위한 포럼을 제공한다. 스웨덴은 2017년 HLPF 개최 전후에 야심적인 이해관계자 협의회를 수 차례 개최하였다. 이러한 협의회는 또한 PDG를 수단으로 삼아 2030 의제를 실행하기 위한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모니터링 및 보고 PDG와 SDG를 연계시키는 새로운 보고모델을 활용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외무부 PCSD 팀은 2년마다 2016-2017 기간 동안의 실행조치와 결과 및 향후 전망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PGD는 2030 의제 실행을 위한 도구로 간주되며, 부서간 자문단을 구성하고 있다.

출처: OECD(2017[68]), Government Offices of Sweden(2018[67]).

박스 3.12.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 발굴

정부는 스웨덴 기업들이 스웨덴 및 기타 시장에서 국제 지속가능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을 영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15년 12월에 정부는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한 정책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다(Communication 2015/16:19). 동 보고서에는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사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기대와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 지침은 주로 2030의제를 포함하여 다국적기업에 대한 OECD 지침, 유엔글로벌 콤팩트,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지침, ILO 기본협약 및 3자간 선언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동 보고서를 근거로 2016년에 스웨덴 기업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사업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정부는 또한 해당 분야의 유엔 지침을 실천하기 위한 50개 조치가 포함된 기업 및 인권지침 국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실행지침은 스웨덴 기업 및 기타 기업들이 유엔의 지침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회사정책을 채택하고 인권침해와 관련된 가치사슬 내의 위험을 확인하고 통제(정밀 실사)할 내부절차를 운영하며, 위험요소를 보고함으로써 투명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OECD(2017[68]).

스위스

명확한 지침을 갖춘 공동의 전략들은 정책일관성 추구에 도움이 된다. 연방평의회가 채택한 지속가능개발전략(SDS) 2016-2019는 2030 의제 실행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자 준거 틀이다. 전략에는 해당 SDG와 명확하게 연계된 9개 주제 분야의 실행계획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새로 제안하는 법안과 절차는 SDG 관련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PCSD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부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연방평의회 5개 지침 중의 하나다(Swiss Federal Council, 2016_[69]). 따라서 PCSD에 대한 정치적 약속은 연방 최고위층에서 표명된다. 그러나, 스위스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분권화하였으며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문화는 지방 수준에서의 실질적 합의가 SDS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을 나타낸다(OECD, 2017_[70]). 대신에, 연방, 주 및 지역사회 간의 제휴 또는 수직적 정책일관성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행정 단위간 및 행정 단위 내의 조정과 협의는 일관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연방 행정부를 통할하는 7인 집행평의회로서 집단 통치기구 및 내각의 역할을 하는 연방평의회는 정기적인 2단계 매커니즘을 통해 PCSD를 증진한다. 첫째, 정책담당부서는 실무협의체를 조직하여 타 부서의 의견을 수집하고 종합한다. 그 다음, 연방평의회 위원들이 최종 결정 전에 정치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문제를 고려하여 상이한 관점 간의 균형을 잡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협의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권력구조가 반영되기 때문에 결론이 항상 지속 가능한 개발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OECD, 2017_[70]). 연방 공간개발청(ARE)과 스위스 개발협력청(SDC)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부서간 국장급위원회와 관련 부서가 국내 정책에 있어서의 SDS 및 SDG의 실행을 조정한다. 두 기관은 국내 및 국제적 SDG 실행을 조정하며 환경, 보건, 농업, 통계, 경제, 외교 분야 연방 부처와 연방수상실의 대표자들을 참여시킨다(Swiss Confederation, 2018_[71]). MoE와 MFA에 의한 이러한 공동 지도체제는 국내 및 국제적 목적을 동시에 고려하고 SDG 실행의 일관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전반적인 SDG 실행의 일환으로서의 정책일관성 감시를 위해 기존 시스템을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스위스는 2018년부터 매 4년마다 국가 SDS 및 2030 의제의 실행 진도를 보고할 예정이다. 연방평의회는 국회 임기의 중반에 진도 보고를 실시함으로써 필요 시 향후의 실행계획과 우선과제를 논의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활동에는 MONET 지표를 SDG와 연계시키고, SDG 17.14를 포함한 세부목표 수준에서 각 SDG 실행조치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에 대비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기관간 전문가 그룹(IAEG)의 노력이 포함된다(박스 3.13). 그 결과는 2018년 HLPF에서 스위스의 2차 VNR에 포함하여 제출할 예정이다.

표 3.19. PCSD 확보를 위한 제도적 매커니즘(스위스)

구성요소	스위스
정치적 약속	현행 지속가능개발전략(SDS) 2016-2019는 정부 입법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2030 의제 실행을 위해 PCSD를 사용할 것이라는 스위스의 공약을 조명한다. 정부의 모든 행정 단위에서 의사결정자는 참여를 증진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책 통합	부문별 연방 부처는 실무적, 정치적 협의를 통하여 국내 SDG를 실행한다. 이 과정은 상충관계와 시너지 효과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며 PCSD를 향상시킨다.
세대간 시간 프레임	스위스 거버넌스 시스템은 안정적이며 선거 결과에 즉시 강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연방평의회는 의회에 제출하는 법안에 장기적인 세대를 초월하는 효과를 반영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SDS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년까지의 스위스의 우선과제를 반영한다.
정책 효과	정책 평가를 위한 VOBUs, 규제영향평가(RIA) 등과 같은 사전, 사후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책 수단들이 있으나, 국경을 초월한 효과 분석 등 보다 체계적 틀로 활용할 정치적 의지는 결핍되어 있다.
조정	연방평의회는 일상적인 통치의 틀/framework 내에서 PCSD를 촉진할 수 있다. 부서간 지속가능개발위원회(ISDC)와 국가 2030 의제 실무단 등 2개의 연방기구에는 정보 공유와 중재를 통하여 일관성 증진을 지원한다. 최종 결정은 연방평의회가 내린다. 국내 및 국제 수준간의 조정은 ISDC와 실무단간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보장된다.
지방 참여	지방기관은 주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각 주와 지역사회는 자체 전략과 실행부서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주정부와의 대화는 실행과정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협력하면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표권을 행사한다.
이해관계자의 참여	비정부단체와 시민사회는 국민투표 및 국민발안 형태의 직접민주주의를 통하여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민간 부문, 과학계, 환경, 사회 및 개발관련 비정부단체 및 청년을 포함한 비정부 수행주체들과의 대화와 중재를 위한 SDG 실행 플랫폼도 창설하였다.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지만 최종 결정은 연방정부가 내린다.
모니터링 및 보고	스위스는 2018년부터 매 4년마다 2030 의제 및 국가 SDS의 이행현황을 보고할 계획이다. 스위스는 지속가능개발 종합 감시시스템(MONET)을 기반으로 국내 및 국제적안 실행의 진척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장 수준의 SDC 자원을 발굴하여 스위스의 정책일관성 대화를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SDC는 현재 스위스 정부와 연방의회가 연간 단위로 결정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비정부 PCD 감시기구의 실행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곧 발간될 2018년도 VNR에는 SDG 17.14의 발전상황도 포함될 예정이다.

주석: 연방국회(스위스 의회)는 7명의 스위스 정부 연방협의회 위원을 선출한다. 각 위원은 정부 부처보다 업무영역이 광범위한 연방 부처를 지휘한다.

출처: OECD(2017[70]), Swiss Confederation(2016[72]) and(2018[71]).

박스 3.13. MONET 지표 시스템을 이용한 SDG 이행 모니터링

2003년부터 스위스는 MONET 지표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의 진척정도를 평가해 왔다. 연방통계청(FSO)은 전체론적 방식으로 SD를 측정한 73개 지표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공시한다. 지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세 가지 차원을 통합하고 그들간의 상호작용은 물론 국경과 세대를 초월한 차원("지금 여기", "나중에", "다른 곳에서")까지 고려한다.

동 시스템의 준거 틀을 2016년 5월에 개정하여 SDG 이행의 국내 및 국제적 보고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SDS 2016-2019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36개 지표를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보다 폭넓게 분석하기 위해 지표를 세부목표보다는 상위 목표에 연계시켰다.

최초 분석의 이해 증진을 위해 목표당 최대 4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2017년에 SDG 세부목표에 대응하여 MONET 지표 시스템을 MONET+로 확대하였다.

스위스의 2016년도 VNR에 수록된 지속 가능 개발의 세계적 차원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9개의 대표적인 지표에는 수입의 원재료 족적,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의존성, 이주자의 송금, 개발 도상국에 대한 직접투자, 탄소 족적, 공적개발원조, 다자간 조약 및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면세 수입이 포함된다.

출처: Swiss Confederation(2016[72]).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관련 협력국가의 기고문

아래 기고문에 제시된 의견과 논쟁은 저자의 견해이며 OECD 또는 회원국 정부의 공식 견해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아니한다.

네팔의 SDG 실행을 위한 제도적 일관성

네팔 비정부단체연합(NFN)

네팔 연방정부는 2017년에 SDG 실행을 위한 3단계체계를 확립하였다: 1) 수상이 주도하는 국가 수준의 운영위원회, 2) 국가계획위원회(NPC) 부의장이 주도하는 이행 조정 및 모니터링 위원회, 3) NPC 위원이 조정하는 아홉 개 주제별 실무단. 이러한 기구들은 감독 및 정치적 방향 제시, SDG와 관련된 사업의 조정 및 이행, SDG와 정부의 계획, 정책 및 예산의 조정, 성과의 통합을 책임진다.

다양한 부문 정책 및 전략과 SDG를 조정함으로써 수평적 정책일관성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부처의 고위급 관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조정 위원회는 수평적 정책일관성 확보를 지원한다. 지역 및 지방정부의 미 참여로 수직적 정책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는 아직 이루어 지지 않았다.

지역 수준의 과제는 SDG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지역과 지방정부는 국내 최초로 구성되어 자체 제도, 법률과 규정을 정비하고 있는 관계로 SDG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매커니즘이 구비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미흡하다. 시민사회단체는 아직 국가운영위원회에 대한 대의권이 없으며 “초청 위원” 자격으로 실행 및 조정위원회와 주제별 실무단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집단적 지식과 관련이 있으며 SDG의 통합, 실행, 조정 및 감시 과정에서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제한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개발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소외된 사회집단인 달리트(카스트 제도의 최하위 계급), 여성, 장애인 및 토착민이 이러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모든 이익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자신이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포럼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하는”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팔 시민사회단체는 SDG 실행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네팔

SDG 포럼을 창설하였다. 포럼에는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네팔 비정부단체 연합은 국가 수준에서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을 조정하고 촉진시키고 있으며 지방 수준에서 네팔 SDG 포럼을 결성하고 있다. 지역 및 지방정부는 아직 정착단계에 있으므로 시민사회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농촌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네팔 SDG 포럼을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다양한 수준에서의 네팔 SDG 포럼은 시민사회단체와 이해관계자 집단(MGoS)이 SDG 제도화에 참여하기 위한 공동 플랫폼이 되고 있다.

파키스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 이행

사회정책 및 개발센터(SPDC)

파키스탄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의 채택과 실행에 대한 확고한 정치적 약속을 표명하였다. 파키스탄은 2016년 2월에 국회의 만장일치 결의로 SDG를 국가개발의제로 채택한 최초의 국가다. 수상은 의회 내에 SDG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국회의원들이 정책 실행의 효과적인 감시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도록 사무국을 설치하였다.

정부 수준에서 계획개발개혁부가 재정 및 공공정책 개발기관인 계획위원회를 통하여 연방 각 부처, 지방정부의 SDG 실행을 조정할 책임을 지고 있다.

파키스탄 비전 2025는 포용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기준및 로드맵을 제공한다. 동 비전은 수상이 주재하고 지방장관 전원으로 구성된 고위급 헌법상 기관으로서 재정, 통상, 사회, 경제정책에 대하여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를 자문할 권한이 있는 국가경제위원회(NEC)에 의하여 2014년 5월에 승인되었다. 정부는 SDG와 연계된 7개의 개발전략⁶으로 구성된 비전 2025를 SDG 달성을 위한 발판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국가경제 위원회는 세계적 의제의 국내 의제로의 전환을 통한 SDG 및 세부목표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SDG 기준을 수립하였다. NEC는 동 기준을 2018년 3월에 승인하였으며 연방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대하여 국가 SDG 기준에 따라 정책과 계획을 조정하고 자원을 배분할 것을 권고하였다.

파키스탄 비전 2025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통합적인 전략을 제공한다. 국가 SDG 기준은 동일한 비전에 따라 개발되었다. 계획위원회 내에 특별 SDG 감시조정기구를 설치하여 국가적 조정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SDG의 통합, 정책일관성, 주류편입 및 현지화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에도 유사한 기구를 설치하였다. 현재 4개 주 가운데 2개 주(펀잡 및 신드)가 동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2개 주(파크툽크와 및 발루치스탄)는 운영 준비 중이다. 이러한 기구는 각 주의 계획개발부서에 소속되어 있으며,⁷ 2030 의제에 부합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 정책 및 실행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SDG 실행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하기 위해 의회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였다.

파키스탄 비전 2025의 개발과정에서 관련된 이해관계자 전원의 참여는 참여자의 폭넓은 주인의식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으며 지방 수준에서도 동일한 과정이 실행되었다. 지방정부는 지방 SDG 부서를 감독하고 전략적으로 지도할 자문기구를 구성하였다. 동

자문기구에는 정부, 학계, 개발사업자와 시민사회의 대표자들이 참여하여 SDG에 부합하는 지역개발계획과 성장전략을 검토한다. SDG의 현지화를 위해 사회, 경제, 환경 및 거버넌스를 포함한 포괄적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다. SDG 부서가 목표와 지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필요한 정보와 전략을 확인하고, 집단간의 내부간 및 전후방간 연계를 조성하며, 정책 및 실행계획을 개발함에 있어 지침을 제공할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였다. 편집 주와 신드 주는 이미 이러한 분야의 전체에 걸쳐 활동을 개시하였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또한 민간 부문과의 협의를 개시하였다. 연방정부는 파키스탄의 SDG 달성에 민간 부문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탁하였다.

연방국가인 파키스탄은 세 계층의 정부간에 더 높은 수준의 통합과 조정이 필요하다. 2010년의 제18차 개정헌법은 정치, 재정 및 행정권력의 이양에 관한 한 정치적 권리의 주요 헌장이다. 동 개정에 의해 사회복지사업의 권한과 책임이 주정부로 이양되었다. 그 결과 SDG 실행에 있어서의 주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증대되었다. 마찬가지로 주정부는 지방정부를 설립하고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 대표에게 이양할 의무가 있었다. 계획위원회는 2017년에 지방 수준에서의 SDG 전망과 정부간 조정을 증진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방 정부에 속한 구역 및 하위구역 단위의 선출직 대표들을 초대하여 지속가능개발목표에 관한 지방정부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지금은 주정부가 동일한 회의를 주관하며 SDG 담당부서는 지방정부, 싱크 탱크 및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정규업무의 일부분으로 자체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 매커니즘을 운영하고 있다. SDG와 관련된 모니터링 및 보고 매커니즘은 없다. 그러나, 계획위원회의 주도 하에 연방과 지방의 SDG 담당부서는 통합 모니터링 및 보고 틀을 개발 중에 있다.

파키스탄의 2030 의제에 대한 정치적 약속은 위에 언급된 실행조치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진행속도를 유지하고 높이기 위해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자원의 제약은 개발도상국이 개발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과제다. 파키스탄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간 조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합심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제18차 헌법개정에 따라 직무책임이 증가한 주정부의 제도적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더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더욱이 네 개 주정부의 구조가 서로 상이하고 권한과 직무의 이양 정도도 제각기 다르다. 예를 들면, 카이베르파크툰크와 주의 교육 및 의료서비스 제공 직무책임은 지방정부에 있지만 다른 주에서는 그렇지 않다. 재정적 권한의 범위에도 유사한 차이가 있다. 주민들과의 근접성을 고려하면 지방정부는 SDG 틀의 실행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의 역할, 책임 및 권한을 재정립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브라질의 지방자치 입법에 적용된 수직적 정책일관성에 관한 사례연구

Patricia Almeida Ashley, Núcleo Girassol(Universidade Federal Fluminense)

SDG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의 수직적 및 수평적 일관성을 결합하여야

한다. 플루미넨시 연방대학(Uff)의 Núcleo Girassol은 국가의 크기와 세 계층의 정부(국가 수준의 연방정부, 27개 주, 5,570개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일관성 확보의 복잡성을 염두에 둔 브라질 연방공화국에 특정된 맥락에서 관찰한 국제, 국가 및 지방 수준에서의 수직적 정책일관성에 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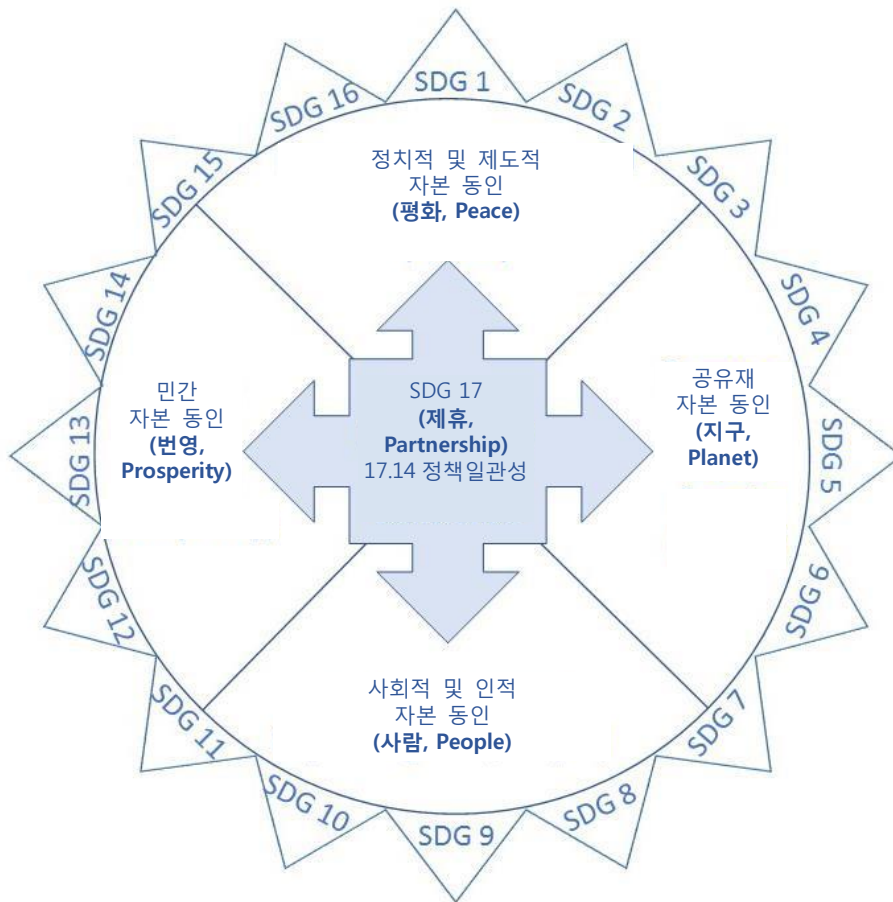
수직적 정책일관성은 다단계 및 다중 수행주체 간의 제휴를 의미한다. 우리는 인류 문명의 기술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및 사회적 양식의 일부로서 결합된 구역과 네트워크 영역의 시간과 공간(다중 영역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책일관성을 위한 제휴는 물리적 또는 사법적 경계에 의해 설정된 영역(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에 의해 설정된 영역(공급사슬 또는 다국적기업 같은 네트워크 영역) 모두에 적용될 때 보다 더 강화될 수 있다(도표 3.5).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에 입각한 일련의 현행 공공정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브라질에서 지방자치 입법에 관한 사례연구가 3년간 시행되었다. 동 연구에서는 다섯 개 지역(북부, 북동부, 서부중심, 남동부 및 남부)의 수도에 해당하는 12개 도시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최초 방식에 의해 500개의 지방자치단체 법률의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었으며 SDG 6, 7, 11 및 15에 적용한 방식과 그 결과는 <https://goo.gl/UhSt9b>에서 검색할 수 있다.

동 연구에서 일부 법률은 “맨 처음부터 입안”할 필요 없이 수정하여 다른 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간의 모범사례 학습과 공유에 기여하였다. 또한 브라질 같은 연방국가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수직적 정책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브라질과 같은 연방공화국의 입법부문과 행정부문이 현재 선출된 대표들의 임기를 초월하는 장기적 관점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공공정책 제안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 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이 반영되지 않아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일관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법률의 수집, 통폐합 및 개정이 필요하다.
- 2030 의제 실행을 위한 국가,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방의 법적 틀 내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고 연방 수준에서 상호 학습과 협력의 계기를 제공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서로 보완할 수 있다.
- 공공부문의 각 제도적 수준(지방자치단체, 주, 국가, 국제 및 국가간)에서의 정책 및 법률에 대해 공개적인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는 무역, 투자, 고용, 교육 및 기타 수단과 관련된 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간의 잠재적인 협력을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도표 3.5. 2030 의제의 5 P와 핵심 동인



주석: 2030 의제의 5P(Planet, People, Prosperity, Peace and Partnership)는 정책의 내용과 과정을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상호 연결된 인자로 표현한다. 정책일관성은 국가간, 국제, 국가, 지역,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및 사적인 개인 수준에서의 정치적/제도적, 경제적 수행주체와 동인, 공유재, 사회적 및 인적 자본의 연합을 의미한다.

출처: Patricia Almeida Ashley, 2018.

각주

- 1 일본은 SDG 실행을 위한 지침으로 다음의 비전을 설정하였다.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개선이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이 좋은 방식으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이루어지는 미래를 향한 선도자가 된다.”
- 2 2016년 9월20일 제71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멕시코 대통령 Enrique Peña Nieto가 한 발언: <https://gadebate.un.org/en/71/mexico>.
- 3 지속가능개발 2030 의제 국가위원회 설치를 위한 명령. 발효일: 2017년 4월26일. 연방 관보: http://www.dof.gob.mx/nota_detalle.php?codigo=5480759&fecha=26/04/2017.
- 4 PCD에 대한 네덜란드의 접근법이 기술된 토론 논문은 Mackie, J., M. Ronceray 및 E. Spierings의 *정책일관성과 2030 의제: PCD 경험을 기반으로* 를 참고하라. Maastricht: ECDPM, 2017.
- 5 입법에 대하여는 <https://www.boe.es/buscar/act.php?id=BOE-A-1998-16303> 을 참고하라.

⁶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사람의 우선적 고려, 지속가능하고 고유하며 포괄적인 성장 달성, 민주적인 거버넌스, 제도개혁과 공공부문의 현대화, 물, 에너지 및 식품의 안전, 민간 부문과 기업 주도에 의한 성장,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경쟁력 있는 지식경제 개발, 교통기반시설 현대화 및 지방과의 연결성 증진.

⁷ 이 모든 연방 및 지방정부의 부서는 SDG에 관한 국가계획이라는 프로젝트 하에서 UNDP 파키스탄 지부와 협력하여 설치하였다. 동 계획의 목표는 계획, 재정 및 통계기관들을 규합하여 공동으로 SDG를 실행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BOE(2017), *Resolución de 13 de octubre de 2017, de la Secretaría de Estado de Cooperación [62]*
Internacional y para Iberoamérica y el Caribe, por la que se publica el Acuerdo de la
Comisión Delegada del Gobierno para Asuntos Económicos por el que se crea el Grupo de
Alto Nivel para la Agenda 2030, Boletín Oficial del Estado, Núm. 259, Sec. III., Pág. 102991,
<http://www.boe.es/boe/dias/2017/10/27/pdfs/BOE-A-2017-12294.pdf>.
- Bundeskanzleramt Österreich(2017), *Beiträge der Bundesministerien zur Umsetzung der [2]*
Agenda 2030 für nachhaltige Entwicklung durch Österreich,
<http://archiv.bka.gv.at/DocView.axd?CobId=65724>(accessed on 27 February 2018).
- Destatis(2017), *Sustainable Development in Germany - Indicator Report 2016, [26]*
[http://www.destatis.de/EN/Publications/Specialized/EnvironmentalEconomicAccounting/Susta](http://www.destatis.de/EN/Publications/Specialized/EnvironmentalEconomicAccounting/Sustainability/Indicators2016.pdf?__blob=publicationFile)
[inability/Indicators2016.pdf?__blob=publicationFile](http://www.destatis.de/EN/Publications/Specialized/EnvironmentalEconomicAccounting/Sustainability/Indicators2016.pdf?__blob=publicationFile)(accessed on 29 January 2018).
- Dutch Ministry of Foreign Affairs(2017), *Letter to the President of the House of [44]*
Representatives on the Annual Report on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PCD),
 Minister for Foreign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http://www.government.nl/documents/parliamentarydocuments/](http://www.government.nl/documents/parliamentarydocuments/2017/11/14/letter-to-the-president-of-the-house-of-representatives-on-the-annualreport-on-policy-coherence-for-development-pcd)
[2017/11/14/letter-to-the-president-of-the-house-of-representatives-on-the-annualreport-](http://www.government.nl/documents/parliamentarydocuments/2017/11/14/letter-to-the-president-of-the-house-of-representatives-on-the-annualreport-on-policy-coherence-for-development-pcd)
[on-policy-coherence-for-development-pcd](http://www.government.nl/documents/parliamentarydocuments/2017/11/14/letter-to-the-president-of-the-house-of-representatives-on-the-annualreport-on-policy-coherence-for-development-pcd)(accessed on 03 January 2018).
- Estonian Government(2005), "Sustainable Estonia 21 Estonian National Strategy on [12]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riigikantselei.ee/sites/default/files/contenteditors/](https://riigikantselei.ee/sites/default/files/contenteditors/Failid/estonia_sds_2005.pdf)
[Failid/estonia_sds_2005.pdf](https://riigikantselei.ee/sites/default/files/contenteditors/Failid/estonia_sds_2005.pdf).
- Federal Ministry for Europe, I.(2016), *The future needs development. Development needs a [3]*
future. Three-Year Programme on Austrian Development Policy,
[http://www.entwicklung.at/fileadmin/user_upload/Dokumente/Publikationen/3_JP/Englisch/20](http://www.entwicklung.at/fileadmin/user_upload/Dokumente/Publikationen/3_JP/Englisch/2016-2018_3-YP.pdf)
[16-2018_3-YP.pdf](http://www.entwicklung.at/fileadmin/user_upload/Dokumente/Publikationen/3_JP/Englisch/2016-2018_3-YP.pdf).
- German Federal Government(2016), *German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22]*
[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EN/StatischeSeiten/Schwerpunkte/](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EN/StatischeSeiten/Schwerpunkte/Nachhaltigkeit/Anlagen/2017-06-20-langfassung-nen.pdf?sessionid=E88CE589087F1ADC9F9F8A504B2AA600.s7t2?__blob=publicationFile&)
[Nachhaltigkeit/Anlagen/2017-06-20-langfassung-nen.](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EN/StatischeSeiten/Schwerpunkte/Nachhaltigkeit/Anlagen/2017-06-20-langfassung-nen.pdf?sessionid=E88CE589087F1ADC9F9F8A504B2AA600.s7t2?__blob=publicationFile&)
[pdf?sessionid=E88CE589087F1ADC9F9F8A504B2AA600.s7t2?__blob=publicationFile&](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EN/StatischeSeiten/Schwerpunkte/Nachhaltigkeit/Anlagen/2017-06-20-langfassung-nen.pdf?sessionid=E88CE589087F1ADC9F9F8A504B2AA600.s7t2?__blob=publicationFile&)

[v=5](#)(accessed on 29 January 2018).

- German Federal Government(2016), *Report of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to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16*, [24]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0686HLPF-Bericht_final_EN.pdf.
- Government of Japan(2017), "Japan's Voluntary National Review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8]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6445Japan.pdf>.
- Government of Mexico(2017), *Guía para incorporar el enfoque de la Agenda 2030 en la elaboración de planes estatales y municipales de desarrollo*, Oficina de la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Ciudad de México, [39]
http://www.gob.mx/cms/uploads/attachment/file/255731/Gu_a_enfoque_A2030_para_entidades_y_municipios_comp.pdf.
- Government of Sweden(2017), "Sweden and the 2030 Agenda - Report to the UN High Level Political Forum 2017 on Sustainable Development", [66]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6033Sweden.pdf>.
-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2017), *Coalition Agreement: Confidence in the Future*, [42]
<http://www.kabinetsformatie2017.nl/documenten/verslagen/2017/10/10/coalition-agreementconfidence-in-the-future>(accessed on 14 February 2018).
-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ithuania(2011), *National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31]
<http://www.am.lt/VI/files/0.515592001408429196.pdf>.
-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lovenia(2018), *Implementing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8 Update*, [61]
http://www.svrk.gov.si/fileadmin/svrk.gov.si/pageuploads/Strategija_razvoja_Slovenije/Implementing_the_Agenda2030_update_2018.pdf.
-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lovenia(2017), *Sloveni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58]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6313Slovenia.pdf>.
-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lovenia(2017), *Slovenian Development Strategy 2030*, [57]
http://www.vlada.si/fileadmin/dokumenti/si/projekti/2017/srs2030/en/Slovenia_2030.pdf.
- Government Office Republic of Estonia(2016),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in Estonia", [13]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0647estonia.pdf>.
- Government Offices of Sweden(2018), *Government Communication 2017/18:146: Politiken för global utveckling i genomförandet av Agenda 2030*, [67]

- <http://www.regeringen.se/4952fb/contentassets/7af580b7bee2454eb8ae3fd572525654/politiken-for-global-utveckling-i-genomforandet-av-agenda-2030-skr-2017-18.146.pdf>.
- Grand-Duchy of Luxembourg(2017), *Mise en oeuvre de l'AGENDA 2030 au et par le Luxembourg*, [36]
<http://environnement.public.lu/content/dam/environnement/documents/developpementdurable/rapport-meo-agenda2030.pdf>.
- Grand-Duchy of Luxembourg(2017), *Rapport sur la mise en oeuvre de l'Agenda 2030 au et par le Luxembourg: Transformer les vies tout en préservant la planète.*, [37]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5709Luxembourg.pdf>.
- IFDD(2018), *La Vision stratégique fédérale à long terme(VLT) en matière de Développement durable*, [5]
<http://www.developpementdurable.be/fr/politique-federale/strategiefederale/instruments/la-vision-strategie-federale-long-terme-vlt-en-0>
 (accessed on 24 January 2018).
- Jap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2017), "Japan The SDG Implementation Guiding Principles", [30]
<http://www.mofa.go.jp/files/000252819.pdf>.
- Kingdom of Belgium(2017), *First Belgian National Voluntary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6]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5721Belgium_Rev.pdf.
- Kingdom of the Netherlands(2017),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45]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6109Netherlands.pdf>.
- Mexican Ministry of Finance(2017), *Invest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ow does Mexico invest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41]
http://www.transparenciapresupuestaria.gob.mx/work/models/PTP/Presupuesto/Documentos_anteriores/mexico_sdg.pdf.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ortugal(2017), *National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n the occasion of the Voluntary National Review at the United Nations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PORTUGAL*, [54]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5766Portugal2017_EN.pdf.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2016), *2017 Development Cooperation Plan*, [53]
http://www.polskapomoc.gov.pl/download/files/Dokumenty_i_Publikacje/Plan_wspolpracy_2017/Development_Cooperation_Plan_2017.pdf.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2015), *Multiannu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me* [51]

2016–2020, http://www.polskapomoc.gov.pl/download/files/Dokumenty_i_Publikacje/Program_wieloletni_2016-2020/WPWR_2016-2020_ENG_broszura.pdf.

- Nation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2016), *The Finland We Want by 2050 - Society's Commitment to Sustainable Development*, [16]
http://kestavakehitys.fi/documents/2167391/2186383/FINAL+Kest%C3%A4v%C3%A4n+kehityksen+yhteiskuntasitoumus+20+4+2016_eng-GBs_Final+-+kielenhuolto_EN_rev+%282%29.pdf/e057e638-507e-464c-a3dd-d3f0826f8950
 (accessed on 17 January 2018).
- Netherlands Court of Audit(2017), *The Dutch government's preparations aimed at 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arliamentary paper, 13.09.2017, [47]
<https://english.rekenkamer.nl/publications/parliamentary-papers/2017/09/13/the-dutchgovernment%E2%80%99s-preparations-aimed-at-achieving-the-sustainable-developmentgoals>(accessed on 13 February 2018).
- OECD(2017), *2017 Survey on applying the eight building blocks of PCS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Austria*, OECD, Paris, unpublished. [4]
- OECD(2017), *2017 Survey on applying the eight building blocks of PCS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Belgium*, OECD, Paris, unpublished. [7]
- OECD(2017), *2017 Survey on applying the eight building blocks of PCS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Czech Republic*, OECD, Paris, unpublished. [9]
- OECD(2017), *2017 Survey on applying the eight building blocks of PCS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Estonia*, OECD, Paris, unpublished. [14]
- OECD(2017), *2017 Survey on applying the eight building blocks of PCS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inland*, OECD, Paris, unpublished. [20]
- OECD(2017), *2017 Survey on applying the eight building blocks of PCS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Germany*, OECD, Paris, unpublished. [25]
- OECD(2017), *2017 Survey on applying the eight building blocks of PCS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Greece*, OECD, Paris, unpublished. [27]
- OECD(2017), *2017 Survey on applying the eight building blocks of PCS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Japan*, OECD, Paris, unpublished. [29]
- OECD(2017), *2017 Survey on applying the eight building blocks of PCS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Lithuania*, OECD, Paris, unpublished. [34]
- OECD(2017), *2017 Survey on applying the eight building blocks of PCS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Luxembourg*, OECD, Paris, unpublished. [35]

- OECD(2017), *2017 Survey on applying the eight building blocks of PCS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Mexico*, OECD, Paris, unpublished. [40]
- OECD(2017), *2017 Survey on applying the eight building blocks of PCS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oland*, OECD, Paris, unpublished. [52]
- OECD(2017), *2017 Survey on applying the eight building blocks of PCS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ortugal*, OECD, Paris, unpublished. [55]
- OECD(2017), *2017 Survey on applying the eight building blocks of PCS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Slovak Republic*, OECD, Paris, unpublished. [56]
- OECD(2017), *2017 Survey on applying the eight building blocks of PCS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Slovenia*, OECD, Paris, unpublished. [60]
- OECD(2017), *2017 Survey on applying the eight building blocks of PCS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Spain*, OECD, Paris, unpublished. [65]
- OECD(2017), *2017 Survey on applying the eight building blocks of PCS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Sweden*, OECD, Paris, unpublished. [68]
- OECD(2017), *2017 Survey on applying the eight building blocks of PCS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Switzerland*, OECD, Paris, unpublished. [70]
- OECD(2017), *2017 Survey on applying the eight building blocks of PCS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The Netherlands*, OECD, Paris, unpublished. [46]
- OECD(2017),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Finland 2017*,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87235-en>. [19]
- OECD(2017),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Luxembourg 2017*,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84364-en>. [38]
- OECD(2017),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Slovenia 2017*,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79308-en>. [59]
- OECD(2017),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The Netherlands 2017*,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78363-en>. [43]
- OECD(2017),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Estonia 2017*,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68241-en>. [15]

- OECD(2017), *The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Towards a Successful Implementation by Poland*, OECD Publishing. [50]
- OECD(2016), *Better Polic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6: A New Framework for Policy Coherence*,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56996-en>. [64]
- OECD(2016),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Czech Republic 2016*,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64939-en>. [10]
- OECD(2015),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Germany 2015*,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46133-en>. [23]
- OECD(2013), *OECD Development Assistance Peer Reviews: Spain 2011*,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17129-en>. [63]
- Office of the Government of the Czech Republic(2017), *National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zech Republic*,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5717Czech_Republic.pdf. [11]
- Office of the Government of the Czech Republic(2017), *Strategic Framework Czech Republic 2030(Czech)*, Sustainable Development Department, Prague, https://www.vlada.cz/assets/ppov/udrzitelny-rozvoj/CR-2030/Strategicky_ramec_Ceska_republika_2030-compressed-_1_.pdf. [8]
- PMO Finland(2017), *Follow-up and review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Finland*, <http://kestavakehitys.fi/documents/2167391/2186383/Followup+and+review+of+sustainable+development+in+Finland/46850aa3-b7a2-4686-9092-b5b894656280>(accessed on 17 January 2018). [21]
- PMO Finland(2017), *Government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in Finland - Long-term, Coherent and Inclusive Action*,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519VNK_J1117_Government_Report_2030Agenda_KANSILLA_netti.pdf. [17]
- PMO Finland(2016), *National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INLAND*. [18]
- State Progress Council(2012), *Lithuania's Progress Strategy. Lithuania 2030*, https://lrv.lt/uploads/main/documents/files/EN_version/Useful_information/lithuania2030.pdf. [32]
- Statistics Netherlands(2018), *Duurzame ontwikkelingsdoelen: de stand voor Nederland*, <https://www.cbs.nl/nl-nl/publicatie/2018/10/duurzame-ontwikkelingsdoelen-de-stand-> [49]

[voornederland](#)(accessed on 14 March 2018).

- Statistics Netherlands(2017), *Measuring the SDG: an initial picture for the Netherlands*, [48]
<https://www.cbs.nl/en-gb/publication/2016/44/measuring-the-SDG-an-initial-picture-for-the-netherlands>(accessed on 15 February 2018).
- Statistik Austria(2018), "Agenda 2030 - SDG-Indikatoren", *Statistics Brief Austria*, [1]
http://www.statistik.at/web_de/services/statistics_brief/index.html
(accessed on 27 February 2018).
- Swiss Confederation(2018),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71]
<https://www.eda.admin.ch/agenda2030/en/home.html>(accessed on 09 February 2018).
- Swiss Confederation(2016), *Switzerland's initial steps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72]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0617Full%20Report%20HLPF%202016_Switzerland_EN%20fin.pdf.
- Swiss Federal Council(2016),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2016–2019*, [69]
http://www.sdnetwork.eu/pdf/country_profiles/Swiss%20Sustainable%20Development%20Strategy%202016-2019.pdf.
- UNDP(2017), *Institutional and Coordination Mechanisms - Guidance Note*, [33]
<http://www.undp.org/content/undp/en/home/librarypage/sustainable-developmentgoals/institutional-and-coordination-mechanisms---guidance-note.html>
(accessed on 01 February 2018).

제4장.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확보 이행상황 조사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세부목표 17.14는 각국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정책일관성(PCSD)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장의 목적은 이러한 세부목표를 국가 수준에서 감시하고 지표 17.14.1 달성을 위한 세계적 방법론 개발에 기여하는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본 장에서는 2018년 7월에 개최되는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 논의할 다섯 가지 주제의 SDG에 대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틀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동 틀은 각국이 정책입안 과정의 세 구성요소인 제도적 매커니즘, 정책간 상호작용, 다른 국가와 세대에 대한 정책 효과를 고려하도록 조언한다. 동 틀은 또한 국가별 환경에 따른 다양한 지표, 우선과제 및 장기적 정책목적을 규명하도록 권장한다. 본 장은 SDG의 일관된 이행을 위한 분석도구를 개발하였거나 활용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확보 파트너십 기관회원의 3건의 기고문을 게재함으로써 결말을 짓는다.

서론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한 의사결정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SD) 확보에 필수적이다. PCSD 확보를 위해서는 1) 정책을 조정하고 실행을 위한 보다 더 통합적인 접근 방법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매커니즘의 성과, 2)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의 정책간의 중요한 절충안 및 시너지 효과 및 3) 국내 정책의 국경을 초과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의사결정자는 이러한 감시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잠재적인 국내 및 국제적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분열된 정부의 행위를 통합하고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2030 의제의 기본적인 원칙인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아동, 여성, 장애인 및 토착민들의 공존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 기준과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는 정책일관성 의제의 영역을 넘어선다는 점을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이행상황을 조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명심하여야 한다. 국가 수준의 적절한 지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 이는 각국이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을 제고하도록 요구하는 SDG 세부목표 17.14에도 해당된다.

세계 수준에서의 이런 세부목표의 발전과정은 지표 17.14.1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을 제고를 위한 매커니즘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UN, 2016^[1]). 그러나 모든 세계적 세부목표는 일반적인 열망을 표현한 것이며 각국은 2030 의제를 토대로 각자의 환경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국가의 세부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본 장은 SDG 세부목표 17.14를 국가 수준에서 감시하는 각국의 노력을 지원하고 17.14.1의 달성을 위한 세계적 방법론의 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OCEC 측정틀을 활용하여 정책과 제도적 관점에서 각국의 PCSD 증진하기 위한 국가들의 이행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지표 또는 지표 집단을 제시한다. 또한 각국이 국가적 우선과제와 사정에 적합한 자체적인 지표와 조사방법을 개발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본 장에서는 먼저 3부로 구성된 PCSD 이행상황 조사 틀을 소개하고 각 구성요소의 평가에 사용하는 지표를 유형별로 예시한다. 그 다음 PCSD를 위한 우선분야를 확인할 방법을 살펴보고 2018년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 검토할 목표와 관련된 분야의 PCSD 이행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지표 조합의 사용법을 살펴본다.

- SDG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시설의 이용과 지속 가능한 관리 보장
- SDG 7. 모두를 위한 적절한 가격의 믿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 보장
- SDG 11. 포용적이며 믿을 수 있고 회복력이 좋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및 주거지 조성
- SDG 12.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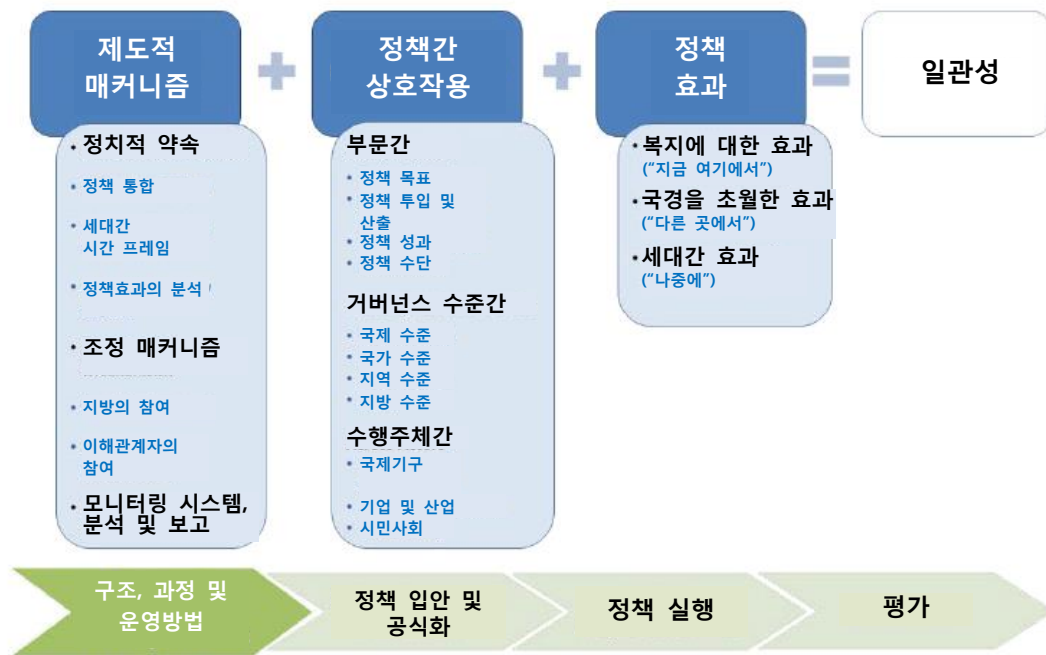
- SDG 15. 육지 생태계의 보호, 복구 및 지속 가능한 이용 촉진, 삼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 사막화 저지, 토지 황폐화 방지 및 복원

본 장은 SDG 실행 이행상황 조사를 위한 분석도구를 개발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확보의 다중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멤버 국가인 세 회원국이 제공한 기고문을 게재함으로써 끝을 맺는다.

정책일관성의 진척상황 조사 틀

OECD가 개발한 PCSD 틀(2016_[2])는 각국이 정책일관성 주기의 다음 3가지 상호관련된 요소에 중점을 둘 것을 권장한다. 1) 업무의 구조, 과정 및 방법이 고도의 정책일관성 확보를 지원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매커니즘**, 2)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이한 분야의 부문 정책들이 어떻게 상호 보완하는지를 검토하는 **정책간 상호작용** 및 3) “지금 여기”, “나중에”, “다른 곳에서”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정책의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는 **정책효과**(도표 4.1).

도표 4.1. PCSD 확보 발전상황 조사 항목



출처: OECD PCD 부서,(OECD, 2015[3]) 수정.

정책일관성을 위한 제도적 매커니즘 평가지표

PCSD 틀은 일관성을 위한 기존 제도적 매커니즘을 2030 의제와 SDG의 특성과 원칙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PCSD 틀은 다양한 제도적 매커니즘이 정책일관성 향상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장한다. 그 성과는 2장에 소개된 **8개 구성요소**인 1) 정부 전체의 실행력 결집, 2) 경제적, 환경적 및 사회적 문제의 균형 유지, 3) 단기 및 장기적 우선과제의 조정, 4) 국내 정책의 국경을 초월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해소, 5) 부문간의

조직적인 상호 지원 노력, 6) 하위국가 정부 및 지방정부의 참여, 7) 정부 외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8) 일관된 정책 결정을 위한 모니터링 및 보고의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요소는 일관된 SDG 실행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제도적 차원을 대변한다. 8개 구성요소는 행정적 및 정치적 전통과는 무관하게 정부의 정책일관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구조, 과정 및 업무방식을 나타낸다. 다음 단계는 이러한 8개 제도적 차원의 일관성을 평가하고 발전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과정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표 4.1에는 이러한 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정성적 지표와 성과의 정도를 표시하는 등급이 제시되어 있다.

보다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경우 이러한 잠정적인 지표 집합을 보다 더 개발하여 한 국가가 SDG 세부목표 17.14에 따라 어떻게 PCSD를 향상시키고 있는지를 표시하는 자기평가도구(대시보드)에 반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기존의 일관성 매커니즘을 종합하여 제도적 격차를 확인하고 정책일관성을 증진하고 발전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적용하는 국가별 접근법, 제도적 관례 및 구체적 조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

OECD는 최근의 연구에서 물 관리 거버넌스 분야에 매우 유사한 접근법을 적용하여 OECD 물 거버넌스 지표들을 발표하였다(OECD, 2018_[41]). 정책일관성에 대한 물 관리 거버넌스 원칙 3은 물에 관한 SDG 6의 실행과 관련된 PCSD를 위한 제도적 매커니즘의 발전상황 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동 원칙은 또한 물 부문 이외의 상호보완적인 지표 개발에 참고가 될 수 있다.

표 4.1. SDG 실행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매커니즘 권장 평가지표

구성요소	지표	성과 등급	근거
정치적 약속	PCSD에 대한 공약은 공식적으로 국내법, 국가전략 및 실행계획에 반영 된다.	낮음: 정부가 PCSD를 지지하는 공개적인, 그러나 구속력이 없는 성명을 발표한다. 중간: 공식적인 제도적 “축매”(부처간 위원회, 중앙감시기구, 부처 또는 부서)에게 PCSD 추진 권한을 부여한다. 높음: PCSD를 국가 전략/계획/법률에 명확하게 반영하고 공식적인 부처간 및 다중 이해관계자 매커니즘을 통해 기한이 명시된 PCSD 계획을 실행하고 감시한다.	정책일관성 향상은 명확한 권한과 기한이 명시된 실행계획이 뒷받침된 강력한 지도력과 공약에서 시작 된다는 사실이 경험으로 입증되었다. 기관에 대한 주도권 확보와 범 정부적인 행동의 지도에 정치적 약속이 필요하다.
정책 통합	정부는 계획, 예산편성, 입법, 부문계획 및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조정할 수 있는 전략적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매커니즘(부처간, 다중 이해관계자)을 보유하고 있다	낮음: 매커니즘은 상호연관성을 고려하여 부문 계획과 정책을 수정하고 SDG와 PCSD를 반영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중간: 매커니즘은 시너지 효과와 절충안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부문 계획을 합병할 수 있다. 높음: 매커니즘은 SDG와 PCSD를 예산편성과정을 포함하는 각 제도의 위임범위에 통합시키고 다부문 전략 또는 계획을 개발할 수 있다.	2030 의제의 서명국들은 “SDG의 상호연관성과 통합적인 특성은 의제의 목적 실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한 “균형 있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의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차원을 달성할 것을 공약한” 점을 강조하였다(UNGA,

<p>세대간 시간 프레임</p>	<p>정부는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매커니즘을 운영하고,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며, SDG 및 PCSD에 대한 공약을 계속 유지한다.</p>	<p>낮음: 정부는 전반적인 SDG 실행 틀로서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장기적 비전/전략을 보유하고 있다. 중간: 비전 또는 전략들에는 구체적인 장기적 과제가 명시되어 있고, 정책일관성이 요구되는 세대를 초월한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문제와 관련된 목적, 기준 및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높음: 정부는 선거 주기와 무관한 지속적인 공약과 실행 노력을 보장하는 매커니즘을 보유하고 장래의 정부 계획과 예산안에 SDG 및 PCSD를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하였다.</p>	<p>2015^[5]). 지속 가능한 개발의 기본 원리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필요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2030 의제의 서명국들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의 이익을 위해 의제를 실행하고”, “자연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기후변화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지구의 황폐화를 방지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것”을 공약하였다(UNGA, 2015^[5]).</p>
<p>정책 효과</p>	<p>정부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국내정책의 국내외적인 부정적 영향을 제도적 틀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개발하는 매커니즘을 보유하고 있다.</p>	<p>낮음: 국가 전략들에 정책이 다른 나라(특히 최소한 선진국 또는 세계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할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만 매커니즘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중간: 실행 전후에 지속 가능한 개발의 연관성과 정책제안 및 법안의 잠재적인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국경을 초월한 효과 포함)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높음: 부정적 효과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고려하여 정책을 조정한다.</p>	<p>정책결정 과정의 초기에 정책불일치를 예상, 탐지 및 해결할 수 있는 매커니즘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국내정책과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간의 모순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경험으로 입증되었다.</p>
<p>조정</p>	<p>정부는 각 부처와 민간 부문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책임을 분담하며, 자원을 분배하고, 이해관계 충돌 또는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보유하고 있다.</p>	<p>낮음: 정부 부처와 민간 부문 기관이 정기적으로 SDG 관련 프로그램,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 중간: 정부 부처와 민간 부문 기관이 공동 목표와 세부목표에 맞추어 각자의 실행전략, 계획 및 정책을 조정하나 각각 별도의 자원을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실행한다. 높음: 정부 부처와 민간 부문 기관이 틀적인 정보와 자원의 공유를 토대로 공동으로 프로그램, 계획 및 정책을 개발한다. 정부는 정책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 매커니즘을 보유하고 있다.</p>	<p>통합적인 SDG 실행의 경우와 같이 본질적으로 여러 부문과 관련된 정책 분야에는 조정 장치가 필요하다.</p>
<p>지방 참여</p>	<p>국가, 지역 및 지방수준에서 제도적 틀의 협의, 협력 및 노력을 조정하기 위한 매커니즘이</p>	<p>낮음: 국가, 하위국가 및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자들은 각자의 SDG 달성 노력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한다. 중간: 국가, 하위국가 및 지방정부의 행정단위는 공유한 정보를 토대로 실행 계획을 조정하고 SDG에 대한 국가공약에 기여하기 위해 각자의 자원을</p>	<p>SDG 실행은 지방, 지역 및 국가 수준의 행동 결집을 필요로 한다. 2030 의제는 “정부와 공공기관은 지역 및 지방정부와 긴밀히</p>

	구비되어 있다.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활동한다. 높음: 국가, 하위국가 및 지방정부의 행정단위는 각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틀적으로 공유한 정보를 토대로 협력하여 공동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다양한 행정단위 간의 이해관계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 매커니즘이 구비되어 있다.	협력하여 실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UNGA, 2015 ^[5]).
이해관계자의 참여	정부는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기업 및 산업, 과학 및 학계) 의 계획 및 정책입안 과정 참여를 보장 하기 위한 매커니즘 을 보유하고 있다.	낮음: 정부는 PCSD/SDG 실행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공행사를 개최한다. 중간: 정부는 정책결정의 전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와 직접 협의하고 협업하기 위한 매커니즘을 구축하였다. 높음: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SDG 실행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2030 의제는 “모든 국가와 이해관계자가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본 계획을 실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기업 및 산업, 과학 및 학계 등의 이해관계자는 자원동원, 해법의 제공과 혁신, 대표성이 불충분한 지역사회의 관심사와 필요를 표명하기 위한 지지, 책임 보장 지원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감시 및 보고	정부는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고 국경을 초월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며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변경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낮음: 정부가 감시 및 보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책 변경의 증거는 없다. 중간: 정부는 정기적으로 SDG 17.14에 관하여 보고하고 일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매커니즘을 평가하고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및 국제정책을 차단하기 위한 지표가 포함된 감시 및 보고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감시 및 보고 시스템을 통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매커니즘 또는 규정을 갖추고 있다. 높음: 정부는 국경을 초월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변경한다.	모니터링 매커니즘은 실행 과정 에서 또는 사정변경으로 노출된 잠재적인 부정적 효과를 고려하여 SDG를 지원 하는 부문정책을 조정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수불가결 하다.

출처:(Soria Morales and Lindberg, 2017[6]) 수정.

박스 4.1. OECD 물 관리 거버넌스 지표 틀

2015년에 OECD 물 관리 협치 원칙을 채택한 이후 OECD 물 관리 협치 계획은 1) 거버넌스 자기평가가 가능한 지표의 틀 및 2) 사례를 통한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 모범사례를 토대로 실행 전략을 수립하였다. 거버넌스 대응은 고도로 문맥적이고 비교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지표 틀을 이용하여 이에 기준을 진도를 확인하거나, 국가, 유역, 지역 및 도시에 벤치마킹을 제공할 의도는 없다. 그 주된 목적은 이해관계자들이 실행 가능한 항목과 실행 불가능한 항목 및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장려하기 위함이다. 지표는 물 관리 거버넌스 관련 항목을 조사하고 측정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평가 자체는 아니며 보다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정책일관성에 관한 원칙 3: 지표와 체크리스트

지표

3.a 물과 주요 관련분야, 특히 환경, 보건, 에너지, 농업, 토지이용 및 공간계획간의 정책일관성 촉진을 위한 여러 부문에 관련된 정책과 전략의 실행 계획 유무와 실행 수준.

3.b 물 관련 정책의 수평적 조정을 위한 부처간 기구 또는 기관의 존재 유무와 운영 여부.

3.c 정책일관성 또는 물 관련 실무, 정책 또는 규정의 조정이 미흡한 분야에 대한 장애요인을 검토할 수 있는 매커니즘의 유무와 실행 수준.

체크리스트

- SDG에서 요구하는 경제성장 동인으로서의 물 관리를 위한 전담 정책이나 고위층의 정치적 지원이 있는가?
- 농업, 산업(에너지 포함), 가정의 물 수요 예측자료와 현재와 미래의 경쟁적인 용도간의 우선 배분 여부를 결정할 지침이 구비되어 있는가?
- 에너지 보조금, 공간개발, 농업 또는 환경 분야의 결정이 물 관리와 관련된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사실이 있는가?
- 물 관련 정책일관성의 부재 또는 취약성으로 인한 비용을 평가한 사실이 있으며 평가결과를 의사결정자가 활용할 수 있는가?
- 정책일관성과 정책간 상호보완성으로 인한 이득을 평가하고 의사결정자와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였는가?
- 다른 부문의 의사결정에서 물의 합리적 사용을 고려하도록 보장하는 규정, 틀 또는 수단이 구비되어 있는가?
- 지역과 국가 수준에서의 수평적 조정 매커니즘이 구비되어 있는가?
- 물 관련 정책분야에 걸친 절충안을 관리하기 위한 갈등 완화 및 해결 매커니즘이 구비되어 있는가?

출처:(OECD, 2018[4]).

정책 상호작용 평가지표¹

SDG는 통합적이고 불가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책 입안 시에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영역간의 상호작용을 틀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정책일관성은 한 목표 분야의 성과가 다른 분야의 개발에 기여하도록 보장하고, 한 가지 목표 또는 세부목표에서 달성된 발전이 또 다른 목표를 희생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

OECD는 정책입안자들에게 SDG 달성과 관련된 연관성, 절충안 및 추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대한 범위의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지표의 대부분을 개발하였다. 동 지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

- **자원지표**는 자본의 저장(자연, 경제, 인적 및 사회적 자본)과 관련되며 각국의 현재와 미래세대의 복지를 위한 자산기반에 대한 관리실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흐름” 지표**는 자본의 저장에 대한 투자와 고갈에 관련되며 각국의 사용실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정책반응** 관련 지표는 지속 가능한 개발 성과가 공공정책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표 4.2는 이러한 지표들과 자연자본과의 연관성을 보여준다(인적, 경제적 및 사회적자본과의 연관성은 표 4.5를 참고하라).

표 4.2. 정책 상호작용 내용 파악을 위한 지표 예시

자연자산기반	자원 지표	“흐름” 지표	정책반응
토지	▪ 주된 토지피복 유형의 전체에 대한 기여	▪ 주된 토지피복 유형간의 전환 ▪ 농업 및 반자연 토지피복의 인위적 토지로의 전환	▪ 토지 용도지정 ▪ 보호구역 지정
삼림	▪ 삼림자원 저장	▪ 사용강도 및 삼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증명	▪ 지속 가능한 삼림관리 증명
담수	▪ 1인당 총 재생가능 담수량	▪ 1인당 담수 추출량 ▪ 1인당 총 재생가능 담수량	▪ 확고한 물 배분 제도
생물다양성	▪ 생물학적으로 안전한 어류 자원량 ▪ 멸종위기종	▪ 어획 다양성 지수(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함) ▪ 야생조류 개체수 지수(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함)	▪ 해상보호지역 ▪ 육상보호지역

출처(OECD, 2017[7]) 수정.

지수의 조합을 활용하면 동일한 자원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부문 또는 정책 우선과제를 평가하고, 부문별 우선과제 또는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총 소요량이 생태계의 제약범위 내인지 여부를 측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담수 추출량과 총 재생가능 담수량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수분 스트레스 징후(또는 담수자원 사용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농업용, 산업용 및 가정용 등의 인간활동에 기인한 과다추출의 전조가 되는 중요한 측정치다. 결과적으로 부문별 담수 추출량 자료는 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된다.

더 나아가, 각국은 자국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상호작용을 감시하게 될 것이다. 현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개발한 **SDG 상호작용 정보를 파악하고 도표화하기**

위한 몇 가지 도구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발중인 도구도 있다. 본 연구를 OECD의 자료, 증거 및 정책자문과 결합하여 정부의 정책으로 변환시키고자 한다.

닐손 외 다수(2016년)가 제안하고 국제학술연합회의(ICSU)(2017년)가 적용한 7단계 상호작용 등급들은 잠재적인 영향력이 있고,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고, 본질적인 절충안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SDG 상호작용을 도표화하고 파악하기 위한 직관적인 틀을 제공한다(표 4.3).

표 4.3. 목표 평점 부여

상호작용	명칭	내용 설명
+3	불가분	특정 목적이 다른 목적의 달성과 불가분하게 관련되어 있는 가장 강한 유형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2	강화	특정 목적이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건을 직접 조성함.
+1	조장	특정 목적의 추진이 다른 목적의 달성에 도움이 됨.
0	중립	특정 목적과 다른 목적 간에 별다른 상호작용이 없거나 상호작용이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중립적인 관계.
-1	제약	특정 목적의 추진이 다른 목적의 달성에 대한 조건 또는 제약을 형성하는 약한 유형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2	대응	특정 목적의 추진이 다른 목적에 대응하는 관계.
-3	무효화	특정 목적의 추진으로 다른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 지거나 추진 여건이 악화되는 가장 부정적인 상호작용.

출처:(ICSU, 2017[8]).

정책 효과 평가지표

2030 의제가 요구하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필요 충족은 자연적, 경제적, 인적 및 사회적 자본 자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러한 자원을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수록 “지금 여기”에서 보다 더 잘 관리할 수 있고, 지구상의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과 “나중에” 미래 세대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PCSD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럽 통계전문가회의가 최초로 소개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세 가지 개념적 차원간의 잠재적인 상충관계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UNECE, 2014^[9]).

국경을 초월한 효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가적 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경을 초월한 효과 또는 세계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가의 영향을 전부 통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경을 넘어서 가해지는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외부효과를 측정하여 국내 수준의 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고도로 상호 연결된 세계에는 자본 이동, 재화와 용역의 수입 및 수출, 이주 또는 기술이전 등 다양한 전달 경로가 있으며, 각국의 정책은 필연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적 외부효과**는 원조 흐름, 무역 및 국내 지원정책관련 자료에서, **사회적 외부효과**는 외국 태생 의사와 간호사관련 자료에서, **환경적 외부효과**는 특정 국가의 자원 소비 또는 다른 국가의 조건에 기인한 환경적 압박을 계산하는 “족적(발자국) 지표”로 포착할

수 있다(표 4.4). 물과 탄소 족적은 흔히 사용하는 측정치로서 물에 관한 SDG 6 및 에너지에 관한 SDG 7의 해당 절에서 보다 상세하게 논의한다. 생태계 족적에 대하여는 지속 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에 관한 SDG 11,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에 관한 SDG 12 및 육지생태계에 관한 SDG 15의 해당 절에서 보다 상세하게 논의한다.

국가간 프로젝트 또는 전략 - 그 영향을 포함하여 - 에 관한 지표개발 및 자료수집을 고려할 경우에는 양국간의 비교 가능한 측정치의 집합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지역에 적용(또한 상위 정책수준에도 적합한)할 제한된 핵심 지표집합에 각 지역이 각자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 추가적 지표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지표집합을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Martinez-Fernandez et al., 2013_[10]).

결국 세계적 규모 이하의 환경영향 평가 시에는 생산보다는 소비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다(OECD, 2013_[11]). 이는 국제무역 흐름(수입 및 수출)이 점점 더 세계적 가치사슬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생산의 탄소집약도 하락(제조에서 서비스로의 이동에 기인한)을 소비의 탄소집약도의 잠재적인 상승(에너지 집약적 제품의 수입 증가에 기인한)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에너지에 관한 SDG 7의 절에서 보다 상세하게 논의한다.

표 4.4. 국경을 초월한 효과 정보 파악을 위한 지표 예시

외부효과	주제	지표	관련 SDG 세부목표
경제적	개발협력	▪ 공적개발원조(ODA)	17.2
	국제무역	▪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관한 자료	2.b, 3.b, 8.a, 10.a,
		▪ 무역촉진지표(TFIs)	14.b, 17.10, 17.11,
		▪ 서비스무역규제지수(STRI)	17.12
	농업지원	▪ 농업생산자지원 추정치비율(PSE) ▪ 국가보호계수(NPC)	2.b
조세투명성	▪ OECD와 개발도상국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약 체결 건수	17.1	
사회적	이주	▪ 이주 유량 및 저장 관련 자료	3.c, 10.7, 10.c
		▪ 외국태생 보건종사자 비중	
		▪ 송금	
환경적	탄소 발자국	▪ 소비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	8.4, 12.3
		▪ 소비관련 이산화탄소 생산성	
		▪ 음식물 쓰레기	
	물 족적	▪ 물 집약적 제품의 수입	6.4

출처:(OECD, 2017_[12]).

세대간 효과

장기적인 복지수준 유지를 염두에 두고 현존하는 자원의 부존량과 사용추세를 감시하는 것은 미래 복지 전망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자본**(에너지와 광물자원, 토지와 생태계, 수질과 대기질, 기후), **경제적 자본**(물적, 재무적, 지식), **인적자본**(지식, 기술, 개인의 재능과 자질) 및 **사회적 자본**(개인간 관계 및 제도의 질)을 검토하여야 한다(표 4.5).

이러한 상이한 유형의 자본에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 각자가 폭넓은 범위의 복지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일정기간 동안 지속되며, 유지를 위해서는 투자와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본의 변화를 주시하고 이러한 자본 저량의 가치와 충격에 대한 회복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입(투자), 유출(자원의 고갈 또는 가치하락) 및 기타 위험인자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자들은 미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실행하는 수단을 통찰할 수 있다(OECD, 2015^[13]).

표 4.5. 미래 복지를 위한 자원감시 지표 예시

자본저량 유형	자본 "저량" 관련 지표	"흐름" 지표(자본 저량에의 투자 및 소모)	위험인자 관련 지표
자연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PM_{2.5} 대기오염에 대한 노출* 삼림 지역 재생가능 담수자원 멸종 위기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생산의 온실가스 배출량 국내 생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담수 추출량 	
인적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층의 학력(25세-34세) 15세 인지능력* 성인 능력* 출생 생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적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적 실업* 흡연 유병률 비만 유병률
경제적 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된 고정자산 지적 재산 가계 순소득* 정부의 순자산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고정자산 형성 연구개발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전체의 순자산가치 금융부문 레버리지 가계부채
사회적 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인에 대한 신뢰 경찰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투표율*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주석: * 표시항목은 OECD의 현행 복지수준 지표집합에도 포함되어 있음.

출처:(OECD, 2017^[14]).

국가적 우선과제 및 정책일관성 지표 파악을 위한 분석틀 적용

본 항에서는 2018년 유엔 고위급정치포럼에서 검토하고 있는 다섯 가지 목표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을 살펴본다. 동 감시틀은 제1장의 폭넓은 개념설정을 보완한다. 각 목표와 관련된 OECD 회원국 및 제휴국가의 사례를 들어 각국의 환경, 우선과제 및 장기 정책목적을 고려한 PCSD 발전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표를 파악하고 사용할 필요성을 설명한다.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시설

지속가능개발목표 6은 각국이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시설의 공급과 지속 가능한 관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물 세부목표 사이에 그리고 다른 많은 목표들과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다양한 물 용도와 사용자간에 세계적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농업과 개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SDG 6 실행의 발전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쟁관계에 있는 수요를 감시하고 국내 및 국제적인 물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SDG 6의 진척이 식량안전, 농업, 건강, 에너지와 생물다양성 등의

다른 목표의 달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바를 평가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역별 담수 부족량과 추출량은 서로 다르며 이는 그 상호작용과 해결의 긴급성도 상이하다는 의미다. 물이 부족한 국가는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당면한 단기적인 총 담수 저량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반면에 담수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물을 사용하여 작물을 재배하거나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있어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이 덜 드는 방법을 모색한다. 발전상황 조사를 위한 지표집합은 각 PCSD 과제별로 적용한다. 이러한 실무를 예시하고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었다. 관련 지표와 자료 출처는 표 4.7을 참고하라.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에서는 담수 저량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저렴한 음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또한 지속적인 물 부족으로 빈부간에 큰 격차가 발생하여 부유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시추공이나 우물 시공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반면, 빈곤한 사람들은 종종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정부의 해결책에 의존하고 있다(Sieff, 2018_[15]). 예를 들면, 공공 댐의 담수량 증가분이 급증하는 도시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심한 가뭄이 지속 가능한 개발의 모든 측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PCSD 평가를 위해서는 담수 추출율과 담수 저장능력을 동시에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환경적으로 보다 지속 가능한 물 관리에 기여하고 모두를 위한 보다 안정적인 물 공급을 보장할 수 있다.

세계에서 농업생산성이 가장 높은 지역의 하나인 **미국 남서부**에서는 총 경작지의 거의 75%가 보조관개에 의존하고 있다(Cooley et al., 2016_[16]). 이로 인해 이미 부족한 물 공급량이 압박을 받고 있으며 농업용수 부족을 완화시키기 위한 상승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농업용수의 사용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제한된 수자원의 생산성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다.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작물을 물 소비가 적은 작물로 대체하는 것도 더 적은 양의 농업용수로 농경지를 경작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 OECD의 농업환경지표²에서 입수할 수 있는 농업용 담수 회수량, 관개농지 면적, 관개 용수 사용률 등에 관한 자료는 물 부족을 완화하면서도 보다 지속 가능한 식량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일관성 확보의 이행상황을 조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정 국가의 행위가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실태파악을 위해 국경을 초월한 물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수질(오염 및 기후변화)과 수량(댐 건설 또는 가상수) 모두와 관련된다. 국경과 접하여 흐르는 강으로 인해 강안 국가들간의 상호의존성은 높아진다. 강의 하류에 위치한 국가는 상류에 위치한 국가에 의한 물의 과다한 추출이나 댐 건설(하류에 위치한 국가의 물 사용 제한), 오염 또는 수인성 질병(하류에 위치한 국가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 사용 제한) 유발 등 다양한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반대로, 하류에 위치한 국가는 상류의 홍수 유발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OECD, 2-13_[17]).

나일 강은 일곱 개 개발도상국을 거쳐 흐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다. 나일 강 유역의 인구는 향후 25년 동안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한 농업용수,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수요 증가로 해당 지역의 이미 부족한 수자원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Nunzio, 2013_[18]). 각 유역 국가가 강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정책일관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국경을 초월한 강 유역 평가에서는 표 4.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다섯 개 주제와 관련된 국경을 초월한 수자원에 대한 포괄적인 현황을 제시하기 위해 “물부족 유발요인” 지표를 사용한다(UNEP-DHI and UNEP, 2016^[19]).

표 4.6. 국경을 초월한 유역의 상태 평가를 위한 핵심지표

주제 그룹	지표	주석
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용수 부족 ▪ 생활용수 부족 ▪ 농업용수 부족 	부족 지표는 부문 및 국가간의 물 확보 경쟁을 표시한다.
수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분 오염 ▪ 폐수 오염 	오염 지표는 유역과 연안수의 수질문제를 표시한다.
생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습지 차단 ▪ 댐의 생태계에 대한 영향 ▪ 어류에 대한 위협 ▪ 멸종 위험 	생태계 지표는 종의 멸종 위험을 초래하는 압박을 표시한다.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틀 ▪ 물로 인한 정치적 긴장상태 ▪ 권능을 부여하는 환경 	거버넌스 지표는 유역관련 조약의 유무와 진행 또는 계획중인 새로운 물 관련 기반시설을 표시한다.
사회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자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 ▪ 사회적 복리 ▪ 가뭄과 홍수에의 노출 	사회경제적 지표는 기후와 개발 영향에 대한 인적 취약성이 높은 유역을 나타낸다.

출처: (UNEP-DHI and UNEP, 2016^[19]).

그러나 대다수의 물 문제가 국제무역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물 관리에 있어 지역, 국가 또는 강 유역 관점만을 고려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가상수 무역의 영향이 어떻게 생성되어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지는 이른바 족적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제품(물품,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상수 함량은 “제품이 실제로 생산된 지역에서 측정한 제품 생산을 위해 소비한 담수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Hoekstra and Chapagain, 2007^[20]). 이는 한 국가의 물 사용량, 외부 수자원 의존도를 표시하며 정부는 이를 통하여 국내 물 소비, 경제개발, 식량안전 및 국제무역 간의 연관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http://www.waterfootprint.org>). 그 자체로 가상수 함량은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SDG 12에 대한 폭넓은 논의의 대상에 포함된다.

가상수 거래로 수입국은 물을 절약할 수 있으나 수출국은 “손실”이 발생한다.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물 집약적인 제품을 수입하여 희소한 수자원을 절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의 물 족적 대부분을 “외부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요르단은 매년 가상수 형태로 50억에서 70억m³의 물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국내 수자원으로 총당하는 수량은 10억m³에 불과 하다(Hoekstra, 2010^[21]).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농산물 공급을 위한 주된 세계적 물 사용의 근원지다. Lee 외 다수(2016^[22])가 아시아 지역에서의 2000년에서 2012년까지의 몇 가지 농산물의 가상수 수출내역을 조사한 결과 밀과 쌀의 무역으로 인한 가상수 유출량이 아시아 외부에 대한 수출의 50%을 차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예를 들면, 태국은 약 110.7Gm³(증산수)와

22.8 Gm³(담수)를 비 아시아지역 국가에 수출하였으며, 총 가상수 수출량의 44.5 퍼센트가 곡물 무역을 통해 아시아 지역 내에서 거래되었다.³

위의 사례는 특정국가의 물 족적을 감시하고 분석하기 위해 PCSD를 평가할 때는 가상수 수출(국내 원천으로부터의 가상수 수출량과 외국산 가상수의 재수출량의 합계)과 지역(아시아) 외부로의 가상수 수출량을 표시하는 외부 가상수 비율을 구별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절충안과 시너지 효과의 관리를 통하여 지구상의 담수원과 습지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물 관련 생태계를 복구하고 보호하며, 담수 생물다양성을 방지하거나 복원시킬 수 있다. 생물다양성의 다양한 측면(종, 서식지)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정부의 자원 이용과 보호에 관한 의사결정에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WWF, 2016^[23]). 예를 들면, 멸종위기에 처한 양서류 개체 수에 대한 자료는 생태 환경이 악화되었음을 조기에 알려주는 경고 신호로서 양호한 생물지표로 간주된다(OECD, 2017^[7]).

표 4.7. SDG 6와 관련된 PCSD 발전상황 조사를 위한 지표

SDG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시설의 이용과 지속 가능한 관리 보장

	PCSD 우선과제	관련 지표	자료 출처
상충관계	지속 가능한 담수 회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면서(SDG 6.4) 모두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음용수 공급 보장(SDG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담수 수출량(1000m³/인) 1인당 담수 저장량(1000m³/인) 안전하게 관리되는 음용수를 공급하는 인구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OECD 녹색성장 지표 2017 FAO 물 통계 WHO/UNICEF 물 공급 및 위생시설 공동 감시 프로그램
시너지 효과	농업용수 사용 효율 향상(SDG 6.4)을 통한 농업생산성 개선(SDG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 수확량(톤/헥타르) 헥타르당 담수 수출량(백만리터) 전체 농경지 중 관개 면적 비율(%) 관개용수 사용률(관개 농경지 헥타르당 백만리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OECD 농업통계 OECD 농업환경 지표
국경을 초월한 정책 효과	국내 물 소비가 다른 국가의 물 공급에 미치는 영향 제한(SDG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 용수 부족 생활용수 부족 농업용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경을 초월한 물 영향평가 프로그램
	국내 수질오염의 국경을 넘는 영향 최소화(SDG 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양분 오염 폐수 오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경을 초월한 물 영향평가 프로그램
	물 집약적인 국내 수입품 수출국의 물 족적 제한(SDG 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 족적(리터/kg) 수입에 의한 물 절감량(m³/년) 수출에 의한 물 손실량(m³/년) 국내 물 소비량에 대한 물 순절감량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 족적 네트워크 Hoekstra, A.(2010)
세대간 정책 효과	물 관련 생태계의 보호 및 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려진 양서류 종의 수 멸종위기에 처한 양서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OECD 녹색성장 지표 2017

주석: 이는 예시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각국은 자국의 환경 및 지속가능개발목표와 가장 관련성이 큰 상호작용과 정책 효과를 파악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출처: OECD PCD 부서.

목표 7. 모두를 위한 적절한 가격의 청정에너지

지속가능개발목표 7은 각국이 모두를 위한 적절한 가격의 믿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에너지의 생산, 공급 및 사용은 에너지원에 따라 상이한 환경적 영향을 미치며 공기, 토양 및 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SDG 7의 실행과 관련된 정책일관성의 이행상황 조사를 위해서는 이러한 에너지원(화석연료 대 신재생 에너지)의 저량, 효율, 생산성, 용도별 에너지 소비량(물 공급 대 농업생산)을 감시하고 국내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긍정적 및 부정적인 경제적, 환경적 및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한 국가의 에너지 사용행태는 몇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는 경제구조(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산업 존재여부), 물리적 크기(수송부문의 수요에 영향을 미침), 기후(난방 또는 냉방 수요에 영향을 미침) 및 에너지 집약 산업 생산품의 외부조달 등이 포함된다(OECD, 2017^[7]). 정책입안자들이 이러한 사용행태를 이해하면 국가적 PCSD 우선과제를 파악하고 발전상황 조사를 위한 지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실무를 예시하고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었다. 관련 지표와 자료 출처는 표 4.8을 참고하라.

전체 전력의 95% 이상이 수력발전에 의해 생산되고 농업이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말라위** 같은 국가에서는(Malawi Water Partnership, 2016^[24]), 에너지, 물 및 식량생산간의 관계에 대한 감시는 PCSD 평가에 필수불가결하다. 정책입안자들은 부문별 물소비량과 에너지 기술에 관한 자료를 사용하여 에너지와 기타 부문간의 물 확보 경쟁을 감시하고 에너지 부문 자체 내의 효율적인 물 사용 기회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통찰을 통하여 식량 경작에 필요한 물을 더 확보하고 어류가 고사하지 않도록 담수원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식량안전을 달성하려는 말라위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바이오에너지가 가장 큰 신재생 에너지원이다. 바이오 에너지 소비량은 정부의 2020년 에너지 관련 세부목표 및 기타 장려책에 힘입어 증가하였다. 에너지원으로서의 목재 소비량은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에너지용 목재 소비량이 산업공정 또는 조경관리의 부산물인 폐목재 등과 같은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부터의 공급량을 초과하였다. 그 결과 에너지원으로 전목을 점점 더 소비함으로써 삼림벌채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Birdlife Europe and Central Asia and Transport and Environment, 2016^[25]). 이러한 경우에는 정책일관성 발전상황 조사 시 바이오에너지 지원정책,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순변동량, 삼림자원의 저량과 소비량의 추이에 관한 전국적인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국가 삼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유용한 지표는 삼림의 연간 생산능력 대비 실제 수확 또는 벌목량을 표시하는 삼림자원의 이용강도라 할 수 있다.

청정 에너지에의 접근, 특히 조리용 에너지 공급은 직접적인 건강개선 효과를 나타내지만,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도**에서는 약 7억8천만명이 조리를 바이오매스에 의존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석유, 고체 바이오매스 및 석탄을 조리용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연간 약 280만명이 조기에 사망하고 있다(IEA, 2017^[26]).

국제에너지기구는 에너지에의 접근을 “청결한 조리시설과 전력에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계”로 정의하는데, 이것은 초기에는 기본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면 충분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지역평균 전력소비량에 해당하는 정도의 전력에 대한 접근도를 말한다.⁴ 청결한 조리용 에너지 접근 “가족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개발도상국에서 사용하는 바이오매스 조리기구 및 모닥불보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조리시설을 주로 사용하는 가계”를 말한다. 청정 에너지에의 접근과 다양한 조리용 연료에의 의존도를 감시함으로써 PM_{2.5} 및 오존으로 인한 조기사망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기후(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해), 여성 역량강화(땀감을 모으는 시간 절약을 통해) 등 다른 SDG와의 시너지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에너지 생산과 소비로 인한 국경을 초월한 영향은 한 국가의 탄소 족적을 평가함으로써 포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배출량 통계는 국경선 내에서 발생하는 배출을 측정하는 생산기반 또는 지역 배출 회계방식에 의해 집계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에는 국경을 초월하는 생산 사슬은 반영되지 않는다. 여러 국가가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배출에 개입되어 있을 수 있다. 최종 수요에 체화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근원을 규명하기 위해서 정책입안자들은 소비 또는 수요기반의 배출량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세계적인 생산 사슬을 따라 모든 지역에서 배출되고 체화된 탄소의 최종소비가 여러 국가에 분산되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OECD, 2016_[27]).

자료에 의하면 **OECD 회원국** 전부는 체화된 탄소의 순 수입국이며, 비회원국은 순 수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⁵ 다시 말해서, OECD 회원국들은 자국 내에서 실제로 배출되는 양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소비”한다. 마찬가지로, 최근 수십 년 동안 많은 선진국에서 주로 제조업의 서비스업 전환 같은 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GDP의 탄소강도가 떨어지고 기타 환경 “유해물질”의 배출량이 감소해 왔다. 그 결과 이러한 국가들의 생산 탄소강도는 떨어지고 있는 반면, 에너지 집약적인 제품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 탄소강도는 높아지고 있다(OECD, 2013_[11]).

이러한 유형의 결론은 선진국이 누리고 있는 높은 생활수준은 개발도상국의 재래식 기술에 의해 생산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일부 의존하고 있다는 논쟁을 부채질하였다. 그러한 정보의 추적을 통하여 국내 소비양식의 잠재적 또는 실제적인 초국가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각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입안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은 생산품의 세계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산업기반을 확장함에 따라 2000년대부터 주목할 만한 배출량 순 수출국이 되었다(OECD, 2016_[29]). 그럼에도 중국은 막대한 수출 증가에 불구하고 배출량의 대부분은 국내 소비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 수준에서 유사한 일관성 문제가 발생한다. Feng 외 다수(2013_[30])는 중국의 고도로 개발된 연안 지역에서 소비하는 제품과 관련된 배출량의 80%가 부가가치가 낮고 탄소강도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중부 및 서부의 미개발 지역으로부터 수입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SDG 7의 실행과 관련된 정책일관성 확보 발전상황을 조사할 경우, 소비기반 배출량은 국가간 또는 국내의 국경을 초월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정보는 OECD 국가간 투입-산출(ICIO) 데이터베이스⁶ 및 IEA의 연료소비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통계 및 기타 산업통계로부터 입수할 수 있다.

특정 에너지원의 사용에 대한 장려금 지원은 국내외에서 예상하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바이오연료 지원제도(보조금, 무상계약 등)는 자국뿐만 아니라 공급원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의 삼림벌채와 생물다양성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육지생태계에 관한 SDG 15에서 보다 상세하게 논의한다. 바이오연료의 증산은 식량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가처분소득의 대부분을 식량에 지출하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한 소비자에게 특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러나 전파경로는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지원수준과 식량가격간의 상관관계는 신중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PCSD 평가에 있어 특정국가에 영향을 한정시키기 보다는 국내의 바이오연료 정책이 다른 국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과적으로 화석연료 보조금은 세계적인 기후변화 완화 노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오염문제를 악화시켜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끼친다.

OECD 복지기준(Framework)은 국내 소비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과 함께 자연자본의 소모에 해당하는 “흐름 지표”로 분류하고 있다. 화석연료의 연소가 전 세계의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원천이 되고 있어 보조금은 미래 세대의 복지 증진과 모순되므로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점진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정부의 개혁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OECD 화석연료 지원책 목록⁷에는 OECD와 IEA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화석연료 보조금 및 기타 지원책의 내역이 수록되어 있다.

표 4.8. SDG 7과 관련된 PCSD 발전상황 조사를 위한 지표

SDG 7. 모두를 위한 적절한 가격의 믿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 보장

	PCSD 우선과제	관련 지표	자료 출처
상충관계	모두를 위한 음용수 공급(SDG 6.1) 제한 없이 모두를 위한 에너지에의 접근성 증대(SDG 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문별 물 회수량(에너지 생산, 농업, 생활용수)(km³) 에너지 기술에 의한 물 소비(리터/MWh) 	<ul style="list-style-type: none"> FAO 물 통계 IEA 에너지 접근 전망 OECD 녹색성장지표 OECD-FAO 농업 전망
	삼림벌채 증가(SDG 15.2) 없는 바이오에너지 생산 증대(SDG 7.2의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오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량(감축톤수) 토지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톤) 삼림자원의 사용강도(목재,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OECD 2050년 환경 전망 IEA 신재생에너지 통계 OECD-FAO 농업 전망 OECD 환경통계-삼림자원
시너지 효과	청정 에너지 기술에의 접근을 촉진(SDG 7.a)을 통해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과 발병건수를 줄임(SDG 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PM_{2.5} 및 오존 농도(μg/m³) PM_{2.5} 및 오존으로 인한 조기사망 청결한 조리에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OECD 환경통계-대기 및 기후 IEA 에너지 접근 전망
국경을 초월한 정책 효과	국내의 에너지집약적 수입의존으로 인한 다른 국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 완화(SDG 7.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 기반(소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OECD 국가간 투입-산출(ICIO) 데이터베이스 IEA 연료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료
세대간 정책 효과	국내 바이오연료 보조금으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식량가격 인상 방지(SDG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 원료를 사용한 바이오연료 생산량(석유환산톤) 바이오연료 지원금(미국달러) 식량 가격(미국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OECD 농업환경지표 OECD 비료 및 바이오연료 지원정책 데이터베이스 FAO 식량가격지수 농산물시장 정보시스템(AMIS)
세대간 정책 효과	인간과 지구의 미래 복지 증진을 위한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SDG 7.2, SDG 12.c)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석연료를 사용한 에너지 비율(%) 연료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톤) 화석연료 지원금(미국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IEA 세계 에너지 전망 OECD 환경통계 OECD 화석연료 지원책 목록

주석: 이는 예시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각국은 자국의 환경 및 지속가능개발목적과 가장 관련성이 큰 상호작용과 정책

효과를 파악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출처: OECD PCD 부서.

목표 11. 지속 가능한 도시 및 지역사회

지속가능개발목표 11은 각국이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를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도시가 생성하는 성장, 일자리 및 서비스 기능은 도시가 자연자원, 기후 및 환경에 가하는 압박과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복지에 대한 도시의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접근편의성 대 혼잡)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SDG 11의 실행과 관련된 정책일관성 확보 발전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도시 집적의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고 그 장기적인 실행가능성과 국내외적인 영향을 감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경로로 전환하려는 목적을 설정한 도시와 지역이 직면하는 한 과제는 이러한 전환의 진척도 평가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부족이다(OECD, 2013_[11]).

전 세계에 걸쳐 도시화의 원동력은 유사하다(OECD, 2015_[31]). OECD 대도시 데이터베이스⁸는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고 PCSD 평가를 위한 유용한 정보가 되는 일단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및 인구통계적 추정지표를 제공한다(표 4.9).

표 4.9. OECD 대도시 데이터베이스: 비교 가능한 도시지표

경제	환경	사회	인구통계
GDP/인(미국달러)	이산화탄소 배출량/인 (톤/주민)	노동인구(명)	인구밀도(명/km ²)
노동생산성	백만 명당 녹지(백만 명당 m ³)	실업률(%)	인구증가율(%)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특허 출원(건수)	대기오염에의 노출 평균치 (PM2.5)	범죄 통계(추후 결정)	국가가치 중 인구의 비중(%)

주석: OECD 281개 대도시 지역에 관한 자료 입수 가능.
출처: OECD 대도시 데이터베이스(OECD,(n.d.)(32)).

그러나 **각국의 도시화와 관련된 과제는 각각 다르다**(OECD, 2015_[31]). 예를 들면, 고도로 도시화가 이루어진 선진국은 도시화의 정도가 낮은 개발도상국과는 상이한 지속 가능성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이행상황을 조사해야 할 PCSD 우선과제도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무를 예시하고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었다. 관련 지표와 자료 출처는 표 4.10을 참고하라.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국가들 중의 하나인 동시에 가장 도시화된 국가들 중의 하나다. 주요 도시, 특히 가장 큰 도시인 **오클랜드**에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사회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완화시키기 위한 한 방안인 **오클랜드 계획**에는 토지이용, 교통, 주택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장기적인(30년) 방향이 통합적인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행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목표, 원칙과 계량화된 세부목표가 포함되어 있다(OECD, 2017_[33]). 사용하는 지표(폐기물 발생량, 재활용 비율)의 대다수를 개별적인 도시 우선과제의 달성이 다른 우선과제, 사회적 목적 또는 다른 국가나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PCSD 평가 항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도시화가 덜 이루어진 지역이지만 도시화율은 가장 높은 지역중 하나로 대륙 전체에 걸쳐 도시화 수준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OECD, 2015^[31]). 또한 아프리카 도시인구의 60% 이상이 빈민가에 밀집되어 있다(Lall, Somik Vinay, J. Vernon Henderson, 2017^[34]). **케냐 나이로비**의 키베라 지역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빈민가로 심각한 물, 위생시설, 위생문제를 안고 있다. 오염된 물로 인한 사망률 자료와 양질의 상수도과 하수처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도시인구의 비율을 비교함으로써 PCSD 발전상황 조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는 다른 SDG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Ahrend와 Schumann(2014^[35])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대도시(인구 50만명 이상)가 위치한 **유럽지역**은 각국의 평균 성장률을 고려할 때 대도시가 없는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1인당 GDP를 달성하였음을 보여준다. PCSD 발전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도시 집적, 지역별 GDP와 인구, 이동시간과 거리에 관한 자료간의 상관관계를 사용하면 이러한 긍정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다.

도시의 생태 족적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고 감시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다. 생태 족적을 통하여 도시가 소비할 자원을 생산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토지와 수역을 측정한다. 세계 족적 네트워크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국가에서 대규모 도심지가 국가 생태 족적의 주된 원천이 되고 있으며 1인당 족적 또한 전국 평균치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면, **그리스 아테네**의 자원 수요는 국가 전체 생태용량을 초과한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도시 자체 생태용량은 32만4천 글로벌 헥타르에 불과하지만 생태 족적은 8천4백2십만 글로벌 헥타르에 달한다.⁹ 다시 말해서, 모스크바는 구역내의 자연이 재생할 수 있는 용량의 260배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Boev et al., 2016^[36]).

반면에 도시는 또한 개인적인 족적을 줄일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시주민들은 광범위한 대중교통과 가정용 중앙난방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베이징** 도심지의 가정용 에너지 소비의 탄소 족적¹⁰ 은 농촌지역의 탄소 족적보다 낮다. 이와는 반대로 농촌지역은 가정용 난방 및 냉방을 위한 에너지 수요 증가, 자가용 차량의 증가 및 분산된 농촌인구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Gong et al., 2012^[37]).

생태 족적의 개념에 대하여는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양식에 관한 SDG 12에서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로 한다.

표 4.10. SDG 11과 관련된 PCSD 발전상황 조사를 위한 지표

SDG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좋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및 주거지 조성

PCSD 우선과제	관련 지표	자료 출처
절충안 도시화(SDG 11)가 폐기물 감축 노력(SDG 12.5)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인구 증가율(%) ▪ 도시 폐기물 발생량(kg/인/년) ▪ 도시 재활용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의 녹색성장
시너지 효과 빈민가 개선(SDG 11.1)과 안전하고 저렴한 음용수에의 접근 개선(SDG 6.1)을 통한 수질오염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된 물, 불결한 위생시설 및 위생결핍으로 인한 사망률(%) ▪ 개선된 수원에 접근 가능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O 세계 건강 관측소 ▪ 세계은행, 세계개발지표

	기인한 사망과 질병 감축(SDG 3.9)	도시인구 비율(%) ▪ 하수처리시설에 연결된 도시인구 비율(%)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화(SDG 11.3) 및 교통시스템(SDG 11.2) 구축 촉진을 통한 1인당 경제성장 수준 유지(SDG 8.1)	▪ 1인당 GDP 성장률(%) ▪ 대도시 거주인구(천명) ▪ 여행시간 및 거리	▪ OECD 국가회계통계 ▪ OECD 대도시 데이터베이스
국경을 초월한 정책 효과	도시의 주변 지역에 대한 생태 족적 최소화	▪ 생태 족적(글로벌 헥타르)	▪ 세계 족적 네트워크
세대간 정책 효과	도시의 장기적인 탄소 족적 감소를 위한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확충	▪ 도시 대중교통 접근성 (대중교통 정류소로부터 1km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의 백분율) ▪ 교통부문의 연료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체에 대한 백분율)	▪ 국제 교통포럼 ▪ IEA 연료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료 ▪ OECD 환경통계

주석: 이는 예시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각국은 자국의 환경 및 지속가능개발목적과 가장 관련성이 큰 상호작용과 정책 효과를 파악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

출처: OECD PCD 부서.

목표 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지속가능개발목표 12는 각국이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SCP)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및 부문별 계획, 지속 가능한 상관습 및 소비자 행동과 연계된 강력한 국가적 SCP 틀을 구축하고 유해물질과 폐기물 관리에 관한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United Nations, 2017_[38]). 국가적인 PCSD 우선과제와 지표를 파악함으로써 각국은 미래세대의 필요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실무를 예시하고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었다. 관련 지표와 자료 출처는 표 4.11을 참고하라.

자연자원의 감시는 SDG 12의 실행을 위한 정책일관성의 발전상황 조사 노력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는 자연자원이 경제활동에 사용되고 경제적 성과에 기여하는 방식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포함된다. 자원생산성의 발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원자재 흐름분석(MFA)¹¹에 기초한 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 동 지표는 환경에서 추출한 원자재의 경제부문 투입(주변 자원환경에서 추출 또는 수확하거나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한 자원), 경제부문 내 투입물의 변환 및 사용(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환경에 유출되는 경제부문의 잔류물(폐기물, 오염물질) 또는 수출의 형태로 다른 국가로 유출되는 경제부문의 산출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관련 자료는 생산, 소비 및 무역 자료 및 환경 통계로부터 수집한다(OECD, 2014_[39]).

흔히 사용하는 지표는 원자재(또는 원료) 투입량에 대한 경제적 산출량을 표시하는 원자재 생산성(또는 강도)이다. 원자재 생산성은 국내원자재소비량(DMC) 또는 국내원자재투입량(DMI)에 대한 GDP로 정의된다.¹² 원자재 생산성은 경제 전체에 대한 범경제 원자재흐름 계정으로부터 산출할 수 있으며 다양한 원자재의 유형과 그룹별로 구분할 수 있다. 동 계정에 수자원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OECD, 2014_[39]).

식량 멸실과 폐기물 감축을 통하여 긍정적인 환경적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 FAO는 매년 전 세계에서 인간이 소비할 목적으로 생산하는 식량의 3분의 1이 멸실되거나 폐기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경제성과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기회를 모두 놓치고 식량 재배에 사용된 자연자원을 낭비하는 셈이다. 예를 들면, 식량 폐기의 총 탄소 족적은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세계적으로 연간 약 4.4 Gt에 달하며 고소득 국가의 1인당 족적은 저소득 국가의 1인당 족적의 두 배가 넘는다(FAO, 2013). 이러한 유형의 개량정보는 PCSD 평가를 위한 중요한 정보가 되며 다른 SDG와의 상호작용을 감시하는데 도움이 된다.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을 위한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외에서의 국가 족적을 파악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스위스는 생산기반 자원 생산성 측면에서는 OECD 평균 이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1인당 소비기반 환경 족적은 OECD 회원국 가운데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스위스는 유럽에서 도시 고형폐기물을 가장 많이 배출하며 OECD 회원국 중에서 1인당 소비기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높은 국가다. 스위스는 또한 지속 불가능한 소비 양식과 관련된 환경 족적이 가장 큰 국가이기도 하다. 스위스의 비교적 개방적인 무역정책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의 절반에서 4분의 3이 재화와 용역의 수입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OECD, 2017_[40]).

따라서, 녹색경제 실행계획(GEAP)의 발전상황 보고를 위해 스위스가 파악한 지표 집합에는 생산성관련 지표 외에 절대적 환경 수요기반 족적(온실가스, 생물다양성, 원자재와 에너지)이 포함되어 있다(Eidgenössisches Departement für Umwelt, 2016_[41]). 스위스는 이를 통하여 특히 국내 소비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환경영향을 해결하고 감시할 수 있다.

생태 족적은 다른 족적 지표를 보완한다. 생태 족적은 개인, 전체인구 또는 활동이 효과적인 기술과 자원관리기법을 사용하여 소비용 자원을 생산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생물학적으로 생산성이 있는 토지와 수역의 면적을 측정한다. 생태 족적은 일반적으로 전세계적으로 비교가능하며 세계 평균생산성에 의해 표준화된 헥타르인 글로벌 헥타르(gha)로 표시한다(Global Footprint Network_[42]).

무역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 또는 국가의 생태 족적에는 전 세계의 토지 또는 해양이 포함된다(Global Footprint Network_[42]).

- **소비 생태 족적(EFC)**은 지정된 인구의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면적으로 정의한다. 소비 족적(gha로 표시된)에는 소비용 원자재 생산을 위한 면적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흡수할 면적이 포함된다.
- **수출 생태 족적(EFE)**은 다른 국가에 수출되어 소비되는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체화된 족적이다.
- **수입 생태 족적(EFI)**은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소비되는 제품에 체화된 족적이다.
- **생산 생태 족적(EFP)**은 지리적으로 특정된 지역 내에서 수확된 모든 자원과 생성된 모든 폐기물에 대한 족적의 합계다.

이는 특정 지역의 인구의 생태 족적이 그 지역의 생태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태적 적자가 발생하며 다른 국가로부터 추가로 자원을 수입하여 수요를 충족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특정 지역의 생태용량이 그 생태 족적을 초과하면 생태여력이 생기게 된다(Global Footprint Network_[42]).

고소득 국가의 1인당 생태 족적은 저소득 국가의 1인당 생태 족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WWF, 2016_[23]).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자원수요는 기타 대부분의 지역에 비해 특히 빠르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한국은 전체 인구의 생태 족적이 1인당 생태용량보다 8배나 크며 이는 불과 50년 사이에 거의 다섯 배가 증가한 것이다**(WWF-Lorea, 2016_[43]).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국경을 초월한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완화시키기 위해 교역상대국의 생태 족적과 생태용량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의 주요 곡물 수입국인 한국의 무역구조는 가상수 무역 측면에서의 수출국의 수자원과 관련되어 있다(물에 관한 SDG 6에서는 쌀 무역국인 태국, 인도 및 파키스탄을 주요 가상수 수출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화학물질과 유해 폐기물을 환경에 적합하게 관리함으로써 인간과 지구의 미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화학산업은 매년 4조 유로 상당의 제품을 생산하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산업이다. OECD 회원국이 전 세계 화학제품 생산량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화학 제품의 안전한 생산과 소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OECD, 2013_[44]).

표 4.11. SDG 12와 관련된 PCSD 발전상황 조사를 위한 지표

SDG 12.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 보장

	PCSD 우선과제	관련 지표	자료 출처
절충안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효율적인 사용(SDG 12.2)을 저해하지 않는 높은 경제적 생산성 달성(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에너지 원자재 생산성 ▪ 국내원자재소비량(DMC) ▪ 국내원자재투입량(DMI) ▪ 환경손실 조정 다요소 생산성(EA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환경통계-원자재 자원 ▪ OECD 생산성 통계 ▪ IEA 세계 에너지 전망 ▪ OECD 녹색성장지표
시너지 효과	전 세계 1인당 음식을 쓰레기 배출량 반감(SDG 12.3)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SDG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물 쓰레기(톤) ▪ 음식물 쓰레기 탄소 족적 (이산화탄소 등가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O 음식물 쓰레기 족적(FWF) 모델
국경을 초월한 정책 효과	국내 소비로 인한 다른 국가에 대한 족적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 기반(소비) 족적 ▪ 소비 생태 족적 (글로벌 헥타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족적 네트워크
세대간 정책 효과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수명주기에 걸친 친환경적 관리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 및 유형별 폐기물 처리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환경(OECD, 유엔통계청, 유럽연합 통계청, 바젤·로테르담·스톡홀름 협약 사무국의 자료를 토대로 개발 예정인 지표)

주석: 이는 예시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각국은 자국의 환경 및 지속가능개발목표와 가장 관련성이 큰 상호작용과 정책 효과를 파악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출처: OECD PCD 부서.

목표 15. 육지 생태계

지속가능개발목표 15는 각국이 육지생태계를 보호, 복구하며 그 지속 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고, 삼림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며, 사막화를 저지하고, 토지 황폐화를 방지하고 복원하며, 생물다양성 손실을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 각국은 지리적 위치, 자연적 특성 및 기후에 따라 상이한 과제를 안고 있지만 토지이용과 피복변화, 대기 및 수질 오염, 농업의 집약화, 기후변화, 외래종의 도입, 바이오연료 생산/연소 기술 등의 생태계 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동인은 동일하다. 이러한 동인 또는 위협요소는 또한 상호작용을 통해 종을 약화시킨다. 예를 들면, 서식지 파괴와 남획은 기후변화에 대한 종의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Dirzo et al., 2014_[45]).

토지피복 변화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대한 압박을 표현하는 최선의 상징적 현상으로 간주된다. OECD는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토지피복과 토지피복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정책관련 지표를 개발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OECD, 2016_[46]). 대부분의 소득 창출을 토지기반 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의 실행과 관리를 통해 빈곤 퇴치에도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SDG 15의 실행과 관련된 PCSD 이행상황 조사의 중요한 부분은 자국과 다른 국가에서의 토지에 대한 경쟁적 수요, 다양한 토지이용과 환경(생물다양성), 경제(소득), 사회(복지)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간의 절충안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무를 예시하고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었다. 관련 지표와 자료 출처는 표 4.12를 참고하라.

농업과 관련 지원책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칠레는 독특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기후, 생태계 및 초목이 다양하며 세계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수많은 고유한 종이 존재한다. 세계적인 생물다양성 유지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태 지역이 많지만 토지용도 변경, 어업, 채광, 도시와 사회기반시설 개발로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비료와 살충제의 사용은 토양과 물에 상당한 위험을 끼치고 있다. 칠레 농민들에 대한 지원은 감소하여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적절한 수준이지만 잔존하는 지원으로 인해 농업생산이 증가하여 물의 과용 또는 남용 및 잠재적으로 유해한 투입에 따른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OECD/ECLAC, 2016_[47]). 여기에서 PCSD 발전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잠재적으로 가장 환경에 유해한 농업 지원책¹³과 다른 한편으로는 생물다양성과 농업으로 인한 생물다양성 손실과 관련된 지표를 함께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멕시코 또한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농민을 위한 일부 국가 지원프로그램이 삼림벌채와 삼림 황폐화로 인한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국가 REDD+ 계획에 역행하고 있다(OECD, 2013_[48]). 이러한 경우에 정책일관성 확보 발전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위한 지원책과 배출량 감축을 위한 지원책을 검토하여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토지용도변경에 따른 삼림 이득과 손실을 검토함으로써 정부가 삼림의 온실가스 순 배출량 감축 능력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수입이 수출국의 삼림벌채 및/또는 사막화를 초래할 수 있다. 기업농으로 인한 열대우림 파괴가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Lawson Sam, 2014_[50]). 이는 앞서 논의한 사람, 복지 및 탄소저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SDG 12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영국**은 "삼림벌채 위험 상품"의 주요 수입국이자 소비국이다. WWF와 왕립 조류보호협회가 의뢰한 최근의 연구에서 영국이 수입하는 삼림 손실과 관련된 쇠고기와 피혁, 코코아, 야자유, 펄프와 종이, 고무, 대두, 목재 등 일곱 개 품목과 관련된 잠재적인 국외 영향의 계량화를 시도하고 있다. 동 연구의 결론에 따르면 이러한 7개 품목의 연간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만 영국 전체 면적의 절반인 13.6 헥타르의

토지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의 해외 토지 축적의 40% 이상이 삼림벌채의 위험이 높거나 매우 높고 거버넌스가 취약하며 노동기준이 열악한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Jennings, Sheane and Mccosker, 2017_[51]).

환경적으로 인증된 수입품에 대한 계량화된 자료는 PCSD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자료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다.

야생동물로 만든 제품의 불법 거래는 해당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부 아프리카의 많은 범죄국가들은 동식물을 포함한 토착 자연자원을 그 중점적인 대상으로 한다. 그들의 일탈행위로 인해 지역민의 잠재적인 이익이 소멸되고 생명다양성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생계수단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의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OECD, 2018_[52]). 아시아 시장은 흔히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야생동물과 야생동물로 만든 제품(상아와 코뿔소 뿔 포함)의 최종 거래 장소가 되고 있지만, 일본과 같은 OECD 회원국을 포함하여 유럽연합 회원국 및 미국까지도 희귀 야생동물과 불법제품의 경유지, 도착지 및 심지어 원산지로서 가담하고 있다(OECD, 2018_[53]).

불법적인 자금흐름을 차단하고 귀중한 야생동물군에 대한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들간의 일관되고 조직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OECD, 2018_[52]). 국경을 초월한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일관성 확보 발전상황 조사를 위해서는 불법거래와 관련 정책적 대응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

육지 및 해양 보호구역에 관한 지표는 아이치 세부목표와 SDG 달성을 위한 각국의 보존 노력을 대변한다. OECD는 새로운 연구를 통하여 국가별, 유형별 및 IUCN 관리범주별 육지 및 해양 보호구역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법론을 활용하면 이전보다 더 상세하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국가별 보호구역에 대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OECD, 2016_[46]). 또한 SDG 15의 실행과 관련된 PCSD 확보 발전상황 조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표 4.12. SDG 15와 관련된 PCSD 발전상황 조사를 위한 지표

SDG 15. 육지생태계의 보호, 복구 및 지속 가능한 이용 촉진

	PCSD 우선과제	관련 지표	자료 출처
절충안	생물다양성 손실방지(SDG 15.5)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농업생산성 향상(SDG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잠재적으로 환경에 가장 유해한 농업 지원금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OECD 농업 녹색성장지표 세계자연보전연맹
	삼림벌채(SDG 15.2)로 인한 배출량 감축(SDG 13)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농업생산성 향상(SDG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림분야 온실가스감축(BBB+) 지원금(미국달러) 토지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OECD 농업 녹색성장지표 OECD 환경통계
시너지 효과	손상된 토지 및 토양의 복구(SDG 15.3)을 통한 소규모 자작농의 소득증대(SDG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지 면적당 식량 생산량(톤/헥타르) 소규모 자작농의 평균소득 (개발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OECD 농업통계 FAO AGRIS 프로젝트
국경을 초월한 정책 효과	야자유/대두의 국내수입으로 인한 생산국의 삼림벌채 억제(SDG 1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자유/대두 생산량(톤 또는 재배면적) 야자유/대두 수입/수출량(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유 세계 데이터베이스 OECD-FAO 농업 전망 국가 무역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림벌채율(%) ▪ 인증된 수입량 비율(%) ▪ 불법 야생동물 제품 거래로 인한 다른 국가와의 불법적 자금흐름 억제(SDG 1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O 세계 삼림자원 평가 ▪ WWF-IUCN TRAFFIC 야생동물 거래감시 네트워크 ▪ 세계 금융 무결성 ▪ 위조 및 해적행위의 경제적 영향(OECD, 2008) 	
세대간 정책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지 생물다양성의 유지(또는 손실의 원상회복)(SDG 1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끼리 상아와 코뿔소 뿔 거래량(미국달러) ▪ 불법적 자금흐름(미국달러) ▪ 제품/경제의 일반무역관련 위조지수(GTRIC-p 및 GTRIC-e)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지수 ▪ 육지 및 해양 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자연보전연맹 ▪ OECD 환경통계

주석: 이는 예시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각국은 자국의 환경 및 지속가능개발목적과 가장 관련성이 큰 상호작용과 정책 효과를 파악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출처: OECD PCD 부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관련 협력국가의 기고

아래 기고문에 제시된 의견과 논쟁은 저자의 견해이며 OECD 또는 회원국 정부의 공식 견해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아니한다.

세계가 직면한 새로운 현실에 개발기여도지수 적용

Anita Käppeli, 세계개발센터

SDG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분석도구가 필요하다. 2030 의제의 이해관계자는 그러한 분석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서로 배우고 세부목표 실행의 발전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세계개발센터(CGD)는 매년 발간하는 개발기여도지수(CDI)를 사용하여 각국의 정책을 조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CDI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에 따라 지속가능성의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차원을 다룬다. CGD는 CDI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적 목표의 실행에 참여하는 수행주체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다음 각 절에서는 이러한 교훈을 조명하고 CDI 자체가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기술한다.

각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정책 측정

2003년부터 계량지표의 집합체인 CDI를 활용하여 27개 OECD 회원국의 정책 실행노력과 저소득 국가 국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 오고 있다. CDI를 사용하여 원조, 재정, 기술, 환경, 무역, 안전 및 이주 등 7개 분야의 정책일관성을 측정한다. 매년 순위를 매김으로써 국내 및 국가간에 시민사회와 정책입안자들 사이의 대화를 장려하고 서로 학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CDI를 통하여 고소득 국가들이 관대한 양질의 원조정책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조명한다.

CDI의 채점 시스템을 통하여 각국의 금융 투명성 확보 능력과 국제투자들 준수여부를 인정한다. CDI를 통하여 각국이 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어류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장려한다. CDI는 또한 개방적인 무역정책, 세계 안보체제와 평화유지 노력 및 개방적인 이민정책에의 기여도 고려한다. 장벽을 설정하여 기술공유 또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빈곤한 독재국가에 무기를 판매하거나, 세계적 공공재를 훼손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감점한다.

SDG에 발맞추어 CDI 또한 개발의 경제적, 환경적 및 사회적 차원을 망라하는 전체론적 접근법을 적용한다. CDI의 독특한 역할은 성과보다는 정책을 평가하고 그러한 정책이 다른 국가의 개발에 어떻게 기여 또는 방해하는지를 검토한다. 따라서, CDI는 고소득 국가들의 정책 파급효과를 조명한다.

15년간의 CDI로부터 얻은 교훈

지난 15년에 걸친 CDI 발간과 각국의 정책적 노력에 대한 이행상황을 조사하여 얻은 몇 가지 교훈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적 목표 실행의 진척도를 측정하고 조사하는 방식에 다섯 가지 권고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 **투명성:** 신뢰성 있게 정책 - SDG의 경우에는 성과 - 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방법론과 자료 출처에 대해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결과의 비교가능성을 명확하게 하고 자료의 부족이나 성급 현상에 대처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 **이해가능성:** 대다수 국가들은 CDI 결과에 대해 기꺼이 서로 논의하고 학습하고자 한다. 그러나 세부목표의 대상이 자주 사용하는 소중하고 설득력 있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인식과 소통:** 지표의 집합은 중요한 정책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변화를 원하는 주체와의 대화를 개시하기 위한 훌륭한 도구다. 주된 대상을 효과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소통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 **증거:** 최선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자료의 가용성과 증거의 효용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발전상황 조사 방법은 계속 적합하게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감시 도구 자체의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할 수 있다.
- **상호연관성:** SDG 이행상황 조사 시 개별적인 목표와 세부목표 간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CDI 관련 분야를 다룰 때 종종 상이한 정책 분야간의 상호연관성의 문제와 직면하게 된다. SDG간의 상호연관성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할 수는 없지만 개별적인 세부목표를 감시하고, 상이한 목표와 세부목표들 간의 정책일관성과 절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2030 의제와 관련된 논의에 가치 있게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개별적인 정책과 행위가 세계적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성과와 어떠한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의사결정자와 입안자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CDI를 어떠한 방식으로 새로운 세계적 현실에 적합하게 수정할 것인가?

지난 15년 동안 CDI를 활용하여 유력한 개발 수행주체들의 정책 실행 노력을 조명하고 개발을 위한 노력에서의 지도력을 실증해 왔다. CDI는 아직도 정책일관성 평가를 위한 가치 있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나 CDI가 생성되는 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MDGs는 SDG로 대체되었으며, 새로운 세계적 문제가 발생하고, 중진국의 등장으로 기증국가의 유형이 다양해졌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 보호무역주의 사상이 고개를 들고 있으며 기후변화, 양성평등, 불평등 및 이주 등의 세계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당연하게 높아지고 있다.

세계개발센터는 향후 3년에 걸쳐 CDI를 개선하여 최첨단의 조사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계획이다. 지도적 사상가, 선진국 및 중진국의 정책입안자 및 관계 시민사회단체를 주요 검토과정에 참여시켜 다양한 견해와 관점의 수용이 보장되도록 할 예정이다.

금년 HLPF의 중요한 주제인 SDG 달성과 회복력이 좋은 사회를 조성하는 일은 수행주체, 정책입안자 및 시민사회간의 모범사례와 아이디어의 소통과 공유를 통한 학습과정을 통해서 가장 잘 실현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CGD가 검토과정에서 얻고자 하는 이익이기도 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CDI는 SDG와 경쟁관계 보다는 보완관계를 유지한다. 한 명도 소외되지 않게 하고자 하는 정신으로 SDG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길로 매진하는 각국의 발전상황에 올바르게 관심을 집중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DG가 상정하는 세계적 변혁의 테두리 안에서 정책 파급효과가 가장 큰 주요 강대국들은 보다 의욕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자국의 기여도를 높이기를 기대할 수 있다. CDI를 활용하여 이러한 정책들을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비교함으로써 SDG의 진척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스리랑카의 에너지 SDG 7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적용의 교훈

Navam Niles, Janathakshan Gte Ltd and Karin Fernando, 빈곤분석센터

2030 의제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다양한 차원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 실행은 세계적 과정이나 주된 책임은 각국 정부에게 부여되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행위가 필요하다. 공공정책은 2030 의제를 실행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며 그 유효성은 공공정책간의 일관성에 의해 결정된다. 정부 및 기타 기관이 정책일관성을 확보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는 배경 증거, 도구 및 과정을 제공하여 그들의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빈곤분석센터(CEPA)는 Janathakshan Gte Limited와 공동으로 스리랑카에서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여 상호연관성과 균형을 연구하기 위한 틀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다. 연구에서는 에너지에 관한 SDG 7과 관련된 국가 정책을 검토하고 “청정한 에너지 안전”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첫 번째 단계로서 SDG 의제 내에 포함된 청정한 에너지 안전과 관련된 요소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청정 에너지 관련 자료를 지속 가능한 개발의 세 가지 차원에 연계시킴으로써 이루어졌다. 환경적 차원에는 신재생에너지(7.2), 에너지 효율(7.3) 및 전화를 적용하였다. 사회적 차원에는 에너지에의 접근(7.1) 및 에너지 구입능력(7.1)을 적용하였고, 경제적 차원에는 에너지 신뢰성(7.1)과 화석연료 보조금 축소 노력을 적용하였다. 이를 정책의 지속 가능한 개발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한 균형을 결정하기 위한 분석의 토대로 삼았다. 이는 에너지와 관련된 일련의 정책 조합에서 정책 기술서를 추출한 다음 각 기술서를 청정한 에너지 요소에 연계시킴으로써 이루어졌다. 이 작업에서 기술서를 평가하기 위해 규정한 청정한 에너지 안전 기준의 유용성이 입증되었다.

분석 과정에서는 또한 다른 SDG와의 상호연관성을 규정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였다. 첫째, 상호연관성(Le Blanc, 2015_[54]) 및 균형(Cutter, 2015_[55])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여 기준을

설정하였다. 기준은 환경적, 사회적 및 경제적 차원에 각각 44%, 33%, 22%를 할당하여 차등을 두었다. 기준은 SDG 1, 8, 9, 10, 11, 12 및 13의 7개 SDG와의 최소 상호연관성을 설정하였다. 그 다음 다양한 SDG 세부목표와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해 일련의 정책 조합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균형의 관점에서는 정책들이 환경적, 사회적 및 경제적 차원에 걸쳐 각각 50%, 33%, 17% 수준으로 불균형적으로 분포하여 기준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 상호연관성의 관점에서는 모든 정책이 예상한 SDG 모두와 관련되어 있었으며 SDG 2 및 SDG 15와 같이 예상하지 않은 SDG와의 관련성도 밝혀졌다.

본 연구의 결과 도출과 시각화에는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정책입안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교차결합과 파급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예를 들면, 에너지 신뢰성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적 집단에 대항하는 환경정책의 방향성 왜곡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이 그러한 일관성 도구를 사용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의 다양한 차원간의 시너지 효과를 파악하고 촉진하며, 무엇보다도 절충안을 인식하고 조정하여야 한다는 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본 연구과정을 통하여 기존 정책은 일관성 향상을 위한 양호한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분석의 설득력은 정책의 완전무결성에 달려있음이 입증되었다. 다양한 당사자들이 각기 다른 논리 모델과 목적을 토대로 입안한 정책의 심도와 내용이 상이하여 분석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또한 실행자로서의 이해관계자가 채점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분석과정에서 정책의 처방을 벗어나 조작화의 실제적인 측면에 바탕을 둔 채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네트워크 분석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연결부분(crosslinks)을 성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지만 분석의 엄밀성과 현실적인 적용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Southern Voice Network on the post MDG Development Goals](http://southernvoice.org/implemented-the-sdgs-responding-to-the-challenges-of-interconnectivity-and-balance/) 의 지원과 지도 편달에 힘입은 바가 크다. 본 연구의 전편인 "상호연관성과 균형의 과제에 대응한 SDG의 실행"은 <http://southernvoice.org/implemented-the-sdgs-responding-to-the-challenges-of-interconnectivity-and-balance/>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의회 SDG 활동 조사: 기술적인 해답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연구센터(CIECODE)

다양한 부문과 관련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의 특성으로 인하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주된 사회적, 환경적 및 경제적 과제에 대하여 그 복잡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기회가 생긴다. 동시에 목표 및 세부목표들의 상호관련성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주제별 정책의 "수직적" 배분에 따라 과정과 구조를 조직해 왔던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또는 언론단체들은 2030 의제를 실행, 평가 및 감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정책입안자들이 의제의 이면에 복잡하게 얽힌 상호연관성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부족으로 SDG 목표를 자신들이 담당하는 공공정책에 제대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제안되거나 승인된 SDG 관련 정치활동을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노력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2030 의제에 포함된 문제(특히 오염, 양성평등, 음식물 쓰레기, 강제노역 등)와 관련된 뉴스를 다루어 왔던 대중매체들이 SDG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는 풍조가 만연된 이면에는 SDG의 이러한 상호연관적 특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사정으로 많은 국가에서 기존의 관련 공공정보의 이용과 공개적 접근 문제가 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모든 자료를 선제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형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각국의 SDG 실행에 있어서의 진전 및 차질에 대한 감시가 곤란해지고 지역,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SDG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의 기본적인 작용에 대한 시민들의 혐오감과 무관심이 증가한다.

기술에 의한 장애 극복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CIECODE(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스페인 싱크 탱크)는 혁신적인 기술도구인 TiPi를 2030 의제 틀에 적용하고 있다.¹⁴ Transparency(투명성), Information(정보), Participation(참여), Influence(영향력)을 뜻하는 TiPi는 스페인 의회가 발간하는 모든 SDG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자동적인 대규모 태깅 과정을 통하여 특정 SDG 목표 및 세부목표와의 연관성에 따라 분류한다. 그 다음 이러한 정보는 온라인 브라우저를 통해 공개되며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검색, 확인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다.

TiPi는 직관적이고 매력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일견 분명하지 않은 의회의 SDG 관련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어떤 SDG가 특정 법안의 영향을 받는가? 어떤 SDG가 의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거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가? 2030 의제의 실행에 적극적인 의원은 누구이며 등한시하는 의원은 누구인가? 더 중요한 점은 TiPi는 다양한 의회의 위원회가 동시에 제안하고 심의하는 모든 SDG 목표 또는 세부목표와 관련된 법안을 탐지하여 PCSD 관점에서 정치활동을 분석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TiPi는 수 천 건의 공표되는 제정법의 PDF 파일을 수집하여 조직적인 데이터베이스로 변환하기 위해 필요한 선진 컴퓨터 과학과 정책입안자,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의 보다 전통적인 지식을 결합하여 정치적 계획을 관련 SDG 목표 및 세부목표와 자동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SDG 유의어 사전을 구축한다. TiPi는 이러한 전문지식을 사용자들에게 전수함으로써 사용자가 SDG의 복잡한 구조를 극복하고 자격을 갖춘 관점에서 정치활동을 관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TiPi는 또한 공공정보와 접근 가능한 유용한 정보간의 격차를 줄이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제 SDG 관련 정책의 감시 및 보고에 필요한 주요 정보는 온라인 검색엔진을 통해 한 번의 클릭으로 무료로 간편하게 입수할 수 있다.

열린 의회, 정책일관성 및 2030 의제

의회는 SDG 실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의회는 각국에서 장차 통과될 수십만 건의 법률, 법안, 공공계획 및 예산과 관련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는 적절한 공공기관이다. TiPi는 의회관련 정보의 공개와 조직화를 통하여 이러한 본질적인 과업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및 일반시민이 의회에 그 달성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행정부는 TiPi를 활용하여 가 제정법과 관련된 SDG 실행을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다. 스페인 정부는 최근 이러한 잠재력을 인정하였으며 스페인의 SDG 실행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재 설계중인 공식적인 감시 및 문책 시스템의 일부로 TiPi를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TiPi는 스페인 외부로 확장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도구의 암호는 공개되어 있고 공개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국가 또는 초국가적인 의회가 손쉽게 복제하고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관심을 보이는 다른 대륙에 있는 국가, 독일의 주 또는 유럽의회를 불문하고 이러한 취지로 TiPi를 실행할 수 있으며 단시일 내에 SDG 관련 활동에 대한 조사를 게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TiPi의 목표는 지역,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2030 의제를 달성할 수 있는 공공 정책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TiPi가 활용해야 할 네 가지 필수적인 구성요소는 1) 적극적이고, 박식하며 까다로운 시민, 2) 자율적인 시민사회단체, 3) 유능하고 비판적인 언론기관 및 4) 공공의 통제를 받는 책임 있는 정치인과 공무원이다. TiPi는 시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정보접근을 더 쉽게 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언론기관에 새롭고 전문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에 기반한 2030 의제에 대한 공공의 토론을 촉진한다. 끝으로, TiPi는 모범사례에 대한 인식과 여론의 압력과 책임에 대한 노출 증가를 통하여 정치인과 공무원에 대한 유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각주

¹ 정책 상호작용과 정책 효과에 관한 두 장은 OECD PCD 부서가 2017년 7월에 발간한 *개발을 위한 일관성 보고서* “국가 수준에서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확보 발전상황 조사: 무엇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근거를 두고 있다.

² OECD 농업환경 데이터베이스에는 수자원, 수질, 농업 및 토지, 토양침식, 암모니아,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배출,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 및 바이오연료 생산량, 살충제 판매량, 가금류 지수와 관련된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전체 데이터베이스는 <http://www.oecd.org/tad/sustainable-agriculture/agrienvironmentalindicators.htm> 에서 검색할 수 있다.

³ 증산수는 강우로 인해 토양에 스며든 수분이며 증산작용에 의해 식물이 소비한다. 증산수는 물 순환 과정의 증발산 유량의 일부를 구성한다. 담수는 호수, 강, 지하수, 빙하와 눈에 저장된 물이다.

⁴ IEA의 에너지 접근 방법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www.iea.org/energyaccess/methodology 를 방문하라.

⁵ 소비기반 배출량보다 생산기반 배출량이 더 높은 국가는 배출량 순 수출국이며 소비기반 배출량보다 생산기반 배출량이 더 낮은 국가는 배출량 순 수입국이다.

⁶ OECD 국가간 투입-산출(ICIO) 데이터베이스는 부가가치 기준 무역(TiVA) 측정을 위한 OECD-WTO 공동프로젝트 하에서 개발된 지표의 주된 원천이다. 동 데이터베이스는 또한 국제무역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량을 측정하기 위한

주된 입력자료로 활용됨으로써 환경적 분석에도 기여한다. 동 데이터베이스는 <http://www.oecd.org/sti/ind/inter-country-input-output-tables.htm> 에서 검색할 수 있다.

⁷ 화석연료 보조금에 관한 완전한 데이터베이스는 <http://www.oecd.org/site/tadffss> 에서 검색한다.

⁸ OECD 대도시 데이터베이스 및 OECD 지역 데이터베이스는 <http://www.oecd.org/cfe/regional-policy/regionalstatisticsandindicators.htm> 에서 검색한다.

⁹ 세계 평균생산성에 기초한 세계적으로 비교 가능한 표준화된 헥타르.

¹⁰ 생태 족적 계정에서 화석연료 사용과 관련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그 흡수에 필요한 생태적으로 생산적인 면적으로 변환된다. 탄소 족적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생태 부채의 증가로 간주되어 생물생성 공간을 경쟁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생태 족적에 가산된다(세계 족적 네트워크).

¹¹ 원자재 흐름계정은 환경경제계정 시스템(SEEA)의 중앙 틀에 기술된 다음 세 항목에 대한 측정을 다루는 물리적 흐름 계정군에 포함된다(<https://seea.un.org>).

- 환경적 흐름. 자연적 투입물, 환경과 경제부문간, 경제부문 내의 생산물과 잔류물의 실물 및 금전측면의 흐름.
- 환경자산의 저량. 물 또는 에너지와 같은 개별자산의 저량 및 경제활동과 자연적 과정으로 인한 회계기간 중의 실물 및 금전측면의 변동 내용.
- 환경과 관련된 경제활동. 환경보호 및 자원관리 비용, “환경관련 재화와 용역”의 생산을 포함한 환경관련 경제활동을 위한 자금 흐름.

¹² DMI는 경제에 대한 원자재 투입량을 측정하며 원자재의 국내 추출량과 수입량의 합계를 표시한다. DMC는 경제의 원자재 소비량(직접적이고 명백한 원자재 소비)을 측정한다. DMC는 국내 추출량과 물적 무역수지(수입에서 수출을 차감한 값과 동일함)의 두 요소로 구성된다. DMC는 DMI에서 수출을 차감한 값과 같다.

¹³ 잠재적으로 가장 유해한 농민 지원금은 시장가격 지원금으로 농법에 대한 환경적 제약을 부과하지 않고 물품의 산출량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금액과 농법에 대한 환경적 제약을 부과하지 않고 가변적인 투입량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 구성된다.

¹⁴ TiPi와 2030 의제의 통합에 관한 정보는 www.parlamentoods.org 에서 검색할 수 있다.

참고문헌

- Ahrend, R. and A. Schumann(2014), “Does Regional Economic Growth Depend on Proximity to Urban Centres?”, *OECD Regional Development Working Papers*, No. 2014/7,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jz0t7fxh7wc-en>. [35]
- Auckland Council(2012), *The Auckland Plan*, <https://www.aucklandcouncil.govt.nz/plansprojects-policies-reports-bylaws/our-lansstrategies/docsaucklandplan/aucklandplanenglish.pdf>. [56]
- Young, G.(ed.)(2016), *The Black Book of Bioenergy*, <https://www.birdlife.org/europe-and-centralasia/black-book>(accessed on 28 February 2018). [25]
- Boev, P. et al.(2016), *Ecological Footprint of the Russian Regions*, https://www.footprintnetwork.org/content/documents/2016_Russia_Report_Eng.pdf. [36]

- Cooley, H. et al.(2016), "Water risk hotspots for agriculture: The case of the southwest United States", *OECD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Papers*, No. 96,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jlr3bx95v48-en>. [16]
- Cutter, A.(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Integration: Achieving a better balance between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Stakeholder Forum, London. [55]
- Dirzo et al.(2014), "Defaunation in the Anthropocene", *Science*, Vol. 345/6195, pp. 401-406, <http://dx.doi.org/10.1126/science.1251817>. [45]
- Eidgenössisches Departement für Umwelt, V.(2016), *Grüne Wirtschaft: Indikatoren zur Messung der Fortschritte: Indikatoren zu aktuellen Schwerpunkten der Schweiz sowie OECD Green Growth Indikatoren*, Eidgenössisches Departement für Umwelt, Verkehr, Energie und Kommunikation(UVEK) and Bundesamt für Umwelt(BAFU) Abteilung Ökonomie und Innovation. [41]
- FAO(2016),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 <http://www.fao.org/3/a-i6340e.pdf>. [49]
- Feng, K. et al.(2013), "Outsourcing CO 2 within China",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ol. 110/28, pp. 11654-11659, <http://dx.doi.org/10.1073/pnas.1219918110>. [30]
- Global Footprint Network((n.d.)), *Global Footprint Network*, <https://www.footprintnetwork.org/>(accessed on 02 May 2018). [42]
- Gong, W. et al.(2012), *China Ecological Footprint Report 2012: Consumption, Produ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orld Wildlife Foundation, Beijing, <http://www.igsnr.ac.cn>(accessed on 27 February 2018). [37]
- Hoekstra, A.(2010), "The relation between international trade and freshwater scarcity, Staff Working Paper ERSD-2010-05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Geneva, https://www.wto.org/english/res_e/reser_e/ersd201005_e.pdf. [21]
- Hoekstra, A. and A. Chapagain(2007), "Water footprints of nations: Water use by people as a function of their consumption pattern", *Water Resources Management*, Vol. 21/1, pp. 35-48, <http://dx.doi.org/10.1007/s11269-006-9039-x>. [20]
- D.J. Griggs et al.(eds.)(2017), *A Guide to SDG Interactions: From Science to Implementation*, 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Paris, <http://dx.doi.org/10.24948/2017.01>. [8]
- IEA(2017), *Energy Access Outlook 2017: From Poverty to Prosperity*, IEA,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85569-en>. [26]

- Jennings, S., R. Sheane and C. Mccosker(2017), "Risky Business. Understanding the UK's overseas footprint for deforestation-risk commodities", <https://www.wwf.org.uk/sites/default/files/2017-10/WWF%20and%20RSPB%20-%20Risky%20Business%20Report%20-%20October%202017.pdf>. [51]
- Lall, Somik Vinay, J. Vernon Henderson, A.(2017), *Africa's Cities: Opening Doors to the World*, World Bank, Washington DC,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854221490781543956/pdf/113851-PUB-PUBLICPUBDATE-2-9-2017.pdf>. [34]
- Lawson Sam(2014), *Consumer goods and deforestation: An analysis of the extent and nature of illegality in forest conversion for agriculture and timber plantations*, Forest Trends, Washington DC, http://www.forest-trends.org/documents/files/doc_4718.pdf. [50]
- Le Blanc, D.(2015), "Towards Integration at Las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s a Network of Targets", *Sustainable Development*, Vol. 23/3, pp. 176-187, <http://dx.doi.org/10.1002/sd.1582>. [54]
- Lee, S. et al.(2016), "Evaluation of external virtual water export and dependency through crop trade: an Asian case study", *Paddy and Water Environment*, <http://dx.doi.org/10.1007/s10333-016-0569-4>. [22]
- Malawi Water Partnership(2016), *Final report of National Consultation on Water, Food Security and Nutrition*, <http://www.gwp.org/globalassets/global/activities/news/july-2016/gwp---malawicountry-report.pdf>. [24]
- Martinez-Fernandez, C. et al.(2013), "Green Growth in the Benelux: Indicators of Local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in Cross-Border Regions", *OECD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LEED) Working Papers*, No. 2013/9,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k453xgh72ls-en>. [10]
- Nunzio, J.(2013), "Conflict on the Nile: The future of transboundary water disputes over the world's longest river", http://futuredirections.org.au/wpcontent/uploads/2013/11/Nile_Conflict_Potential.pdf. [18]
- OECD(2018), *Governance Frameworks to Counter Illicit Trade*,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91652-en>. [53]
- OECD(2018), *Illicit Financial Flows: The Economy of Illicit Trade in West Africa*,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68418-en>. [52]
- OECD(2018), *Implementing the OECD Principles on Water Governance: Indicator Framework and Evolving Practic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92659-en>. [4]
- OECD(2017), *Green Growth Indicators 2017*, OECD Publishing, Paris, [7]

- <http://dx.doi.org/10.1787/9789264268586-en>.
- OECD(2017),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14]
http://dx.doi.org/10.1787/how_life-2017-en.
- OECD(2017), "Making the Slovak Republic a more resource efficient economy", [57]
<http://www.oecd-ilibrary.org/docserver/download/2d5c00e7-en.pdf?expires=1515167590&id=id&acname=guest&checksum=8B9A72D5FA1127F7980BDCEC467824FE> .
- OECD(2017),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New Zealand 2017*, OECD [33]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68203-en>.
- OECD(2017),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Switzerland 2017*, OECD [40]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79674-en>.
- OECD(2017), "Tracking progress on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national level", [12]
http://www.oecd.org/pcd/Coherence%20for%20Development_Issue_9.pdf.
- OECD(2016), *Better Polic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6: A New Framework for Policy Coherence*, OECD Publishing, Paris, [2]
<http://dx.doi.org/10.1787/9789264256996-en>.
- OECD(2016), *Biodiversity, Land Use and Ecosystems. What's happening 2017-18*, [46]
<https://www.oecd.org/environment/resources/Biodiversity-land-Use-and-ecosystems-brochure-2017-2018.pdf>.
- OECD(2016), *Measuring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29]
<http://www.oecd.org/sti/STI-Stats-Brochure.pdf>.
- OECD(2016), *OECD CO2 emissions embodied in consumption*, [27]
http://www.oecd.org/sti/ind/EmbodiedCO2_Flyer.pdf.
- OECD(2015), *Better Policies for Development 2015: Policy Coherence and Green Growth*, OECD Publishing, Paris, [3]
<http://dx.doi.org/10.1787/9789264236813-en>.
- OECD(2015), *How's Life? 2015: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13]
http://dx.doi.org/10.1787/how_life-2015-en.
- OECD(2015), *The Metropolitan Century: Understanding Urbanisation and its Consequences*, OECD Publishing, Paris, [31]
<http://dx.doi.org/10.1787/9789264228733-en>.
- OECD(2014), *Green Growth Indicators for Agriculture: A Preliminary Assessment*, [39]
 OECD Green Growth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 <http://dx.doi.org/10.1787/9789264223202-en>.
- OECD(2013), *Green growth in cities*, OECD, [11]
<http://dx.doi.org/10.1787/9789264195325-en>.
- OECD(2013),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Mexico 2013*, OECD [48]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80109-en>.
- OECD(2013), *The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Programme*, OECD Publishing, [44]
 Paris, <http://www.oecd.org/env/ehs/Environment-Health-Safety-Brochure.pdf>.
- OECD(2013), "Transboundary water management", in *International Regulatory [17]*
Co-operation: Case Studies, Vol. 3,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0524-4-en>.
- OECD((n.d.)), *Metropolitan areas(Edition 2016) - OECD Regional Statistics – [32]*
OECD iLibrary, OECD, [http://www.oecd-ilibrary.org/urban-rural-and-regional-](http://www.oecd-ilibrary.org/urban-rural-and-regional-development/data/oecd-regionalstatistics/metropolitan-areas-edition-2016_95f368bf-en)
[development/data/oecd-regionalstatistics/metropolitan-areas-edition-2016_95f368bf-en](http://www.oecd-ilibrary.org/urban-rural-and-regional-development/data/oecd-regionalstatistics/metropolitan-areas-edition-2016_95f368bf-en)
 (accessed on 19 December 2017), <http://dx.doi.org/10.1787/95f368bf-en>.
- OECD/ECLAC(2016),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Chile 2016*, OECD [47]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52615-en>.
- Sieff, K.(2018), *Divided by drought*, [15]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orld/wp/2018/02/23/feature/as-cape-towns-](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orld/wp/2018/02/23/feature/as-cape-towns-waterruns-out-the-rich-drill-wells-the-poor-worry-about-eating/?utm_term=.ec99699d58b1)
[waterruns-out-the-rich-drill-wells-the-poor-worry-about-eating/](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orld/wp/2018/02/23/feature/as-cape-towns-waterruns-out-the-rich-drill-wells-the-poor-worry-about-eating/?utm_term=.ec99699d58b1)
[?utm_term=.ec99699d58b1](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orld/wp/2018/02/23/feature/as-cape-towns-waterruns-out-the-rich-drill-wells-the-poor-worry-about-eating/?utm_term=.ec99699d58b1)(accessed on 04 April 2018).
- Soria Morales, E. and C. Lindberg(2017), "Tracking progress on policy coherence [6]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national level: What and how to measure?",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CODE Reports), No. Issue 9, OECD, Paris,
http://www.oecd.org/pcd/Coherence%20for%20Development_Issue_9.pdf.
- Tittensor et al.(2014), "A mid-term analysis of progress toward international [58]
 biodiversity targets", *Science*, Vol. 346/6206, pp. 241-244,
<http://dx.doi.org/10.1126/science.1257791>.
- UN(2016), *Report of the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1]
 Development Goal Indicators*, [https://unstats.un.org/unsd/statcom/47th-session/](https://unstats.un.org/unsd/statcom/47th-session/documents/2016-2-IAEG-SDG-Rev1-E.pdf)
[documents/2016-2-IAEG-SDG-Rev1-E.pdf](https://unstats.un.org/unsd/statcom/47th-session/documents/2016-2-IAEG-SDG-Rev1-E.pdf).
- UNECE(2014),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Recommendations on Measuring [9]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www.unece.org/fileadmin/DAM/stats/publications/2013/CES_SD_web.pdf.

- UNEP-DHI and UNEP(2016), *Transboundary River Basins: Status and Trends*, [19]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 Nairobi, <http://www.geftwap.org/publications/river-basins-technicalreport>(accessed on 29 January 2018).
- UNGA(2015), *A/70/L.1: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5]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A/RES/70/1&Lang=E.
- United Nations(2017), *Progress toward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38]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New York.
- Wiebe, K. and N. Yamano(2016), "Estimating CO2 Emissions Embodied in Final Demand and Trade Using the OECD ICIO 2015: Methodology and Results", [28]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Working Papers, No. 2016/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jlrcm216xkl-en>.
- WWF(2016), *Living Planet Report 2016: Risk and resilience in a new era*, WWF [23]
 International, Gland, Switzerland,
https://www.footprintnetwork.org/content/documents/2016_Living_Planet_Report_Lo.pdf.
- WWF-Korea(2016), *Korea Ecological Footprint Report 2016: Measuring Korea's impact on Nature*, WWF-Korea, Seoul, [43]
https://www.footprintnetwork.org/content/documents/2016_Korea_EF_Report_English_lo.pdf

제5장 2030 의제를 위한 국내 및 국제 의제의 조정

각국 정부는 국제적 공약 이행과 관련하여 국민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러나, 2030 의제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에서의 공동 노력과 정책일관성이 요구된다. SDG, 특히 PCSD에 관한 SDG 17.14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차원간의 균형 잡힌 접근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실행의 국내 및 국제적 차원간의 효과적인 인터페이스,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제협약간의 일관성, 세분화에 의해 유효성이 약화될 수 있는 다양한 재원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본 장은 PCSD의 이러한 폭넓은 차원을 자세하게 검토한 PCSD 파트너십의 여섯 회원국의 기고를 포함한 외부 기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

세계적이고, 통합적이며, 변혁적인 2030 의제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준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국가 수준에서의 정부의 행위가 여전히 핵심적인 동인이지만 이해관계자의 참여, 국제적 과정과 기관간의 국경을 초월한 집단적인 행동이 없이는 진전을 이룰 수 없다. 실행 수단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적 제휴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 노력은 SDG 17의 핵심이다.

OECD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내 및 지방 수준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정책일관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유엔 SDG 플랫폼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OECD가 주도하여 발족시킨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확보 다중 이해관계자 파트너십(PCSD 파트너십)이 그 중의 하나에 해당된다. 3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동 파트너십은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싱크 탱크 및 민간 부문이 SDG 실행의 정책적 의의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교환하는 포럼을 제공한다. 동 파트너십은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정책일관성 과제를 분석하는 능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제도적 매커니즘, 정책결정 과정 및 정책일관성 모니터링 및 보고 시스템을 2030 의제와 SDG에 적합하도록 수정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에 관한 SDG 세부목표 17.14의 이행상황 보고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지원하고자 한다. 중요한 점은 동 파트너십이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 파리 기후협약, G20 및 T20, Samoa Pathway 및 Sendai 등을 포함한 국제적 틀에 일관성을 도입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준의 국제적 제도와 절차의 일관성은 재정적 원조와 능력개발 지원을 받는 개발도상국에 특히 중요하다. 개발도상국들은 종종 부족한 역량을 가지고 수많은 여러 유형의 국제적 틀, 교섭상대, 자원(때로는 단편적인), 보고 의무를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PCSD 제후국가들에게 식견과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한 의견은 본 간행물 전반에 걸쳐 반영되어 있다. 본 장에는 국제적 수준에서의 정책일관성 확보와 관련된 과제와 갈등을 조명하는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

OECD가 국제적 수준에서 정책입안을 지원하는 또 다른 방식은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의 정책대화 증진이다. 이를 위한 한 계기로서 OECD(경제부의 PCD 담당부서)는 프랑스 개발청과 공동으로 “정책일관성, SDG 및 유엔 2030 의제: 세계경제에 있어서의 정책 상호작용과 국경을 초월한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2017년 10월27일에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2030 의제를 실행하기 위한 국제 파트너십과 관련된 일련의 조직적인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SDG 틀은 국제 거시경제적 조정과 일관성(SDG 17.13)을 한데 모아, 다양한 국가별 실정, 역량 및 개발수준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SDG 17.14)과 정책공간 창출의 필요성(SDG 17.15)을 높인다. 이러한 SDG 세부목표를 통해 목표달성을 위한 “협업”의 필수조건으로 우호적인 세계적 환경과 국제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회의에서는 국내 및 국제적 수준의 SDG 실행간의 갈등을 파악하고 세계적 제도의 시스템이 세계적 협력에 대한 국내정치적의 우위 상황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정책입안자는 지리경제학적 변화, 세계적 가치사슬의 출현 및 지구온난화 등과 같이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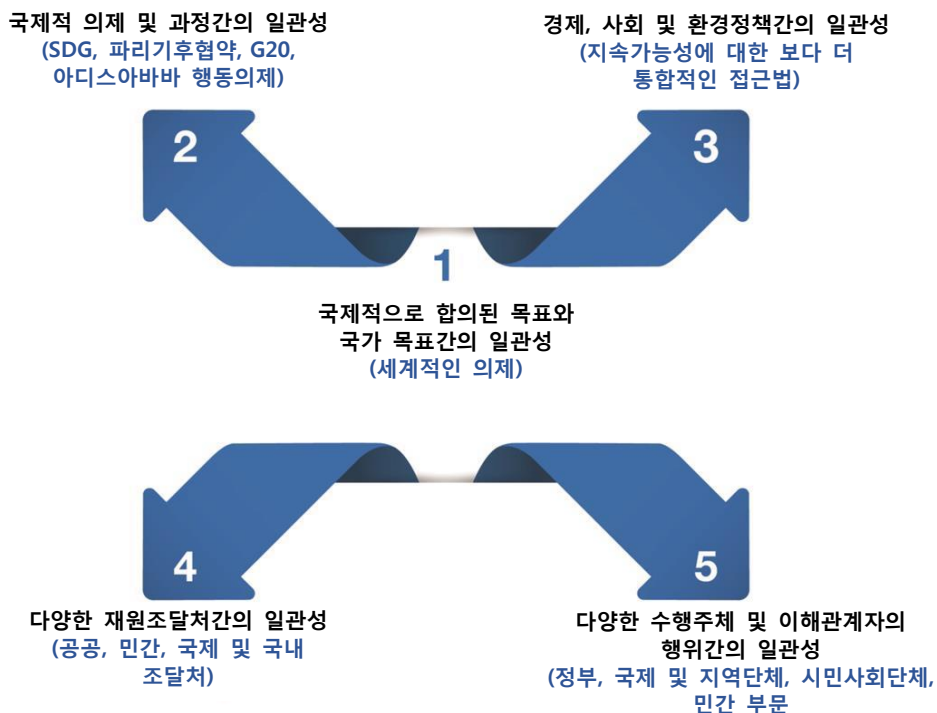
정치뿐만 아니라 세계적 추세와도 관련된 수많은 제약과 씨름하여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단순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실행 경로가 무엇이며 세계-국내 관련성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의시 발표자와의 후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객원 참석자의 기고문을 요청하였다. 그 첫 번째 기고문은 브루킹스 연구소의 비상근 수석연구원 Colin I. Bradford의 “국내정치 우위 부활 상황에서의 2030 의제의 전반적 전환에 관한 장기적 전망”으로 아래에 수록되어 있다.

OECD 개발협력이사회 이사인 Jorge Moreira da Silva가 제출한 두 번째 기고문은 재원의 관점에서 정책일관성을 검토한 “수조달러 기금조성 목표: 2030 의제 실행을 위한 공통 영역의 필요성”이다. 동 기고문은 2018년 3월13일에 개최된 “SDG 달성을 위한 국내 및 국제적 의제의 연계”와 관련한 개발원조위원회 원탁회의에서 제기된 일부 과제를 조명하고 있다.

본 장에는 또한 본 장의 주제인 2030 의제를 위한 국내 및 국제의제의 조정 - 세계적 거버넌스를 위한 과제의 맥락에서 집필한 몇 편의 간단한 기고문도 수록되어 있다.

도표 5.1. 일관성의 5 가지 보완적 단계



출처: OECD(2014), 개발을 위한 정책개선 2014: 정책일관성과 불법 자금흐름, 수정, OECD Publishing, doi: <http://dx.doi.org/10.1787/9789264210325-en>.

국내 정치 상황을 반영한다는 맥락에서 본 2030 의제에서의 체제 변환에 대한 장기 전망

Colin I. Bradford, 브루킹스 연구소 비상근 수석연구원

세계는 지금 국내 문제에 대한 정치적 내부 정치적 우위와 국경을 초월하여 점증하는 세계적 상호연결성 및 상호침투간에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적 인식과 연결이 기승을 부리는 민족주의와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충돌하는 힘의 장은 세계-국내간 인터페이스를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국제기구의 세계적 시스템이 세계적 협력에 대한 국내 정치의 우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사태는 1970년대 G5-7 정상회담이 개최된 이래 사회통합, 경제적 안전 및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해 운영되는 경제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세계적 협력의 핵심 정책인 전통적인 거시경제정책 관리의 한계에 대한 인식의 증대와 동시에 발생하였다.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결과간의 균형과 일관성 향상을 위한 전반적 변화의 필요성에 직면한 정책 공동체는 전통적인 경제정책을 탈피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절충적이며 통합적인 정책과 과정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제기구의 세계적 시스템은 전반적인 변화를 위한 전체론적 정책과 제도적 접근법의 시급한 필요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보다 더 개선된 사회적 및 환경적 결과는 광범위한 부문, 정책도구 및 제도적 절차의 통합과 관련성 및 외부효과에 중점을 둔 영역간의 횡적인 활동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국제기구 전통적인 경제정책 도구박스를 넘어서는 통합적인 접근법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이로써 장기적 과제가 무엇인지 명확해졌다. 세계화에 대한 반발, 향후 20년간 예상되는 도시화의 급증, 급격한 기후변화의 지구적 생존에 대한 위협, 금세기 중엽까지의 디지털화로 인한 경제적 안전에 기인한 국내 의제와 관련된 사회 통합에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및 환경적 지속 가능성은 위협에 처해 있다. 전반적인 변화를 통해 이러한 장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지속 가능성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치적 계획과 정책 혁신의 대부분은 내부과정에서 도출되지만 국제기구는 전반적 변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고무하고, 격려하며,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무대에는 정치는 금기시되는 주제에 속한다. 경제학은 정치적인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기술적인 학문으로 치부된다. 그 결과 담론으로서의 경제학은 세계 정책포럼과 국제기구에서 전문적인 의사소통방식으로 널리 인정되어 왔다. 문제는 국내 정치의 시급성과 우위가 증대된 상황에서 국제기구는 국내의 정치적 논쟁과 관련하여 자신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국내 여건에 맞게 자신의 국제적 직무책임을 조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국제기구들은 “경제와 사회간의 도전적인 차이점을 해소하기 위해”(OECD, 2017^[1])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제도적 기반에 대한 전반적인 위협에 직면한 사실에 대응하여 어려운 정치적 문제와 씨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고, 시장은 정치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는데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정치의 양극화와 정책입안의 마비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정치적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중도주의 정치로 진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기업과 민간 부문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정부가 더 큰 사회적 포용과 통합을 달성함으로써 시장으로 하여금 모두를 위한 진보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할 수 있는가? 달리 표현하면 시장에 대한 대중의 신뢰회복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더 개선된 사회적 결과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가?
- 진보주의 정치가 보수적 가치와 원칙을 존중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진보적 가치를 지닌 지도자가 개인의 자유, 재산권, 경쟁 및 자유의 핵심적인 보수적 가치를 증진하는 개혁과 정책을 제안할 만큼 창의적인가?
- 분권화, 분산 및 보완성으로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가? 즉, 진보적 및 보수적인 지도자들이 정부의 행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신 시민사회와 민간 부문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실행되도록 정책을 구성할 수 있는가?
- 국제기구의 세계적 시스템이 대중과 공공무대로부터 거리를 두고 기술관료나 엘리트주의자로 자처하는 태도를 버리고 가치-담론-정치-정책 역학에 대한 국내의 정치적 논쟁을 수용, 전달, 형성하거나 논쟁에 기여할 수 있는가? 국제기구는 공개담론을 기술용어로 가득 찬 세계 정책으로 변환하기를 고집하지 않고 지식 기반의 혁신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 양식 및 방식을 갖추고 국내 정치 우위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가?

새로운 정치적 환경에 국제기구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정치를 움직이고 세계 질서의 기반을 형성하는 가치의 중요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가치 - 국내 불만과 세계 질서

대부분의 국내 정치투쟁은 개인과 공동체간에 내재하는 긴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긴장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서양과 공동체에 대한 오랜 문명적 애착을 지닌 동양간의 기본적인 문화적 차이(지나치게 단순화되었음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에도 반영되어 있다(Allison, 2017_[2]). 오늘날 대다수의 국제적 긴장 또한 지정학적 경쟁, 국제협력 및 조정을 둘러싸고 발생한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세분된 경제단위들이 자유방임적으로 서로 경쟁하는, 개인의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불간섭주의에 입각한 시장경제를 가정한다. 이러한 자유방임적 가치는 개인주의와 경쟁이 서로 교차하는 공간을 분명히 밝혀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상호경쟁에 입각한 시장경제 개념은 중복된 정책을 조정하고 충격과 파급효과를 관리하기 위한 시장경제간의 국제 협력 증대 필요에 의해 약화되었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상호의존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의해 확장된 시장경제의 고수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이러한 조정으로의 이동은 협력과 개인주의가 겹치는 공간을 규정한다. 시장경제는 자체내의 경쟁에 의존하기보다는 국제 경제협력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나은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부상하여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 신흥 시장경제는 개인주의와

경쟁에 기반을 둔 “이상형의” 시장경제를 수정한 공공-민간 부문이 상호작용하는 혼합 경제 체제의 사전 실험장이 되었다. 시장과 정부간의 선택보다는 결합에 기초한 이러한 혼합경제의 출현은 공동체와 협력이 수렴하는 공간을 규정한다.

세계 정치 경제 분야에 크게 뚫린 구멍은 정확하게 경쟁적인 시장경제와 공동체가 만나는 힘의 장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시장의 정치경제로 편입되는 곳이다. 현재의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성 위기의 발생 원인은 시장경제가 정치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멍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정치적 중도의 공동과 정치경제 분야의 빈 박스의 크기를 규명할 수 있다. 이 공간의 정책도구 박스는 전반적인 지속 가능성 확보에 필요한 사회적 균형 달성을 위한 경제적 수단이 거의 없고, 대부분의 경제체제가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음에도 지금까지 사회통합을 달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어 있다.

현재의 국내 문제와 세계적 문제간의 정치적 갈등은 대중의 불만에 대해 압도적으로 반응한 주체가 정치적 좌파, 중도좌파, 중도가 아닌 극우파라는 점에서 보다 더 악화된다. *오늘날의 정치적 위기는 정치적 중도를 대변하는 적절한 정책이나 정치적 대응책이 전무함에서 비롯된다.*

21세기적 가치 지향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가 직면하는 중심 과제는 시장경제가 정치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사회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더 나은 사회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한 방안은 혁신적인 정책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 추진에 사용할 정치적 담론의 기초가 될 새로운 가치들을 확립하는 것이다.

전후의 세계 질서는 개인의 자유, 재산권 및 경제주체간 경쟁을 통하여 시장이 주도하는 사회적으로 최적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신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자유는 민주주의 제도에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다. 경쟁시장과 민주정부의 적법성에 대한 신뢰는 이러한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국제적인 시스템은 국가에 부여된 주권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전후의 가치들인 자유, 재산권, 자유 및 주권은 20세기 후반에 걸쳐 경쟁, 시장경제, 민주주의 및 행동규범으로서의 국가를 뒷받침해 왔다.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전반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 사회적 참여, 새로운 정치, 혁신적인 정책 및 조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시장 자체가 획기적인 결과를 창출할 조짐을 보일 경우에는 의미가 없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인류가 더 나은 성과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주장할 수단을 구현할 수 있다.

자유, 재산권, 자유와 주권은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 충분하지는 않다. 미래에 역할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는 우월한 사회적 가치에는 **공정성, 존중, 신뢰 및 책임** 이 포함된다. 이러한 가치로부터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촉진할 공용 접근성, 사회적 유동성, 경제적 안전 및 지속 가능성 등의 운영 수단이 파생된다.

공정성은 교육, 보건, 영양, 에너지, 물과 위생시설 및 정의에 대한 모든 사람의 평등한 접근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이 현대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인간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요소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유연하고, 유용하며, 생산적으로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며, 시민생활의 특성과 세계화된 환경 속에서 삶의 유동성, 속도, 연결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정성에는 또한 사회적 및 경제적 관계에서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와 동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접근 보장은 사회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다른 두 개의 운영 수단인 사회적 유동성과 경제적 안전의 전제조건이다.

존중은 생산성 증가가 노동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하락을 수반하는 최근의 양상을 타파하고 노동생산성 증가에 비례한 실질임금 인상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경우에 경제적인 의미를 가진다(Trapp, 2014^[3]). 최근의 이러한 양상을 반드시 역전 시켜야 한다. 노동자의 사회적 유동성은 노동의 가치 증가에 상응하는 수입을 달성하기 위한 직무능력 개발, 기술훈련 및 협상과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상호 존중은 또한 “차이”를 강자를 위한 갈등과 방어를 위한 주장의 근거가 아닌 상호보완성의 실현과 이해의 근거로 간주하는 현대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하다.

신뢰는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경제적 및 전략적 약정을 체결할 만큼 충분한 이해 수준에 대한 깊은 존중을 의미한다. 신뢰는 국가 내 또는 국가간의 경제, 무역 및 투자협정의 본질적인 접착제다. 응집력이 강한 사회의 개인은 건실한 기반에 구축된 세대간 연금제도에 의해 노년의 경제적 안전이 보장되리라고 신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개인들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생각이 비슷한 참여자들간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상호보완성을 실현할 수 있다. 중국과 미국의 정책입안자와 관리들은 양국간의 전략적 신뢰가 세계 질서에 기여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양국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Lieberthal and Jisi, 2012^[4]).

책임은 새로운 사회적 가치의 가장 중요한 공적 측면일지도 모른다. 균형을 달성하는 시장에 대한 신뢰에 기반을 둔 20세기 가치들은 사회적 책임을 주장할 필요성 자체를 제거하였다. 책임은 상호관련성의 인정과 사회적 균열과 실패가 시장경제 자체와 사회의 통치가능성을 위협한다는 인식으로부터 나온다. 전반적인 지속 가능성 기반으로서의 더 나은 사회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민간 및 공공 부문을 합하여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지도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경제적, 재정적, 사회적, 환경적 및 정치적 지속 가능성은 국가의 제도적 장치와 통치가능성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공공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다양한 수행주체들의 노력에 달려있다.

사회통합, 포용적인 시장, 타당한 형식의 거버넌스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적 담론과 정책의 혁신으로 구현되는 새로운 21세기적 가치들의 형성을 통하여 시장, 제도, 정부 및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확신의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가치의 구현과 사회통합 달성을 위한 국내계획에 대한 지원틀로서의 SDG

SDG는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고 다양한 문화가 공유하는 새로운 가치들을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SDG는 본질적으로 소수보다는 다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이다. 동 전략은 자유시장의 최적으로 추정되는 성과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발생한 불평등한 분배를 시정하고, 충분히 포용적이지 않은 경제의 실패를 정면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회통합의 증진을 통한 전반적인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SDG에 구현된 본질적인 가치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된다.

- **접근성**(사회기반시설 투자 및 사회복지의 제공): SDG 1(빈곤 퇴치), SDG 2(기아 퇴치), SDG 3(건강과 복지), SDG 4(양질의 교육), SDG 6(깨끗한 물과 위생시설), SDG 7(적절한 가격의 청정한 에너지)
- **사회적 유동성**(직장에서의 사회적 유동성과 공정성을 증진하기 위한 인적자본 투자): SDG 8(완전고용과 경제성장), SDG 9(산업, 혁신 및 사회기반시설), SDG 3(건강과 복지), SDG 4(양질의 교육), SDG 5(양성평등)
- **경제적 안전**(전반적인 변혁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 SDG 5(양성평등), SDG 8(완전고용과 경제성장), SDG 10(불평등 해소), SDG 16(평화, 정의 및 강력한 제도)
- **지속 가능성**(지구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연자본에의 투자): SDG 11(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SDG 12(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SDG 13(기후변화 대응), SDG 14(해양생태계), SDG 15(육지생태계)

접근성, 사회적 유동성, 경제적 안전, 지속 가능성 등의 핵심 가치는 개인주의, 공동체, 세계적 경쟁, 국제협력의 국내 정치적 규범이 만나는 스위트 스폿에 해당하는 정책 공간의 중심에 놓여있다.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가치는 다양한 혼합경제 방식이 20세기의 자유시장과 계획경제간의 이념적 갈등 없이 스스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정책공간을 규정한다. 마틴 알브로우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제각기 다른 핵심가치에 기반을 둔 조화로운 사회로 이루어진 세계”는 서양이 표방하는 보편적 가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Albrow, 2017^[5]).

또한 네 가지 핵심가치와 밀접하게 관련된 네 개의 각 SDG 집합은 그 달성을 위해 네 가지의 정책, 즉 접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 사회유동성 증진을 통한 직장에서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제도적 변화와 전반적인 변혁 및 경제적 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 및 지구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연자본에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전반적인 변혁의 필수적인 동인이다.

이러한 가치는 개인의 기회와 이익을 확대하고 동시에 개인이 생활을 영위하는 사회적 구조를 강화한다. 이는 이념적 내용에 의해 지장을 받지 않은 개인주의 및 공동체주의적 목표들이다. 동 목표들은 “더 나은 미래”와 더 나은 사회적 및 환경적 성과를 보장한다. 시장경제가 간과한 간격과 누락된 요소를 메우고 채워 넣는다. 시장경제의 사회적 및 환경적 혜택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에 관한 국가적 논의를 위한 틀로 SDG를 활용함으로써 모든

사회가 이득을 볼 충분한 이유가 있다.

종합해보면, SDG는 한편으로는 개인주의와 공동체,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과 협력/조정간의 갈등을 관리해 온 현대의 경험이 남긴 정치적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진정한 "공유할 수 있는 전략적 비전"이다. SDG는 소외감 또는 박탈감으로 환멸을 느끼는 대중에 대한 *한* 해결책은 될 수 있지만 *최적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최적의 해결책은 국내의 정치적 과정을 통해 도출하여야 한다.

2030 의제와 SDG 추진을 위한 각국 정부 관리들에 대한 국제기구의 세계적 시스템의 지원 활동의 내용은 이제 대부분이 모니터링과 평가, 목표와 지표 및 주요 실행분야 등에 대한 기술적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논의는 정치적 과정을 반영하나 정치와는 분리되어 있다. 세계적 목표가 내부 정치의 주된 동인으로서 어떠한 방식으로 국내 정치과정에 공공연하게 등장하는가를 파악하는 것보다 국내 정치세력이 어떻게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가를 이해하는 편이 더 쉽다.

그 결과 국제무대에는 정치는 담론으로 인정되지 않는 반면, 경제는 경제 전문용어의 표면적인 중립성의 가면을 쓰고 기술적 담론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시장가격이 진정한 가치(잠재 가격)를 반영한다는 신념, 시장의 힘이 균형을 형성한다는 가정과 금융시장은 자율적으로 규제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세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결과 탄소는 심각하게 저가로 책정되어(지구적 위험 수준까지 기후변화를 악화시킴)있고, 사회적 성과는 정치적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에 부적절하고, 재무적 위험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세계 경제가 위험에 처해 있다.

현재 상황은 경제적 기술성의 한계를 넘어섰으며, 다수를 제외한 소수를 위해서가 아닌 지구, 사람 및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시장경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가라는 우리 시대의 정치적 과제가 되었다. 이제 국제기구의 역할은 정치 지도자를 포함하여 대중과 정책입안자들이 현재의 갈등, 분열 및 불균형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경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식, 연구, 혁신적 아이디어와 참신한 사고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제기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는 국가 지도자들을 위한 공명판, 창의적인 컨테이너 및 혁신의 원천 역할을 해야 한다. 국제기구는 또한 인간의 생활 및 정책실무에 있어서의 사회적, 환경적 및 경제적 문제의 상호연관성을 분명히 밝혀주는 "통로"도 제공한다.

국제기구간의 조정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정 매커니즘이 필요할 수도 있다. 더 중요한 점은 모든 수행주체가 이러한 과제의 세계적, 국가적 및 지역적으로 결합된 특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 바탕을 둔 폭넓은 참여, 수평적 통합, 협업 및 협력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 거버넌스와 세계 질서를 위한 우선적인 사회통합의 의의

거버넌스 실무에 있어서의 정책일관성은 경쟁적 정치가와 능수능란한 관료들을 당혹하게 하는 고도로 야심찬 목표다.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부기관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노력을 규합할 수 있는 공통된 비전이 필요하다. 부적절한

사회적 성과가 남긴 정책과 정치적 공간의 공동을 공유할 수 있는 전략적 비전으로 채우지 않으면 국민사회가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정부 내부의 정책일관성을 결집하여 정치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기 어렵다.

세르지오 비타는 효과적인 세계적 “통치가능성”은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국가적인 “통치가능성”)에 달려있다고 기술했다. 그 결과 세계 질서의 빈 박스를 채우는 일은 국민사회의 빈 박스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달려 있다(Bitar, 2018_[6]). 세계 질서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정부가 새로운 세계 질서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국가 경험과 가치를 세계적 거버넌스로 편입시켜야 할 것이다. 공통의 가치와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의 국가적 기반이 없으면 지정학적 분쟁, 국가의 이익 및 상충되는 원칙으로 인해 세계 질서에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접근성, 사회적 유동성, 경제적 안전 및 지속 가능성 등의 공유할 수 있는 핵심가치에 기반을 둔 국내 사회통합의 우선적 추진을 통하여 사회적 및 환경적 성과를 최적화하기 위한 매커니즘으로서 시장경제, 확대된 국제무역 및 개방된 사회에 기반을 두지만 경쟁, 자유시장 및 자유기업 개념이 배제된 세계 질서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새로운 가치, 정치 및 정책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내용물로 시장경쟁이 공동체주의적이고 협조적인 행동과 더 나은 사회적 성과를 위한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빈 박스를 채울 수 있다.

G20의 지도자들이 국내 우선과제로서 SDG에 대해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피하고 또한 세계 질서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국내에서의 사회통합에 관한 논쟁의 출발점으로 SDG를 조명할 경우 국민들에게 세계적 우선과제의 강요로 인식될 위험을 내포하는 외부에서 내부를 향한 과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 따라서 SDG는 정부관리들이 G20, UN, OECD, IMF, 세계은행 등 세계적 플랫폼에서 상호 의견교환을 위한 참고문헌으로서 더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구조는 이미 경험을 비교하고, 제3자 검토에 참여하며, 다양한 국내 환경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타 정책 혁신을 서로 선별적으로 차용하고, 국제기구와 싱크 탱크의 지원을 받아 지속 가능성과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체적 방안을 개발하고 검토할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세계 질서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는 소수보다는 다수를 위한 더 나은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는 새로운 정책이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정치적 담론 및 새로운 정치다. 그 원동력은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사회의 참여, 혁신적 정책개발, 새로운 정치의 창조와 국가적 노력을 조정하는 국내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국내 상처의 정치적 우위가 유지되려면 그에 대한 반응이 대중적 고통의 국내 원천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국가의 국내정치와 가치들은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세계질서를 위한 기초를 형성시킬 필요가 있다.

정책일관성은 핵심 구성요소를 비전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일관된 방식으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경우의 특성이다. 그러나 일단 채택이 되면 전략적 비전이 전반적인 변혁 달성을 위해 비전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내부 정책 조정과 일관성의 원동력이 된다. 정치는 비전을 창출하고 그 실행을 위한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필요한 지도자와 사회간의 공적인 과정이다. 국가적 비전 제시와 지지 결집의 정치적 과정이 완료되면 행정부가 개입하게 되며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국제기구가 전략적 비전에 내포된 정책일관성을 토대로 내부 조정 노력을 지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지도자와 일반대중간의 정치적 역학관계라기 보다는 국제기구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가 관여하는 거버넌스의 제도적 과정이다. OECD가 지난 20년간 수행한 정책일관성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가적 거버넌스 실무를 강화하기 위한 유용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SDG에서 국내 정치 및 국제기구의 지원에 이르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과제인 사회통합, 도시화 및 기후변화까지 확장할 수 있다. 고위관리들로 구성된 유엔산하의 고위급 비공식 네트워크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과제들을 각각 관리하고 있다. 비공식 네트워크에는 SDG의 달성과 2030 의제의 공약이행에 대한 세계적 발전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유엔 고위급정치포럼(UN HLPF), 마이클 블룸버그가 이끄는 유엔 도시 및 기후 변화부문 특사 및 파리협약 이행을 점검하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요 분야에는 다양한 수행주체들과 사회통합, 도시 및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중요하고 실질적인 재정적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OECD, 세계은행 및 다자간 개발은행과의 조정 플랫폼이 관여하고 있다. G20 정상회담과 기타 G20 정부기관 단체와 참여그룹 또한 특히 상기 세 가지 과제에 대한 의제 개발, 실행 평가 및 감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과 인적, 자연 및 사회적 자본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전반적인 지속 가능성 달성을 위한 변화에 결정적으로 필요하며 국제기구간의 조정과 민간 부문의 기업과 금융기관의 참여가 요구된다.

이러한 세 가지의 핵심영역간의 다양한 계층에서 수많은 참여자들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은 성공에 대한 끊임없는 집착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는 폭넓은 참여, 수평적 통합, 협업 및 협력적 사고방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함을 의미한다. 전세계의 도시와 국가에서 기타 참여자들도 중요하고 주된 역할을 수행하지만, G20과 같은 국제기구의 세계적 시스템과 세계적 거버넌스 매커니즘은 진정으로 이러한 세계적 과제 해결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수조달러 기금조성 목표: 2030 의제 실행을 위한 공통 영역의 필요성

Jorge Moreira da Silva, OECD 개발협력이사회 이사

국제사회는 2030 의제 수립과정에서 놀랍게도 가장 시급한 세 가지의 세계적 과제인 기후변화, 보편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 및 개발을 위한 자원조달을 해결하기 위한 야심적이고 일관된 일련의 목적을 설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고 연간 수조달러의 SDG 자원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원규모를 “수십억에서 수조로” 변경하기 위한 국제적인 요청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호소는 어느 정도까지는 현실적이었다. 2000년 이후 두 배로 증가한 공적개발원조(ODA)는 2017년 현재 총 1,466억달러로서 SDG를 위한 자원조달의 튼튼한 기동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저개발국의 외부 자원의 70%를 차지하는 중추적인 자원이다(OECD, 2017^[7]). 그러나, ODA가 주요 자원이기는 하나 2030 의제에 규정된 목적들을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파트너를 모색하는 일은 자원조달 자체보다 더 광범위한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강제 이주, 금융위기 등의 세계적 과제로 인해 각국의 상호연관성이 보다 더 증대되었다. 개발도상국이 회복력을 배양하도록 지원하는 일관된 전략 수립에 대한 압력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자원의 유치는 정부, 다국적기업, 독지가와 시민들간의 목표를 포함한 세계적 목표에 대한 책임분담의 표현이다. 2030 의제에는 모든 국가들이 포용적인 성장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특히 가장 빈곤한 국가에서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내포되어 있다.¹

요청에 따른 행동이 이어져 오늘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수조달러가 조성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ODA 외에 중요한 개발기금의 재원이 확보되었으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이 아닌 원조제공 국가를 관리하고 남-남 협력과 3자간 협력의 규모를 추산하기 위하여 TOSSD 측정 틀 등의 새로운 도구도 활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통계에서 밝혀진 점은 적은 규모의 재원으로도 오늘날 개발을 저해하는 가혹한 환경적, 경제적 및 사회적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OECD DAC 회원국들은 ODA를 활용하여 혼합금융, 사회성과연계투자 및 녹색금융 등의 새로운 방식으로 추가적인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 OECD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ODA를 활용하여 4년 동안 개발도상국에 810억달러의 민간자본을 유치한 것으로 밝혀졌다.²

이제 수조달러의 기금을 목표별로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분열에 대응하여 일관성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추가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예를 들면, 개발금융 제공자들이 민간 부문으로부터 조달한 투자금액 중 LDGs에 배분된 금액은 소액에 불과하다. 이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촉각을 다투어야 한다. 2030년까지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빈곤층의 감소 속도를 분당 48명에서 96명으로 배가시켜야 한다(OECD, 2017^[8]). Addis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을 위한 전체적인 자원관리의 실행을 통해 다양한 자금흐름과 수행주체들을 시급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관된 계획을 추가 자금의 배정을 통해 지원하고 개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2030 의제 실행을 위한 공통 영역이 필요하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OECD가 곧 발간할 *개발을 위한 세계적 자원조달 전망* 에서 지지하고 있는 데이터, 정책 및 실행조치 등의 세 가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데이터는 영향 및 결과를 측정하고 실행 가능한 방식에 관한 더 나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SDG 실행 재원의 부족분에 대응하는 제후국의 자금수요를 파악하고 추가 재원이 국가적 필요를 반드시 충족시키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OECD *개발협력보고서 2017* 에 따르면 놀랍게도 51개 국가가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통계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OECD, 2017^[9]). 또한 세계적 목표의 다양한 실행주체의 “개발 족적”을 보다 정확하게 포착할 필요도 있다. 미성년 노동 또는 오염유발 활동에 쓰이는 1달러의 해외직접투자(FDI)는 현재 청정에너지에 쓰이는 1달러와 동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원조자금의 100%가 파리협약에 부합하게 지출되도록 할

것인가?

정책과 관련해서는 모든 자금흐름간의 상호작용과 이해하고 개발을 위한 새로운 재원의 촉매 효과를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무역원조로부터 국내 자원개발, ICT 및 사회기반시설에 이르는 지원수단에 투자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개발협력 접근법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개발을 위한 재원을 가장 전략적으로 활용하도록 국내정책 개선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조세징수를 개선하고 불법 자금흐름을 추적하며, 기업 및 경쟁환경을 개선하고 무엇보다도 채굴 부문의 정밀심사를 촉진하는 OECD의 활동이 포함된다. 또한 원조제공자에게 다양한 재원이 제공된 프로그램의 개발성과를 측정할 도구와 OECD DAC 혼합금융원칙(OECD, 2018_[10])과 같은 정책 틀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을 통해 그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곧 발간될 세계적 전망에서는 아디스 의제의 관점에서 일부 OECD 회원국의 국내정책과 동 정책이 개발 및 개발 유효성 증진을 위한 자원조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국제 파트너십의 2018년 감시보고서는 강화되고 갱신된 틀을 바탕으로 정부를 넘어서는 개발협력의 유효성에 관한 증거를 제시한다. 또한 개발협력을 통한 민간 부문 참여의 유효성에 관한 원칙을 설정하려고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실행조치와 관련해서는 해당 분야에 전체론적 접근법을 확보하고 세 갈래의 접근법을 통해 Addis를 이행해야 한다. 그 첫째는 더 우수한 지도력을 통해 모든 단계에서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자원조달을 증진하고, 둘째는 개선된 진단 및 조정도구를 사용한 자원조달전략과 국가개발전략의 조정이고, 셋째는 각 SDG 부문의 특수성, 각 SDG 부문이 다양한 수행주체들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 및 개발을 위한 자원조달전략 실행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2019년에 2030 의제를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2030 의제의 성공적인 실행은 국가적 실행과 지속적인 국제적 협상과 점검을 위한 논의 모두의 수준에서 세 협정의 일관성과 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관련 협력국가의 기고

아래 기고문에 제시된 의견과 논쟁은 저자의 견해이며 OECD 또는 회원국 정부의 공식 견해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아니한다.

SDG 추진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법 강화: 고위급정치포럼의 역할은 무엇인가?³

Hannah Janetschek, Imme Scholz, Niels Keijzer

독일 개발연구소/Deutsches Institut für Entwicklungspolitik(DIE)

Planet B는 없다. 인류는 이를 인정하고 힘을 합쳐 2030 의제와 17개 지속가능개발목표(SDG)를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실행할 필요가 있다.

2030 의제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독특한 비전을 전개하고 있다. 그 핵심과제는 기후변화 완화와 환경보호를 통한 사회적 및 경제적 개발을 이루어 인류의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공정책의 내용 및 실행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뿐만 아니라

그 정책의 결정과정의 변화도 똑같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SD) 확보와 관련된 특정 세부목표를 17개 SDG에 포함시킴으로써 세계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법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통합적인 접근법은 시너지 효과와 절충안, 초기단계에서의 다양한 정책분야간의 소통의 필요성, 다양한 정책안의 예상되는 효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수반한다.

용어가 시사하는 바대로, 통합적인 접근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각기 운영 되어 왔던 정책 공동체와 영역을 규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특정 정책 영역은 특정 목표집단만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농업부 장관을 통속적으로 “농민들의 장관”으로 부르는 정도에까지 이른 나라도 있다. 사회 - 국경을 넘는 효과를 고려하면 사회를 넘어 - 내에 광범위한 소유권이 존재하는 환경으로 이행하려면 그러한 정책을 지탱하는 정체성을 유지한 채로 균형을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정책 통합을 위한 학습경로는 국가별로, 또한 국가를 운영하는 지역 또는 국제기구별로 판이하게 다르다. 일부 국가는 통합적인 접근법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책 우선순위와 중재과정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정부 부처와 이해관계자 집단간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더 투자할 필요가 있는 국가도 있다. 모든 국가는 정책 분야 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호작용 - 의도적이든 자연 발생적이든 - 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수집 및 연구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통된 학습경로를 고려하여 연례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은 2030 의제 실행과 관련된 발전상황과 당면 과제를 논의하는 주된 플랫폼을 제공한다. 2017년 제2차 HLPF 참가국의 국가평가보고서는 44건으로 두 배로 늘었다. 이렇게 고조된 관심은 2030 의제 실행을 위한 유엔과 HLPF의 역할의 중요성을 재강조한 함부르크 G20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도 반영되어 있다.

증빙 간행물 자료수집,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패널과의 대화를 포함한 국가 수준의 광범위한 준비과정은 뉴욕에서의 2주간의 보고 과정으로 끝을 맺었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통해 각국은 그 해의 2030 의제 실행에 기여하였다.

2017년 HLPF에서 처음으로 국가별 보고내용에 지정된 SDG에 대한 “주제별 검토”가 포함되었다. “빈곤 퇴치와 번영의 촉진”이라는 제하에 HLPF는 빈곤(SDG 1), 기아(SDG 2), 건강(SDG 3), 양성평등(SDG 5), 사회기반시설(SDG 9), 해양생태계(SDG 14) 및 세계적 제휴(SDG 17) 등의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개발도상국은 보고서에서 자체적으로 우선과제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7개 SDG를 중점적으로 실행한다. 주제를 한정된 접근법을 적용함으로써 2030 의제의 환경적 차원은 도외시되고 사회 및 경제적 차원에 논의가 집중되었다.

논의대상 주제의 범위를 한정된 점이 실무적인 관점에서 유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특히 극빈국가나 역량이 부족한 국가들이 보고 부담을 분담하고 관련 주제별로 다른 국가와 제휴 관계도 수립할 수 있었다. 또한 지정된 SDG가 폭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 SDG가 촉진하는 실질적인 정책 요소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다.

주제별 검토는 부문 정책간의 중요한 상호의존성에 초점을 맞춘 논의를 진행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예를 들면, 부문간의 영향에 대한 증거가 증가하면 이를 토대로 시장을 왜곡하거나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보조금 지급제도를 재검토할 수 있다. 주제별 검토 자체가 개발, 성장 및 환경보호간의 특히 중요한 절충안을 확인하고 조직적인 변화 과정에서 경험과 과제에 대한 정보 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은 2017년 HLPF에서는 개별 정책 분야간의 상호작용을 등한시한 결과, 실현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에는 2030 의제의 통합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주제별 검토 방식을 수정하여야 한다. 개별 정책 분야에 대해 고립된 접근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및 정치적 사안을 연계시킬 매커니즘을 찾아야 한다. 그런 연후라야 2030 의제의 실행에 있어서의 절충안과 시너지 효과, 승자와 패자 및 장애요인을 논의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로의 이행이 자연자원에 대한 경쟁적인 수요 증가를 수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호 관련된 SDG의 세부목표에 대한 주제별 검토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정된 일련의 사회적 및 경제적 SDG는 환경적 토대에 의해 연계될 수 있다(예를 들면 SDG 6과 SDG 15). 이러한 접근법을 통하여 다양한 부문에서 달성한 내용과 그 내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역의 생물물리학적 조건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효과적인 토론을 촉진함으로써 위에 언급한 세계적 수준에서의 정책 부문을 망라한 대화와 학습과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G20에 속하지 않는 국가도 참여할 수 있는 2030 의제에 대한 자발적인 학습 매커니즘의 설치와 비정부 수행주체들과의 대화를 통합하는 함부르크 G20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협정 또한 긍정적인 조치다.

이제 주제별 검토의 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각국의 복잡한 과제 실행, 전체적인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열정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권고안 개발과 관련된 진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SDG의 여러 부문을 망라하는 특성을 채용한 주제별 검토를 통하여 전체적인 실행을 위한 권고안 개발을 장려하고 부문별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국가별 검토는 현실에 기반을 둔 실태 확인을 통해 주제별 검토를 보완한다. HLPF의 개방적이고 외교적인 분위기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모두가 동의한 의제 실행과 관련된 정치적 장애물과 기타 장애물을 인정하기를 주저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들은 모범사례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해결책을 도출한 세부과정을 제시함으로써 통합적인 접근법에 대한 논의의 질을 높였다.

다단계 SDG 정책일관성: 2030 의제에 맞게 정부간 의제 조정

Lynn Wagner, 지속가능개발 국제연구소

국가 수준에서 정책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정책 방향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 계획에 의해 뒷받침된 정치적 약속이 필요하다. 정부는 또한 정부간 수준에서 정책일관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 이를 전제로 국가들은 다자간환경협정(MEAs) 및 기타 국제조약의 당사자가 되며, 기관들은 각 협정 기구 또는 기관의 본인 - 기본적으로 이사회 구성원 - 이 된다. 정부간 협정에서 지정한 사무국과 이행절차는 본인에 대한 대리인의 지위를 가지며

당사자가 부여한 권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MEAs상 이행항목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 들의 세부목표 및 목표와 중복된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중복내용이 생물다양성 협약상의 2020년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된 목표 15(육지생태계) 하의 세부목표와 같은 SDG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또한 SDG와 기존 MEA 이행절차가 중복된 부분을 SDG와 대비하여 표시함으로써(대부분의 경우 실행하였음) 동 이행절차가 2030 의제와 관련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MEA의 이행항목을 SDG 틀에 연결시키는 출발점이 되며, 진정한 정책일관성을 위해서는 원칙들이 SDG와 관련된 이행항목을 분명히 나타내고, SDG에 관련한 구체적인 연계내용 및 과제가 확인될 수 있고, 실행자가 접근법을 SDG 실행으로 실제로 변환할 수 있도록 의제 및 이행항목이 특별히 조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소는 진행되고 있는 의제의 조정 노력을 주시하고 있으며 관련 수행주체들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이행항목과 관련된 제안을 주의 깊게 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모의 참여와 행동을 수반하는 의사결정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 주목한다. 주요 사례로는 현재 유엔 고위급 의사결정기관이 자체의 개발 시스템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검토과정을 들 수 있다.

유엔총회는 2016년 12월에 유엔의 개발시스템과 2030 의제를 조정하기 위한 주기적인 정책 수단인 4년주기 종합 정책검토보고서(QCPR)을 채택하였다. 2016년도 QCPR 결의안의 규정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개발시스템의 개혁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였으며 현재 유엔 회원국들이 동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SDG를 채택하기 위한 협상의 주축축으로서 유엔이 SDG 실행에 일관된 정책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이며 중요하다.

대부분의 MEA 당사국 회의(COPs)는 2년 또는 3년에 한 번 개최되므로 협약상의 관련성과 선택사항을 분석하여 실행 가능한 결정을 토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COP 의제에 2030 의제를 반영시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MEA 이행 노력의 한 사례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과 관련된 토지황폐화중립(LDN)을 평가, 측정하기 위한 과학적 기초를 개발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SDG 목표 15.3의 주제이기도 하다. UNCCD를 근거로 2012년 유엔 지속가능개발회의(Rio+20)에 대한 사전 준비로서 LDN 개념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마침내 “토지 황폐화 없는 세계”의 달성을 요구하기로 합의하였다. UNCCD는 LDN의 개념과 달성 의의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를 촉진하였으며, 각국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시키기 전에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개념을 입증하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SDG 채택 후 한 달이 지난 2015년 10월에 개최된 제12차 UNCCD COP에서 당사국들은 SDG 목표 15.3의 달성이 “UNCCD의 실행을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원동력”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수년에 걸친 과정을 통하여 다수의 수행주체들이 방향을 같이함으로써 정책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의제를 조정하기 위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한 8개 구성요소와 같이 이해관계자의 참여, 반복적인 정책개발 과정을 통한 학습, 실행, 감시와 보고, 새로운 경로를 추진하기 위한 공약의 갱신은 끊임없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 중심적인 요건은 국가 수준의 정책과 공약이 SDG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부간 수준에서 채택되고 일관된 국가적 접근법이 적용된 SDG를 정부간 참여를 위한 일관된 국가적 접근법에 따라 실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파리기후협약과 2030 의제의 주제 연관성

Hannah Janetschek, Clara Brandi, Niels Keijzer and Imme Scholz

독일 개발연구소/Deutsches Institut für Entwicklungspolitik(D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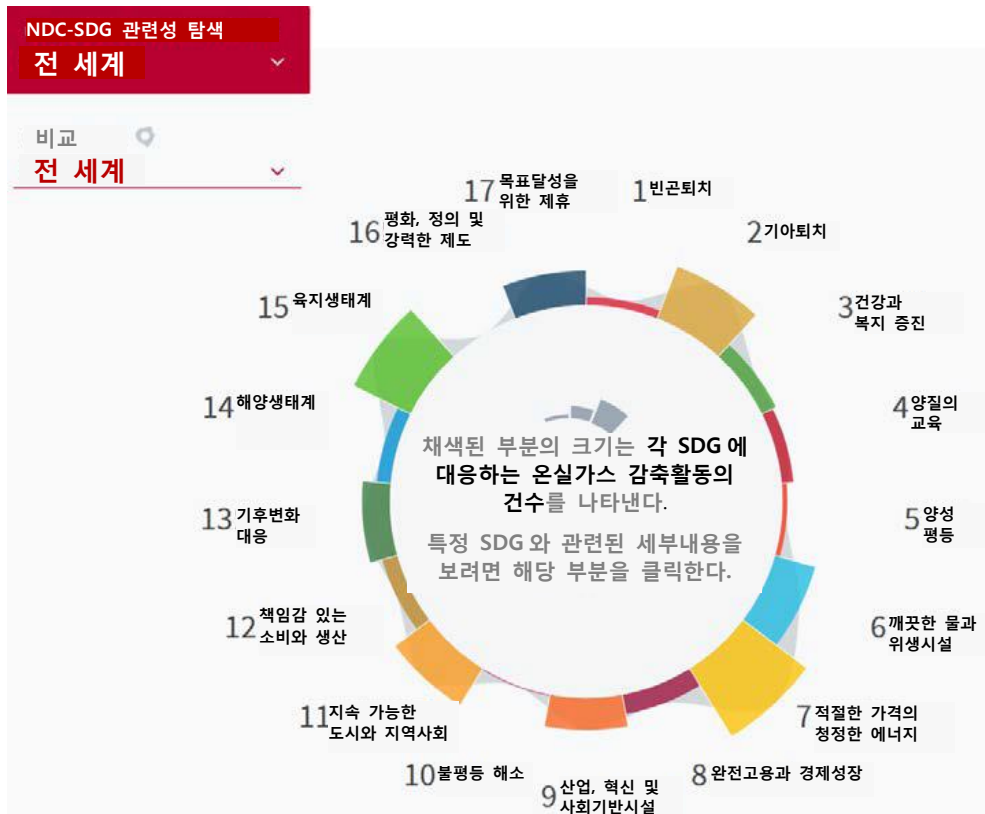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의 채택과 2015년말의 파리협약 체결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향한 세계적인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30 의제에 명시된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파리협약을 뒷받침하는 국가별 감축목표(NDCs)의 상호지원을 통한 실행으로부터 얻는 잠재적 이익은 막대하다.

명칭의 의미와는 정반대로, 각국의 NDCs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의 제시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기타 다수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NDCs와 SDG간에 주제별 중복과 공통 분야가 많이 존재하지만, 둘은 별개의 과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달성이라는 공동 목적은 세계적인 공동선이다.

160개 이상의 NDCs 관련 항목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NDCs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활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SDG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지를 개관할 수 있다. NDCs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활동은 "기후변화 대응활동"(SDG 13) 및 "적절한 가격의 청정한 에너지"(SDG 7)를 넘어서 다수의 SDG 목표 달성을 지원하며 다른 수많은 지속 가능한 개발 분야의 목표달성에 기여한다. NDC 기후변화 대응활동은 또한 SDG의 상호연관성도 강조한다.

본 연구소는 17개 SDG 렌즈를 통하여 161개 NDCs에 포함된 7,000건의 기후변화 대응활동을 분석하여 대화형 도구인 *NDC-SDG 관련성*(www.ndc-sdg.info)으로 시각화하였다. 도구를 활용하면 SDG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NDC 활동의 범위, 위치 및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분석결과는 고도로 세분화된 NDC 분석에 기초하고 있어 사용자는 목표 수준을 넘어서 NDCs에 포함된 SDG와 관련된 기후변화 대응조치를 탐색할 수 있다. NDCs는 17개 SDG 전부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도표 5.2. NDC 기후변화 대응활동과 각 SDG와의 관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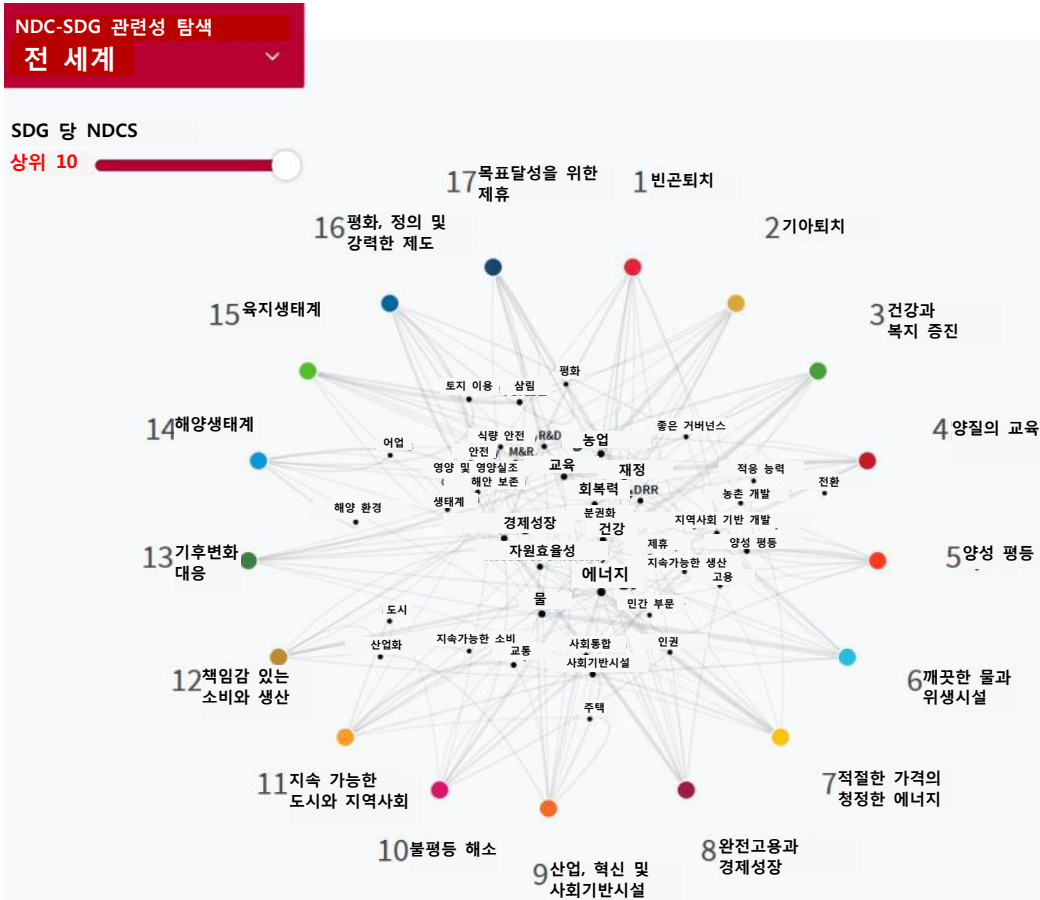


출처: DIE, 2018.

더 나아가, 사용자는 *NDC-SDG 관련성*을 활용하여 NDCs의 맥락에서 SDG의 네트워크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사용자는 웹사이트에서 세계적 수준에서의 SDG의 NDCs 관련범위를 개관할 수 있고, 특정 국가의 NDC 활동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SDG와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수많은 NCD 활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수의 SDG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수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에너지, 농업, 물과 같은 SDG 항목이 특히 관련성이 높으며 대표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주제에 해당된다.

시너지 효과의 파악은 계획 및 상호 관련된 실행에 영향을 주지만 관련 정책문건에 언급이 되지 않은 관계로 본 연구소의 분석에서 상충관계의 확인은 상정되지 않았다. PCSD를 성공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에서의 이러한 상충관계에 대한 입증과 고려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목표간의 다양한 상충은 반드시 이해되고 실행 시간대, 단계 및 지역에 걸쳐 조정하여야 한다. 시너지 효과와 상충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정치적인 중재와 기대치의 관리가 용이해진다. PCSD의 확보는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이득이 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이한 이익집단간에 승자와 패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도표 5.3. NDCs와 SDG간의 시너지 효과와 절충안



출처: DIE, 2018.

공동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1) 중복을 방지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2) 국가 수준에서 NDCs의 공약된 활동을 활용하여 2030 의제를 보다 틀적으로 실행함으로써 두 의제간의 시너지 효과를 도출하도록 NDC와 SDG의 실행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향후에는 파리협약과 2030 의제를 연계시키는 기회를 활용하여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실행을 위하여 절충안을 틀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정책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각국은 파리협약의 맥락에서 장차 갱신되는 NDC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대응활동과 SDG를 더 밀접하게 연계시켜야 한다.
- 2030 의제의 맥락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으로 NDCs를 효과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 각국은 잠재적인 공동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공약을 실천할 동기를 가지게 되지만 두 의제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상충되는 점을 예측하여야 한다.

요컨대, 파리협약과 2030 의제의 검토 과정은 NDCs 및 SDG와 관련된 정책들의 조정을 모니터링하고 추진할 수단을 제공한다. 두 의제의 주제별 실행을 연계시킴으로써 레버리지

포인트를 파악하고 지원하며, 중요한 격차와 단점을 확인하고, 사회적, 경제적 및 생태학적 차원의 진정한 통합적인 실행을 촉진하는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두 의제의 상호연관성을 통하여 기후정책이 인류의 개발에 결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 렌즈를 통해 인간본위의 기후정책에 필수불가결 하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다.

PPPs를 통한 성공적인 SDG 자원조달을 위한 PCSD 접근법의 역량강화 필요성⁴

Raymond Saner, CSEND 외교적 대화 이사

2030 의제의 17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유엔 무역개발 회의(UNCTAD)가 발간한 2014년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에 한정하는 경우에도 매년 약 4조달러가 필요하다고 한다. 현재의 SDG 관련 부문에 대한 공공 및 민간기관의 투자 규모를 감안하면 개발도상국은 매년 2조5천억달러의 자금이 부족하다.

정부예산과 공적개발원조로 이러한 부족자금을 충당할 방법은 없다. 많은 개발도상국이 높은 수준의 국가채무와 세수확보 능력의 부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원조자금은 전통적인 필요를 충족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 부문에 의한 투자가 SDG 달성 지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UNCTAD 보고서는 민간 부문의 참여에는 많은 난관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적절한 위험-수익 프로파일은 존재하지 않아 추가적인 민간 부문 투자를 유치하기 곤란하다. 이는 국가 수준에서의 취약한 제도, 시장 수준에서의 수요의 불확실성 등 투자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소에 기인한 현상일 수도 있다.

둘째는 SDG 자체의 속성이다. 많은 SDG에 접근가능하고 저렴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수익 비율은 더 하락한다. 또한 정부가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할 궁극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공공자산에 대한 민간소유 허용수준에 대한 딜레마가 여전히 존재한다.

SDG 17.17 - 제휴

SDG 실행을 위한 충분한 재무적 자원을 확보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무적 자원은 세수 증대 또는 공공구매, 민영화, 사업권 양여 또는 민관협력사업(PPP) 같은 프로젝트 금융을 통해 확보한다.

SDG 목표 및 세부목표 17.17, “제휴의 경험과 자원동원 전략에 기반을 둔 효과적인 공공, 공공과 민간 및 시민사회간 제휴를 장려하고 촉진한다.”은 PPP의 전통적인 개념을 공공 및 민간 수행주체들에 시민사회단체까지 포함하여 확장시킨다(약어로 PPP+로 표시함). 관련된 하위지표 17.17.1은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협력사업에 배정된 미국달러 금액”에 의해 PPP+s를 측정할 것을 추천한다. 현실적으로는 성공적인 PPP+의 달성은 정부기관간의 조정과 정부의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단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능력, 즉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능력배양의 중요성 에 따라 좌우된다.

대다수의 개발도상국 정부는 PPP+의 법률적 사항, 채무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 SDG 관련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의 재원조달을 위한 대체 금융수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적절한 예를 들면 선택 가능한 PPP+ 수단의 다양성이며, 가장 흔한 PPP+ 재원조달 옵션을 나열하면 건설 및 양도(BT), 건설, 리스 및 양도(BLT), 건설, 운영 및 양도(BOT), 건설, 소유 및 운영(BOO), 건설, 양도 및 운영(BTO), 추가계약 및 운영(CAO), 개발, 운영 및 양도(DOT), 성능복구, 운영 및 양도(ROT), 성능복구, 소유 및 운영(ROO) 등을 들 수 있다.

정부가 다양한 금융수단 및 방식에 대한 제도적 지식을 완전히 습득하지 않으면 채무증가와 공공 및 민간기관의 담합에 취약하게 된다.

PPP+와 PCSD의 중요성

사회기반시설 분야의 예를 들면, 보건 분야의 PPP+s는 보건부와 기타 관련 정부 부처간의 긴밀한 정책조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정부 부처에는 국가기획국(거시경제계획), 재무부(예산문제), 공공구매청(입찰 감독), 민영화청(실행, 역할분담, 사업권 양여), 행정부, 각 부처(BTO, BOO, BLT 등), 지방자치단체(실행) 등이 포함된다.

보건부는 종종 프로젝트 주기를 실행하고 타당성조사 및 계약을 승인하는데 필요한 PPP+ 단위가 부족하다. 따라서 최초의 PPPH 계약의 입찰과정에서 PPP+ 프로젝트에 대한 오해, 예측불가능, 선결요건의 편향성 주장 및 투명성 결핍이 발생할 수 있다. 감시와 평가를 누가 실시할 것인지, 보건부문 PPP+를 재정, 공정성 및 전문성 측면에서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평가에 어떤 지표를 사용할 것인지 불분명하다. 의료업계, 보건부문 노동조합, 환자단체 및 제약회사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부의 협의 능력 또한 똑같이 중요하다.

다중 수행주체 간의 제휴는 PCSD 과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

보건부문을 계속 살펴보면, SDG 및 다중 당사자간 제휴, 지방 협력기관(정부, 지역 비정부 단체)+보건부문과 관련된 국제원조기관(USAID, DFID, SDC 등)+새로운 백신 또는 진단법(말라리아, 소아마비, 에이즈 등의 퇴치를 위한)을 개발하는 학술연구기관+자선 재단(빌게이츠 재단, 아가칸 재단, 휴렛팩커드 재단)+국제기구(WHO, UNICEF, 세계은행)+중개 PPPs(GAVI, 글로벌펀드, MMV)+다국적기업 또는 국내기업을 포함하는 PPP+s가 존재한다.

노력의 중복, 서로 모순되는 정책계획, 높은 거래비용, 경제적, 사회적 또는 인종적 배경에 따른 환자 차별대우, 다양한 기부자 및 제휴단체의 대상 선별 등을 방지하고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결정과 PPP+ 정책의 관리 및 평가가 필요하다.

PPP+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 정부관리들은 제휴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한다. 하나의 방안은 고유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건실한 법적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국제적 수준의 합의에 의해 PPP+ 감시기구를 창설하여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자문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시기구는 더 나아가서 아무도 소외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일관성 격차를 확인하고, 조정 및 협의 역량을 강화하며, 발전상황을 감시하고 보다 일관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충분한 일관성

Jan Vanheulekom, James Mackie & Martin Ronceray

유럽 개발정책 관리센터(ECDPM)⁵

“복잡한 시스템은 상호작용하며 같이 변화하는 수많은 가동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산출물은 정확하게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 Yuen Yuen Ang, 중국은 어떻게 빈곤의 멍을 벗어났는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SD)은 지속가능개발목표의 구조로 편입되었다. PCSD 자체는 목적이라기보다 포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길잡이에 지나지 않는다. PCSD를 운영하고자 하는 2030 의제의 이행공약을 한 국가와 이해관계자는 절대적인 복잡성과 극도로 높은 기대수준에 아연실색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PCSD와 이전의 야심찬 개발계획인 좋은 거버넌스 의제를 비교할 수 있다. 좋은 거버넌스(GG)는 기부공동체에서 강한 공감을 불러 일으켰지만, 곧 통제할 수 없는 야망, 부실한 개발이론, 필요한 개혁의 깊은 정치적 속성과 같은 국가별 실정의 도외시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좋은 거버넌스로부터 보다 정치에 기반을 둔 실행 가능한 모범적 거버넌스 의제로의 변화과정에서 PCSD를 위한 여섯 가지의 의미 있는 교훈이 도출되었다.

배경

90년대의 좋은 거버넌스 패러다임은 경제적 및 정치적 개발을 뒷받침할 제도적 전제조건에 중점을 두었다. 동 패러다임은 개발과 빈곤 완화를 위해 일련의 필수적이고 야심찬 공공부문 개혁을 상정하였다. 이러한 “필수적인” 의제에는 “경제적 및 정치적 상호작용을 위한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제도부터 공공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의사결정구조 및 행정시스템을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조직에 이르는” 공공부문의 모든 긍정적인 특성의 포괄적인 목록이 포함되었다(Grindle, 2004_[11]).

하버드 대학 국제개발 교수인 메릴 그린들은 2004년에 발표한 논문인 “충분한 거버넌스: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개혁”에서 좋은 거버넌스에 대한 합의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그린들은 좋은 거버넌스가 수단을 위한 목적을 만들고 개혁가와 외부지지자들에게 실현 불가능한 개혁의제를 부과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린들의 “충분한” 접근법은 좋은 거버넌스가 개발, 경제성장, 민주화 등의 전제조건이라는 견해를 정면으로 일축하였다.

더욱이 GG 의제는 과도하게 설정되었고 비현실적이며 “자금, 시간, 지식, 인간과 조직의 역량 등의 제한된 자원을 고려할 때 특정 국가의 입장에서 더 좋은 거버넌스로 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Grindle, 2004_[11]).

좋은 거버넌스로부터 충분한 거버넌스로의 이동

2004년 이래 증거의 규모와 충분한 거버넌스(GEG) 의제는 확대되어 개발에 대한 GG 가정으로부터 주요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두 가지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변화 1: 좋은 거버넌스에서 잘맞는 맞춤형정책으로

계획적인 이상형 거버넌스 솔루션으로부터 현재의 방식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주안점이 이동하였다. 다양한 학문분야를 의도적으로 결합하여 국가의 이상적인 위치를 상상하기 보다는 국가의 현재 위치가 어디인가를 이해하려고 했다. 그에 따른 정치경제적 분석은 정책문제 또는 개발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특정한 국가의 맥락과 특정부문 만이 아니라 정치, 사상, 제도, 유인책까지 중요하게 다루게 된다.

변화 2: 기술적 실행가능성에서 정치적 실행가능성으로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이 정치적인 지원을 받음으로써 정책유효성이 실현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특정한 정책이나 실행계획에 대한 정치적 견인력을 유발하는 요소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정책유효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효성의 행정적 원천의 본질에 대한 분석과 이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도출된 결론 중의 하나는 포괄적인 공공부문의 개혁이 없는 경우에도 약한 거버넌스 시스템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개혁을 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거버넌스와 법률에 관한 세계은행의 획기적인 2017년 세계개발보고서(World Bank, 2017[12])에는 “좋은 거버넌스 이후”의 사조에 대한 귀중한 종합적인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동 보고서는 효과적인 정책은 구체적 사정에 기초한 협상, 권력행사, 연합형서, 지배엘리트, 정부관료 및 부문 수행주체 간의 트레이드 오프에 의해 형성되는 핵심적 제도적 기능에 의해 추진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내에서 형성된 이러한 정책 분야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화하며 세계화 및 기타 외부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포괄적이고 모범적인 제도적 청사진은 정책실험, 자율적 교정, 정책 유효성 및 잠재적으로 정책일관성에 대한 점진적인 학습을 통한 능력배양에 실패함으로써 어느 정도 매력을 잃었다(Booth and Cammack, 2013_[13])(ESID, 2017_[14]).

정책일관성에서 충분한 일관성으로

왜 PCSD와 관련이 있는가?

개발관련 논의에서 정책일관성에 대한 관심은 한동안 계속 존재하였다. 정책일관성 개념은 SDG 논쟁에서 PCSD로 새롭게 부각되어 “실행 수단” 및 2030 의제의 목표(17.140로 간주되게 되었다. 그러나 SDG 의제의 다면성과 통합적인 특성으로 인해 그 전신인 단일 방향인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에 비해 더 복잡해졌다(Mackie, Ronceray and Spierings, 2017[15]). GEG 의제에서 도출된 결론과 교훈 및 모범적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은 PCSD 의제 실행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처음에는 그린들도 좋은 거버넌스가 탁월한 구상임을 인정하였다. 공정하고 신중하며, 투명하고 책임이 있으며, 참여적이고 민감하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제도를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Grindle, 2010_[16])? GG가 “바람직한 상태의 강력한 지표”로 간주된 것과 마찬가지로 PCSD 또한 모든 정책이 상호간에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강력하고 매혹적인 발상이다. 그러나 이상형의 좋은 거버넌스 제도의 필요성과 이상적인

형태의 정책일관성을 부각시키는 것만으로는 그 달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좋은 거버넌스라는 국가가 “좋은 날의 스웨덴 또는 덴마크” 같이 되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도 없이 높은 기대감과 통제하기 힘든 의제만 유발하였다.⁶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포용적으로 성장하는” 지나치게 탄력적이고 열망적인 개념”(Grindle, 2010_[16])에 대한 그린들의 비판은 PCSD에도 적용할 수 있다. GEG는 바람직한 상태에 집착하기 보다는 특정한 맥락에서 어느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행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한다. GEG와 그에 따라 발생한 환경 분석에 대한 정치적 경제 접근방식은 주저 없이 복잡성을 수용한다. 환경 분석을 통하여 구조적 요소, 제도, 유인책, 정치권력 획득경쟁, 내부적 변화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과 외적변수를 분석함으로써 변화와 개혁 궤적의 기술적 및 정치적 실행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⁷ 이러한 접근법은 모든 거버넌스 결손과 개혁을 동시에 다룰 수 있거나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며 성취가 역전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충분한 일관성의 의미

정책일관성을 확보하고 2030 의제의 PCSD 목표를 다루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거버넌스 명제에서 얻은 여섯 가지 교훈이 있다.

첫째, 다른 무엇보다도 정책과 그 실행을 개선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경로의 현실성이 이상적인 최종상태의 비전에 의해 흐려져서는 안 된다.** 이는 GG의 GEG로의 전환을 통해 정책일관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다. GEG 접근법과 같이 충분한 일관성을 명백하게 우선시함으로써 정책입안자들이 가능성 모색기술을 통하여 “기술적 타당성과 정치적 실현가능성간의 스위트 스폿”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Kossoff, 2015_[17]). 다시 말해서, SDG의 통합적인 정책의 세계와 씨름하는 정책입안자들은 모든 정책의 상호간 일관성 확보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맹목적으로 추구하기 보다는 자체 정책분야의 충분한 일관성이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두세 개의 부문 정책에 주목 하여야 한다.

두 번째의 교훈은 제도적 개혁 또는 정책일관성을 위한 모범사례 모델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구체적 상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충분한 일관성에 의해 초점을 청사진 모델로부터 어느 정도의 정책일관성 확보가 가능하지만 더 야심찬 대안은 실행 불가능한 구체적인 상황별 조건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교훈은 **정책유효성과 정책일관성을 위한 상황별 조건을 형성하는 두 가지의 기본적 차원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과** 관련이 있다. 한 차원은 지배 엘리트와 사회간의 권력의 양태, 유인책과 협상이 공권력과 신뢰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는 기관의 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이 있다(World Bank, 2017_[12]). 다시 말해서, **주요 국가기관이 공공재를 공급하거나 대개의 경우 복잡한 정치적 과정의 산물인 일련의 일관된 정책의 점증하는 개발과정에 참여할 역량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Andres, Pritchett and Woolcock, 2017_[18]).

지배 엘리트의 협상과정의 방침과 결정논리의 범위를 설정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기본적 차원은 **국내 수행주체가 통제할 수 없는 구조적 요인 및 외적 변수**다. 이에는 예를

들면, 천부적 재능, 기후변화, 세계화의 영향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차원의 상호작용을 깊이 있게 통찰하면 운신의 폭, 관련 이해관계자의 영향력, 연합의 가능성 및 특정 정책분야의 정책일관성을 지원할 수 있는 관료적 역량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섯 번째의 함의는 **모든 정책 선택에는 이해관계자가 개입하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변화가 촉진되거나 저지된다.** 따라서 승자와 패자가 생기고 논쟁이 발생한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므로 “완벽한” 일관성을 달성하기 보다는 타협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최적의 균형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도출되는 정책적 해법은 분명히 “충분한 일관성”의 영역에 속한다.

GEG 사고와 일치하는 마지막 통찰은 역학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측할 수 없거나 우발적으로 이동하고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충분한 일관성은 시간의 변화에 적응하고 유연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의 조건에 따라 어느 정도 GEC를 확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몇 년이나 심지어 몇 달이 지나 조건이 변경되면 더 효과적이거나 더 높은 수준의 충분한 일관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일일관리 실태

Pedro Rodrigues de Almeida, Miguel Coleta and Livio Vanghetti

Philip Morris International

배경

Philip Morris International은 최상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장하고 규모, 복잡성 및 사회적 문제와 무관하게 기업에 도움이 되는 인정된 지속 가능성 틀 하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 운동에 동참하였다. 흡연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며 흡연의 폐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아예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 11억 흡연자의 건강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Philip Morris International은 10년에 걸친 과학적 연구와 30억달러의 누적 연구개발투자의 결과 2014년에 최초로 금연제품을 출시하였다. 이는 회사 역사상 가장 크고 해당 부문에서 유래가 없는 큰 전환이었다.

과거의 고립과 인지된 불투명성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부문의 노력에 제도적 신뢰를 재확립하고 모든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에 대한 명확하게 연결된 접근법은 모든 부문에 걸친 공공정책의 개선에 필수적이다.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전통적인 접근법은 목표 탐색과 실행 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SDG 틀은 시민참여를 위한 매우 설득력 있는 체계적인 사고 도구를 제공하지만 민간기업들은 그 존립기반이 극심한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직면하는 극도로 복잡한 문제와 관련된 필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는 없다.

강력한 정책일관성 렌즈를 요구하는 Philip Morris International의 사업전략에 가장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는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SDG 12)이다. 정책일관성 분석 및 체계적인 사고를 통하여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이 좋은 사회의 복잡한 결합과 씨름하는 접근법은 현재

시험 중에 있으며 여기에서 간략하게 설명한다(Hester and Adams, 2014_[19]).

과제와 기회

담배에 대한 수요는 수년간 줄어들었지만 Philip Morris International은 380,000개 담배농장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2백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식하고 있다. 담배연기 없는 미래가 현실화 됨에 따라 향후 10년에서 15년 사이에 현재 수준에 비하여 잎담배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배농민의 수입과 관련 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수년간 회사는 소규모 자작농이 담배와 함께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지원해 왔다. 예를 들면, 모잠비크, 말라위 및 탄자니아의 경우 기술지도와 농작물 재배 투입물(비료 및 주로 옥수수 종자) 구입자금을 지원하였다. 2016년에 Philip Morris International이 지원한 이들 국가의 농작물 생산량(260,000톤 이상)은 이미 담배 생산량을 초과하였으며 동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농민은 60,000명에 달하였다. 2017년에는 이들 3개국에서 직접적인 농작물 생산 지원을 받는 소규모 자작농민은 150,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는 농작물의 수확율이 상당히 개선되어 옥수수의 경우 4배로 증가하여 식량 안전이 강화되었으며 종종 잉여 생산물이 현지 시장에 판매까지 할 수 있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Philip Morris International은 선별된 공급자들과 함께 국제 농산물 구매상들이 이들 국가의 담배 재배농가의 잉여 농산물 판매경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고 있으며 운영중인 사회기발시설과 물류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의 노력은 농촌 공동체가 담배 재배 대체로 인한 영향에 대한 회복력을 키워 경제적 이유로 인한 도시로 이주하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비전을 통해 모든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시장을 개혁하여 긍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제와 기회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안을 함께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보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지향하고 담배를 다른 작물로 성공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연결성이 필요하다(Simons, 2015_[20]). 다시 말해서,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개별적인 수행주체가 대응할 수 없는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대처하여야 한다. Philip Morris International은 몇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 재무적 자원과 역량을 동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농민 공동체와의 공동 협력을 통해서만이 현재 담배 재배에 의존하는 생활의 지속 가능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저소득 국가에서의 농업 부문의 개혁은, 특히 아프리카 연합 의제 2063에 따르면, 소규모 자작농의 주도로 최저생활 영농으로부터 고도로 효율적이고 집약적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으로 비교적 빠르게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기초적인 사회기발시설 투자(교통, 관개, 전력생산 등)와 새로운 상품에 대한 수요를 포함한 정책적 제약으로 심각하게 지연될 수도 있다. 그러나 큰 변화를 수반하는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이 좋은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성격을 시장 모델에서 사회의 폴리스 모델(공동체에 바람직한)(Stone, 2013_[21]), 즉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모델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인 사고와 정책일관성

체계적인 사고와 마르코프 모델(Howard, 2007^[22])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분야의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문제를 구성하는 시스템의 행동양식은 특정 SDG에 대한 개별적인 해법인 아니라 다양한 해법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hilip Morris International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에 대한 접근법은 체계적인 사고의 의미에서 규범적이라기 보다는 탐색적이다.

Philip Morris International은 각 SDG가 제기하는 과제 및 기회와 극도로 제약된 환경에서 이용 가능한 일련의 합리적 선택간에 시의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의적절한 균형은 만족화 매커니즘으로 알려져 있으며, 간단히 말해서 전반적인 SDG 목표를 만족시키고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이다. 개별적인 SDG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정부,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를 자연스럽게 문제를 병행하거나 순차적으로 다루게 되지만 주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제한되어 있으며 중복되는 부분도 많지 않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을 초학문적 렌즈를 통해 통합하여야 하며 특히 SDG에 몰입하는 현상, 예를 들면, 토지이용과 관계시설 설치에 대한 노력과 비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빈곤퇴치를 목적 그 자체로 간주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성공으로 가는 길

SDG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서로 분리하여 다루어서는 안 된다. 한 분야의 진척으로 다른 분야에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예를 들면, 2017년 6월의 세계보건기구 공식보고서에 따르면 담배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720만명에 이른다. SDG 3은 담배와 관련된 유일한 목표이며, 전체적으로 비전염성 질병으로 연간 4천만명이 사망한다. 그러나 담배연기 없는 미래의 달성은 담배제조회사에 달려있기 보다는 모든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체계적인 사고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신제품은 책임있게 출시하여야 하며 흡연을 중단한 사람이나 흡연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Philip Morris International은 초기단계 집단행동의 촉매 역할을 하며, 정책일관성 분석 및 체계적인 사고를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개혁에 관한 포괄적인 사례연구를 수행하고, 장기적인 경제개발(2030-2063) 측면에 대한 분야별 관련성을 밝히는데 전념할 것이다.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변화에 대한 주요 장애물을 파악하고, 선진 실무를 기록하며 2030년과 2063년의 가장 현실적인 경제개발 시나리오를 제시할 예정이다. 사례연구에서는 지속 가능 하고 회복력이 좋은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일관성 분석과 체계적인 사고의 독특한 강점 및 건강과 복지에 대한 영향을 강조한다.

SDG 6, 7, 11, 12, 15와 문화창조산업: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위한 문화적 여건 조성

여성변호사 재단

문화와 그 다양한 표현양식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유산은 기후변화 금융위기, 불평등의 심화 및 세계적인 도시인구 증가 등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공동체의 정체성의 근원과 응집력을 구성한다. 창의성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다원적인 사회 건설에 기여한다(UNESCO, 2018_[23]).

문화적 맥락에 호응하는 정책이 보다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이고 공평한 개발성과를 창출하며 빈곤의 사회적 및 경제적 차원은 문화적 유산과 문화창조산업(CCI)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에 근거하여 2015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문화와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유엔 결의안 70/214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조력자로서의 문화의 역할을 재확인하며, 모든 회원국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지속 가능한 개발에 있어서의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개발 정책에 문화적 측면을 반영할 것을 권장한다(UNESCO, 2018_[23]).

문화와 유산의 중요성은 SDG 목표 11.4 “세계의 문화와 자연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에 명백하게 언급되어 있다.

혁신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며, 2016-2020 단계는 SDG의 맥락에서 결정적인 시기이며 PCD에 대한 간과할 수 없는 폭넓은 접근법을 향한 창문에 해당한다. 여성변호사 재단은 2017년부터 패션과 유산에 중점을 두고 2030 의제의 문화창조산업(CCI) 부문의 모든 측면을 다룬 **창의성을 위한 법률 연구**와 그 포괄적인 접근법의 성과를 토대로 여성변호사 패션 아카이브(<https://ladylawyerfashionarchive.wordpress.com>)라고 명명한 패션 콜렉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2018-2020 **여성변호사 마을캠프 계획**(<https://ladylawyerfashionarchive.wordpress.com/2018/02/28/lady-lawyer-village-funplan-launch-en-soufflant-le-chaud/>)을 개설하였다. 동 계획에는 제공 항목중의 하나로 선형 모델에 대한 대안으로 2015년에 개설한 문화-자연-사회-경제적 모델의 관점에 기반을 둔 내부적인 ‘전쟁과 패션’ 회의(<http://war-and-fashion.tumblr.com/>)의 2017년도 분석결과를 반영한 최신 PCSD 실행수단이 제시되어 있다.

각주

¹ OECD는 도움이 가장 필요한 국가를 최저개발국(LDCs), 내륙 개발도상국(LLDCs), 군소 도서개발 도상국(SIDS) 또는 취약한 분쟁국가 등으로 분류한다.

² OECD 동원 조사: <http://www.oecd.org/dac/stats/mobilisation.htm>.

³ 본 기고문은 2017년 7월24일 DIE의 웹사이트에 최초로 게재된 Janetschek, Hannah / Imme Scholz(2017)의 “2030 의제의 검토: 우리는 통합적인 실행에 진전을 보이고 있는가?”, 본: 독일 개발연구소(DIE)(2017년 7월24일 현재 칼럼)의 수정증보판과 관련된다.

⁴ 본 기고문은 다음의 정책개요서에서 발췌, 수정한 것이다. Brandi/Dzebo/Janetschek(2017), “파리기후 협약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의 연계 실행 사례” 본: 독일 개발연구소(DIE) <https://www.die-gdi.de/en/briefing-paper/article/the-case-forconnecting-the-implementation-of-the-paris-climate-agreement-and-the-2030-agenda-forsustainable-development/>.

⁵ ECDPM – 유럽개발관리센터 – www.ecdpm.org.

⁶ 그린들의 제자인 매트 앤드루스는 모범적 거버넌스에 관한 다음의 비유를 제공하였다. "좋은 날의 스웨덴 또는 덴마크". 출처: Andres. M. 2008, *모범적 거버넌스 의제: 이론이 없는 지표를 넘어서*. 옥스퍼드 개발연구, 36권, 2008 – 4호(379-407 페이지)

⁷ 무엇보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라. Levy, B.(2014), *순리의 존중: 개발전략에 있어서의 거버넌스와 성장의 통합*, Levy, B. and Fukuyama, F.(2010), *개발 전략: 거버넌스와 성장의 통합*, 정책연구 조사보고서 No. 5196, 세계은행.

참고문헌

- Albrow, M.(2017), "*The Community of Shared Destiny'(Xi Jinping) under Conditions of Imperfect Understanding*", Keynote lecture(draft),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Research Network "Trans/Wissen"(Trans/Knowledge), University of Trier, 12-14 October 2017. [5]
- Allison, G.(2017), "China vs. America: Managing the Next Clash of Civilizations", *Foreign Affairs*,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17-08-15/china-vs-america>. [2]
- Andrews, M., L. Pritchett and M. Woolcock(2017), *Building State Capability: Evidence, Analysis, A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http://dx.doi.org/10.1093/acprof:oso/9780198747482.001.0001>. [18]
- Bitar, S.(2018), "*Cohesion para la Gobernabilidad Nacional y Global*", Reunion T20, 2 Febrero 2018, Palacio San Martin. [6]
- Booth, D. and D. Cammack(2013), *Governance for development in Africa: solving Collective action problems*, Zed Books. [13]
- ESID(2017), "Public sector reform in Africa: Understanding the paths and politics of change", *ESID Breifing*, No. 28, Effective States and Inclusive Development, http://www.effectivestates.org/wp-content/uploads/2018/01/esid_bp_28_PSR-Africa.pdf. [14]
- Grindle, M.(2010), "Good Governance: The Inflation of an Idea", *Harvard University,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June, pp. 1-21, <http://dx.doi.org/10.1038/nmeth.3152>. [16]
- Grindle, M.(2004), "Good Enough Governance: Poverty Reduction and Reform in Developing Countries", *Governance*, Vol. 17/4, pp. 525-548, <http://dx.doi.org/10.1111/j.0952-1895.2004.00256.x>. [11]
- Hester, P. and K. Adams(2014), *Systemic Thinking*,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Cham, <http://dx.doi.org/10.1007/978-3-319-07629-4>. [19]
- Howard, R.(2007), *Dynamic Probabilistic Systems: Markov Models Vol. 1*, Dover Publications, Inc. [22]
- Kossoff, S.(2015), *Busting 5 Myths on Political-Economy Analysis*, World Bank – Governance for Development, <http://blogs.worldbank.org/governance/busting-5-> [17]

[myths-political-economyanalysis.](#)

- Lieberthal, K. and W. Jisi(2012), "Addressing US-China strategic distrust", *John L. Thronton China Center At Brookings Monograph Series*, Vol. 4/March, [4]
https://www.brookings.edu/wpcontent/uploads/2016/06/0330_china_lieberthal.pdf, pp. 1-50.
- Mackie, J., M. Ronceray and E. Spierings(2017), "Policy coherence and the 2030 Agenda: Building on the PCD experience", No. Discussion Paper 210, ECDPM, Maastricht, [15]
<http://www.ecdpm.org/dp210>.
- OECD(2018), *OECD DAC Blended Finance Principles for Unlocking Commercial Finance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topics/OECD-Blended-Finance-Principles.pdf>. [10]
- OECD(2017),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7: Data for Development*,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dcr-2017-en>. [9]
- OECD(2017),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Official Development Statistics 2017*, <http://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data/>. [7]
- OECD(2017), *The Global Outlook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Better Policies for Better Finance*, [https://www.oecd.org/dac/Global Outlook flyer DAC HLM 2017.pdf](https://www.oecd.org/dac/Global%20Outlook%20flyer%20DAC%20HLM%202017.pdf). [8]
- OECD(2017), *What Brings Us Together*, OECD Yearbook, <http://www.oecd.org/forum/>. [1]
- Simons, L.(2015), *Changing the food game: market transformation strategies for Sustainable agriculture*, Greenleaf Publishing Limited, Sheffield, UK, [20]
<http://www.worldcat.org/title/changing-the-food-game-market-transformation-strategies-forsustainable-agriculture/oclc/886747001>.
- Stone, D.(2013), *Policy Paradox: The Art of Political Decision Making*, [21]
<http://dx.doi.org/10.1017/CBO9781107415324.004>.
- Trapp, K.(2014), "Measuring the Labor Share of Developing Countries: Challenges, Solutions, and Trends", GIGA, <http://www.iariw.org/papers/2014/TrappPaper.pdf>. [3]
- UNESCO(2018), *Cultu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3]
<http://www.unesco.org/new/en/unescoliaison-office-in-new-york/areas-of-action/culture/culture-for-sustainable-development/>.
- World Bank(2017), *World Development Report: Governance and the law*, [12]
<http://dx.doi.org/10.1596/978-1-4648-0950-7>.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는 각국 정부가 세계화에 따른 경제, 사회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독특한 포럼이다. OECD는 기업지배구조, 정보경제 및 노령화 문제와 같은 새로운 사실과 관심사를 이해하고 각국 정부가 이에 대응하도록 조력하는 데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OECD는 각국 정부가 정책경험을 비교하고 공동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모범사례를 파악하여 국내 및 국제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현행 OECD 회원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및 미국이다. 유럽연합은 OECD의 임무 수행에 참여하고 있다.

OECD는 간행물을 통해 회원국간에 합의된 조약, 지침 및 기준은 물론 자체 통계자료와 경제, 사회, 환경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널리 전파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2018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이 좋은 사회를 향하여

2030 의제는 세계적, 국가적 및 지역적으로 두루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집합적인 책무다. 정책일관성은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국제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전환을 조정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일관된 다자간 시스템이 필수 불가결하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2018년판은 강력한 제도적 메커니즘이 뒷받침하는 통합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2018년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의 주제인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이 좋은 사회로의 전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동 보고서는 정부가 국가적, 세계적 수준에서 집합적으로 SDG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과제 및 기회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틀의 제도적, 분석적 및 감시적 요소를 적용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한 8개 구성요소(SDG 세부목표 17.14)를 제시하고 최근의 OECD 연구, 국가별 조사결과 및 국가평가보고서를 활용하여 새로운 제도적 모범 실무사례를 찾아낸다.

원 본 발행처 : OECD
번역본 발행처 :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공공관리정책본부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9층
연 락 처 : 02-3702-7133~4
홈 페이지 : <http://www.oecdkorea.org>
번 역 업 체 : (주) 이코랜스
번 역 검 수 : 행정안전부 남주현

※이 책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공공관리정책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희 본부 디지털 아카이브(<http://public.oecdkorea.org/>)에서 eBook 으로 확인 가능합니다